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한국의 SDGs 이행 보고서

2022



2022년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금년 2월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억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후반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은 각국의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전례 없는 위기를 불러오고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흔적은 우리 사회가 겪어 온 모습을 담은 지표들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국가 및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으로 빈곤율은 높아졌고, 교육 및 소득 기회와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탄소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SDGs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으며 전 세계가 국가별 리더십을 발휘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한국 통계청은 오픈 소스 기반 SDGs 영문 플랫폼을 서비스함으로써 UN 등 국제기구, 전 세계 통계기관 및 이용자들에게 한국의 SDGs 진행상황 및 데이터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의 관련 정부 정책을 SDGs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힘든 정도는 업종이나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소득의 감소 영향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상쇄되었지만 노인 빈곤은 여전히 높고, 교육 분야의 학습결손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한편, 취업자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비대면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사회적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발의제 설정과 ODA 지원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통계청은 한국판 국가통계체계인 'K-통계'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혁신 및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는 데이터와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국제 비교 가능 자료와 증거 기반 분석에 기초해,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했습니다. 통계는 수치로 적는 삶의 기록이자 또 하나의 역사입니다. 위기는 기회든 측정돼야 관리됩니다. 본 보고서가 전 세계가 목표한 SDGs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바라며, 증거 기반 정책의 핵심 지표로 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통계청장 류근관



통계개발원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상황을 총괄하는 한국의 데이터 책임기관으로서 빈곤, 교육, 에너지 등 총체적인 SDGs 목표를 중심으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SDGs 목표 이행 추세를 살펴보고,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활용하여 세분화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 진단의 핵심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위기 가운데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사회와 나라의 모습을 데이터로 제시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DGs 17개 목표별 분석 결과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국가적인 성과 및 한계를 차분히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세계 위기 2년 차인 2021년에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표되는 코로나19 사회의 특성상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생계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은 보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경제 대응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방역 대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 간 소통에 대한 평가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초·중·고 학생들의 장기적인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업 능력의 저하가 수치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성장에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위험적 징후가 확인되었습니다. 온실가스는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이후 포장재 관련 폐기물과 해양쓰레기가 증가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의 확산으로 산림면적도 줄어들고 있어 생물다양성 등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미래의 팬데믹 위협에 노출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12개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가들의 고찰을 17개 SDGs 목표에 각각 담아내었습니다. 행간에서 들려주는 SDGs 데이터 이야기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과감히 넘어서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데 소중히 활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SDGs 보고(寶庫, Treasure House)에 옥고를 가득 채운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시립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과 연구진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작업을 총괄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학계의 연구진들이 내놓은 보석과 같은 옥고를 꺾어서 빛나는 보배로 다듬은 통계개발원의 박영실 SDG데이터연구센터장, 진유강 주무관, 윤민희 주무관, 김소연 주무관의 노고에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SDGs 데이터로 세상을 보고자 하는 독자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글로 뛰놀기를 기대합니다!

통계개발원장 전영일



발간사	003
서문	005
개요	008
인포그래픽	012

SDGs 목표별 분석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소득 감소를 정부 재정 지원으로 상쇄	017
66세 이상 빈곤율 감소했지만, 76세 이상 빈곤율 감소는 크지 않아	018
국민연금 가입률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 커	019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	021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영양섭취부족 비율 및 식품 안정성 미확보 비율의 소득계층 간 격차 확대	023
경지면적 감소 추세 이어져	025
쌀 이외 곡물자급률의 지속적 감소	026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지속	027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한국의 보편적 의료 보장 서비스보장 수준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029
보건의료 인력은 여전히 부족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국가 간 차이 커	031
한국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중 가장 높아	031
한국의 신생아 사망률은 매우 낮은 수준	031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여타 OECD 국가와 달리 증가 추세	033
한국의 자살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034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 우려 현실화	037
성별 학업성취도 격차 확대	038
중학교 단계의 지역 규모별 학업성취도 격차 심화	040
학생들의 낮은 디지털 활용 정도 및 태도	040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10년 전보다 증가	043
현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경험 여성 비율 20.7%	043
기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여전히 가장 많아	045
경제와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여전히 낮아	045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통합수자원관리 이행률 높음 수준으로 향상	049
물 이용 효율화와 물 스트레스 완화 노력	049
수질 및 수생태 점차 개선	050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에너지 원단위 개선 추세	053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세	055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경제성장률 2020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059
5개 분기 연속 오름세이나 업종별로 큰 편차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취업 감소가 현저	060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증가	061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취업자 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063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량 회복세에 접어들어	064
온라인 쇼핑 거래의 비약적인 성장	064
한국의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은 세계 최고 수준	066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소득 불평등 완화 추세 및 정책 재분배 효과 개선 향상	069
경제성장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아	070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감소	071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한국의 대기오염 수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심각	075
도시 공공녹지 면적, 계획과 집행 간 괴리 여전히 존재	076
도시의 취약계층에 집중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077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권 지역별로 격차 커	078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최근 경제성장에 비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	081
OECD 국가 중 재활용 비율 높은 수준	08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전량을 자원과 에너지 회수로 전환해야	084
플라스틱 폐기물은 급증하나 재활용 처리 기반은 부족	084
코로나19로 인해 포장재 관련 재활용 폐기물이 대폭 증가	085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관리체계는 단계적으로 안정화	086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감소	089
2021년 폭염일수는 11.8일, 1376명의 온열 질환자 발생	091
기후안심 국가 구현을 위한 적응 대책 추진 필요	093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쓰레기 수거량 지속적 증가	095
해수수질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2018년부터 나뭇잎 비율 증가	096
바다숲 조성면적 점차 확대	096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대상 어종 15개로 확대	097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증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한국 산림면적의 장기적인 감소세	099
산불 증가로 산림면적 감소 위험 높아져	100
보호지역 비율의 꾸준한 증가세	10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위한 국가적 노력 가시화	102
산악녹색피복지수 감소세	103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적색목록지수 개선 필요	104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공공기관 서비스 중 높은 보건서비스 만족도	107
대응적 의사결정 과정의 진전과 정치 효능감의 상승	108
살인범죄율은 꾸준히 감소	109
여성의 범죄 피해 두려움 높아	110

17.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한국의 ODA 규모 24억 달러, GNI 대비 0.14%로 낮아	113
최저개발국 대상 양자원조 37.1%로 높아져	114
양자원조의 36.6%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116
33.8%는 경제 인프라에 지원	
양자원조의 53.3%는 아시아, 25.2%는 아프리카 지원	117
전 세계 수출에서 최저개발국 비중 0.94% 수준 유지	117

부록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120
용어 약어	121
지표 총괄표	122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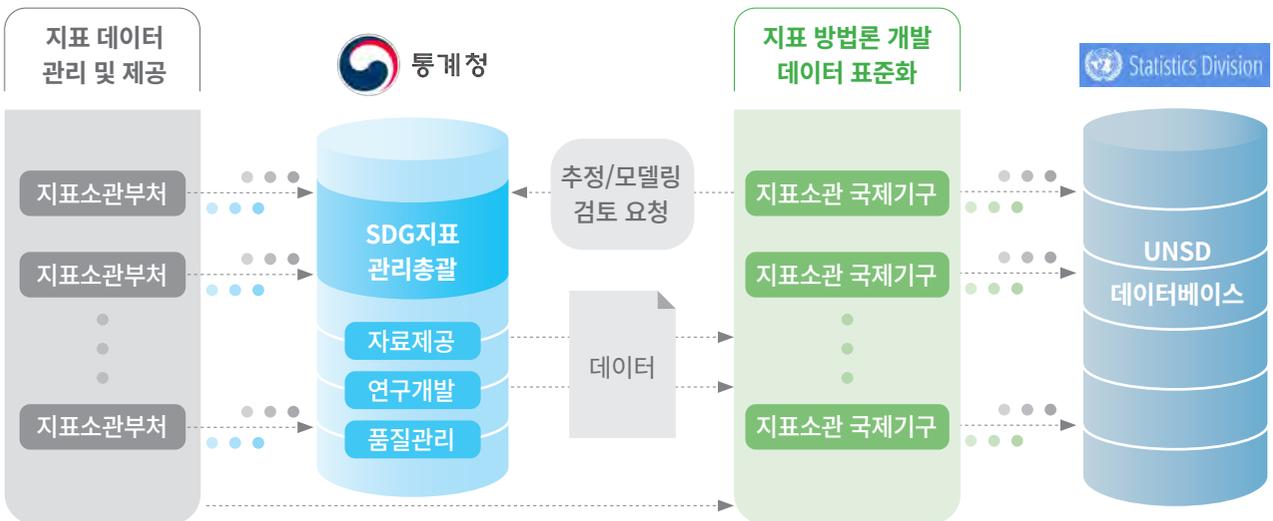
전지구적 패러다임 전환과 유엔 SDGs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진보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희생하면서 경제 발전에 충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물질적 성장을 넘어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진보와 개인의 삶의 질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사회로 진입했다. 그 결과 경제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와 환경의 고유한 영역과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이 설득력을 얻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극복한 한국은 이제 원조 공여국이 되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책임도 갖게 되었다. 지표체계를 통한 과학적 정책 관리, 지배적 패러다임의 전환, 국제사회의 요구가 교차하는 지점에 유엔 SDGs가 존재한다.

SDGs는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 개발정상회의에서 2000년부터 15년간 지속되어 온 새천년개발목표(MDGs) 시대의 막을 내림과 동시에 새로운 15년을 목표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출범했다. SDGs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1개의 글로벌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경제, 사회, 환경, 글로벌 거버넌스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고 제기되는 사안들을 균형 있게 담고 있다. SDGs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모든 국가에서 제도적 개선과 구조적 변화를 전면적으로 요구한다. 유엔 SDGs는 빈곤, 농업, 교육, 성평등, 기후변화, 보건, 경제성장 등 사회·경제 발전 의제를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의제들이 국가 제도와 정책의 수립으로 연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라는 SDGs의 기본 정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이행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그 성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를 2019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SDGs 데이터 제공 흐름도



출처: IAEG-SDGs(2019)를 바탕으로 수정

글로벌 SDGs 지표와 한국 데이터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간하는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는 대한민국의 2030 의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유엔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행보고서에는 글로벌 SDGs에 부합하는 국내 통계를 활용하여 현재 국내 상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고 있다.

2030 의제는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을 통해 매년 글로벌 차원에서 점검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와 통계다. 이를 위해 유엔은 SDGs 지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이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왼쪽의 <SDGs 데이터 제공 흐름도>는 SDGs 데이터 교환 과정에서 국가통계시스템, 국제기구, 유엔통계처(UNSD)의 역할을 보여 준다.

데이터 제공의 일차적인 책임은 개별 국가이며, 보고 과정에서의 정확성,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국은 공식통계원칙에 기반해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기구는 국가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및 통계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UNSD에 제출한다. UNSD는 이 데이터를 자체 운영 중인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다. 세계 전체 및 지역 수준에서 해당 지표가 점검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국가 데이터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데이터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유엔 SDGs 한국 데이터 책임기관으로서 국제기구의 데이터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고 검증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 이 업무는 각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28개 관계부처 및 통계작성기관의 협력을 기본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품질이 담보된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승인통계가 아닌 경우, 정부의 공식 출처가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기도 한다. 법이나 제도 등의 구비 여부를 측정하는 비통계적 지표의 경우,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구성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는 이전 보고서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한국 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SDGs, 취약 계층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피면서 SDGs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비교해 2022년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코로나 시대에 초점을 두면서 한국 사회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의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는 대표 주제 및 각 목표·지표별 주제를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SDGs 지표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목표별로 대표 주제를 설명하는 ‘개요’ 부문과 영역을 세분화 작성했다. 국내 통계를 기본으로 국내 지역별, 인구집단별, 시계열 및 OECD 국가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SDGs 이행현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했다.

둘째, 특히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부각해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시계열적인 비교를 강조했다. 2021년 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이후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국가통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2년 보고서는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우선 선정하되, 이 과정에서 통계의 이용가능성을 우선 고려했다.

셋째, 목표를 핵심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대표 지표를 선정해 이에 대해 향후 이행평가에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목표별로 해당 목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주요 지표를 3~4개 선정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과 한국 사회의 대응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지표를 최소 하나 이상 제시하고자 했다.

넷째, 기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각 목표별로 코로나



19 대유행이 남긴 영향 및 대응과 관련된 현황과 상태, 대응 과정에서의 미비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 사회의 SDGs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기술함으로써 관련 기관에 한국의 이행현황 홍보 및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SDGs 이행 분석 결과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은 위에서 언급한 작성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목표별로 유연하게 내용을 구성했다. 한국의 SDGs 이행보고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 시장의 대응, 전국민적 협조와 참여를 통해서 형성된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선 코로나19의 영향이 경제, 사회, 환경, 국제협력 등 전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항공운송업, 식당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 규모가 급감했으며 전체 취업자 수의 감소도 관찰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주거 환경의 악화로 이어져 평균적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큰 수도권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이 대폭 증가했다.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ODA가 위축되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가계의 생활 능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다. 청년과 여성 집단에서 실업률이 높으며, 특히 양육 부담을 지고 있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더 낮아졌다. 청년 가구와 소득하위 가구의 주거 상황이 더 열악해 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는 사회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소규모 지역에서 더 두드러진다. 이는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대내외적 환경의 전반적 변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응해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극복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위기에도 가계의 생활 능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불평등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 노력과 국민의 협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했으며 강건하고 회복력 있는 보건의료체계는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 20대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지만 40대 이상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대폭 떨어졌던 취업자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온라인 쇼핑 거래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한국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과 국제협력 분야에서 나타난 변화는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과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향해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이 증가를 둔화라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관리, 어자원 보존, 생물다양성 보존, 생활 및 산업 폐기물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체계적 대응이 안정적 기반을 확보해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ODA를 통한 국제원조 노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리더십도 확보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가 SDGs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진보로 나아가고 있지만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성별, 계층별, 지역별 격차와 특정 집단의 빈곤 문제는 여전히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의 보존에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미등록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SDGs 이행수준 목표별 주요 결과

<p>1 빈곤퇴치</p> 	<p>코로나19로 인한 시장소득 급감의 영향을 정부 재정 지원으로 상쇄하고 있으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p>
<p>2 기아종식</p> 	<p>영양섭취부족과 식품 안전성 확보 문제 취약계층에 집중</p>
<p>3 건강과 웰빙 증진</p> 	<p>OECD 국가 중 한국의 보편적 의료 보장 수준은 높으나, 보건의로 종사자 확보와 과부담 의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부진</p>
<p>4 양질의 교육 보장</p> 	<p>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지역 규모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 가시화</p>
<p>5 성평등달성</p> 	<p>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p>
<p>6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p> 	<p>통합수자원관리 수준은 2017년에 비해 2020년에 향상되었으나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이며 물 스트레스는 높은 수준</p>
<p>7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p> 	<p>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최하위권</p>
<p>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p> 	<p>코로나19 시기 여성 실업률 급격히 증가,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p>
<p>9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및 혁신</p> 	<p>2021년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온라인 쇼핑 업종의 비약적인 성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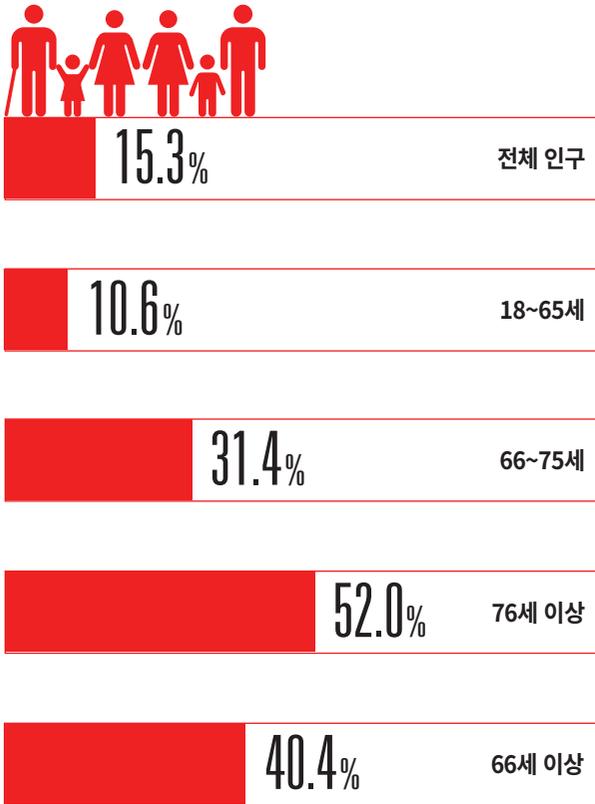
<p>10 불평등 감소</p> 	<p>소득 불평등 수준은 꾸준히 완화되었으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간 차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수준</p>
<p>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p> 	<p>수도권 거주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수도권 이외 거주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청년과 소득하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은 수준</p>
<p>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p> 	<p>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등 포장재 폐기물이 대폭 증가했으며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p>
<p>13 기후변화 대응</p> 	<p>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 속 2019년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p>
<p>14 해양생태계 보존</p> 	<p>해양쓰레기 총량 증가하고 있으며, 해수수질도 2018년부터 상대적으로 나빠짐</p>
<p>15 육상생태계 보호</p> 	<p>산림면적의 감소로 생물다양성 약화 우려, 산불 피해의 대형화로 1건당 피해면적 대폭 증가</p>
<p>16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p> 	<p>2020년 기준 공공서비스 만족도 중 보건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정부 소통 평가와 정치적 효능감이 긍정적으로 변화</p>
<p>17 글로벌 파트너십</p> 	<p>코로나19로 인한 GDP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 세계의 ODA 규모는 사상 최고 수준, 한국은 OECD 국가 중 GNI 대비 ODA 비율이 0.14%로 낮은 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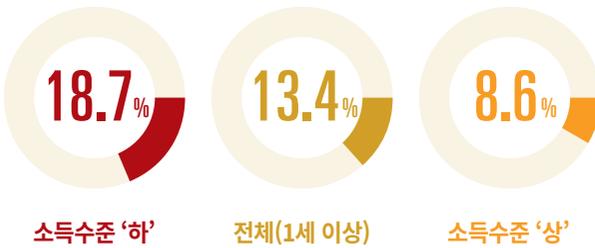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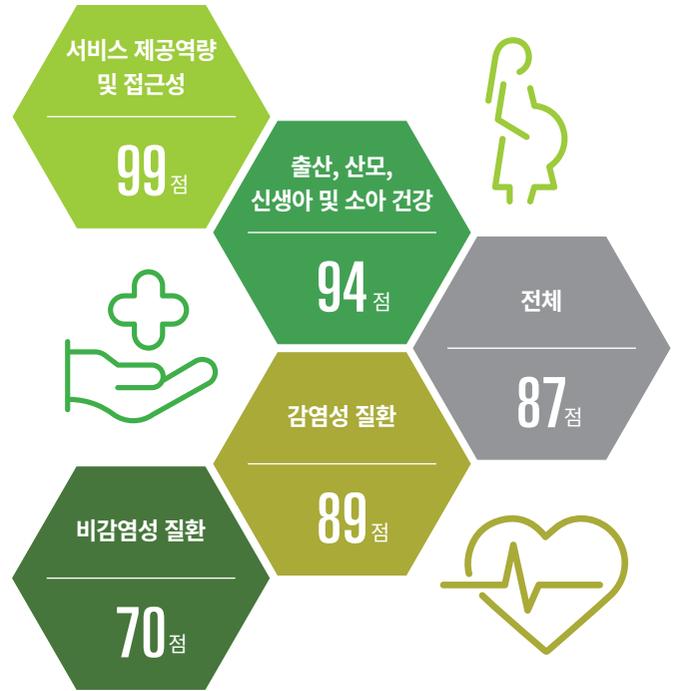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2020



소득수준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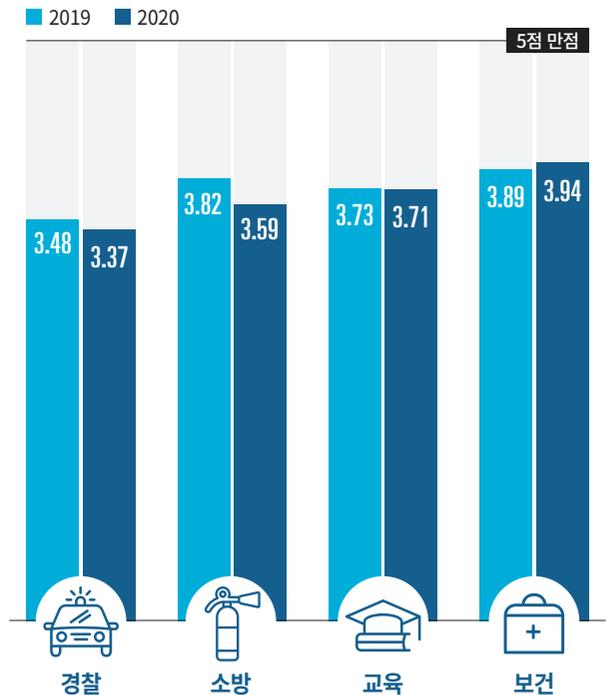


UHC 서비스보장지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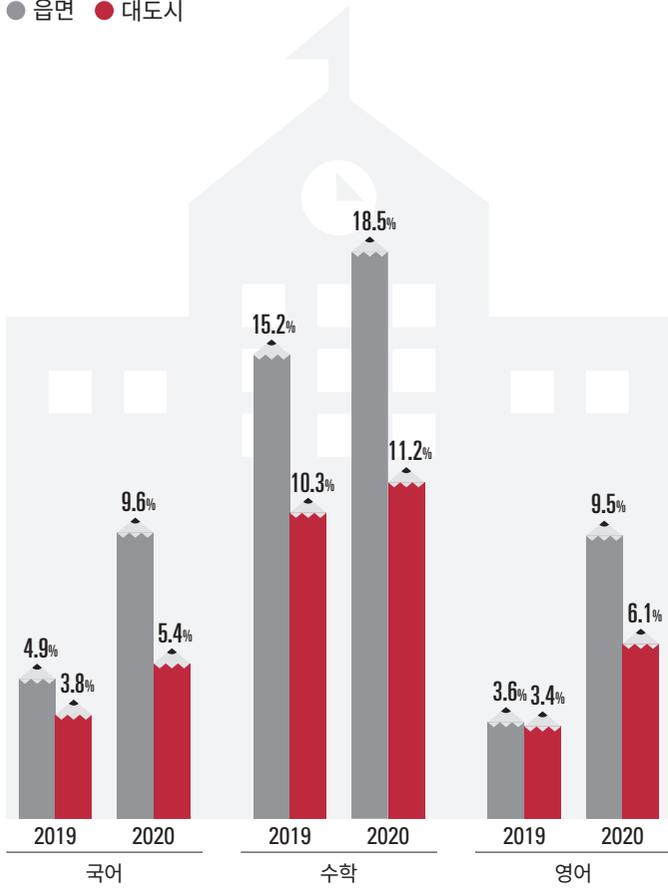
* UHC :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으로 서비스보장지수는 100점 만점임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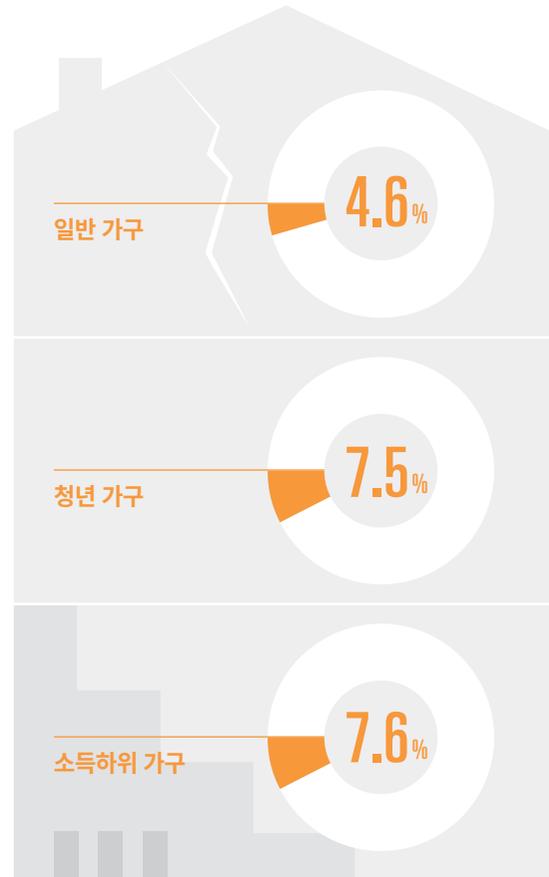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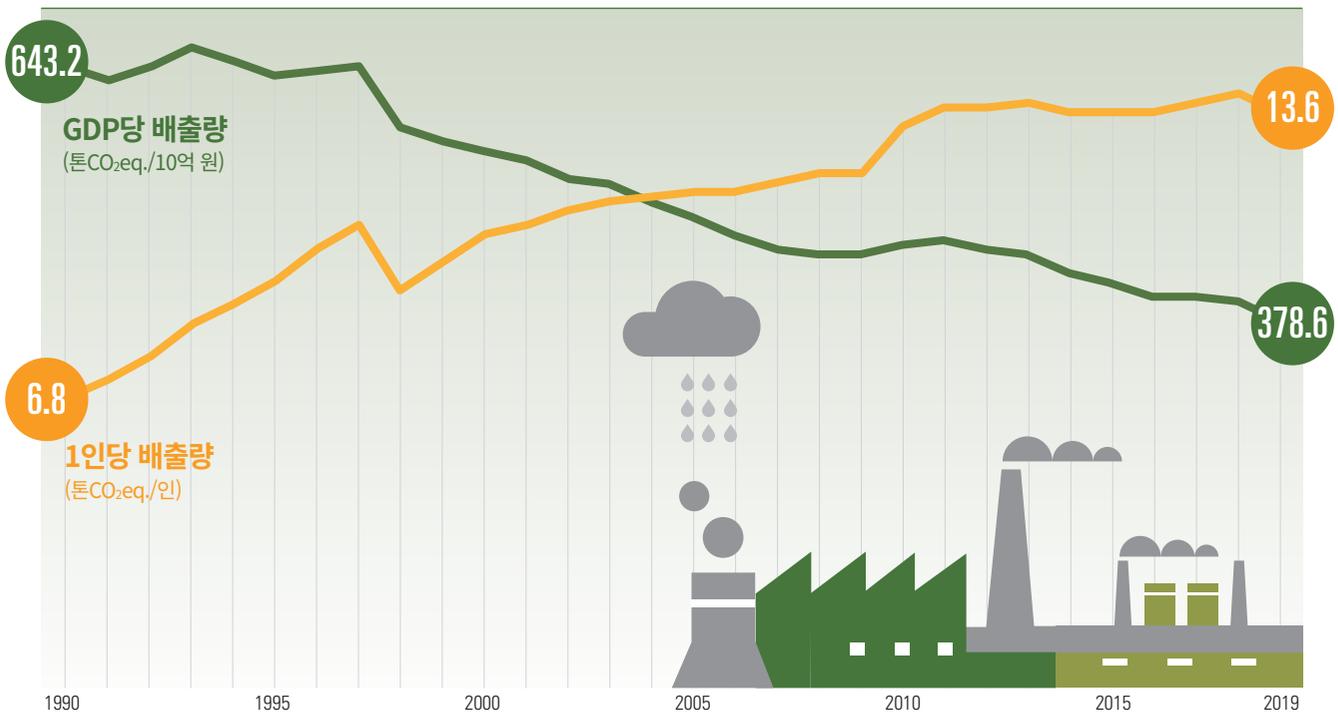
● 읍면 ● 대도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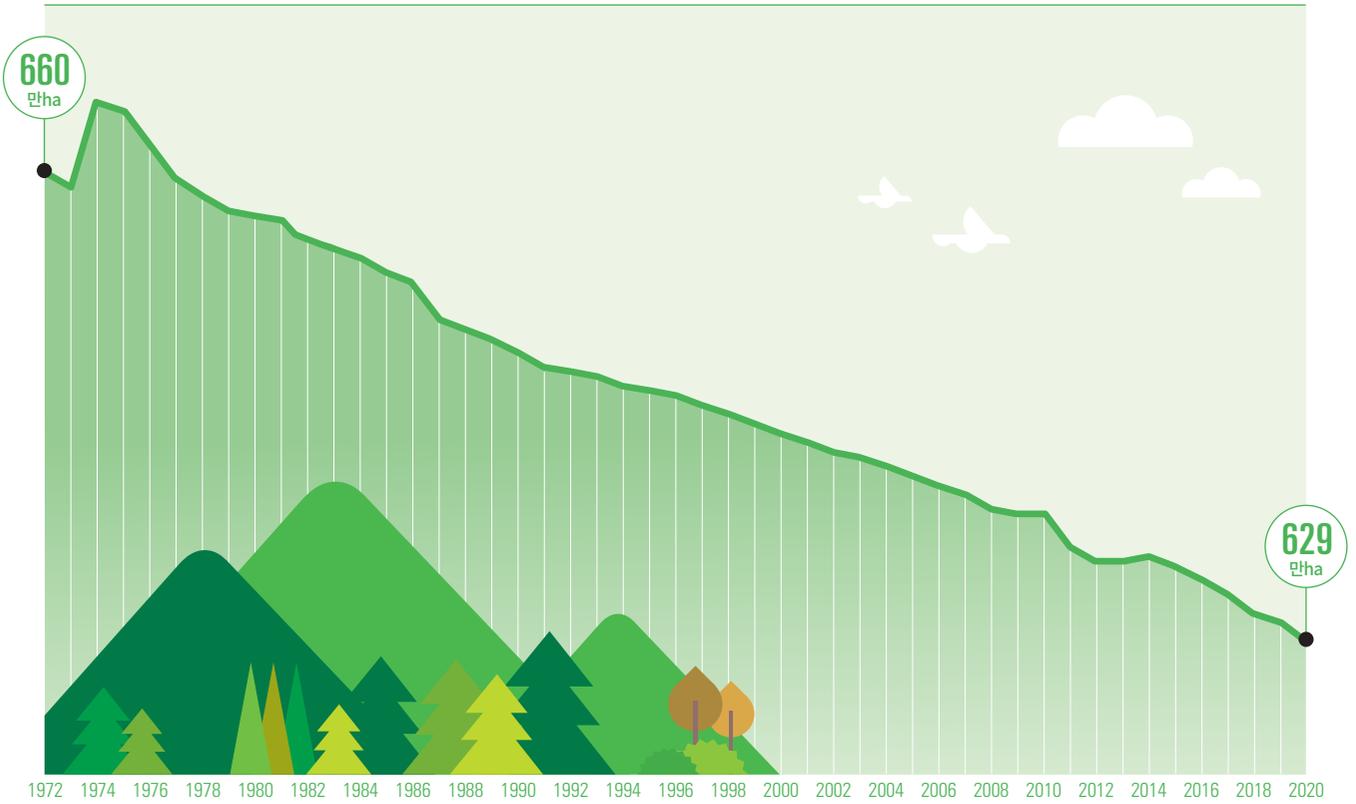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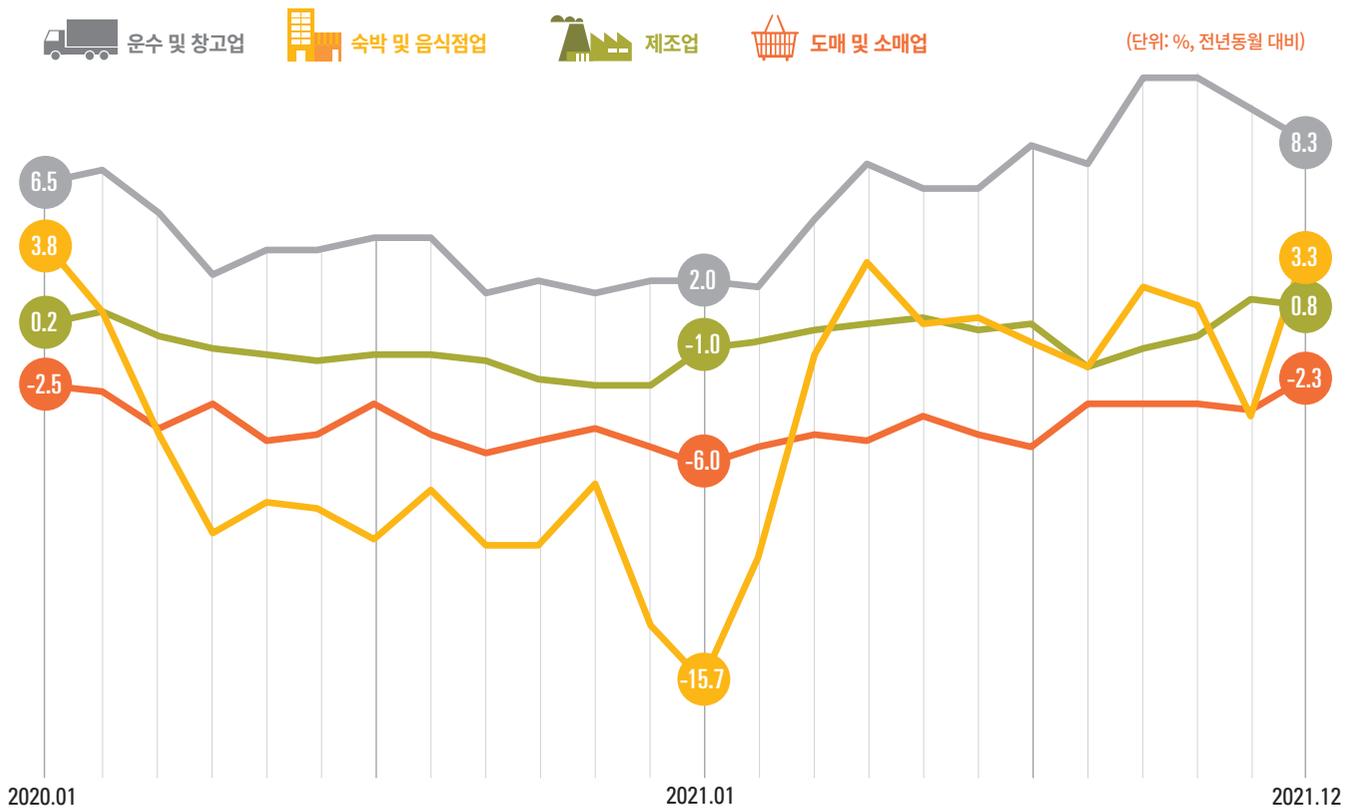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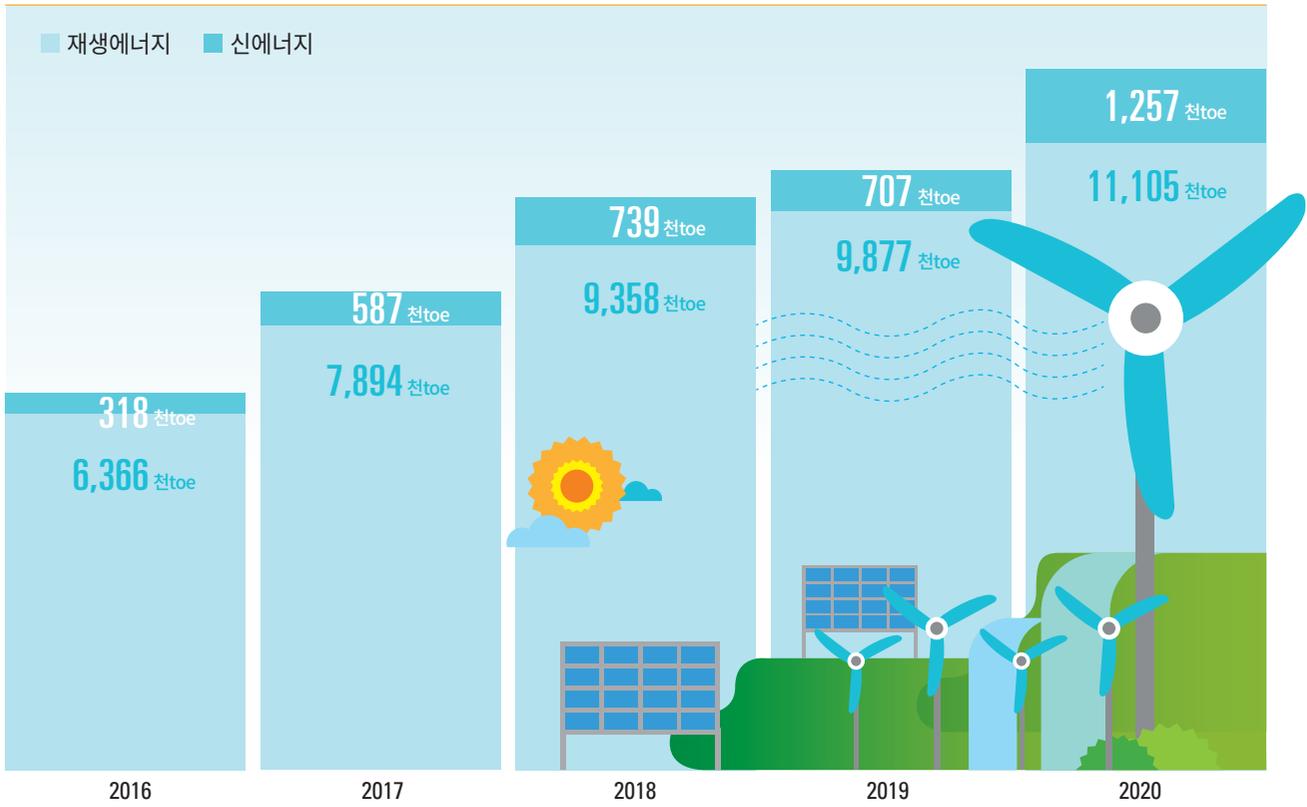
산림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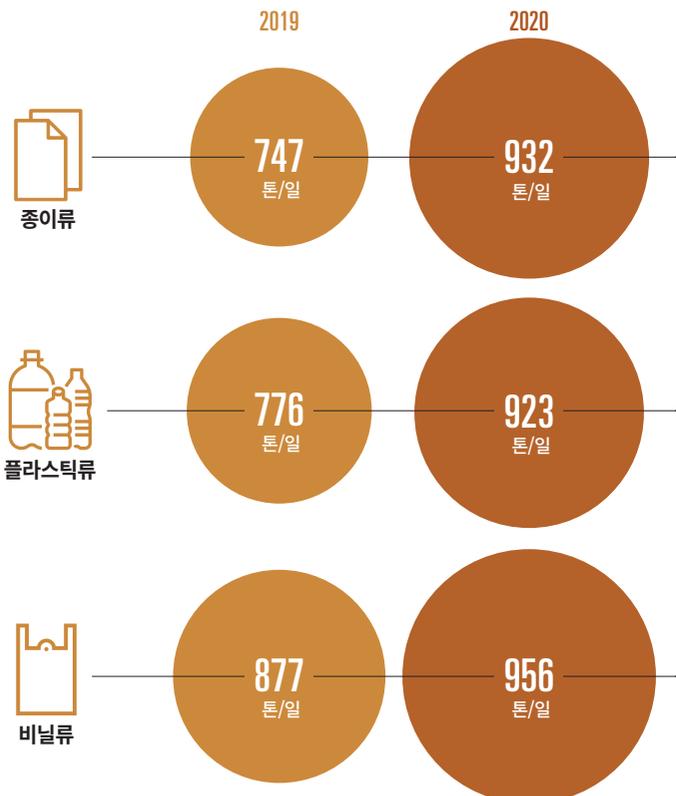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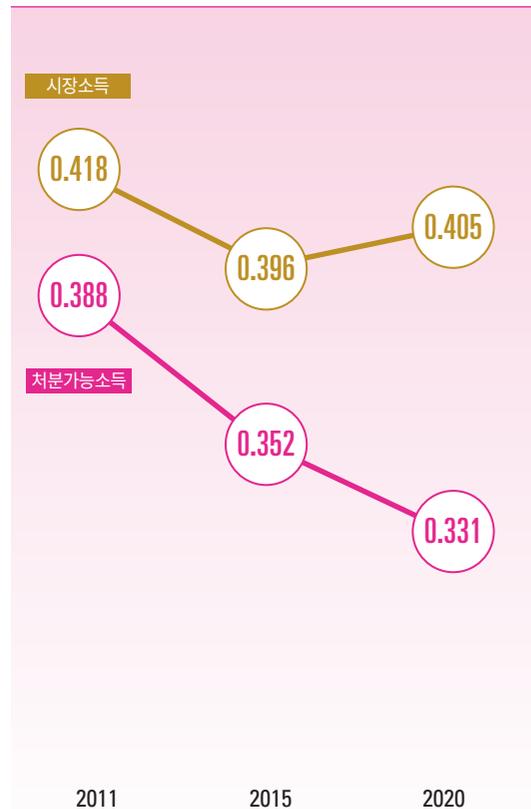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량 변화



지니계수





1 NO POVERTY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SDGs 1번 목표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차원적인 빈곤을 경계하며, 특히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 재난 상황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2015년 SDGs가 채택되고,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 전 세계는 1번 목표에서 유의미한 발전을 보였다. 극심한 빈곤 상황에 노출된 인구 비율은 2015년 10%에서 2018년 8.6%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16억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이 약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은행(World Bank)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빈곤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전 사회적 대응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구성원들이 처할 수 있는 위기를 제도와 정책을 통해 빠짐없이 대응할 수 있는 포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분기 저소득분위 가구의 시장소득은 급감했지만,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위기에도 가계의 생활 능력은 일부분 유지되었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6차례 편성되었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최후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도 취약계층 보호 확대 기조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은 특정 인구집단이 노후 준비를 위한 사회시스템에서 배제되었음을 보여 준다.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소득 감소를 정부 재정 지원으로 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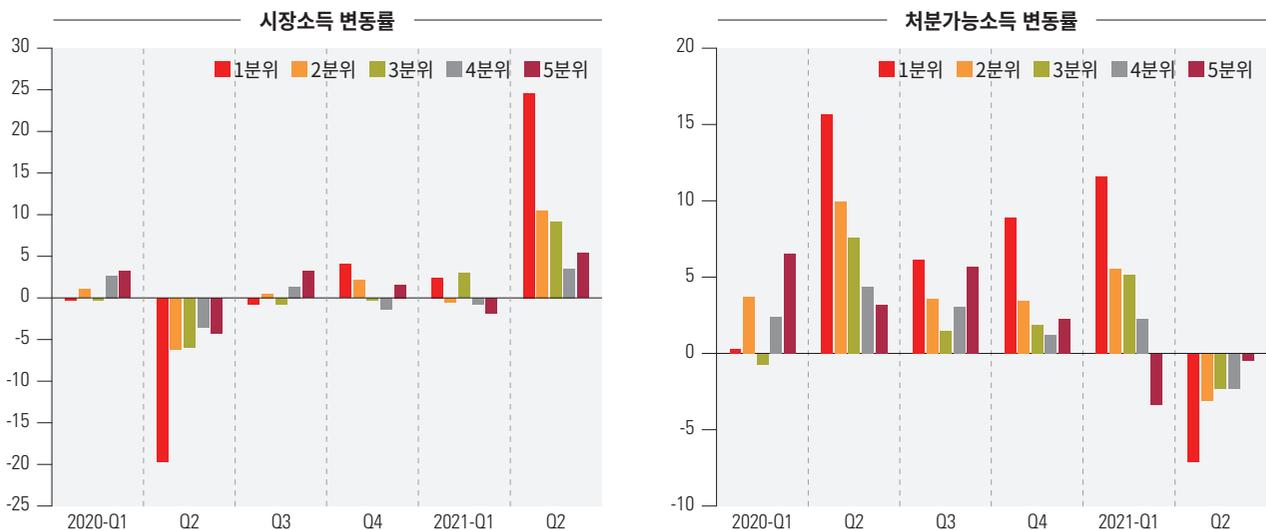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감염병 대응 정책이 시행되면서, 2020년 2분기 가구 시장소득이 급감했다. 특히 저소득분위 가구의 소득에 영향이 컸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면, 2020년 2분기 가구 시장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소득1분위 가구 19.8%, 소득2분위 가구 6.4%, 소득3분위 가구 6.1%, 소득4분위 가구 3.5%, 소득5분위 가구 4.4%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대책으로 2020년 1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생계위기가구, 돌봄부담 가구 등에 재정 지원을 했으며, 2차 추경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2분기 소득분위별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했다.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소득1분위 가구 15.7%, 소득2분위 가구 10.0%, 소득3분위 가구 7.6%, 소득4분위 가구 4.3%, 소득5분위 가구 3.2% 증가했다. 2020년 2분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 처분가능소득 변동률, 2020 1분기~2021 2분기

(단위: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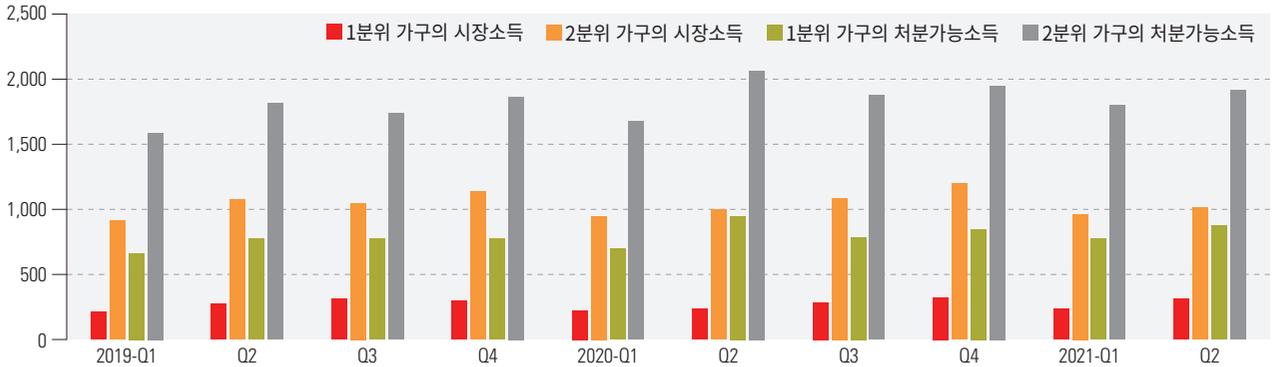
주1: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 비소비지출',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로 계산함

주2: 전년동분기 대비 변동률을 제시함



66세 이상으로 구성된 소득1·2분위 가구의 시장소득·처분가능소득, 2019 1분기-2021 2분기

(단위: 천 원)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주1: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계산하고 해당 소득분위에서 66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현황을 제시함

주2: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 비소비지출',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로 계산함

생계위기가구 대상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 지원 현황

구분	주요 내용	
2020	1차 추경(03.17.)	저소득층 소비쿠폰(1.0조 원, 169만 가구) 긴급복지, 건보료 경감 등(0.8조 원, 575만 명)
	3차 추경(07.03.)	긴급복지(0.05조 원, 3.0만 가구) 주거안정지원, 소액금융 등(0.8조 원, 11만 명)
	4차 추경(09.22.)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0.4조 원, 55만 가구(88만 명))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12.29.)	저소득층 긴급복지(0.1조 원, 6만 가구)
2021	1차 추경(03.25.)	한계근로빈곤층 한시생계 지원(0.4조 원, 80만 가구) 노점상 지원(0.02조 원, 4만 명) 근로장학금(0.03조 원, 1만 명)
		긴급복지·생활안정(0.2조 원, 8만 가구)
	2차 추경(07.0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0.3조 원, 300만 명)

출처1: 기획재정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보도자료(2021.04.01.)

출처2: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도자료(2021.07.01.)

기의 이러한 급격한 변동에 따른 거저효과로 2021년 2분기에는 전년동분기 대비 시장소득은 증가하고, 처분가능소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특히 66세 이상 인구로만 구성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 큰 영향을 미쳤다. 66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에 적게 참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시장소득 감소는 전체 가구 대비 적었지만 재정 지원의 주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득1분위 및 소득2분위에서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2020년 2분기 시장소득은 각각 23만 7000원, 100만 5000원이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95만원, 206만 6000원이었다. 2019년 2분기와 비교해 시장소득은 13.8%, 6.0% 감소했지만, 처분가능소

득은 오히려 23.0%, 14.1%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각국 정부는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ILO는 코로나19 대응책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째, 적극적 재정 정책, 확장적 통화 정책, 보건 부문을 포함한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 및 재정 지원 정책으로 구성되는 경제와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둘째, 모두를 위한 사회보호 확대, 고용 유지 조치 시행, 기업에 재정·세금 및 기타 경감을 제공하는 등 기업, 고용, 소득에 대한 지원 정책이다. 셋째, 산업안전보건 조치 강화,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방식 조정, 차별 및 배제 방지, 모든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유급 휴가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한 작업장에서 근로자 보호 정책이다. 넷째, 정부, 근로자 및 고용주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찾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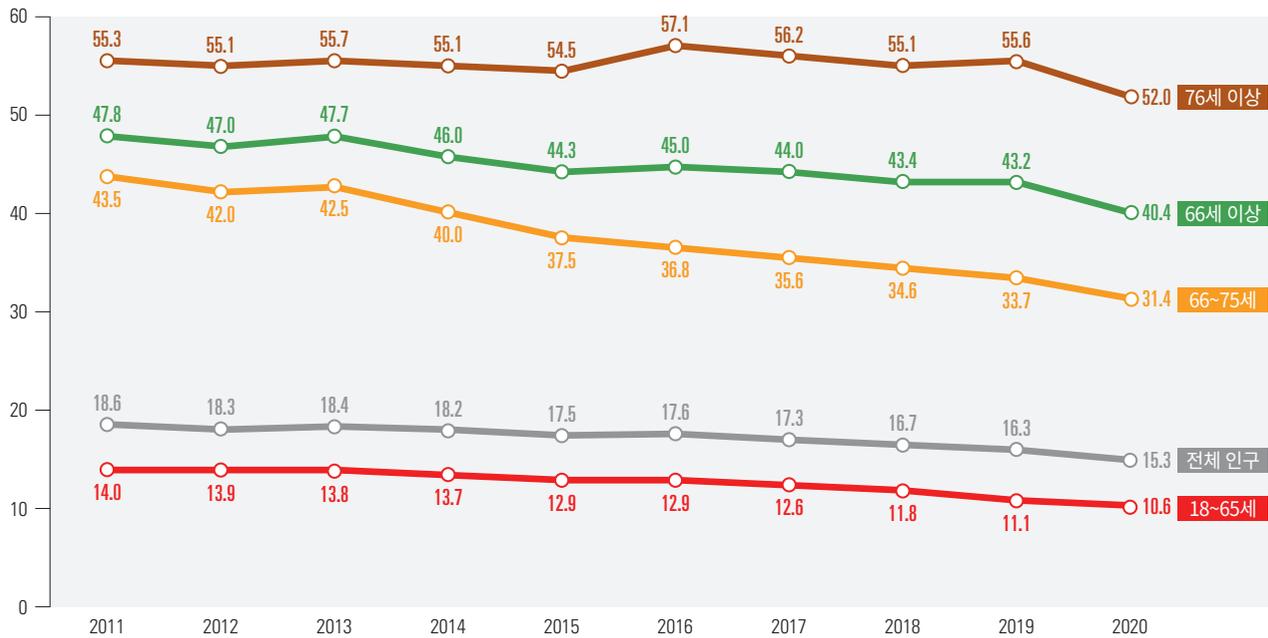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이후 총 6차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재정 지원, 금융 및 회복 지원을 실시했고, 고용취약계층 대상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생계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 지원, 한시생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직접 재정 지원을 실시했다. 이들 생계위기가구에는 2020년 2차 추경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2021년 2차 추경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 지급되었다.

**66세 이상 빈곤을 감소했지만,
76세 이상 빈곤을 감소는 크지 않아**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회

처분가능소득 기준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2011~2020

(단위: %)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3, 2021.12.27. 인출)
 주 : 처분가능소득은 OECD 기준으로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을 가구원수를 고려해 균등화한 소득으로 계산함

내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속한 인구의 비율이다.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인구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15.3%로, 2011년 18.6% 이후 전반적으로 축소경향을 보인다. 연령집단으로 구분하면 18~65세 빈곤율은 10.6%, 66세 이상 빈곤율은 40.4%다. 이는 2011년 14.0%, 47.8%와 비교하면 각각 3.4%p, 7.4%p 감소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 비해 66세 이상에서 빈곤율 감소폭이 더 컸다. 18~65세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66세 이상 빈곤율은 2014년 이후에서야 감소경향을 보였다. 66세 이상 빈곤율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66~75세 빈곤율은 2011년 43.5%에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76세 이상 빈곤율은 2011년 55.3%에서 2019년 55.6%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가 2020년 52.0%로 약간 줄어들었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중위소득은 1809만 원으로, 18~65세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 3240만 원의 55.8% 수준이다(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1). 66세 이상의 저소득 원인으로는

고령자의 주요 소득원인 공적연금의 미수급자가 많고, 연금액도 적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 53.1%만이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전 국민 대상 적용이 1999년에야 이뤄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되었던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다. 80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30.2%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통계청, 2021).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계산한 상대적 빈곤위험도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은 367.8%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주요 OECD 국가 중 네덜란드(32.5%), 덴마크(40.0%), 노르웨이(44.8%)가 낮으며,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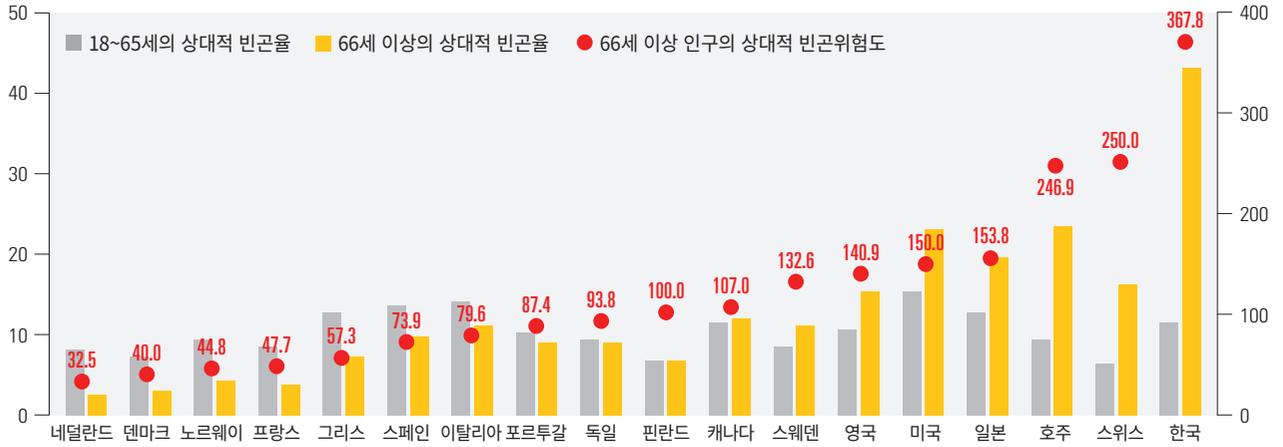
국민연금 가입률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 커

한국의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2021년 현재 만 62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주요 OECD 국가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위험도, 2018

(단위: %)



출처: OECD, 소득 분배 데이터베이스(Income Distribution Database)(OECD.Stat, 2021.09.17. 인출)

주1 :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저자가 계산함

주2 : 2015년 이후 가장 최근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대부분 국가는 2018년 기준임(한국 포함). 캐나다와 영국은 2019년, 덴마크와 스웨덴은 2017년, 네덜란드는 2015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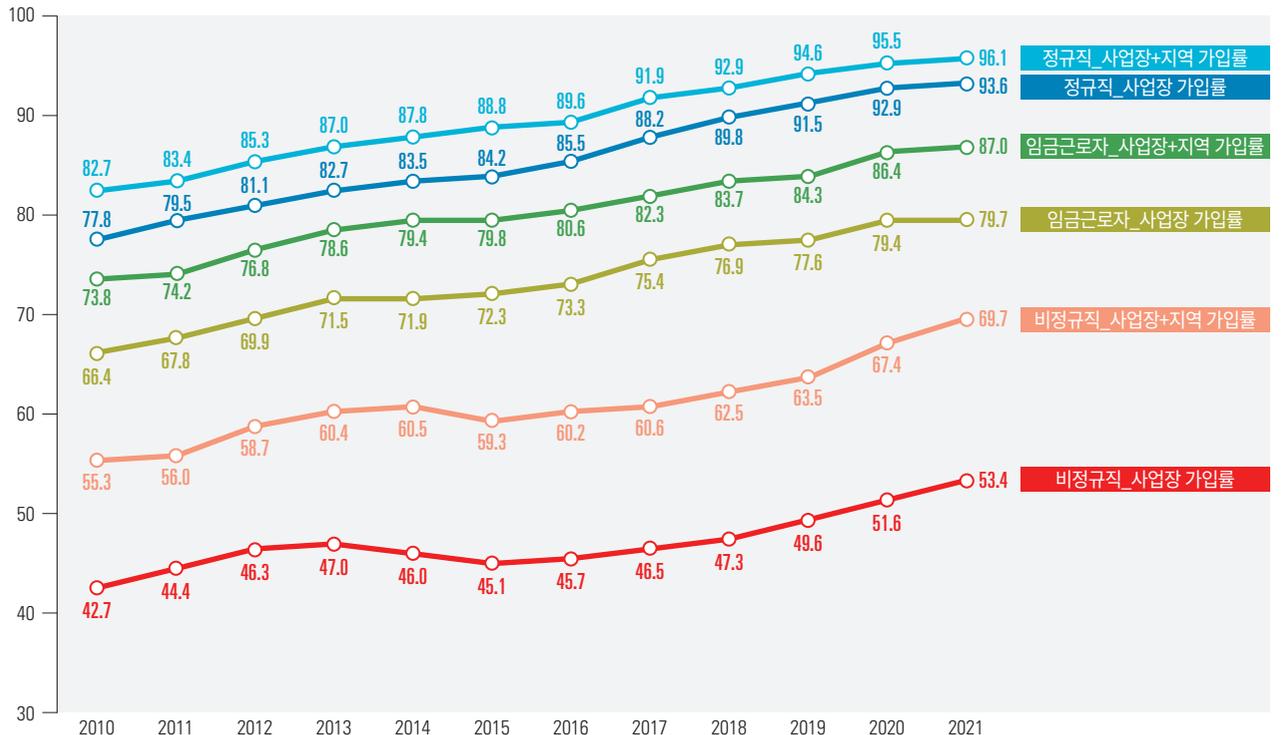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2020년 연간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21조 8000여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16조 2000여억 원이 지급된 기초연금과 더불어 주요한 노후 소득원으로 기능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2021; 보건복지부, 2021).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 지역에 적용되어 소득활동을 하는 전 국민이 가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민연금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9세 이하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은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2010~2021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주 : 국민연금은 만 59세 이하 취업자가 가입대상이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가입률 계산에서 제외함

2010년 66.4%에서 2021년 79.7%까지 증가했으며, 국민연금 지역 가입을 포함한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1년 87.0%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근로형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률은 차이가 크다. 2021년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률은 93.6%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률은 53.4%다. 지역 가입을 포함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1%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9.7%다.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개인이 지역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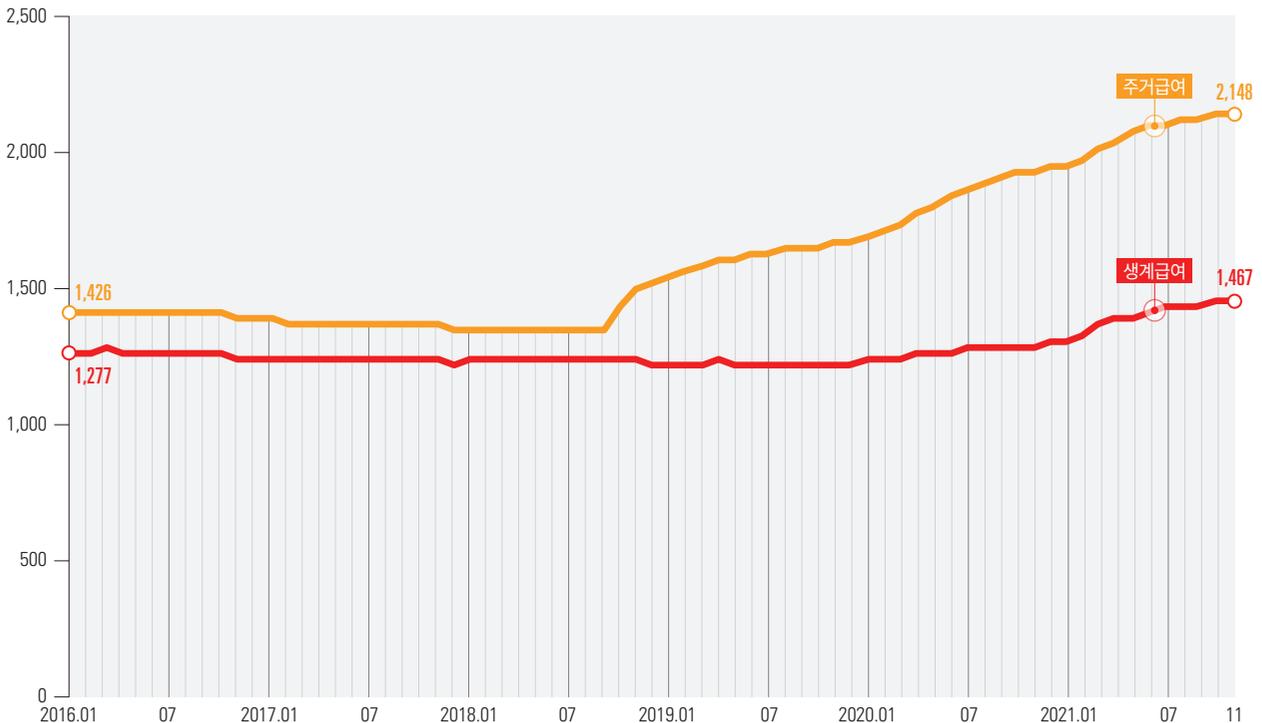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의 중요한 소득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생계 곤란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인구규모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급여자격을 결정하므로, 가구소득 감소에 따라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6년 1월 127만 6000여 명에서 2021년 11월 146만 7300명으로 증가했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같은 기간 142만 6000여 명에서 214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2018년 10월부터 급증했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0년 1월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는 증가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수급자 증가의 주요한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자산 기준만 고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와 폐지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가족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2020년 1월부터 수급권자가 중증 장애인, 노인·한부모 가구인 경우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수, 2016.01~2021.11

(단위: 천 명)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수급가구 수, 수급자 수 월간자료(<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frame.do?datsNo=1&datsCINo=1011&datsCCrit=WS>, 2022.01.13. 인출)
 주 : 수급자 수는 중복 수급을 포함함



2 ZERO HUNGER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SDGs 2번 목표는 기아종식뿐 아니라 충분한 양의 식량 공급 및 소비를 넘어 양질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식량생산체계 확보를 지향한다. 기아와 영양부족 근절은 현대대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다. 현재 지구상에는 인류 전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지만, 세계 기아 인구는 2020년 8억 10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아 인구가 전년보다 약 1억 3000만여 명 증가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는 식품 공급의 안정성과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식 및 식품산업 위축으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물론이며, 국내 농산물 및 식품 공급의 안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food accessibility) 수준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영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식품섭취의 양적 충족과 함께 질적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은 쌀 이외 주요 작물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국내 생산 기반 확보와 함께 국제시장에서 곡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식품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국내 생산 기반에 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경지면적, 농업 인력 등 농업 생산 기반의 안정적 확보와 보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농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핵심 생산 수단으로 양적인 측면은 물론이며, 토양을 비롯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관리와 보전이 요구된다.

영양섭취부족 비율 및 식품 안정성 미확보 비율의 소득계층 간 격차 확대

현대 사회는 경제성장, 식품산업의 발전, 그리고 식품 무역의 확대로 영양소섭취 측면에서는 부족의 시대에서 과잉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영양소섭취부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영양섭취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량의 75% 미만인 반면 칼슘과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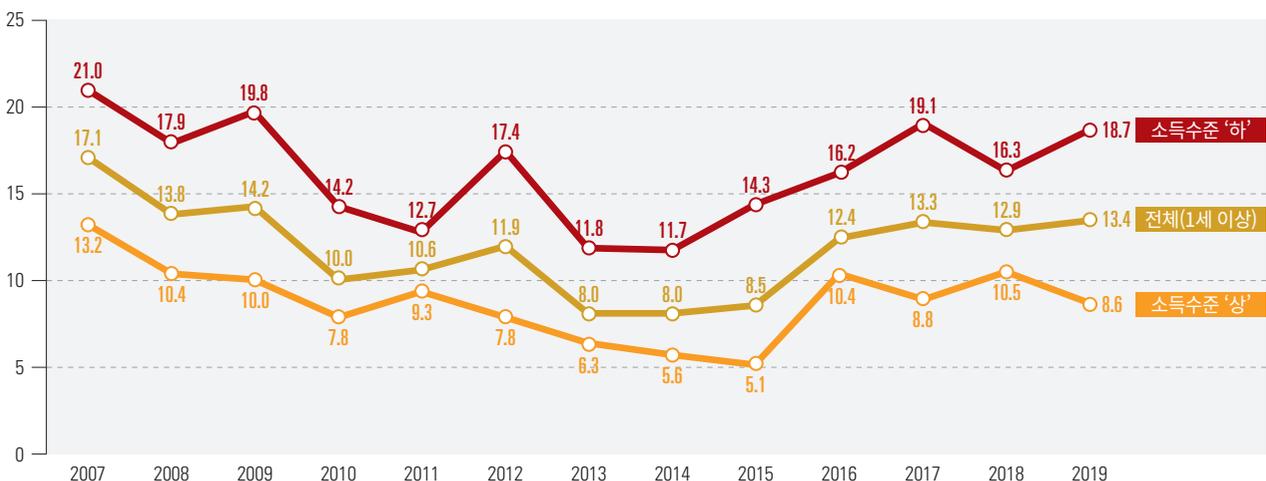
2019년 현재 영양섭취부족자 비율(1세 이상)은 13.4%다.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2007년 17.1%에서 2014년 8.0%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증가해 최근에는 12~13% 수준을 보인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소득수준 ‘상’에서는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8.6%며, 소득수준 ‘하’에서는 18.7%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전 기간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9~29세가 19.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70세 이상(18.9%)과 10~18세(16.7%)가 따른다.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서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높은 현상은 모든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다만 2007년에 70세 이상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32.3%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2019년에는 70세 이상과 다른 연령집단들 간 차이가 확연

소득수준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07~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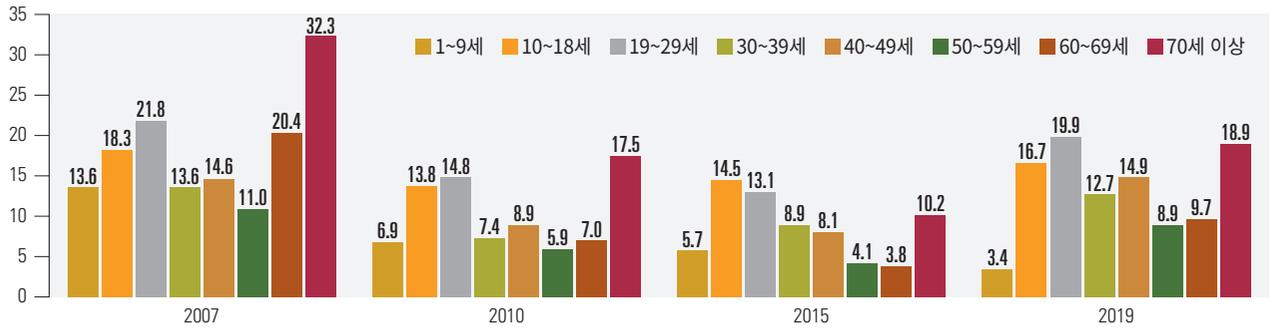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www.kosis.kr, 2021.12.23. 인출)



연령대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07~2019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www.kosis.kr, 2021.12.23. 인출)

소득수준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성별격차, 2007~2019

(단위: %p)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www.kosis.kr, 2021.12.23. 인출)
주 : 성별격차는 여성 비율에서 남성 비율을 차감한 수치임

히 줄어들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2019년 기준 남성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10.1%고 여성은 16.7%로, 여성이 6.6%p 더 높다. 여성의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물론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2007년 11.7%p였던 것이 2017년에 5.3%p까지 좁혀졌다가 2018년에 9.1%p로 증가해 2019년 6.6%p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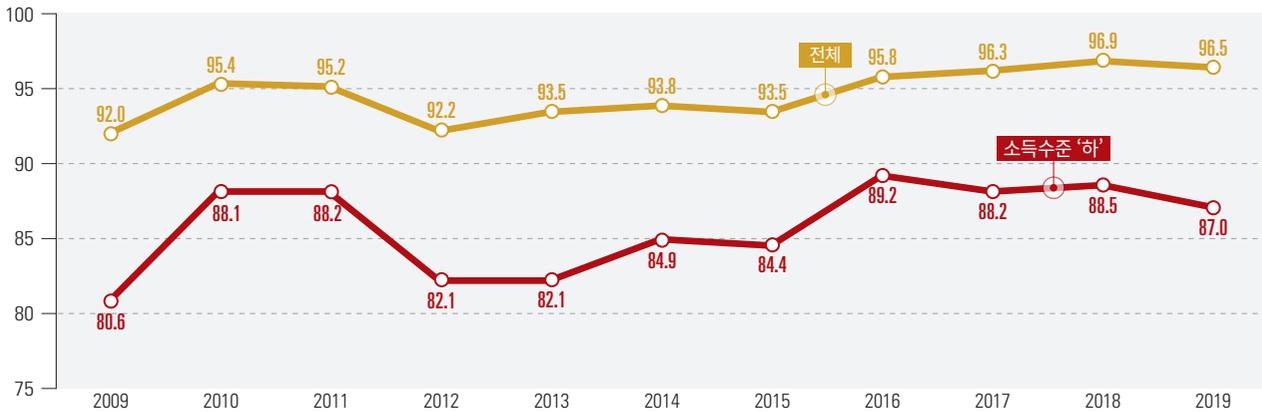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식품 부족, 결식, 영양섭취 불균형 등의 문제는 주로 경제적 취약 계층에 집중된다. 게다가 저소득층의 식료품비 지출 비중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국민건강영

양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득수준 하위 가구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 비중은 87.0%로 전체 96.5%에 비해 9.5%p 낮다. 전체 가구와 하위 가구 간 격차는 2010년대 들어 증감을 거듭하며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6년에 6.6%p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최근으로 오면서 확대되고 있다.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소득 증가 및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으로 절대적 기아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먹거리 보장은 아직 미흡하다. 한국 사회에서 식량안보 개념은 과거의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구축(식량자급률 제고)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의 공급으로 변화해 왔다. 정부는 변화한 식량안보 개념에 맞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식량안보 확보의 관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의 양적 충족과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

식품 안정성 확보가구 비율, 2009~2019

(단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www.kosis.kr, 2021.12.23. 인출)

주 : 식품 안전성 확보가구비율(%) : 가구원 중 식품 구매를 담당하는 1인에게 최근 1년간의 가구 식생활 형편을 물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로 답한 비율을 의미함

의 음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경지면적 감소 추세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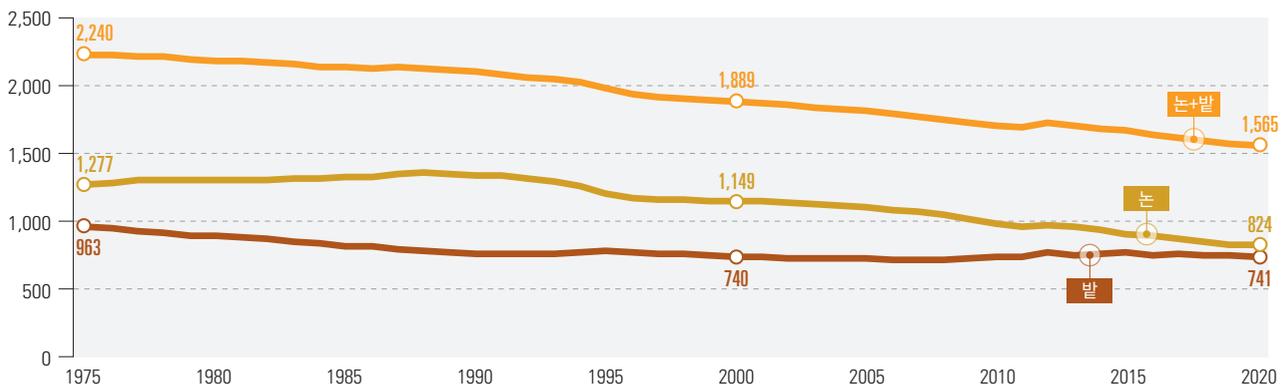
농지는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한 핵심 생산 수단이다. SDGs 2번 목표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시스템을 보장하고 복원력 있는 농업활동 이행에 관심을 두고 경지면적 비율을 주요 지표로 다룬다. 농지의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관리·보전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건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를 주택용지나 공업용지로 전용해 왔으며, 그 결과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한국의 전체 국토면적은 2007년 약 997만 2000ha에서 2019년 약 1004만ha로 증가했다. 반면 농지는 개간·간척 등 신규 확

보보다 전용이 더 많이 이루어져, 전체 경지면적은 2000년 약 189만ha에서 2020년 약 157만ha로 감소했다. 전체 국토면적에서 경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9.3%에서 2019년 15.7%로 감소했다. 경지면적 감소는 주로 논면적 감소에서 기인한다. 논으로 이용된 경지의 면적은 2000년 약 115만ha에서 2020년 약 82만ha로 줄었다. 밭으로 이용된 경지는 같은 기간 약 74만ha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지면적도 감소 추세에 있다. 한국의 전체 국토 중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3%에서 2018년 15.9%로 감소해 온 것처럼, 동기간 일본의 경지면적 비중도 12.8%에서 11.7%로, 미국은 18.5%에서 16.3%로, 캐나다는 4.2%에서 3.9%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만 동기간 13.6%에서 14.1%로 소폭 증가했다.

경지면적 변화 추이, 1975~2020

(단위: 천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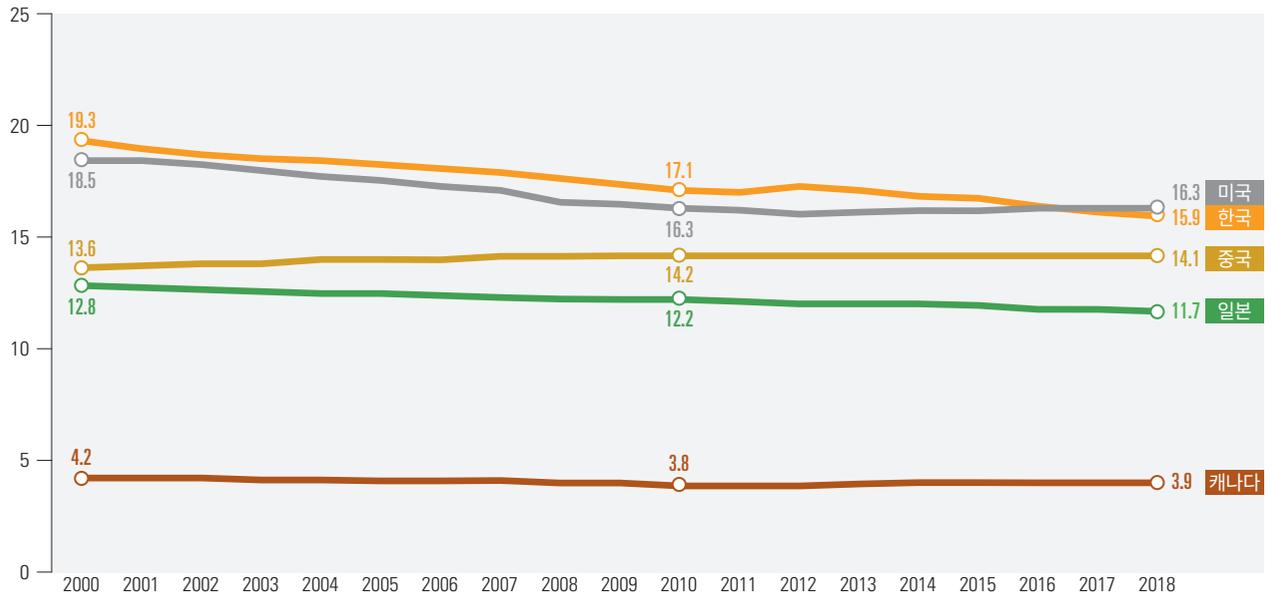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농업면적조사(www.kosis.kr, 2021.10.15. 인출)



주요 국가별 경지면적 변화 추이, 2000~2018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2020(한국), FAOSTAT(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101&conn_path=13, 2021.04.19. 인출)
 주 : 주요 국가들의 국토면적 및 경지면적 수치로 비중 계산함

쌀 이외 곡물자급률의 지속적 감소

세계적으로 인구증가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사료곡물 수요 증가로 국제곡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비식용곡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곡물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혹은 저온현상과 국지적 홍수·가뭄이 빈발하는 등 전 지구적인 기상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제곡물 공급의 불안정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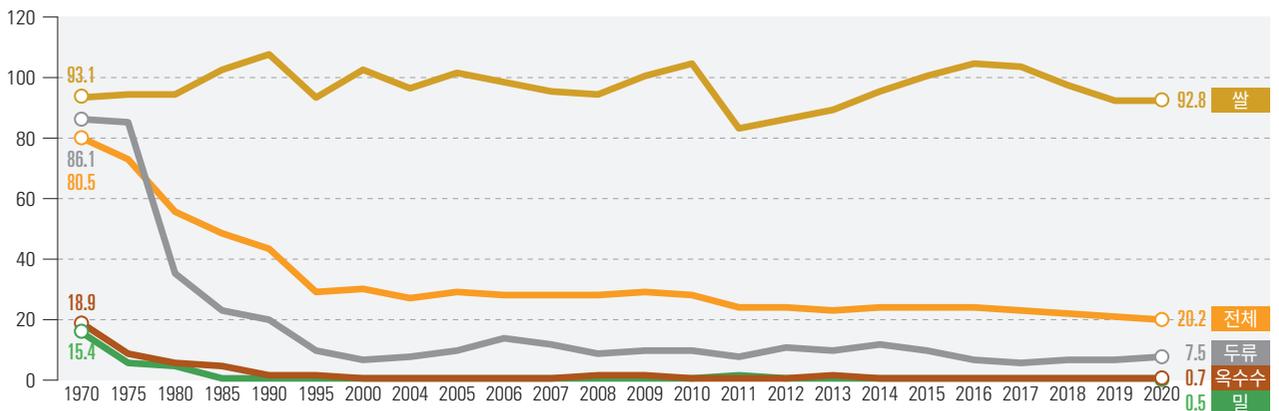
한국은 대표적인 곡물수입국으로 곡물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에 불과하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자급률이 급격히 낮아진 추세가 지속된 결과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 달했으나, 1995년 29.1%로 낮아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다. 주식인 쌀은 90%가 넘는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밀은 0.5%, 옥수수 0.7%, 두류 7.5% 등으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낮다.

주요 국가들의 곡물자급률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2000년 133.1%, 2010년 119.6%, 2020년 120.1%로 나타났으며, 캐나다는 같은 기간에 160.7%, 156.8%, 192.0%로 나타나 곡물자급률 100% 이상의 곡물수출국이다. 또

곡물자급률 추이, 197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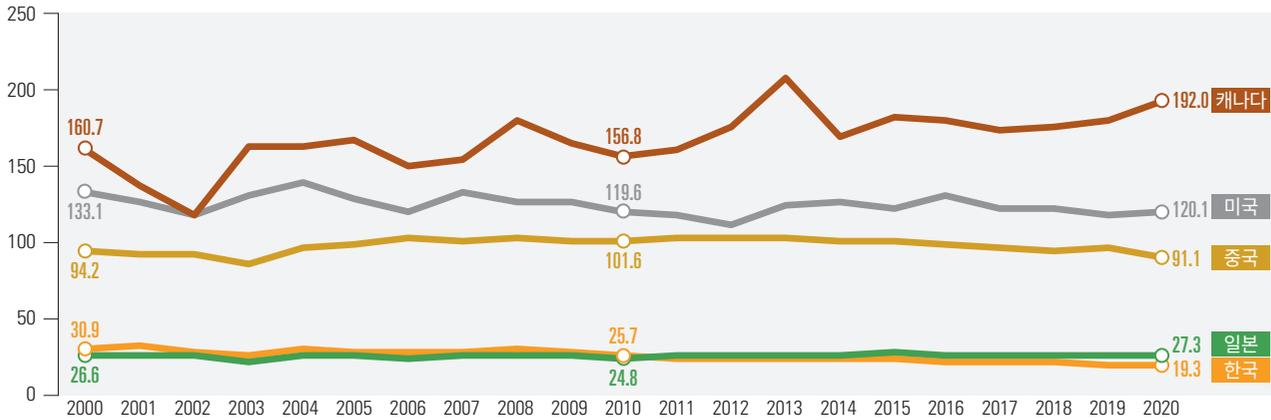
(단위: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각 연도
 주 : 2020년 데이터는 잠정치. 양곡년도(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기준임

주요국 간 곡물자급률 비교, 2000~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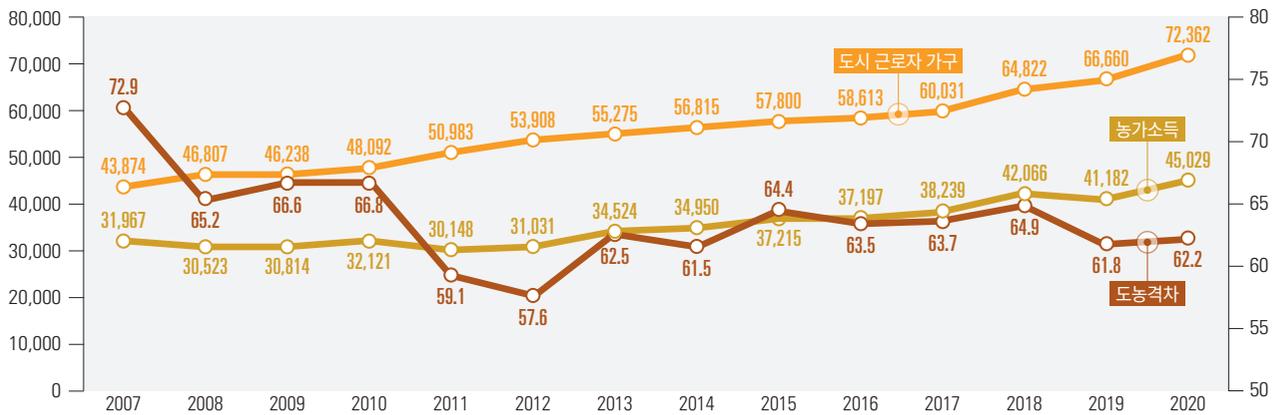


출처: FAO, AMIS(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https://app.amis-outlook.org/#/market-database/custom-query>, 2021.11.13. 인출)

주 : AMIS의 국가별 생산량(production)과 소비량(domestic utilization) 자료를 활용해 자급률(생산량/소비량×100)을 계산함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농가소득 간 격차율, 2007~2020

(단위: 천 원, %)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및 가계동향조사(분기), 각 연도

주 : 도농 간 소득격차는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로 계산함. 여기에서 농가소득의 경우 매년 농가경제조사(2인 가구 이상)의 연간 소득을 활용했으며,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2인 가구 이상)은 월평균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해 두 소득치를 비교함

한 중국은 같은 기간에 94.2%, 101.6%, 91.1%로 곡물자급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곡물자급률은 2000년 26.6%, 2010년 24.8%, 2020년 27.3%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지속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 주체인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농업소득은 농업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기상 여건 변화, 농산물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농외소득은 겸업소득, 근로소득 등 농업 이외 활동에서 올리는 소득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농가가 고령화됨에 따라 활발한 소득 창출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반면,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

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정부의 각종 지원금(각종 연금, 직불금 등)이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가의 소득수준을 도시 근로자와 비교하면, 2007~2020년 동안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은 연평균 3.9%씩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2.7%씩 증가해,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도농 간 격차율은 2007년 72.9%에서 2012년 57.6%까지 낮아졌고, 최근에는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농가소득수준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62.2%에 머물러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 주체의 소득 변동성을 약화시켜 소득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타 산업 분야 종사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농가소득 안정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3 GOOD HEALTH AND WELL-BEING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SDGs 3번 목표는 전 인류의 '건강권' 보장을 지향하며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오랜 기간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감염병(결핵, 말라리아, HIV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춰 왔다. 최근에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2019년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에서는 보편적 의료 보장(UHC) 달성이 세계적인 목표로 내세워졌다. UHC는 강건하고 회복력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지역사회가 경제적 부담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가 공동의 목표(MDGs, SDGs)를 세우고, 각종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도전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보건의료제도를 운영하는 데 핵심 기반이 되어 온 보건의료 인력은 여전히 국가 간, 지역 간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19는 국내외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야기하고,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켰다. 특히,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로 간주되는 백신 접종은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SDGs가 추구하는 모든 이의 건강과 안녕의 달성을 위협한다.

이 장에서는 UHC 서비스보장지수(UHC service coverage index)와 이를 구성하는 4개의 세부영역과 관련된 지표들을 통해 건강 SDGs의 이행수준을 점검한다. 보건의료 인력과 백신은 UHC를 달성하고, SDGs를 이행하는 데 기본 요소가 되는 만큼 두 지표의 글로벌 현황도 함께 살펴본다.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한다.

한국의 보편적 의료 보장 서비스보장 수준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보건의료 인력은 여전히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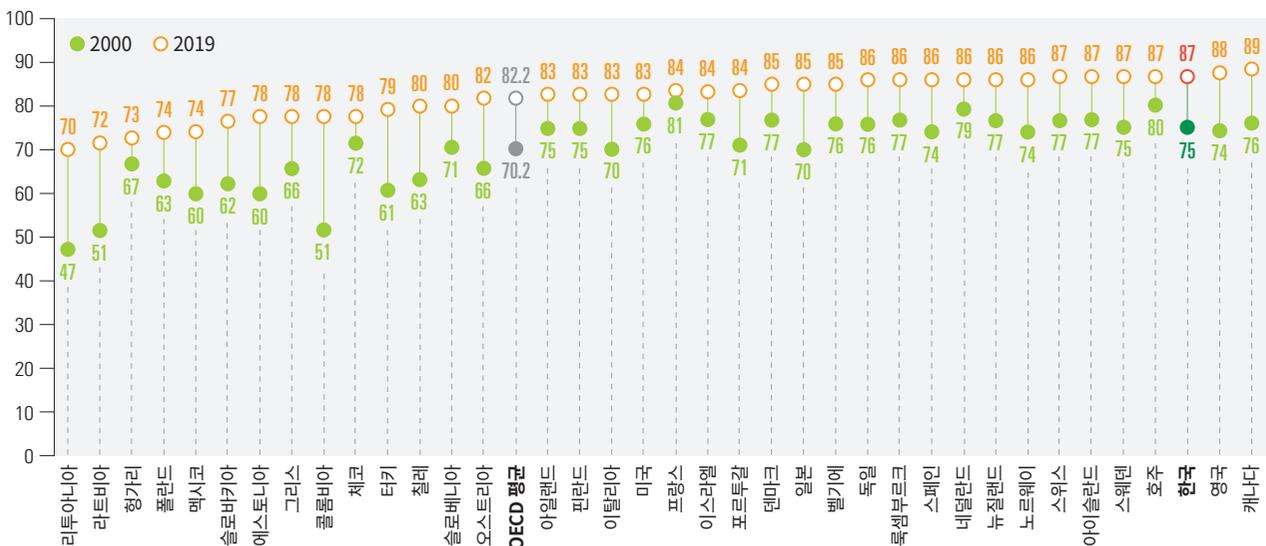
2019년 한국의 UHC 서비스보장지수는 87점이다. 이는 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최초 시점인 2000년(75점)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이다. 모든 OECD 국가에서 과거에 비해 지수가 향상된 가운데, OECD 평균도 2000년 70.2점에서 2019년 82.2점으로 높아졌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보

다 UHC 서비스보장지수가 높은 국가는 캐나다(89점), 영국(88점)뿐이다.

UHC 서비스보장지수는 출산,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서비스 제공역량 및 접근성 등 4개 영역과 16개 필수 의료서비스의 보장 수준과 형평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비록 UHC의 달성 정도는 건강 SDGs의 세부지표 중 하나인 UHC 서비스보장지수로 모니터링 되지만, 이는 건

UHC 서비스보장지수, 2000, 2019

(단위: 점)



출처: WHO, 2021, Track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2021 Global monitoring report; UN SDG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unsdg>, 2022.01.13. 인출)



UHC 서비스보장지수의 세부영역 및 한국 점수

영역	필수 의료서비스	SDGs 연관 세부목표	영역별 점수 (2019년)
출산, 산모, 신생아 및 소아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계획 • 산전 및 분만관리 • 소아 예방 접종 • 폐렴 건강관리 행태 	SDGs 3.1 SDGs 3.2 SDGs 3.7	94
감염성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 치료 • HIV 항바이러스 치료 • 말라리아 예방(살충제 모기장 사용) • 적절한 위생 	SDGs 3.3	89
비감염성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압 상승 예방 및 치료 • 혈당 상승 예방 및 치료 • 자궁경부암 검진 • 비흡연 	SDGs 3.4 SDGs 3.a	70
서비스 제공역량 및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접근 • 보건의료 인력 밀도 • 필수 의약품 접근 • 보건 안보: 국제보건규정(IHR) 준수 	SDGs 3.c SDGs 3.d	99

출처: WHO database(<https://www.who.int/data/gho/data/themes/topics/indicator-groups/indicator-group-details/GHO/universal-health-coverage-index>, 2021.10.11. 인출)

강 SDGs의 여러 세부목표를 포괄한다. 한국은 UHC 서비스보장지수가 높은 만큼, 이를 구성하는 세부영역 각각도 성취수준이 좋은 편이다. 그럼에도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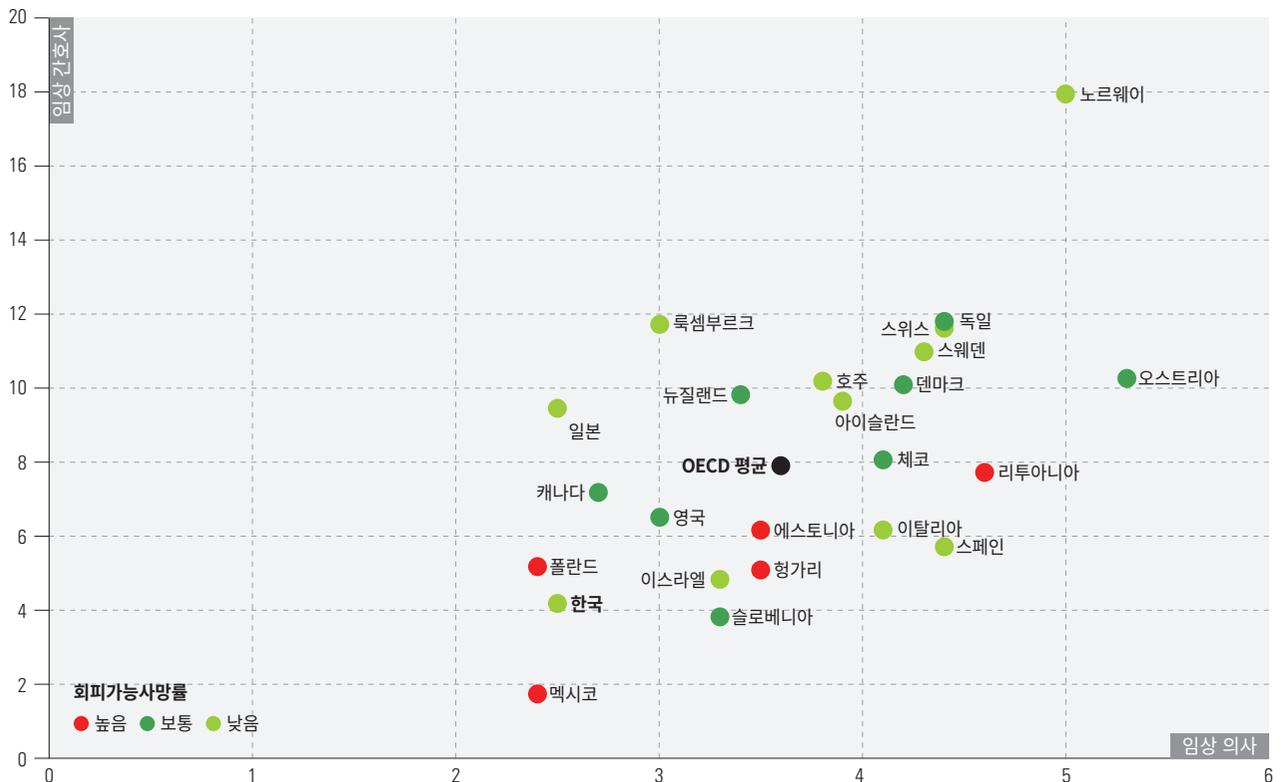
가와 비교했을 때, 관리가 필요한 지표도 있다. UHC 서비스보장지수를 구성하는 각 영역별로 개선이 요구되는 건강 SDGs의 세부목표를 살펴봐야 한다.

보건의료 종사자는 보건의료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요소다. 보건의료 인력이 없으면 일상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으며,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 상황에도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없다. 2019년 한국의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이고, 임상 간호사는 4.2명이다. 한국은 OECD 국가(임상 의사 3.6명, 임상 간호사 7.9명)와 비교해서 보건의료 종사자가 부족한 편이다. 한국보다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폴란드(2.4명)와 멕시코(2.4명)뿐이다. 반면 노르웨이(5.0명)와 오스트리아(5.3명)는 인구 1000명당 5명을 넘어섰다. 한편, 임상 간호사는 멕시코(1.7명)와 그리스(2.0명)에서 적고, 스위스(11.6명), 룩셈부르크(11.7명), 독일(11.8명), 노르웨이(17.9명)에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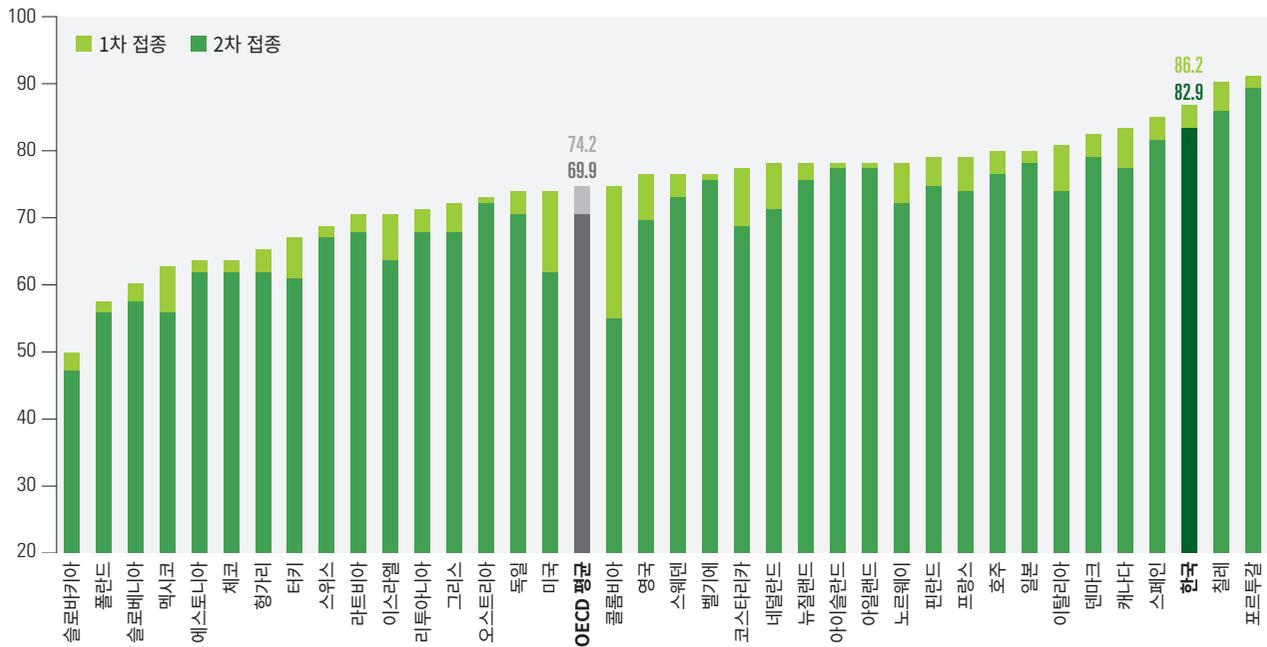
의사와 간호사가 많은 국가에서 질병 예방 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막을 수 있는 회피가능 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이 낮은 편(그래프의 연두색 점)

OECD 국가별 임상 의사와 임상 간호사 분포, 2019

(단위: 천 명당 명)



출처: OECD Statistics, Health Care Resources(2021.09.10. 인출)
 주1 : 덴마크, 일본, 스웨덴은 2018년, 룩셈부르크, 폴란드는 2017년 데이터임
 주2 : 회피가능사망률은 Health at a glance 2021(OECD, 2021: 3)을 기준으로 함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2022.01.13. 인출); <https://www.oecd.org/coronavirus/en/vaccines>
 주1 : 콜롬비아는 2021년 12월 31일, 스웨덴·헝가리·아이슬란드는 2021년 12월 30일, 스페인은 2021년 12월 29일, 일본은 2021년 12월 28일, 포르투갈은 2021년 12월 27일 기준임
 주2 : 룩셈부르크의 경우 최근 2차 접종 정보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함

으로 확인되는 만큼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국가 간 차이 커

백신 접종은 가장 성공적인 공중보건학적 개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규 감염병에 대한 대처에서는 백신의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시의적절한 개입을 위해서 빠른 도입이 요구되지만, 안전성과 효과성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 OECD 국가는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많은 저소득 국가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인해 접종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지연을 경험하게 된다.

2022년 1월 1일 기준 OECD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74.2%, 2차 69.9%다. 한국은 각각 86.2%, 82.9%다. 1차 접종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국가(슬로바키아)가 있는 반면, 80%를 넘어선 국가(이탈리아, 덴마크, 캐나다, 스페인, 한국, 칠레, 포르투갈)도 있다. 1차 접종률과 2차 접종률의 차이는 국가마다 편차가 크다. 일본,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벨기에에는 1.5%p 미만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콜롬비아와 미국은 10%p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중 가장 높아

보편적 의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는 관련 지표를 통해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불 능력(가계 총소득이나 총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이 10% 또는 25%를 넘어가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한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중이다. 한국은 2015년을 기준으로 소비 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10%를 넘어서는 가구가 21.8%, 25%를 넘어서는 가구가 3.9%에 이른다. 한국은 자료가 분석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중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 전후로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암,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경감해 주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된다. 하지만 한국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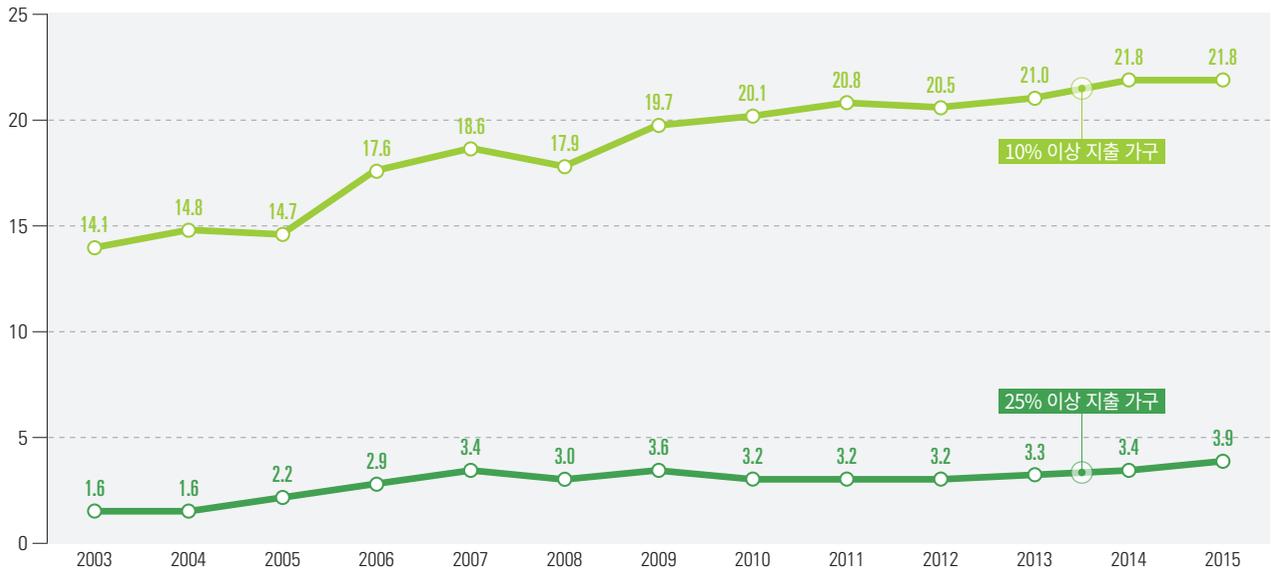
한국의 신생아 사망률은 매우 낮은 수준

신생아 사망은 대체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한다. 양질의 산



한국의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중 추이, 200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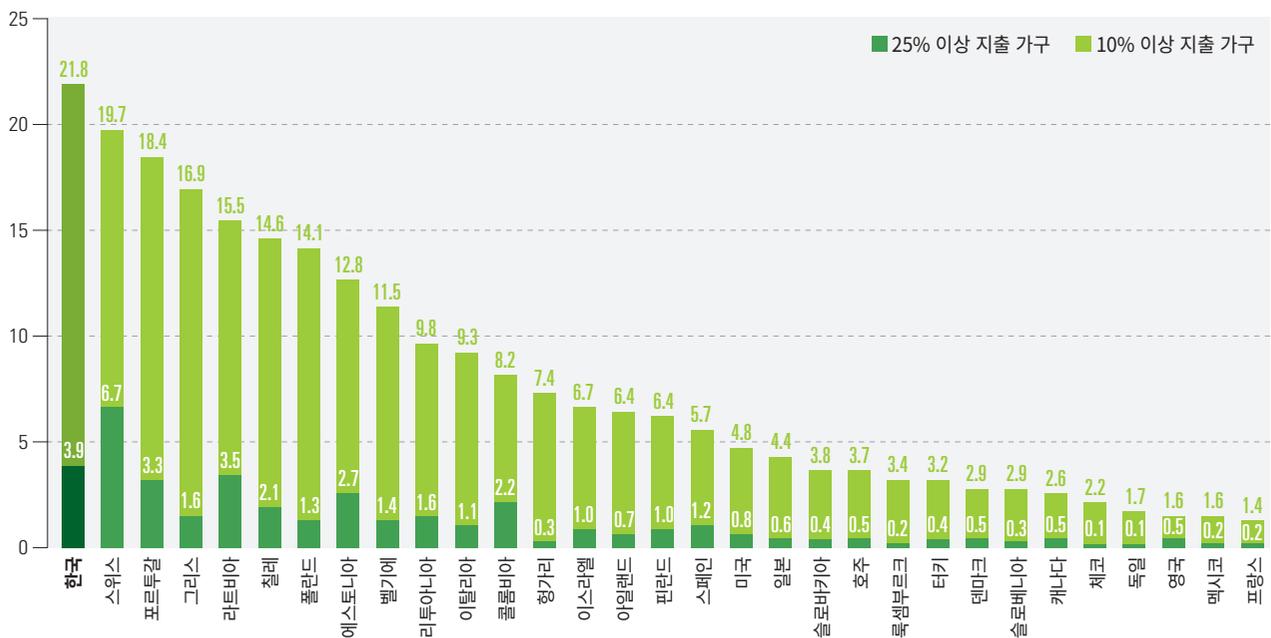
(단위: %)



출처: UN SDG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unsdg>, 2021.09.10. 인출)

OECD 국가별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중

(단위: %)



출처: UN SDG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unsdg>, 2021.09.1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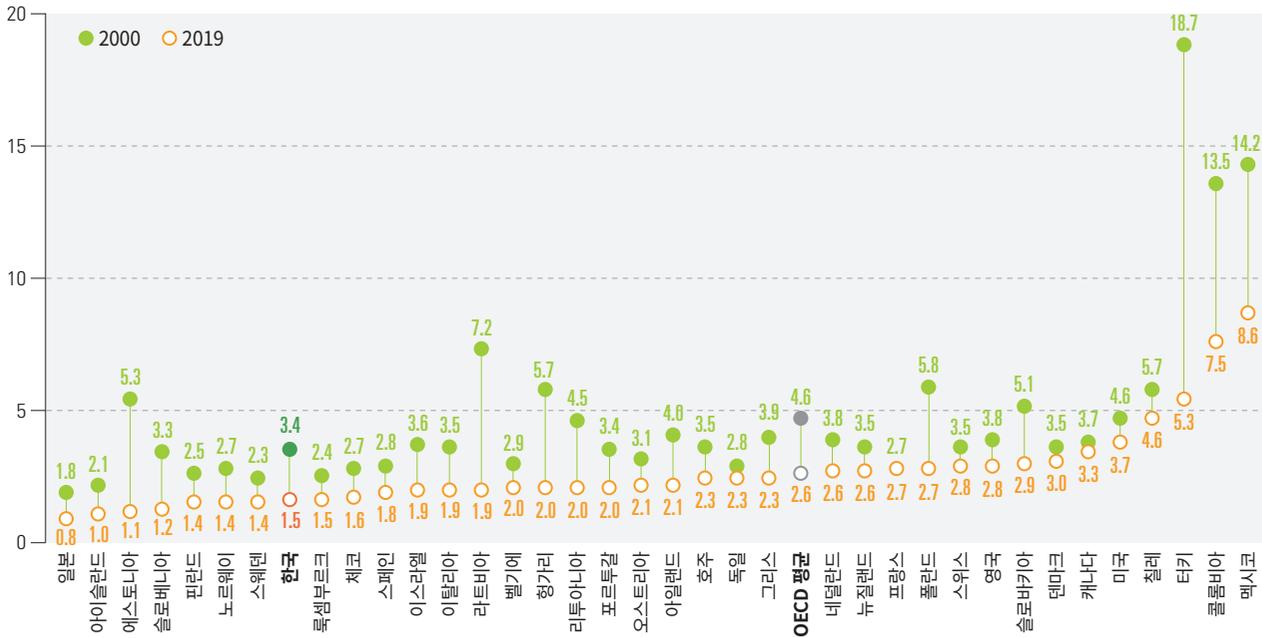
주 : 데이터 연도는 국가별로 상이함. 대부분 국가의 데이터는 2010~2016년 사이에 분포하며, 스위스 2004년, 에스토니아 2007년, 라트비아 2009년임

전 및 산후 관리, 돌봄서비스를 통해 신생아의 생존과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2019년 한국의 신생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5명으로 OECD 국가평균인 2.6명보다 낮다. 이는 2000년 3.4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한국보다 신생아 사망률이 낮은 국가는 일본

(0.8명), 아이슬란드(1.0명), 에스토니아(1.1명), 슬로베니아(1.2명), 핀란드(1.4명), 노르웨이(1.4명), 스웨덴(1.4명)뿐이다. 신생아 사망률이 낮은 것과 함께, 5세 미만 사망 중 신생아 사망 비율이 낮은 것도 하나의 성과다. 이는 신생아의 위험 노출이 적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5세 미만

OECD 국가별 신생아 사망률, 2000,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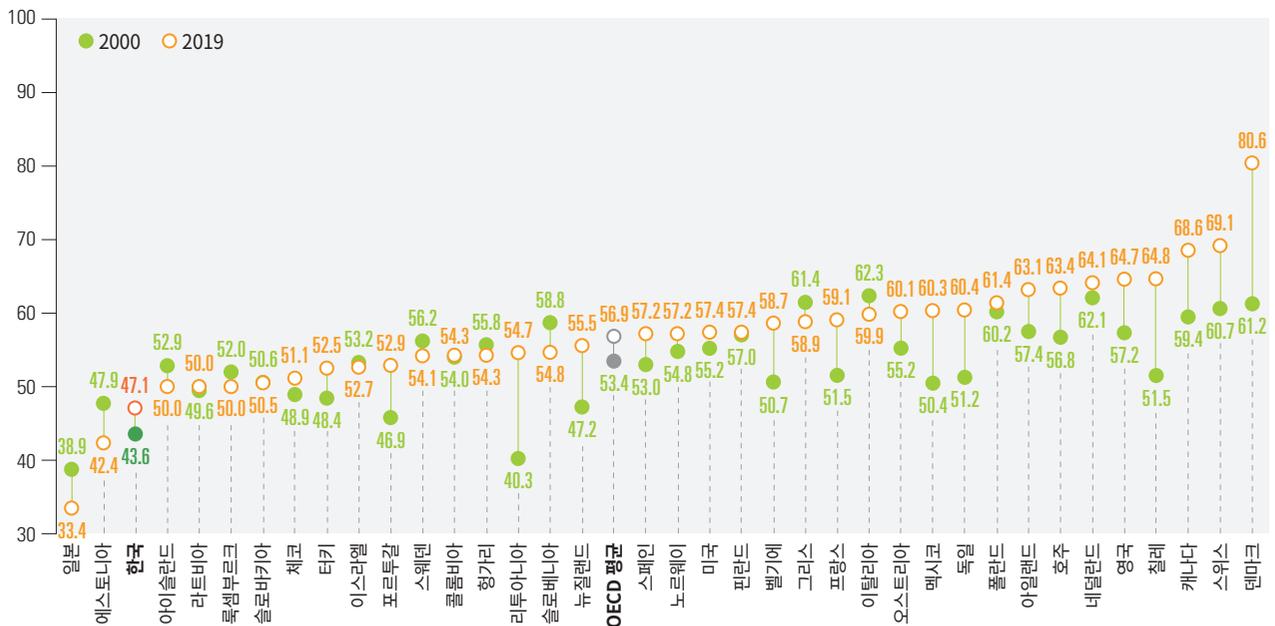
(단위: 출생아 천 명당 명)



출처: UN SDG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unsdg>, 2021.09.10. 인출)

OECD 국가별 5세 미만 사망 중 신생아 사망 비율, 2000, 2019

(단위: %)



출처: UN SDG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unsdg>, 2021.09.10. 인출)

사망 중 47.1%만이 신생아 기간에 발생한 가운데, 일본(33.4%)과 에스토니아(42.4%)에 이어서 그 비중이 세 번째로 낮다. 다만, 한국의 수치는 이들 국가와 달리 2000년(43.6%)과 비교해서 3.5%p 상승해, 신생아의 위험 관리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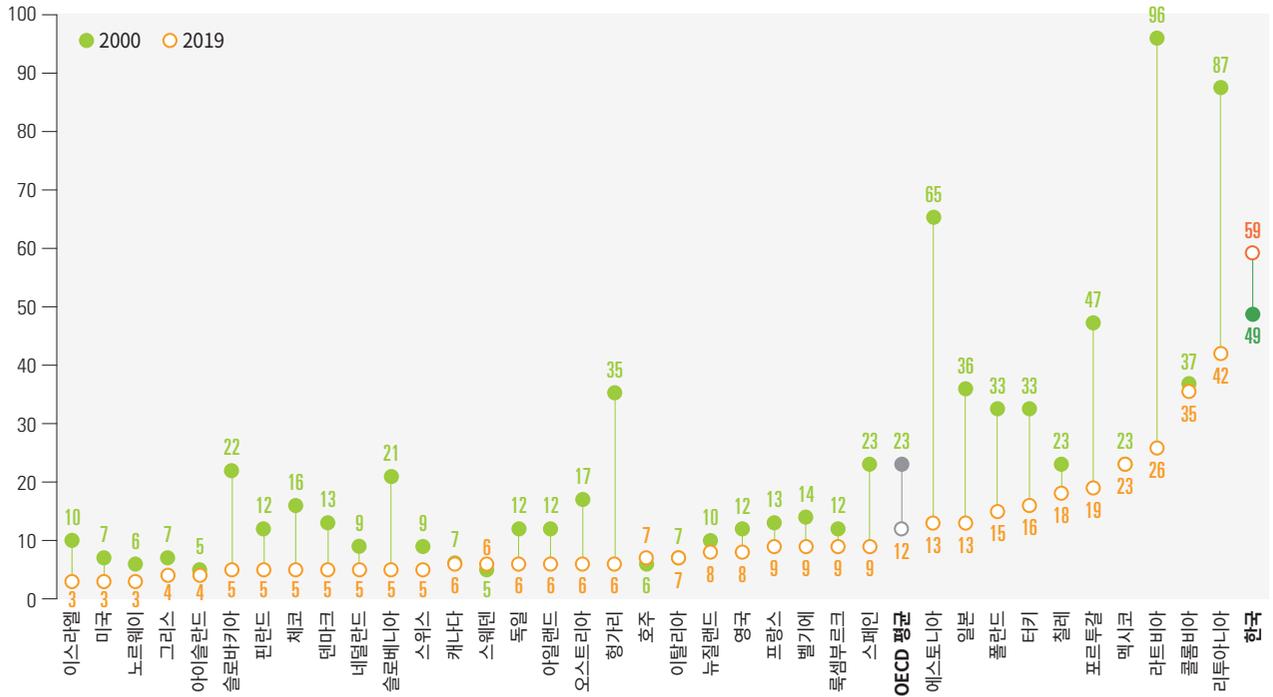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여타 OECD 국가와 달리 증가 추세

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결핵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운용 중이며, 이를 통해 결핵 발생률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0% 줄이고자 한다. 물론, 이 수치는 전 세계적인 목표로 개별 국가가 그대로 이



OECD 국가별 인구 1만 명당 결핵 발생률, 2000, 2019

(단위: 만 명당 명)



출처: UN SDG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unsdg>, 2021.09.10. 인출)

루어 내기란 쉽지 않지만,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의 2019년 결핵 발생률은 인구 1만 명당 59명으로 2000년(49명)에 비해 증가했다. 더욱이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지난 20여 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결핵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국내 정책이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의 추이라면, 203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결핵 관리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은 다소 비관적이다. 결핵 발생률을 목표한 수치로 줄이고, ‘결핵 없는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핵 예방,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 치료, 사후 관리의 전 과정에서 효과적인 중재가 가능한 견고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자살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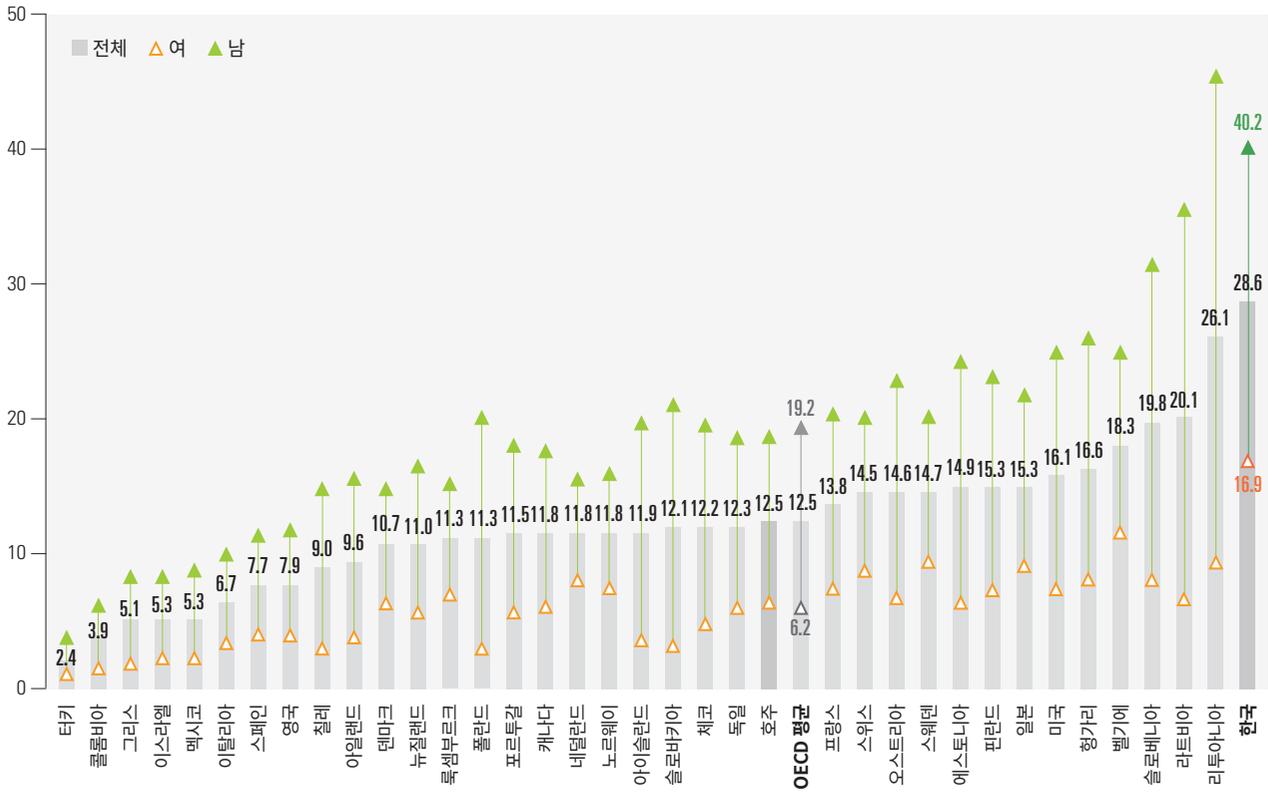
자살은 정신 질환(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사회관계 약화, 만성 질환 등 삶 속의 여러 위기 속에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이는 갈등, 폭력, 학대, 상실과 같은 좋지 못한 경험과 고립감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한다. 자살

률이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개인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19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6명으로 OECD 국가(평균 12.5명) 중에서 가장 높다. 터키(2.4명), 콜롬비아(3.9명), 그리스(5.1명), 이스라엘(5.3명), 멕시코(5.3명)는 자살률이 낮고, 한국을 비롯해 리투아니아(26.1명), 라트비아(20.1명), 슬로베니아(19.8명), 벨기에(18.3명)는 높다. 한편, 자살률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남자의 자살률(19.2명)이 여자(6.2명)에 비해서 3배가량 높은 가운데, 성별에 따른 편차가 5배를 넘는 국가(폴란드,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도 있다. 한국은 남자가 40.2명, 여자가 16.9명으로 남녀 간 차이가 2.4배에 이른다.

한국은 2000년에 OECD 국가평균보다 자살률이 낮았으나, 2000년대 중후반에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해 2010년 34.0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OECD 평균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자살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어느 지역에 살든지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로 보건의료적 중재만으로 줄여 나갈 수 없다. 향후 교육, 노동, 언론 등 사회 여러 분야 간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OECD 국가별 성별 자살률,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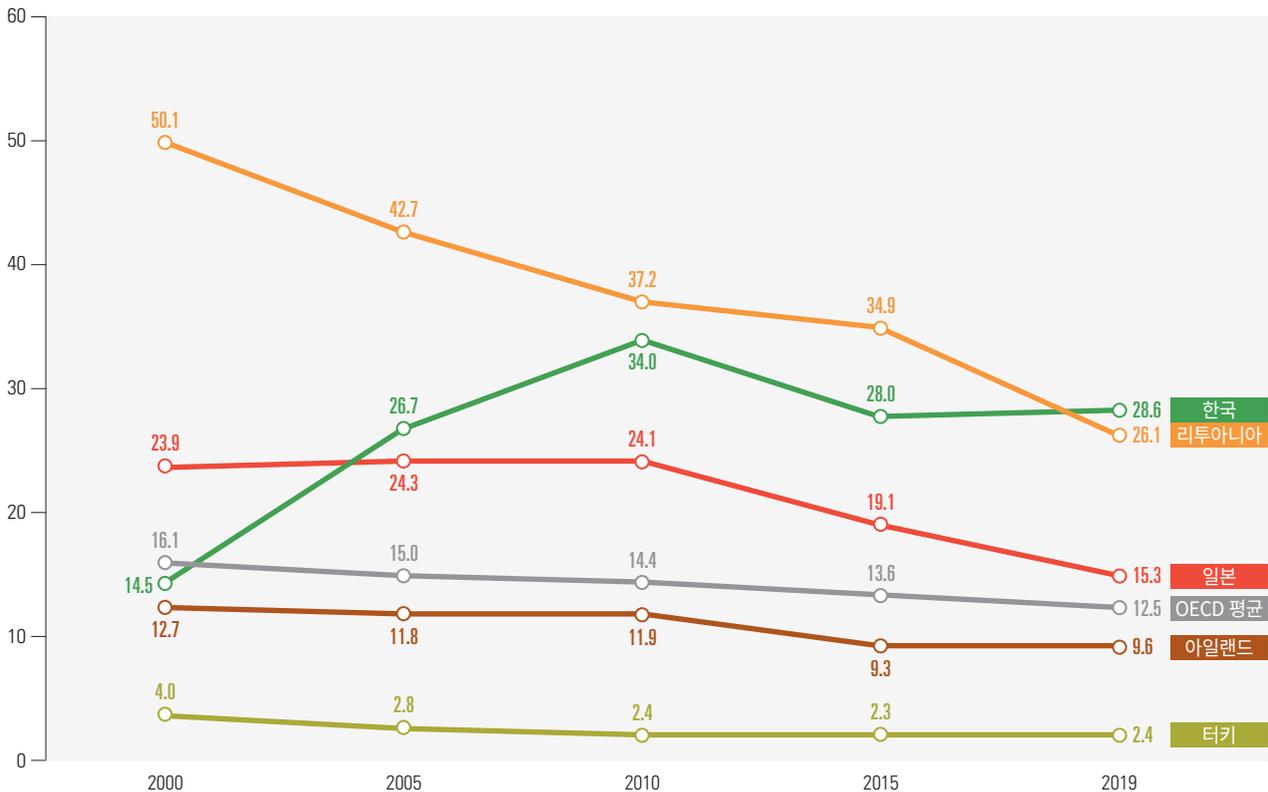
(단위: 십만 명당 명)



출처: UN SDG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unsdg>, 2021.09.10. 인출)

주요국별 자살률 추이, 2000~2019

(단위: 십만 명당 명)



출처: UN SDG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unsdg>, 2021.09.10. 인출)



4 QUALITY EDUCATION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SDGs 4번 목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내용의 질 좋은 교육 보장을 지향한다.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는 교육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많은 국가에서 학교 폐쇄와 수업 축소, 오프라인 수업의 한계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30개 국가의 2020년 한 해 동안 평균 학교 폐쇄 일수는 초등학교 54일, 중학교 63일, 고등학교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59일, 고등학교는 54일이었다. 이러한 교육 기회의 제한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결손에 대한 지적이 많다.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 지역, 장애 및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도 우려된다.

코로나19가 교육 분야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학교 교육에서 원격수업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원격수업은 학습기기(PC, 태블릿, 모바일 등)와 인터넷 환경, 학습 공간 등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의 학습 지원 정도나 학생들이 지닌 ICT 역량에 따라라도 학습격차가 커질 수도 있다. 저소득층 학생이나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각국 정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돕기 위해 PC/태블릿 등 기기 지원, 유연한 개별 맞춤형 학습 플랫폼 제공, 도서벽지 지역 학습자를 위한 인프라 확대, 장애 학생 지원, 통신 사업체와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협약, 저소득층 가정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추가 지원(학습꾸러미, 바우처 등), 이민자·난민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접근 확대를 위한 특별 지원, 소수 언어 사용 학생들을 위한 학습 자료 개발 등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 우려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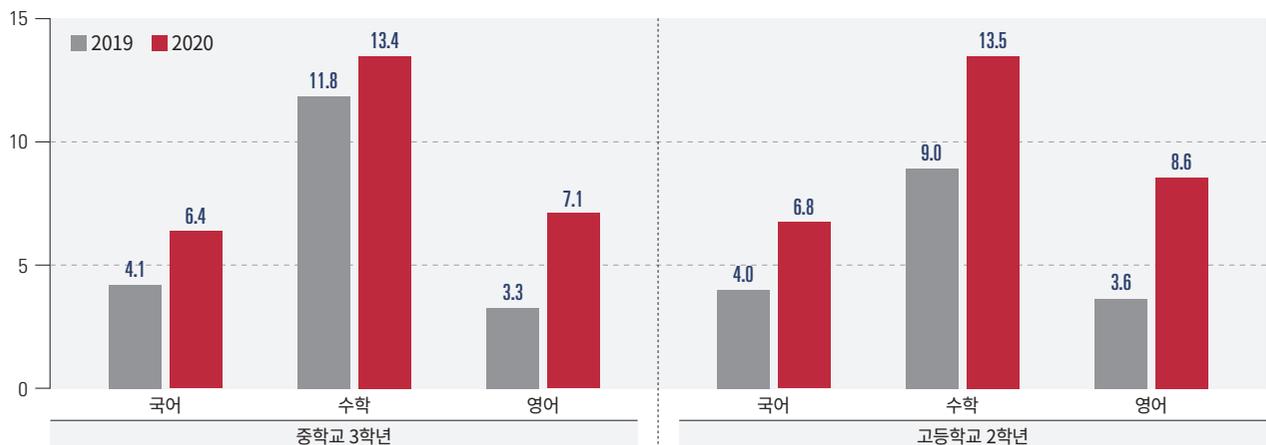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분야의 가장 큰 우려는 장기적인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능력 저하다. 코로나19가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미친 영향은 2020년 11월에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교과별 성취수준에서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은

중학교 3학년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영어에서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와 수학보다 더 증가했다. 중학교 3학년 영어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9년 대비 3.8%p 증가했으며, 고등학교 2학년 영어의 경우 5.0%p 증가했다. 이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우려처럼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 2019, 2020

(단위: %)



출처: 교육부,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보도자료(2021.06.01.), p.2. <표>를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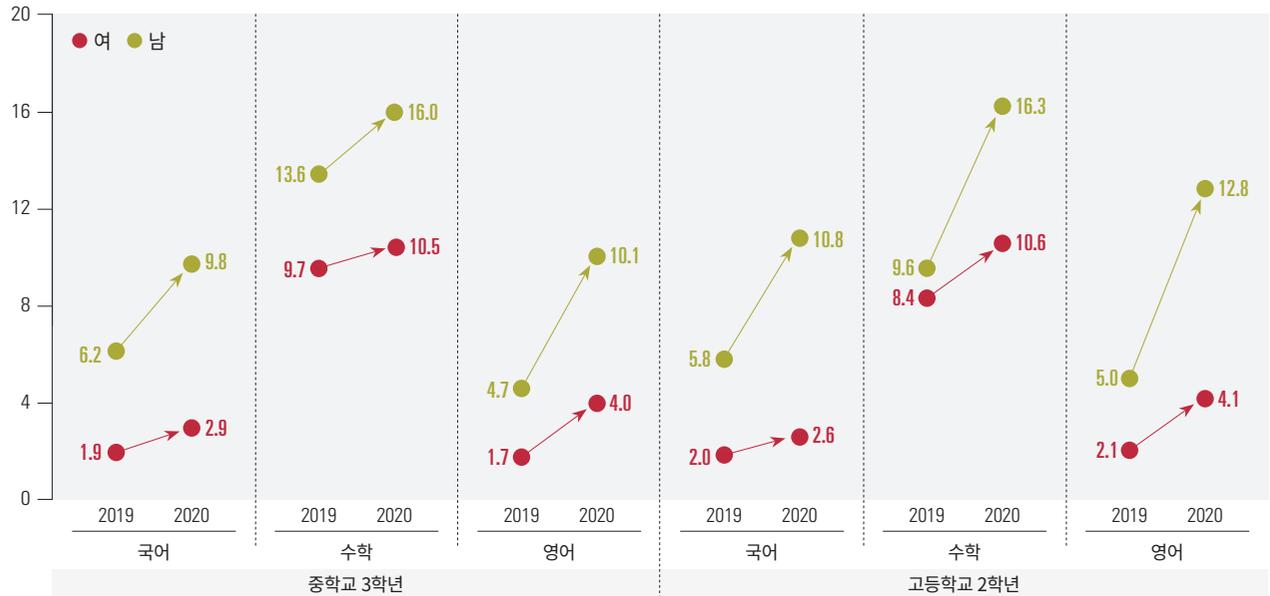
주1: 교과별 성취수준은 네 단계(4수준: 우수, 3수준: 보통, 2수준: 기초, 1수준: 기초학력 미달)로 구분됨

주2: 코로나19가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제 비교 데이터는 현재 없으며,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경계해 2020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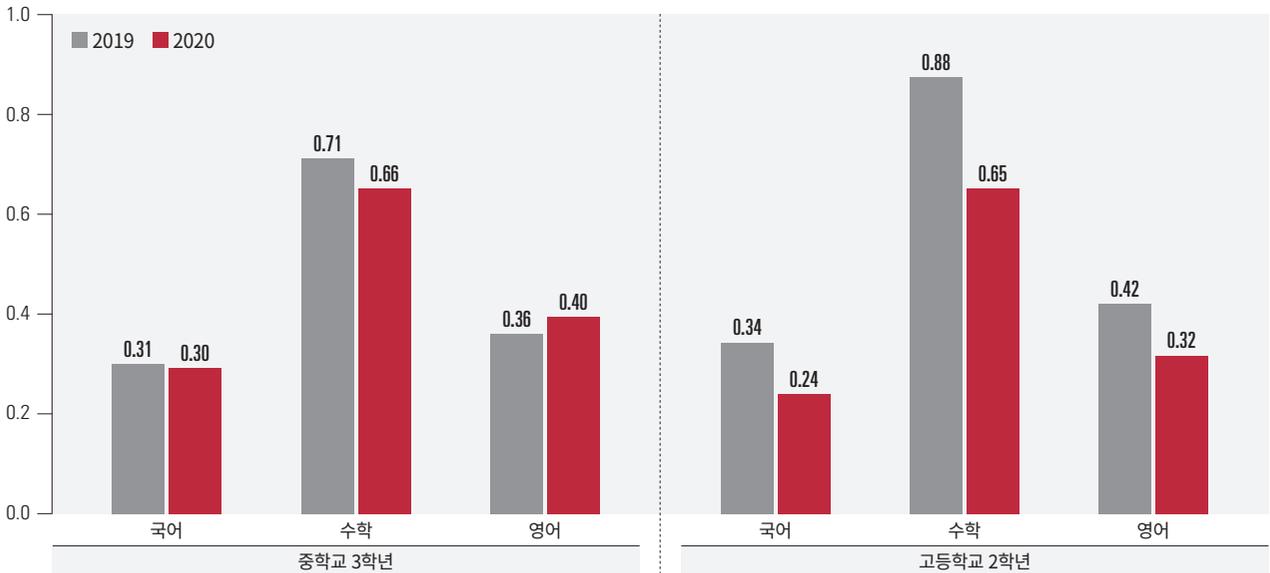
성별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 2019, 2020

(단위: %)



출처: 교육부,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보도자료(2021.06.01.), 별첨 p.3. <표>를 토대로 재구성
 주 : 표본조사로 해당 데이터는 모집단 추정치임

성별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에 대한 형평성지수, 2019, 2020



출처: 교육부,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보도자료(2021.06.01.)를 토대로 계산
 주 : 성별 형평성지수(여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 ÷ 남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전화해 산출. 형평성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두 집단 간 차이가 적음을 의미함

성별 학업성취도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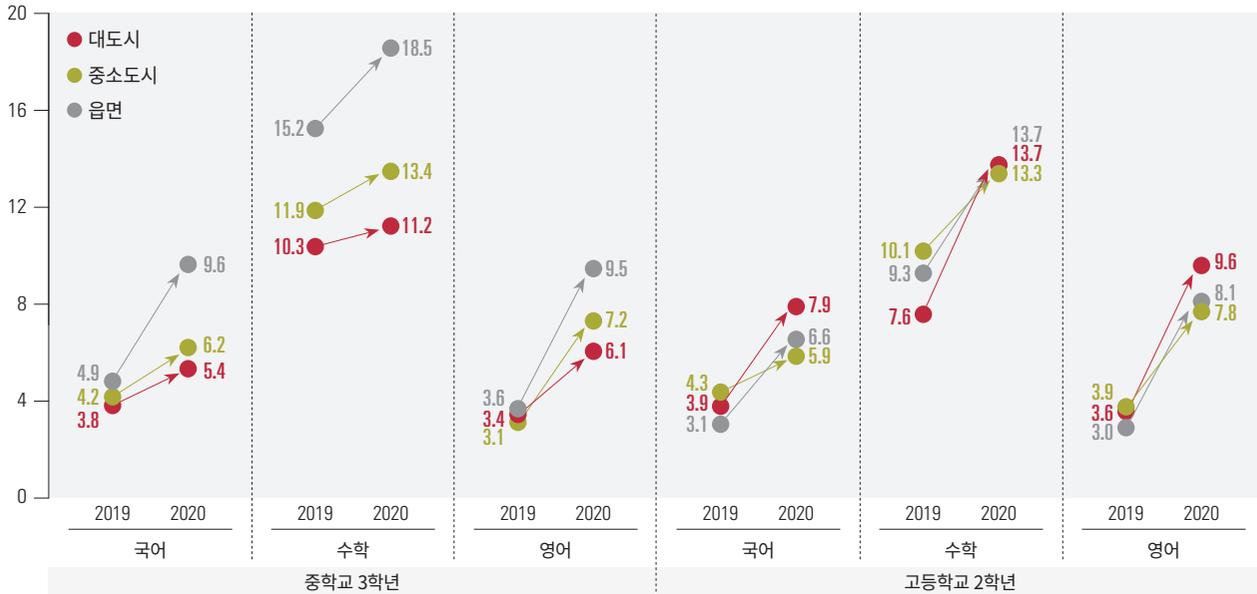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이라는 목표에 따라 SDGs 4번에서는 교육에서의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격차 해소를 세부목표(4.5)로 삼고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형평성지수(성, 도농, 소득

분위, 장애, 이주민, 분쟁 여부별) 산출을 제안하고 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성별, 지역 규모별 학업성취도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든 교과에서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전년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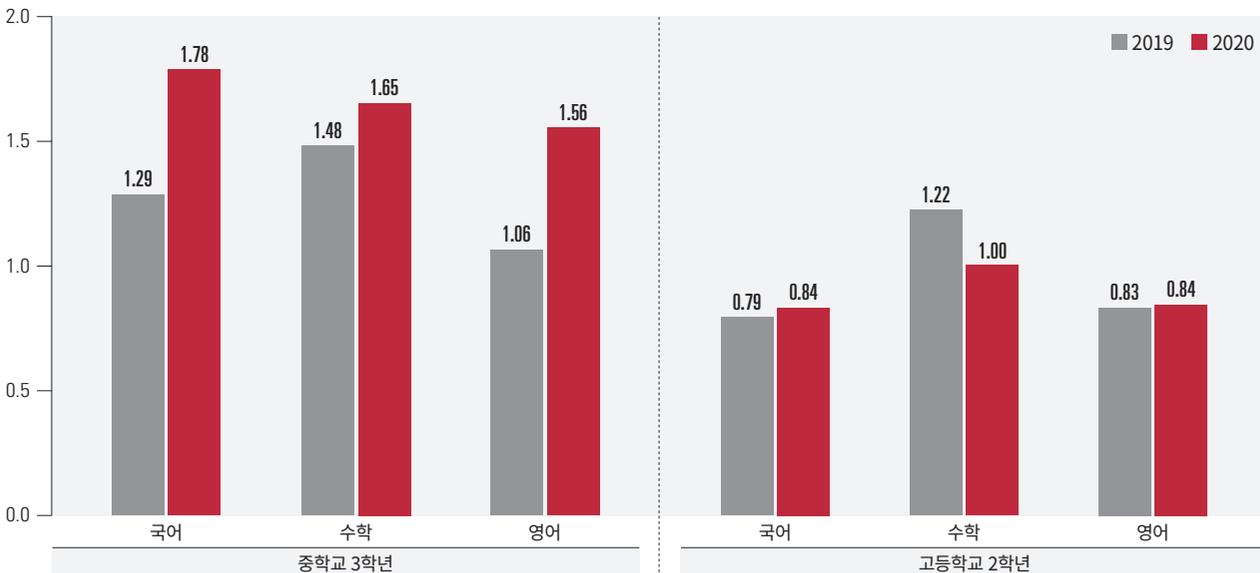
지역 규모별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 2019, 2020

(단위: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년 및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 세부내용은 서민희·김완수·김미림·한정아·손윤희(2020a: 32, 2020b: 33) 및 구남옥·김미림·이소라·곽민호(2021a: 32, 2021b: 33)를 참조

대도시-읍면 지역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에 대한 형평성지수, 2019, 2020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년 및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계산
 주 : 대도시-읍면 지역 간 형평성지수(읍면 지역 기초학력 미달 비율 ÷ 대도시 지역 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전환해 산출. 형평성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두 집단 간 차이가 적음을 의미함

비 증가폭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영어에서 남학생의 2019년 대비 2020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중학교 3학년 영어의 경우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9년 4.7%에서 2020년 10.1%로 5.4%p 증가했지만, 여학생은 1.7%에서 4.0%

로 2.3%p 증가했다. 고등학교 2학년 영어의 경우에도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9년 5.0%에서 2020년 12.8%로 7.8%p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2.1%에서 4.1%로 2.0%p 증가했다. 이를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성별 형평성지수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9년보다 2020



년에 지수가 1에서 더 멀어져 성별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격차는 수학보다는 국어와 영어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중학교 단계의 지역 규모별 학업성취도 격차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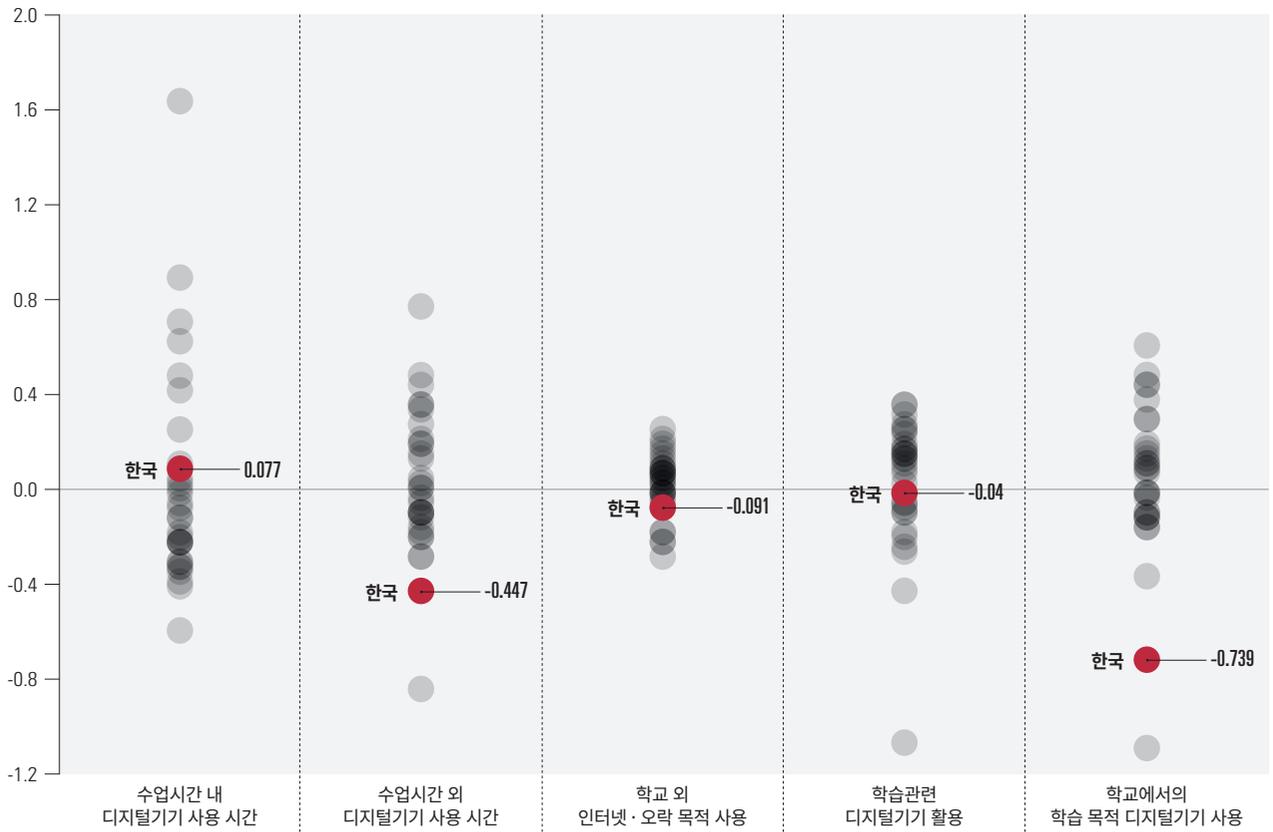
지역 규모별 학업성취도 격차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서 각각 다른 경향을 보인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2019년 대비 2020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대도시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같은 기간 더 증가했다. 2020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지역 간 격차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수학에서 대도시(11.2%)와 읍면 지역(18.5%) 간 격차가 7.3%p로 가장 컸으나,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3개 교과 모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 규모에 따른 형평성지수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중학교에서 모든 교과의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

며, 2019년에 비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 규모에 따른 형평성지수는 모든 교과에서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으며, 2019년과 2020년 간 격차의 변화도 적다. 중학교의 학교 배정이 거주지 근거리 원칙에 따라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중학교에서의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 확대를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낮은 디지털 활용 정도 및 태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8 ICT 친숙도 설문조사에서 디지털기기 활용 정도는 ‘교과수업을 위한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 영역의 2문항(수업시간 내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 수업시간 외 교과 관련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과 ‘디지털기기 사용 빈도’ 영역의 3문항(학교 외 인터넷·오락 목적 사용 빈도, 학습 목적 디지털기기 활용 빈도, 학교에서의 학습 목적 디지털기기 사용 빈도)을 통해 파악

OECD 국가별 학생의 디지털기기 활용 정도(표준화지수), 2018



출처: 김혜숙·신안나·김한성(2020)을 토대로 재구성
 주 : 수치는 표준화지수. 표준화지수는 OECD 평균을 0, 표준편차 1로 변환한 것임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사용에 대한 태도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흥미(6문항)’, ‘디지털기기 활용역량에 대한 인식(5문항)’, ‘디지털기기에 대한 자율성(5문항)’,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털기기 사용(5문항)’ 등의 4개 하위영역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혜숙·신안나·김한성, 2020: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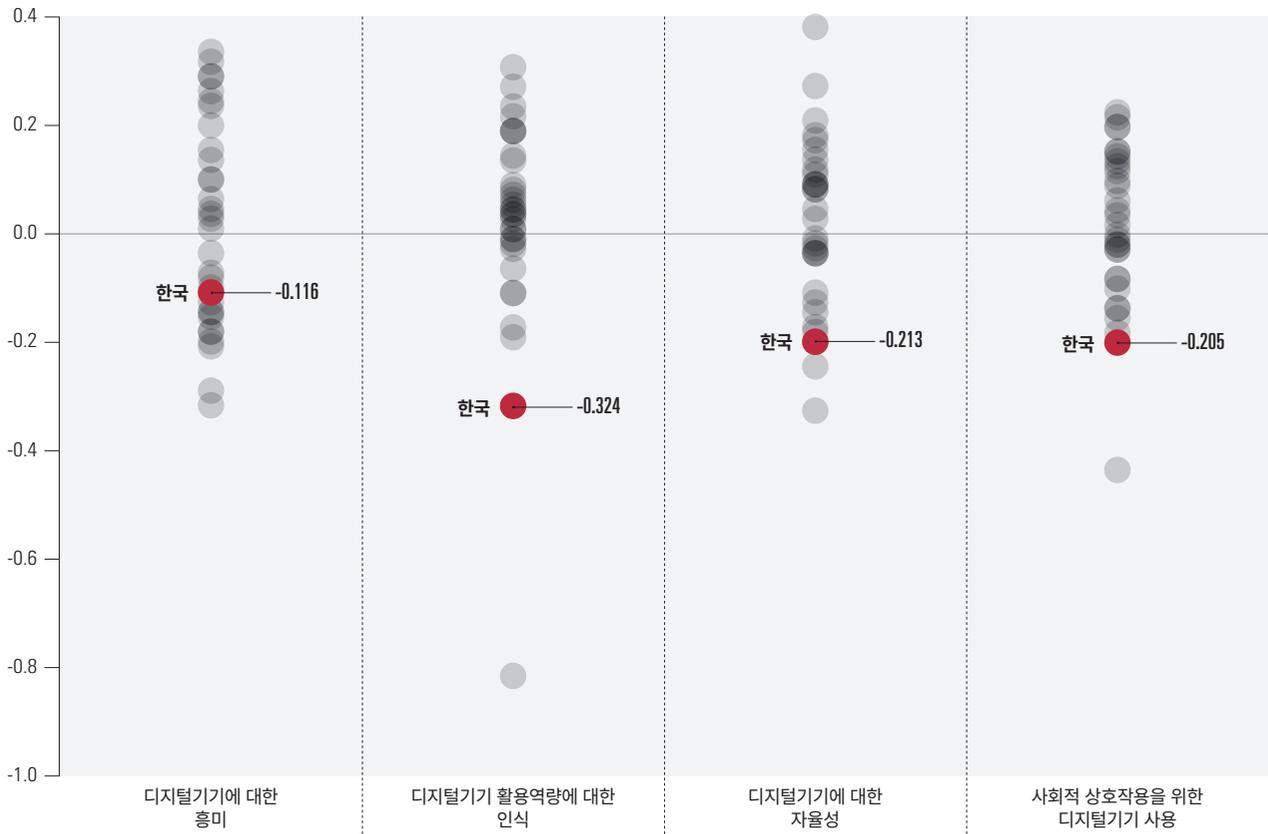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활용 정도와 디지털기기 사용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활용 정도는 국가별 비교를 위해 산출한 표준화지수에서 ‘수업시간 내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 영역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OECD 평균인 0보다 낮게 나타난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 교과 관련 디지털기기 사용 시간(-0.447)’과 ‘학교에서의 학습 목적 디지털기기 사용(-0.739)’은 OECD 조사 대상국 중 각각 30위(총 31개국)와 29위(총 30개국)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디지털기기 사용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

프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에 대한 태도는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인 0보다 낮게 나타난다. 특히,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활용역량에 대한 인식(-0.324)’과 학생들이 디지털기기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자율성(-0.213)’과 학생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털기기 사용(-0.205)’은 OECD 조사 대상국 중 각각 31위(총 32개국), 29위(총 31개국), 30위(총 31개국)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초·중등학교에서 교육 목적의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 등의 정보 인프라 구축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지만(통계개발원, 2021),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및 역량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의 확대뿐 아니라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역량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미래 핵심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원격교육을 위한 여건 마련과 학교 안팎에서의 학습 목적의 디지털 활용,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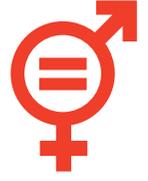
OECD 국가별 학생의 디지털기기 사용에 대한 태도(표준화지수), 2018



출처: 김혜숙·신안나·김한성(2020)을 토대로 재구성
주 : 수치는 표준화지수. 표준화지수는 OECD 평균을 0, 표준편차 1로 변환한 것임



5 GENDER EQUALITY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SDGs 5번 목표는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해 정치, 사회, 경제, 일상생활 영역에서 성평등 달성을 지향한다. 성평등은 SDGs 로 채택 되기 이전부터 '성평등 증진 및 여성 역량 강화'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여아 교육 확대라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SDGs는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그 세부목표로 여성 폭력, 돌봄노동 가치 강화, 여성의 기회와 권리 보장 등을 두고 있다. SDGs 5번 목표는 다른 SDGs 목표들과의 연계성이 높으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SDGs 다른 목표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목표 3(건강), 목표 4(교육), 목표 8(일자리), 목표 10(불평등), 목표 16(인권·정의·평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인적 자원 개발에서 불평등을 측정하는 UNDP의 성불평등지수(GII)를 살펴보면 189개국 중 11위(2020년 발표 기준)로 높은 위치에 있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의 활용과 배분 측면의 성격차를 측정한 성격차지수(GGI)는 152개국 중 102위(2021년 발표 기준)로 낮은 편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미투 운동의 확산과 함께 여성 폭력에 대한 민감성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행정에서 여성 대표성은 낮은 편이다. 여성이 결혼 후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향도 아직 존재한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10년 전보다 증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은 연인, 가족관계 등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국제사회에서 여성 폭력 피해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혹은 과거 연인이나 배우자에 의한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등을 지칭한다. 한국에서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범죄통계가 공식적으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가해자가 애인과 동거친족관계인 범죄자 비율은 2019년 5만 902명으로 형법범의 5.1%를 차지한다. 이는 2009년 대비 2.5%p 상승한 수치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범죄자는 2009년 2만 8733명(2.6%)에서 2011년 2만 1887명(2.3%)으로 감소했다가 점차 증가했다. 친밀한 관계 중 애인이 범죄자인 경우는 2019년 기준 1만 3626명이고 동거친족이 범죄자인 경우는 3만 7276명이다. 애인관계인 범죄자 비율은 2009년 형법범의 1.2%에서 2019년 1.4%로 거의 차이가 없지만, 동거친족관계인 범죄자 비율은 2009년 1.4%에서 2019년 3.8%로 2.4%p 상승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친밀한 관계에 의한 범죄는 약간 다른 특성을 보인다. 성폭력범죄는 동거친족보다 애인관계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2019년 기준 성폭력범죄자는 애인이 1206명으로 2009년(364명)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자의 3.6%에 해당한다. 애인이 성폭력범죄자인 경우는 동거친족(521명, 1.6%)보다 2배 이상 많다. 반면에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을 모두 포

함하고 있는 강력폭력범죄의 경우, 2019년 기준 동거친족자가 3만 1780명(10.2%)으로 애인이 범죄자인 7495명(2.4%)보다 4배 이상 많다. 이는 2009년에 비해 2.6배로 증가한 수치다. 요약하면, 성폭력범죄자는 애인인 경우가 더 많고, 성폭력범죄 이외의 폭력범죄는 동거친족자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현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경험 여성 비율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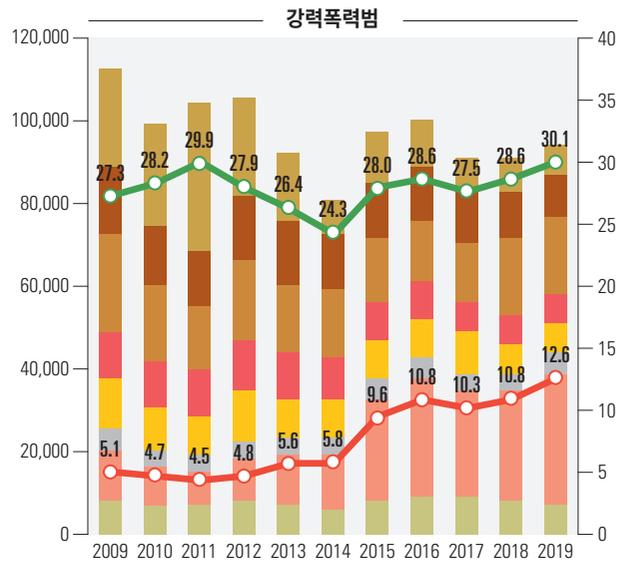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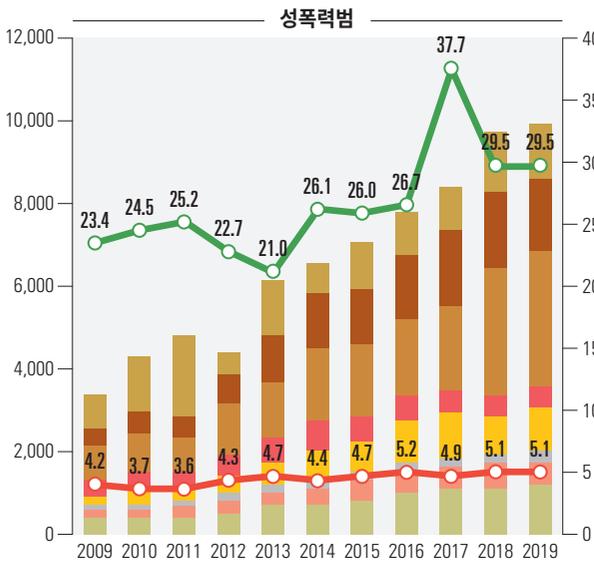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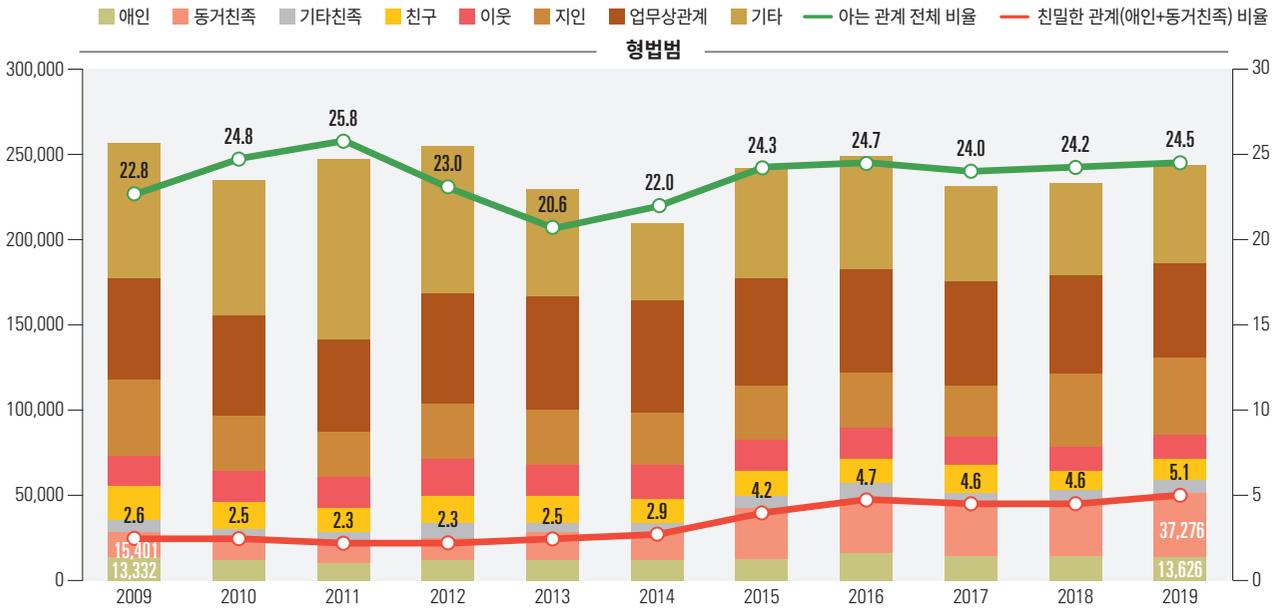
여성가족부의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평생 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20.7%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폭력 경험이 17.8%로 가장 높고, 성적 폭력 경험, 신체적 폭력 경험, 경제적 폭력 경험 또한 각각 7.2%, 5.4%, 3.2%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평생 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은 13.9%로 여성보다 6.8%p 낮으며, 정서적 폭력 경험 비율은 13.1%다. 남성의 신체적, 성적, 경제적 폭력 경험 비율은 각각 2.4%, 1.3%, 1.2%로 여성에 비해 낮다.

이혼이나 별거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당시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을 보면, 여성은 정서적 폭력(66.1%), 신체적 폭력(57.4%), 경제적 폭력(42.2%), 성적 폭력(27.3%) 순으로 폭력 피해 경험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경험률은 유배우자의 현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정폭력 경험과 이혼이나 별거가 높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현황, 2009~201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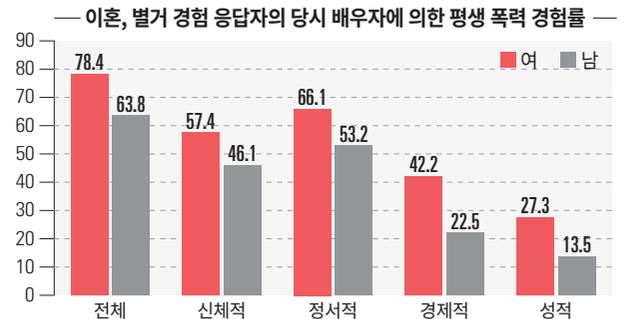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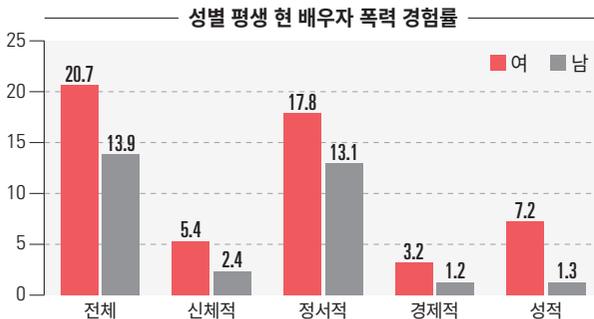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주1: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피의자원표를 기준으로 작성함. 관계 유형은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으로 분류하며, 여기에서 아는 관계는 국가, 공무원, 타인, 미상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자·피고용자·직장동료·거래상대방은 업무상관계로 재분류함

주2: 대검찰청은 형법 및 특별법에 근거해 통계를 수집한 후 자체적으로 죄명을 설계해 통계를 공표함. 형법범죄는 재산범죄, 강력흉악범죄(성폭력범 포함), 강력폭력범죄(폭행 포함) 등으로 구분됨. 한편, 성폭력범죄는 2013년까지는 강간으로 분류함. 자세한 설명은 대검찰청(2019) 참조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경험률, 2019

(단위: %)



출처: 여성가족부,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보고서

주: 이혼, 별거 경험 응답자의 당시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경험률은 이혼, 별거 전 또는 이혼, 별거 후 각 유형에 해당하는 폭력 행동을 중 하나이라도 경험했음을 의미함

기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여전히 가장 많아

통계청은 1999년부터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해 성별 및 혼인상태별로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10세 이상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은 2019년 기준 2시간 58분으로 남성(52분)보다 2시간 6분 더 많다. 이는 2시간 25분의 가정관리시간과 33분의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시간 중 12.4%를 차지한다. 무급가사노동시간을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1999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우 소폭 감소했다.

무급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미혼 여성의 경우, 무급가사노동시간은 2019년 기준으로 1시간 4분이고, 이는 남성의 35분보다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45분으로 대폭 증가하는데 반해, 기혼 남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은 1시간 4분으로 소폭만 증가한다. 즉, 미혼의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차이는 29분에 불과하지만, 기혼의 성별 차이는 2시간 41분으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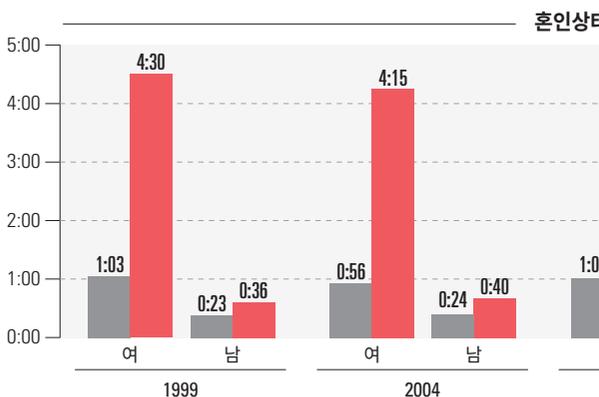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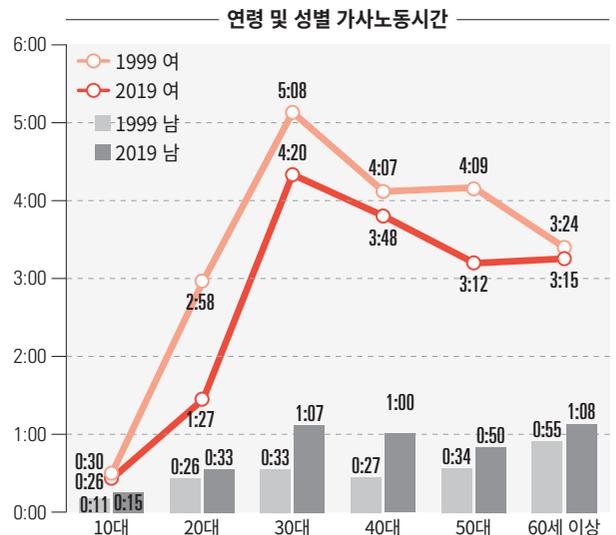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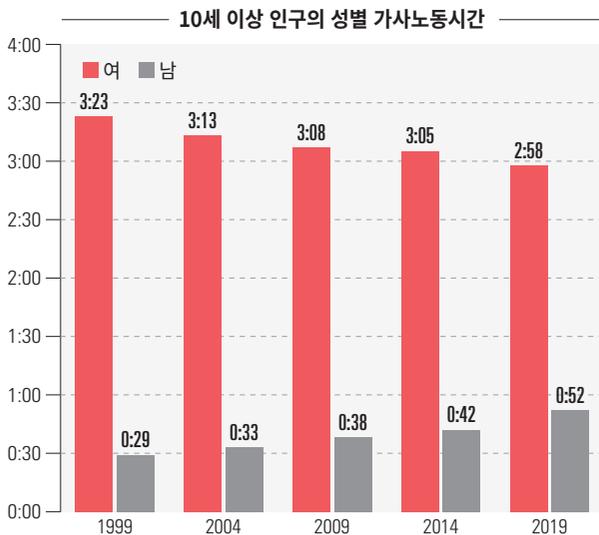
한국에서 무급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처음 평가한 2019년의 결과, 전체 무급가사노동시간의 가치는 490조 9190억 원이고, 이 중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은 356조 원으로 평가됐다. 즉 여성이 전체 무급가사노동시간 가치의 72.5%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로 남성의 기여 비중 또한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성별격차가 심하다.

경제와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여전히 낮아

남성 중심적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한국 여성은 정치, 행정, 공공 및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영역에서 대표성이 낮

무급가사노동시간, 1999~2019

(단위: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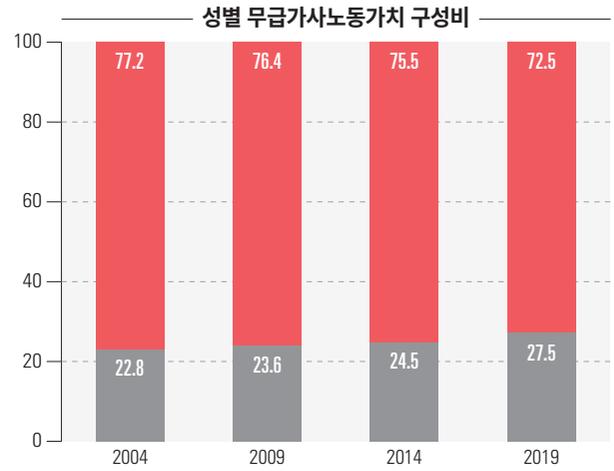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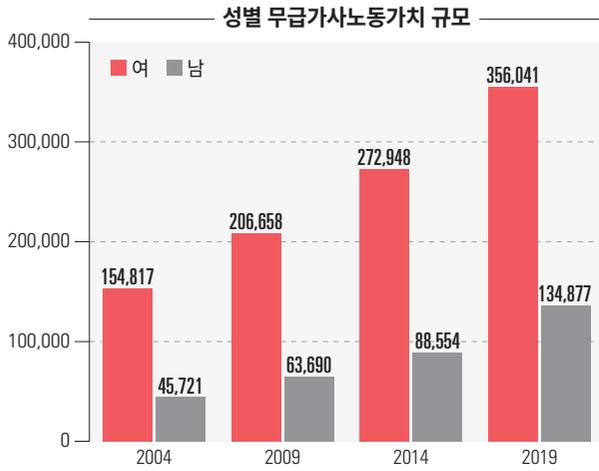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무급가사노동시간의 가치평가, 2004~2019

(단위: 10억 원, %)



출처: 통계청,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결과, 보도자료(2021.06.21.)

고, 이는 사회적 삶 전반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위축시킨다. 2020년 한국의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5.7%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4년 11.1%에서 2016년 9.8%로 하락한 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 여성 관리자 비율을 보면, 여성 취업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20년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70.1%이고, 교육서비스업은 44.0%로 비교적 높다. 이외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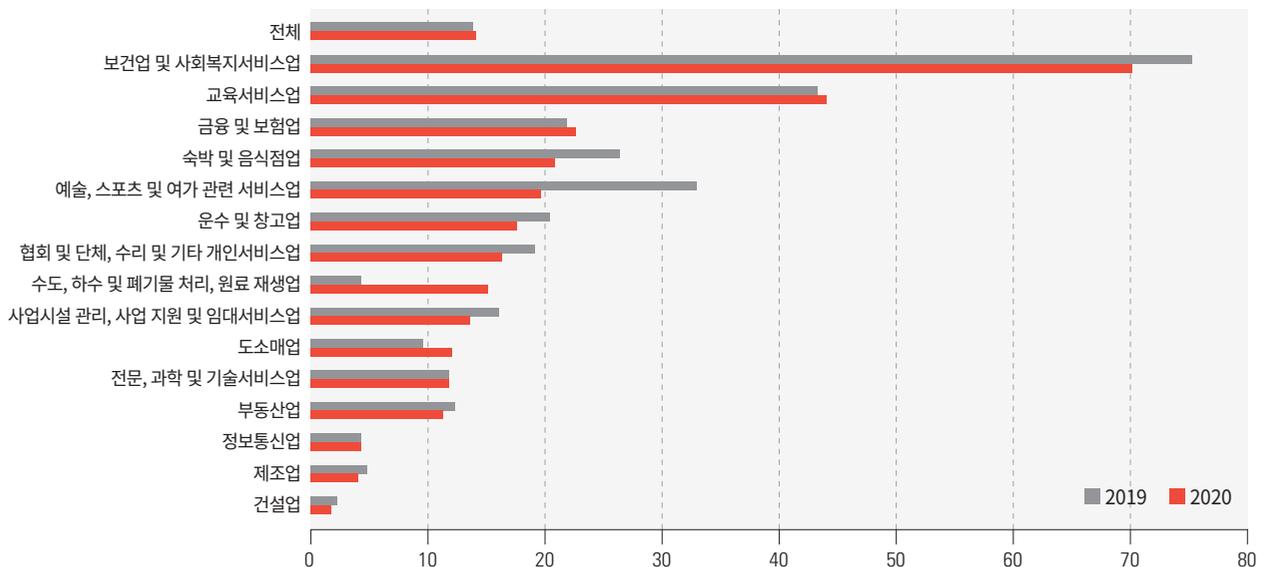
숙박 및 음식점업(20.9%) 등이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살펴보면, 라트비아가 45.8%로 가장 높다. 한국은 하위권에 속한다. OECD 회원국 중 여성 관리자 비율이 40% 이상인 국가는 라트비아(45.8%), 폴란드(43.1%), 아이슬란드(41.9%), 코스타리카(41.0%), 미국(40.7%), 스웨덴(40.3%), 슬로베니아(40.1%) 등이다. 한국을 포함한 터키, 일본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대로 낮은 수준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정치적 대표성을 보여 주는 지표로, 국제사회에서 성평등지표로 자주 활용된다. 2021년

주요 산업별 여성 관리자 비율 변화, 2019, 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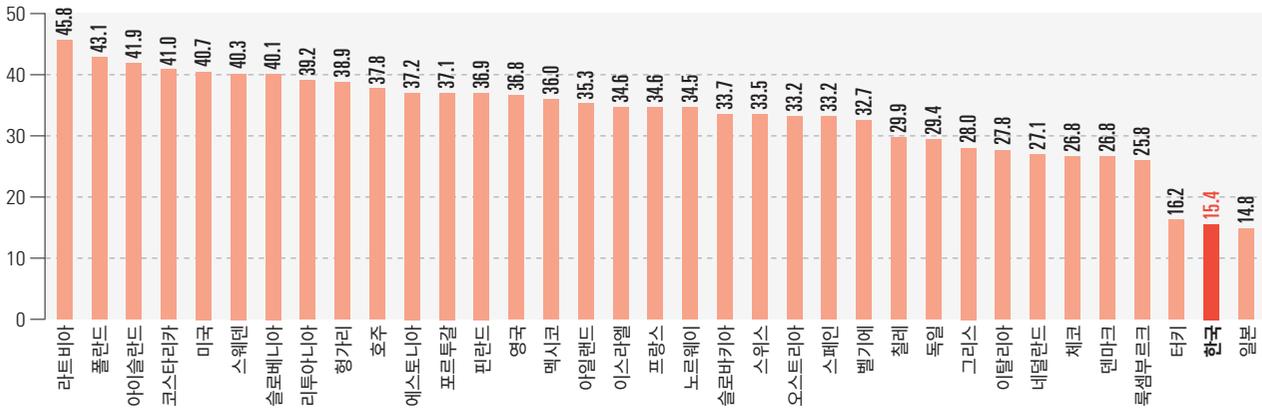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주 : 주요 산업별 여성 관리자 비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로 분석함

1월 기준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며, 2000년 국회의원 선거 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대 국회(2000년)에서 5.9%로 매우 낮았다가 17대(2004년) 13.0%로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정당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지만 점진적 상승에 그친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속한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9.9%), 헝가리(12.6%), 터키(17.3%), 콜롬비아(18.8%)뿐이다. 뉴질랜드가 48.3%로 가장 높고, 그 뒤를 멕시코(48.2%), 스웨덴(47.0%), 핀란드(46.0%), 코스타리카(45.6%), 노르웨이(44.4%), 스페인(44.0%), 스위스(42.0%), 벨기에(42.0%), 포르투갈(40.0%) 등이 잇고 있다.

OECD 국가별 여성 관리자 비율, 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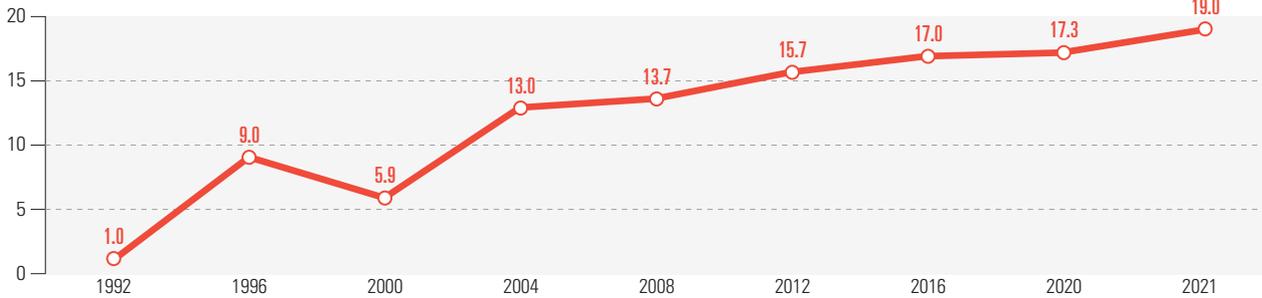


출처: UNSD, 국가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

주 : 이스라엘은 2017년, 호주는 2018년 데이터임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변화, 1992~2021

(단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OECD 국가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21

(단위: %)



출처: IPU(Inter-Parliamentary Union), Parline Database, 2021년 1월 기준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SDGs 6번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보장받는 것을 포함해, 수질오염 감소, 수자원관리 구축 등을 지향한다. 한국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국가물관리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유역 단위의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로서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출범해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식수 공급과 위생서비스의 보급률은 거의 100%에 도달했고 하수도 보급률도 2019년 기준 94.3%에 이르고 있다. 도농 간 혜택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주요 하천과 호소의 수질은 환경기초시설의 집중 투자와 관리로 개선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 다양한 형태의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난분해성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유역 기반의 수질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도시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훼손된 생태하천 복원, 수생태계 연결성 회복을 위한 하천 구조물 개선, 수변 생태벨트의 구축, 습지보호 지정·관리 강화 등을 통한 노력도 요구된다. 또한,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 이용량의 비율은 높아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해 꾸준한 물 수요관리와 수원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의 물 복지 및 평등에 대한 기대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과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도시침수 방지와 안정적 물 공급,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상하수도 서비스, 자연과 인간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수생태의 건강성 회복,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은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당연한 중요 과제다.

통합수자원관리 이행률 높음 수준으로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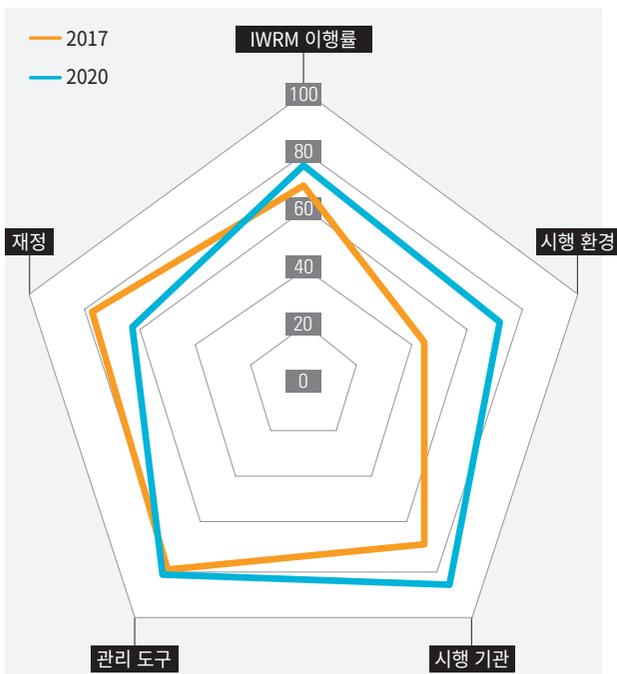
국가별 통합수자원관리(IWRM) 이행 정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7년 68점(Medium-high)에서 2020년 76점(High)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합수자원관리의 이행 정도는 시행 환경(enabling environment), 시행 기관(institutions and participation), 관리 도구(management instruments), 재정(financing)의 네 가지 부문으로 평가되

는데, 재정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모두 2017년에 비해 향상되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분화되어 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유역 중심의 참여형 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최초로 제정되는 등 정책 및 법제도의 개선으로 시행 환경은 44점에서 71점으로, 유역 기반의 물관리를 위한 유역물관리위원회 조직이 출범하고 이를 위한 국가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서 시행 기관 부문은 70점에서 87점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에 통합물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과 예산 확보가 미진해 재정 부문은 78점에서 63점으로 퇴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통합수자원관리 수준은 OECD 36개 국가 중 23번째다. 프랑스, 덴마크, 일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은 90점 이상의 매우 높은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수준을 보이고, 미국과 다른 유럽 주요 선진국 등도 통합수자원관리가 한국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IWRM 부문별 이행 점수 비교, 2017, 2020 (단위: 점)



출처: <http://iwrmdataportal.unepdhi.org/countrydatabase>(2021.11.1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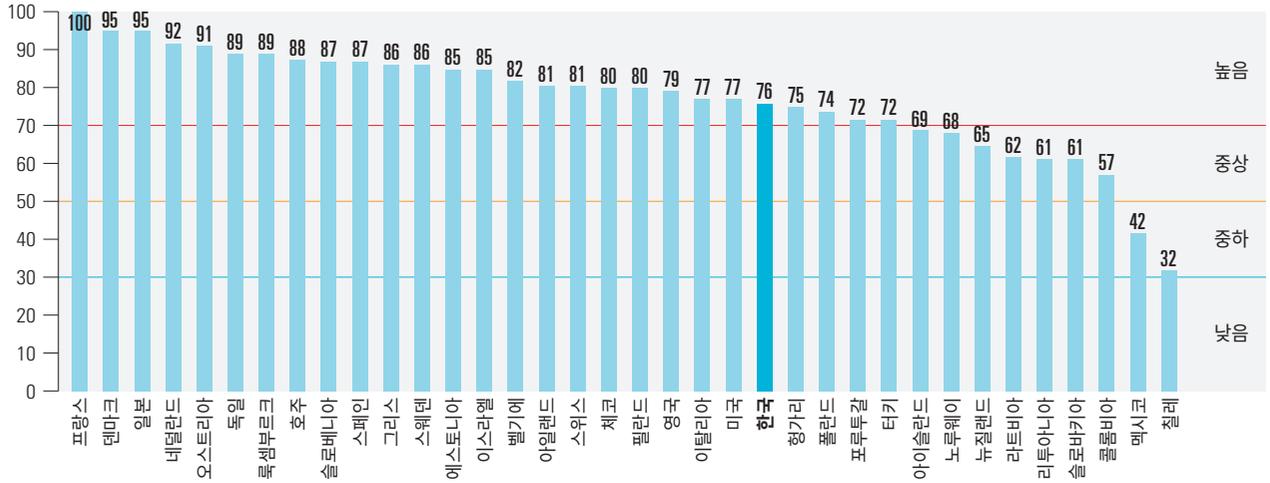
물 이용 효율화와 물 스트레스 완화 노력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1252mm며, 국토면적을 고려한 수자원 총량은 약 1264억³m이다. 연간 유출량은 약 731억³m³이나 공유하천 등을 통해 북한에서 유입된 양을 포함하면 771억³m³이다. 2018년 기준 수자원 이용량은 연간 총 366억³m³로 추정된다. 이 중 생활·공업·농업 등 용수 이용은



OECD 국가별 IWRM 이행 점수 비교, 2020

(단위: 점)



출처: UNEP(<http://iwrmdataportal.unepdhi.org/countrydatabase>, 2021.11.11. 인출)

244억m³(67%), 하천유지유량은 122억m³(33%)다. 용수 이용의 경우, 생활용수에 74억m³, 공업용수에 16억m³, 농업용수에 154억m³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생활용수는 2억m³, 공업용수는 7억m³ 감소했고, 농업용수는 2억m³ 증가했다. 수원별 구성은 댐용수(53.5%), 하천수(35.0%), 지하수(7.6%), 하수재이용(2.9%), 중수도(0.9%), 빗물(0.02%), 해수담수화(0.01%) 순이다.

연간 용수 이용량은 2003년을 정점으로 정체 또는 감소 추세다. 2003년 262m³로 정점에 이르다 점차 감소해 2018년 244m³로 물 스트레스가 다소 줄었다. 그러나 연평균 유출량 기준 용수 이용량을 통한 취수율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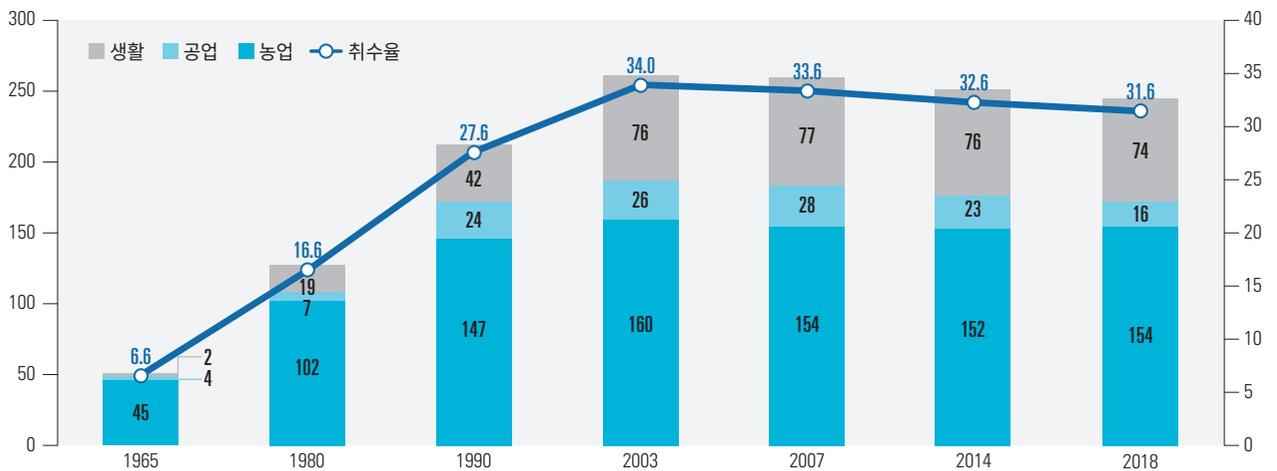
1965년 6.6%에서 2003년 34.0%로 약 40년 동안 5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물 스트레스가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른쪽 지도에서 물 스트레스 지수가 낮을수록 연한 노란색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수록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 한국은 물 스트레스가 '중상'에 해당하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 점차 개선

주요 취수원 지점이 위치해 있는 하천과 호소의 상류 지역은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

물 이용량 및 취수율 변화, 1965~2018

(단위: 억m³/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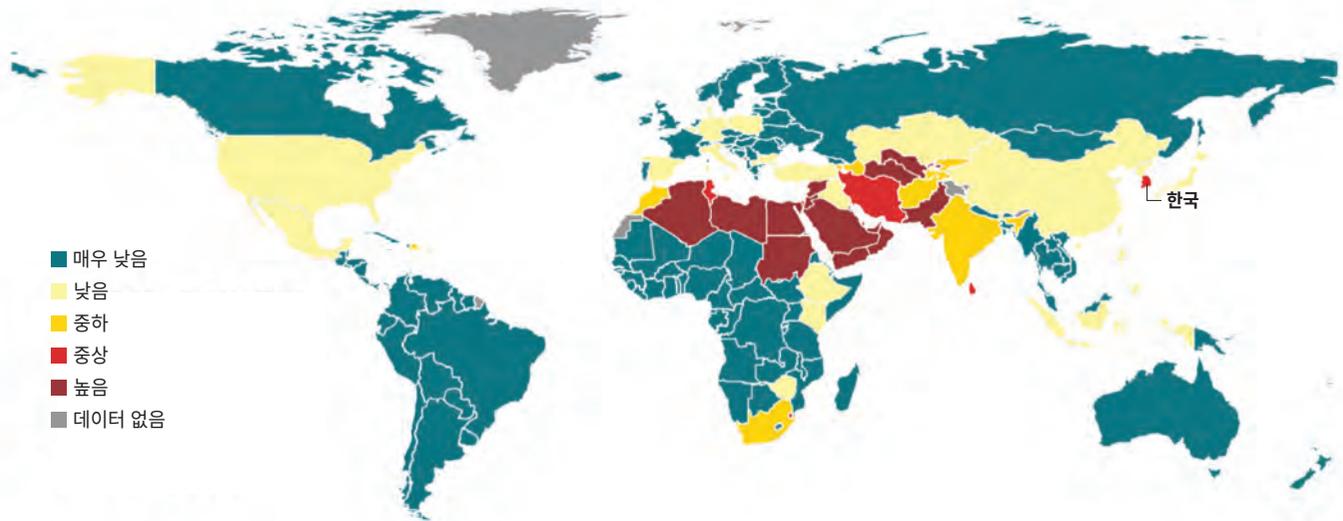
출처: 관계부처합동,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21~2030

주1 : 취수율: 연평균 유출량 771(억m³) 기준 총이용량 비를 저자가 직접 계산함

주2 : 생활: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기준 변경(2018년) 반영(공업용으로 사용된 정수를 생활용수로 분류)

주3 : 농업: 영농방식별 개략산정(필요수량×재배면적) 방식에서 실제 공급량 기준(일부 제외)으로 변경

국가별 물 스트레스 수준 비교, 2018



출처: FAO, 2021 Progress on level of water stress: Global Status and Acceleration needs for SDG Indicator 6.4.2, <https://www.fao.org/3/cb6241en/cb6241en.pdf>
 주1 : SDGs 지표 6.4.2의 물 스트레스 수준은 이용가능한 수자원 중 환경적 물 요구 사항을 고려한 후 주요 경제 부문에서 사용된 취수량의 비율로서, 연간 총취수량(total freshwater withdrawn, TWW)을 이용가능한 총수자원(total renewable freshwater resources, TRWR)과 환경적 물 요구량(environmental water requirements, EWR.)의 차이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으로 계산됨. 지표에 대한 임계값은 기후 및 국가 물관리 목표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 Water Stress(%) = [TWW / (TRWR - Env.)]×100
 주2 : 국제 비교를 위한 이용가능한 한국의 물 스트레스 자료는 2018년 조사 이후 업데이트되지 못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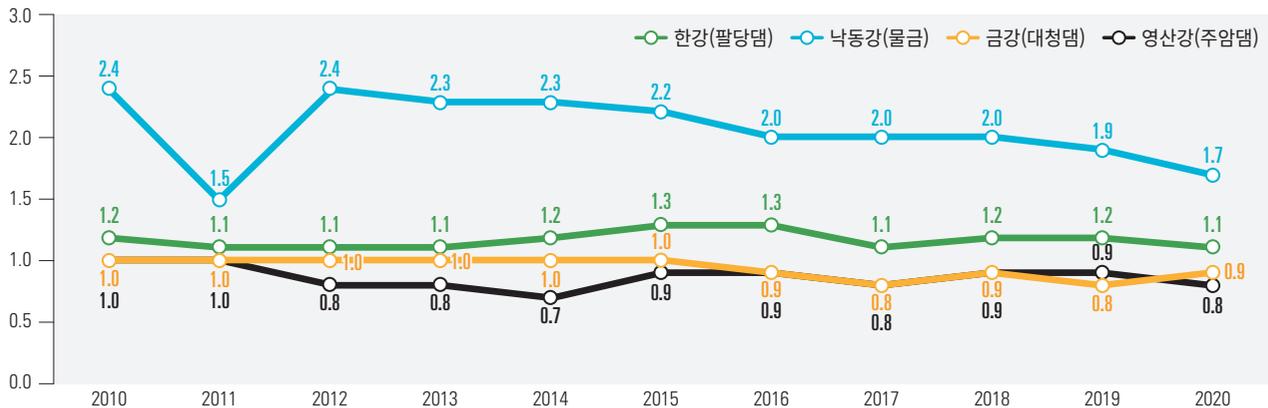
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기준인 ‘약간 좋음(II 등급)’ 수준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섬진강을 제외한 하류 지역은 대표 수질항목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개선되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화학물질 사용 증가, 비점오염원 등 난분해성 오염물질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정·고시한 수질 목표 기준의 2020년 기준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하천의 경우 전국 115개 중권역 중 각 중권역별 설정된 BOD 목

표 기준을 달성한 중권역은 92개(달성률 80.0%)로 조사되었다. 한강의 달성률이 89.7%로 가장 높으며 영산강·섬진강의 달성률이 72.7%로 가장 낮았다. 호소의 경우에는 전국 49개 중 총인(TP) 기준 수질 목표 기준 달성률은 16.3%에 그쳐 전반적으로 목표 기준 달성률이 불량했다. 특히, 한강과 영산강·섬진강은 10% 미만의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2018년 기준 전국의 지하수 수질검사 적합률은 음용 지하수 96.9%, 비음용 지하수 85.7% 수준으로, 2008~2018년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대강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010~2020

(단위: mg/L)



출처: 환경부, 전국수질측정자료(국가주요지표, http://www.index.go.kr/smart/refer.do?stts_cd=278801&idx_cd=2788&clas_cd=&period=Y&periodS=2010&periodE=2020&clas_div=&idx_clas_cd=1&m=1, 2021.11.11. 인출)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SDGs 7번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적정가격에,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반드시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인력과 축력에 의존했지만, 기술 발전과 경제활동의 증대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인류는 필요한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를 절감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해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방점이 맞추어져 왔고, 그 결과 국가 전체의 에너지 원단위(1차 에너지 공급량/GDP)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의 경제구조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반드시 에너지 효율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종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 최근 들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하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 등의 에너지 관련 계획상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유지·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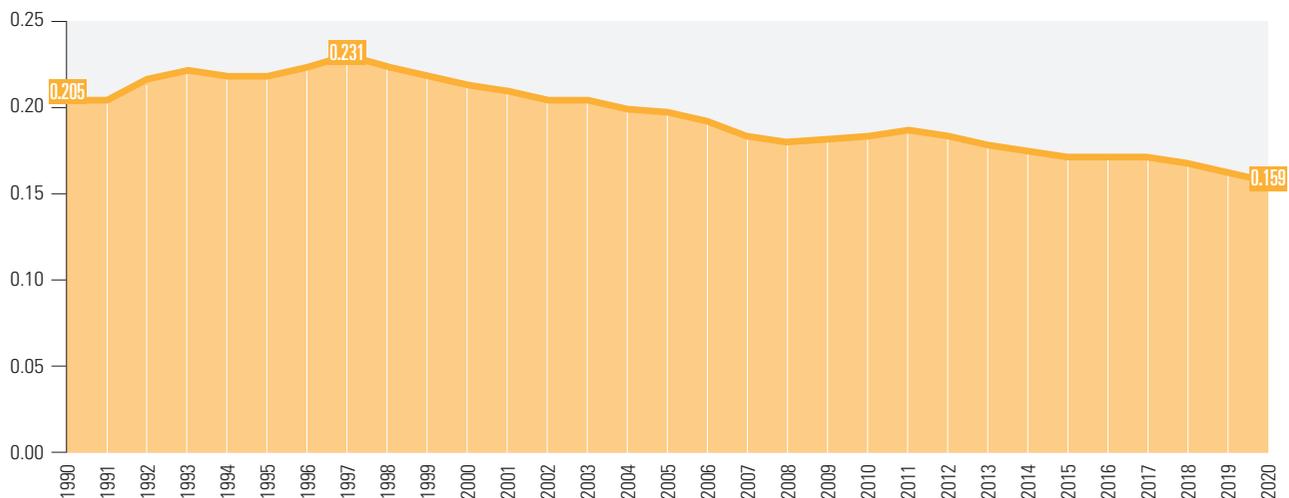
에너지 원단위 개선 추세

에너지 원단위는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 시스템(공장, 기업, 국가 등)의 에너지 효율수준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된다. 시간에 따른 에너지 원단위의 변화를 통해서 국가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1997년 0.231toe/백만 원으로 최고치를 달

성한 이후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노력 등이 어우러져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에너지 원단위는 1997년 대비 31.2% 감소한 0.159toe/백만 원이었다. 2012~2014년에는 1.9~2.6% 수준으로 에너지 원단위가 개선되었지만, 2015~2018년에는 에너지 원단위의 개선율이 0.2~1.2%로 소폭 둔화되었다. 하지만 2019년 에너지 원단위는 전년 대비 3.6%,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 추이, 1990~2020

(단위: toe/백만 원, 2015년 기준)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에너지통계연보 2021(http://www.kesis.net/sub/sub_0003.jsp, 2022.01.17.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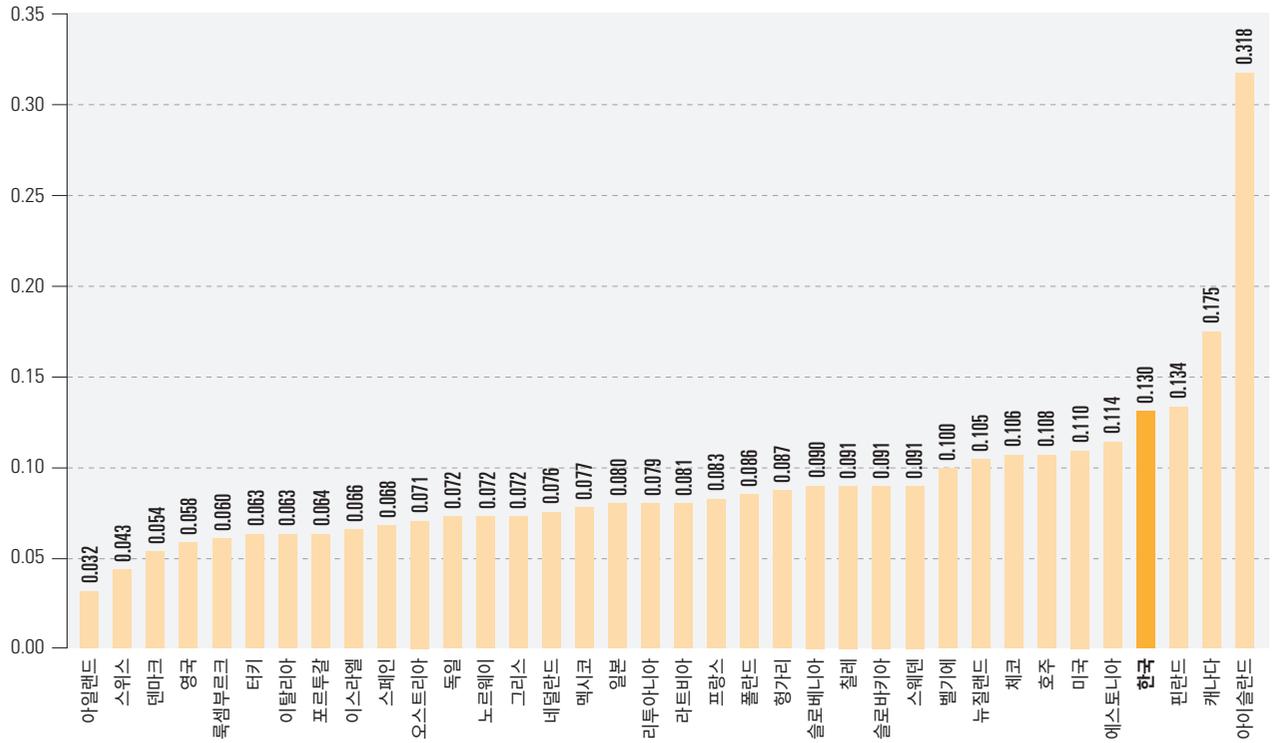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내총생산(원계열, 실질)(<https://ecos.bok.or.kr/>, 2021.11.22. 인출)

주 : 에너지 원단위의 구성요소인 1차 에너지는 자연이 제공한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에너지로서 나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은 재생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고, 수력,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 등의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형태에 해당함(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에너지통계연보, 2020)



OECD 국가별 에너지 원단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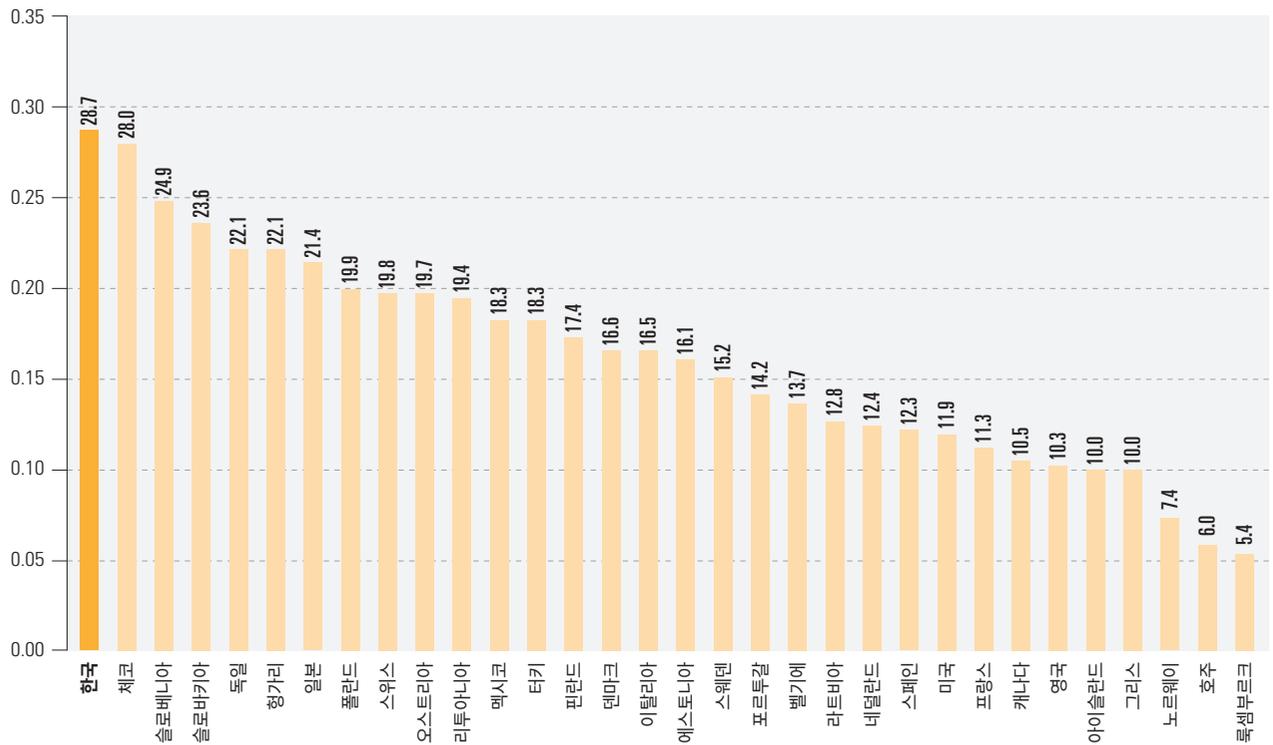
(단위: toe/천USD(2015 PPP))



출처: IEA, IEA World Energy Balances(https://www.oecd-ilibrary.org/energy/data/iea-world-energy-statistics-and-balances_enestats-data-en, 2021.11.10. 인출)

OECD 국가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19

(단위: %)



출처: OECD,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data/oecd-national-accounts-statistics_na-data-en, 2021.11.10. 인출)

2020년은 3.0%로 감소폭이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OECD 36개국 중 한국의 에너지 효율은 3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의 에너지 원단위는 0.032toe/천 달러로 가장 좋았는데 한국의 24.6% 수준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원단위를 통해 국가 간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산업구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산업구조에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동일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이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의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 경제의 주를 이루는 국가에서는 생산활동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반면, 에너지 소비가 적은 경공업 또는 서비스업 위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생산활동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 총부가가치와 에너지 공급량을 기준으로 에너지 원단위를 산정할 경우,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 간에도 산업구조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더 좋거나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국가 총부가가치의 28.7%를 차지했고, 이는 OECD 32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 제조업 중에서도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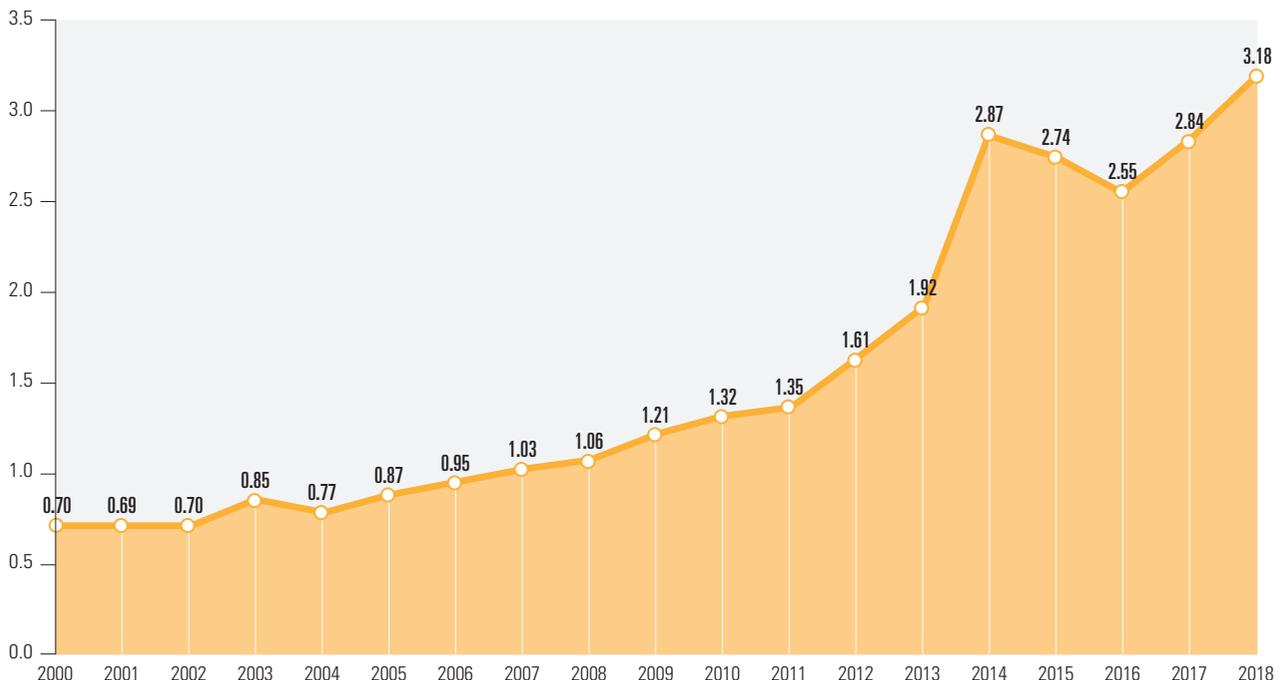
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철강협회 및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철강 생산량은 2019년 기준 세계 6위였고, 석유화학업종의 에틸렌 생산규모는 2020년 기준 세계 4위였다. 이러한 산업구조로 인해 각 업종의 높은 에너지 효율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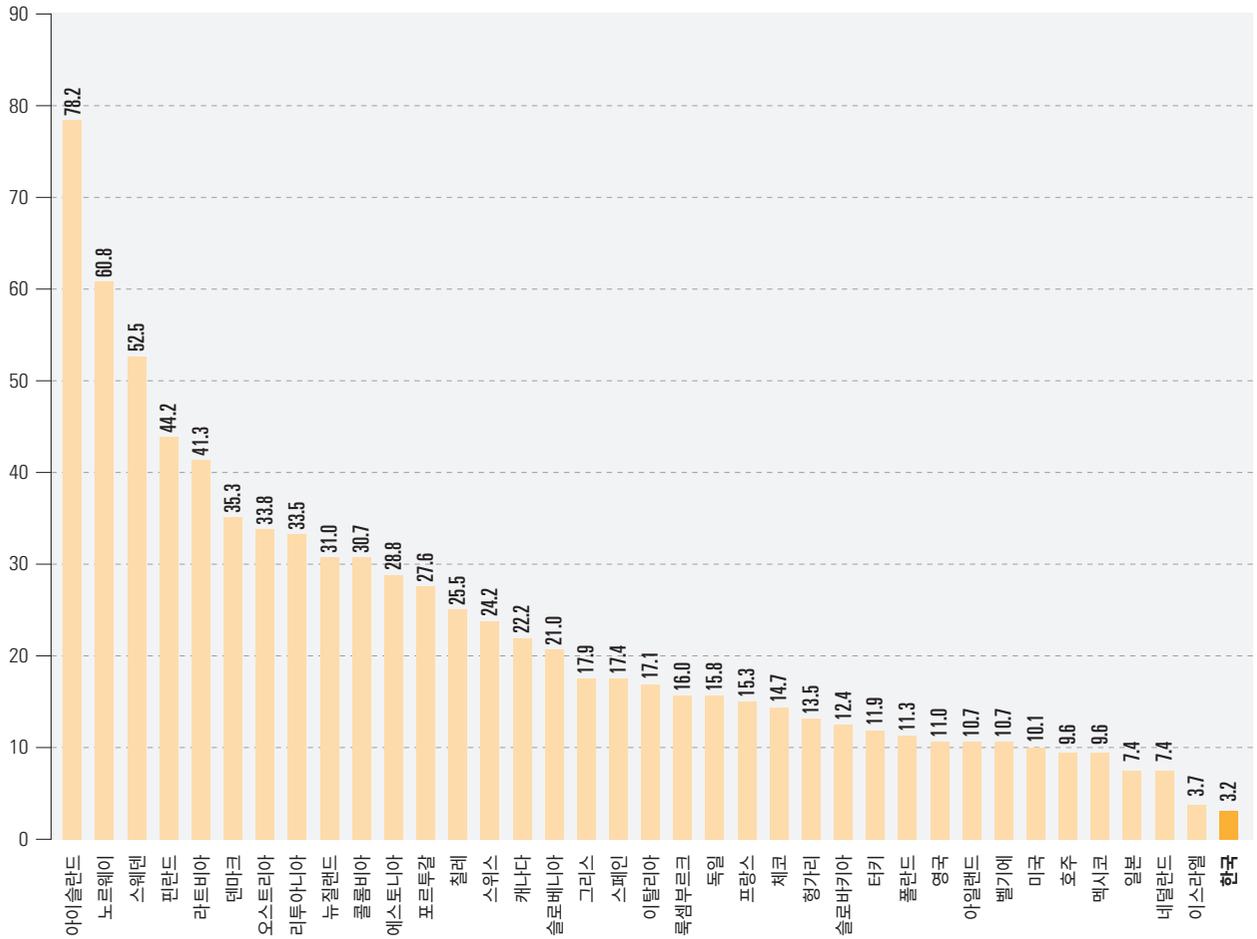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원이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과 2015년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 하락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2018년 재생에너지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3.18%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 0.70%보다 2.5%p 증가한 수치다. 재생에너지 비율의 증가는 최근 들어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00~2011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2000년 0.70%에서 2011년 1.35%로 연평균 6.1%씩 증가했고, 2012~2018년에는 2012년 1.61%에서 2018년 3.18%로 연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2000~2018

(단위: %)



출처: Wor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of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G.FEC.RNEW.ZS?locations=KR>, 2021.11.10. 인출)



출처: Wor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of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2021.11.10. 인출)

평균 12.0%씩 증가했다.

비록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였고, 그 비율은 78.2%다.

한국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등의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 등의 신에너지의 보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9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비재생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서 분리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2020년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생산량은 각각 1110만 5천toe와 125만 7천toe이었고, 1차 에너지 공급의 4.2%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신에너지 생산량의 경우 2019년에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다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태양광(33.6%)과 바이오(31.5%)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재생폐기물, 수력, 연료전지, 풍력 등은 각각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할 때 태양광의 비중은 4.7%p 증가하고, 바이오의 비중은 7.8%p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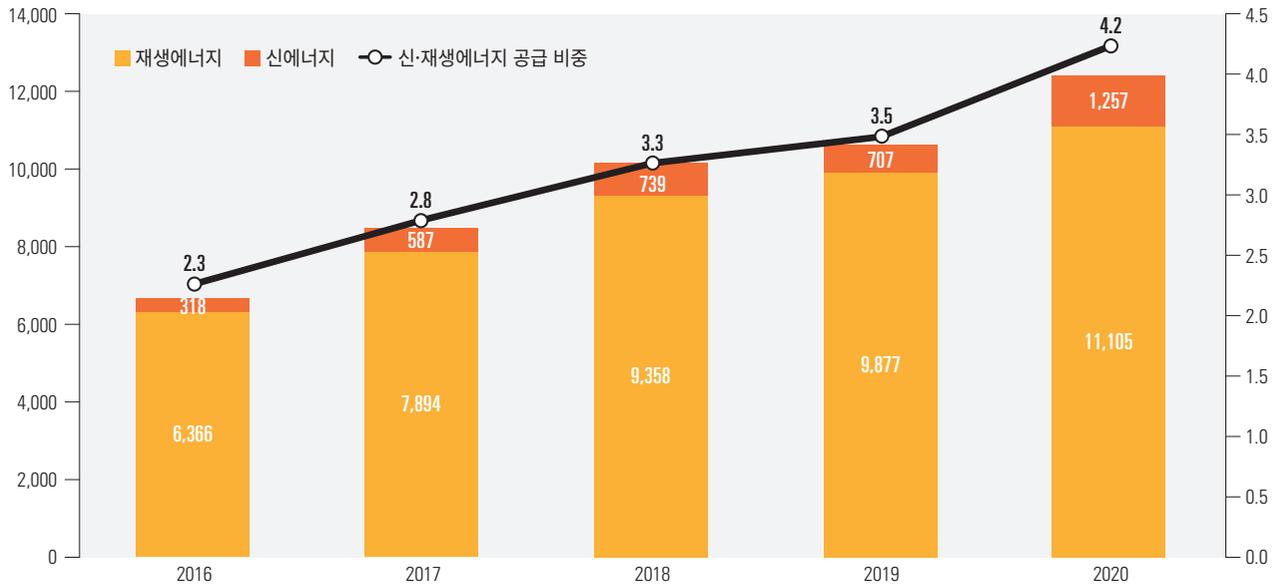
한국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여러 국가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정부

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20%까지 확

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19년에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공급 비중, 2016~2020

(단위: 천to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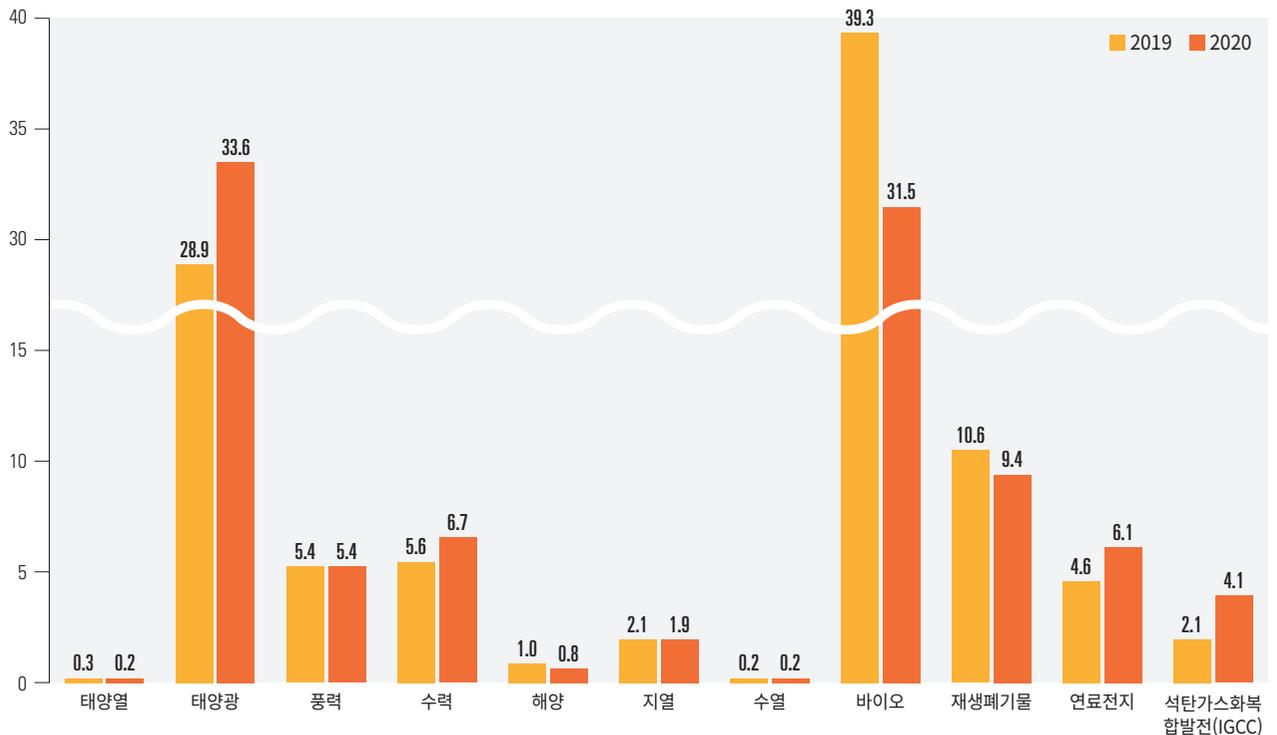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각 연도

주 : 2019년 10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시행으로 2019년부터 비재생폐기물이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었고, 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2015~2018년에 대해서도 비재생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했음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비중, 2019, 2020

(단위: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각 연도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SDGs 8번 목표는 각 국가가 포용적이며 포괄적인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지향하며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국가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을 촉진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목표는 국가별로 상황에 맞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청년 고용,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고 이주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도 추구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 포용성장의 기반 마련, 취약계층 대상 노동 정책 강화, 코로나19 위기 대비 안전망 확충,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청년 구직 지원, 일·생활 균형의 확보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5억 5000만 명에 달하는 정규직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7~2009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유행의 지속으로 인해 각국의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를 겪은 후, 백신 접종 확대와 확장적 경제 정책 등으로 경제성장의 회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 한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3%대로 추정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이는 2020년의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저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 부문에서는 기혼 여성의 일자리 충격이 컸는데 이는 대면 서비스업 등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의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자녀 돌봄부담이 가중되어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이 제한된 것에 기인한다. 2021년 상반기에는 ILO 핵심 협약 중 3개의 비준이 추진되어 전체 핵심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의 노동 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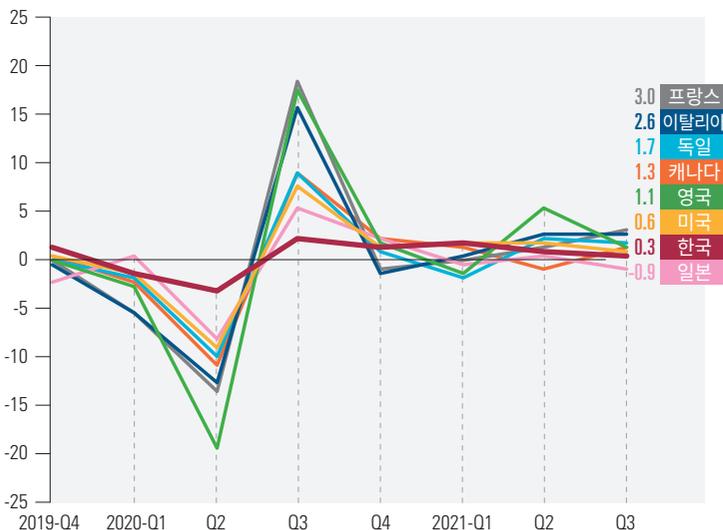
경제성장률 2020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5개 분기 연속 오름세이나 업종별로 큰 편차

세계 경제가 2020년 상반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분기에는 OECD 주요 국가 모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2020년 상반기의 극심한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세를 반영한 것이다. 한

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2020년 3분기 2.2%, 4분기 1.1%의 오름세를 보였으며, 2021년 1분기 1.7%, 2분기 0.8%로 4분기 연속으로 회복세에 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의 4차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민간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황과 관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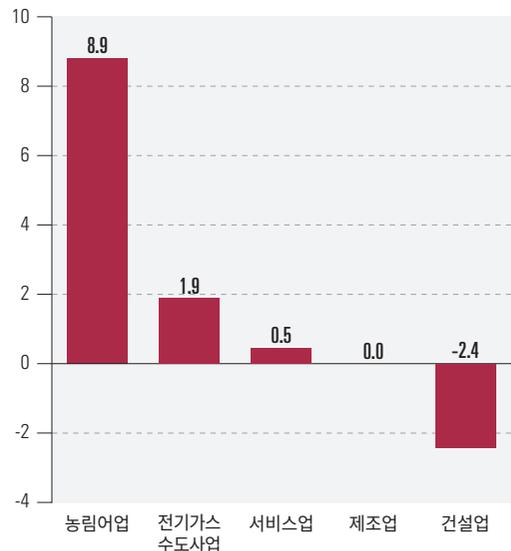
OECD 주요 국가별 1인당 실질GDP 분기별 성장률, 2019~2021 (단위: %)



출처: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AMA)(<https://stats.oecd.org>, 2022.01.06. 인출)

주 : 한국, 독일 데이터는 잠정치임

2021년 3분기 업종별 전분기 대비 성장률 (단위: %)



출처: 한국은행, 2021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kosis.kr, 2022.01.05. 인출)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인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코로나19의 영향은 매우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1년 3분기 업종별 성장률은 농림어업은 8.9%, 전기가스수도업은 1.9%, 서비스업은 0.5%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2.4% 감소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발생한 충격에서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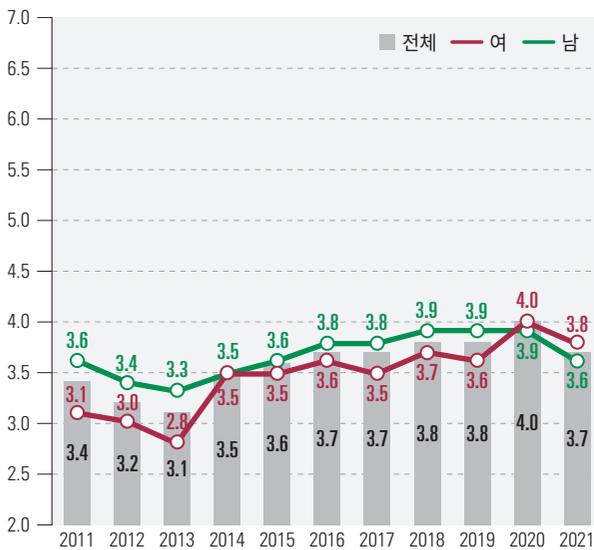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취업 감소가 현저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 이후 3%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시작된 2020년에 4.0%로 높아졌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성별, 산업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적인 고용 충격도 발생하고 있다.

성별로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는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의 실업률보다 항상 높았지만, 2020년에는 여성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해 남성의 실업률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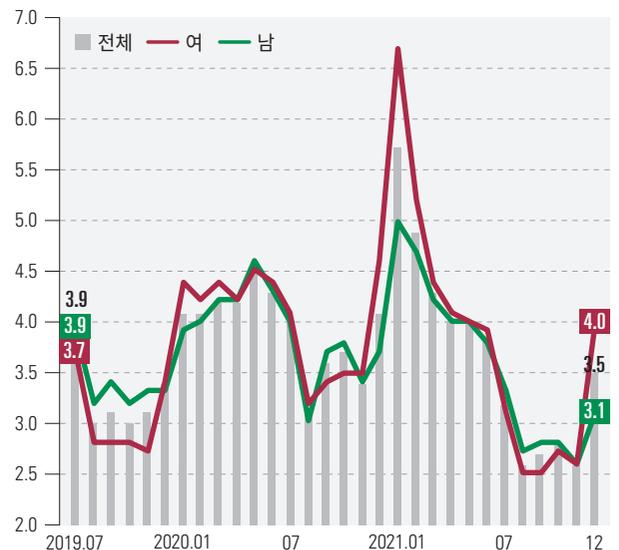
실업률, 2011~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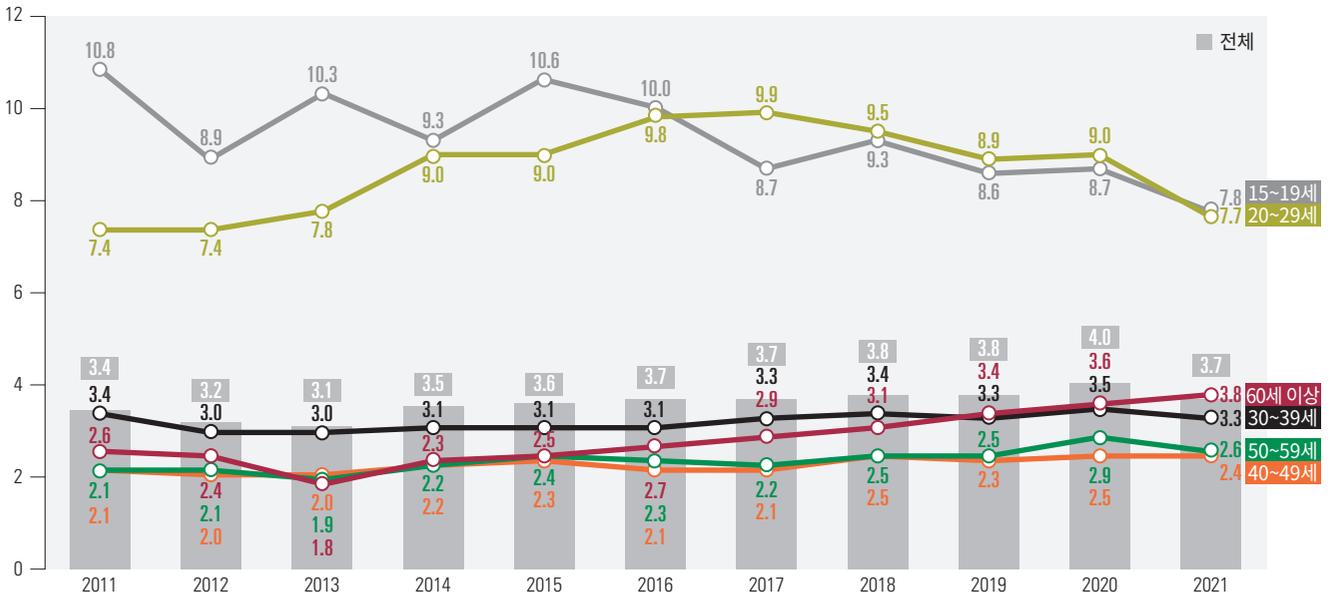
월별 실업률, 2019.07~2021.12

(단위: %)



연령별 실업률, 2011~2021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conn_path=I2, 2022.01.18. 인출)

높아졌다. 그리고 이 경향은 2021년에도 유지되었다. 성별 실업률을 월별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에 여성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된 것이 확인된다. 이 시기에 한국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성의 고용 회복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뎠던 것이다. 즉 외환위기를 비롯한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여성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더 짊어지고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연령별 실업률의 차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서비스업종 취업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서 실업률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 2021년 20대의 실업률은 7.7%인 반면, 40대와 50대의 실업률은 각각 2.4%와 2.6% 수준이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실업률이 3.8%로 20대보다 현저히 낮는데, 이는 고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와 노인일자리아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2019년까지는 매년 낮아지고 있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실업률이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복 추세도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노동시장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노동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노동 수요 변화에 맞추어 노동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 취업교육 등 적극적인 노동 정책도 필요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증가

2020년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2019년(10만 9242명)에 비해 863명 감소한 10만 8379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2020명보다 42명(2.1%) 증가한 2062명이며 사고 사망자와 질병 사망자 모두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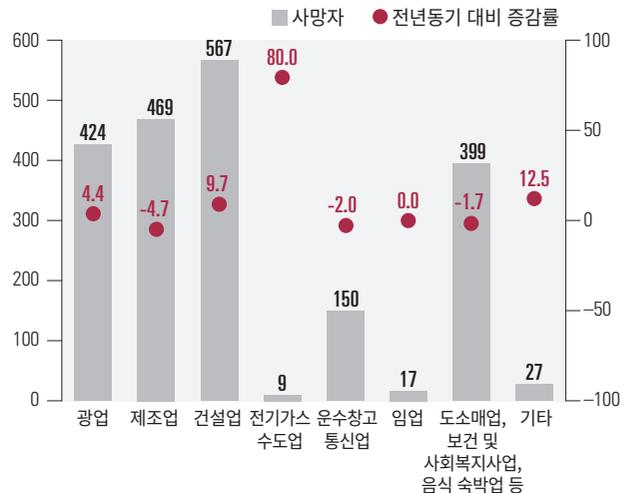
산업별 및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수를 보면, 건설업(567명)에서 그리고 5~4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엄격한 안전 관리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해

최근(2022년 1월)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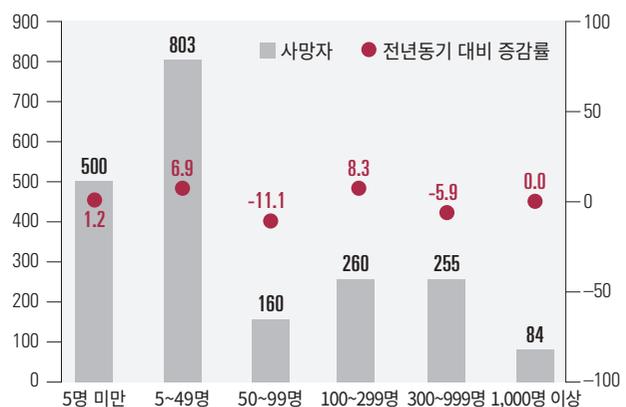
산업재해 발생 증감, 2020 (단위: 명, %)

구분	2020	2019	증감	증감률
재해자 수	108,379	109,242	-863	-0.8
- 사고 재해자 수	92,383	94,047	-1,664	-1.8
- 질병 재해자 수	15,996	15,195	801	5.3
사망자 수	2,062	2,020	42	2.1
- 사고 사망자 수	882	855	27	3.2
- 질병 사망자 수	1,180	1,165	15	1.3

산업별 사망자 수 (단위: 명, %)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수 (단위: 명, %)



출처: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현황(2021.12.)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SDGs 9번 목표는 산업 발전에 따른 부가치 증대와 과학기술 혁신의 적용을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유엔은 산업 발전 전담기구(UNIDO)를 두고 국제적 산업협력을 논의해 왔다. 여기에서는 1975년 ‘리마선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로 가는 길’을 채택했는데 SDGs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또한, 고용과 국내총생산에서 산업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세부목표로 한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속은 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장에서는 산업별 매출액 증가율과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가율을 살펴보았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과 거리두기 강화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수요가 급증했다. 그 결과 온라인을 통한 거래와 같은 비대면 거래가 증가했다. 비대면 거래 증가는 단순히 거래형태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소비자의 변화된 수요에 기업이 빠르게 적응하면서 산업 전반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화나 비대면 거래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통계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온라인 쇼핑의 성장(매출액 증가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 GDP 대비 연구개발비와 인구규모를 고려한 연구원 수로 살펴보았다.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수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산업별 매출액의 경우 제조업과 더불어 숙박업, 음식점업, 항공운송업에서 가장 큰 감소가 보였다. 특히 항공운송업은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다.

취업자 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속은 고용시장에 충격을 줬다.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시화된 시기는 2020년이며 이 시기에 취업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0년 3월과 4월 전체 산업별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숙박 및 음식점업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년동월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감소율은 2020년 3월 -4.9%, 4월 -9.2%를 기록하고, 이후 11월까지 약 -7~-9%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12월 -13.4%,

2021년 1월 -15.7%로 최고치를 찍은 후, 조금씩 감소율이 줄어들었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19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2021년 2월 이후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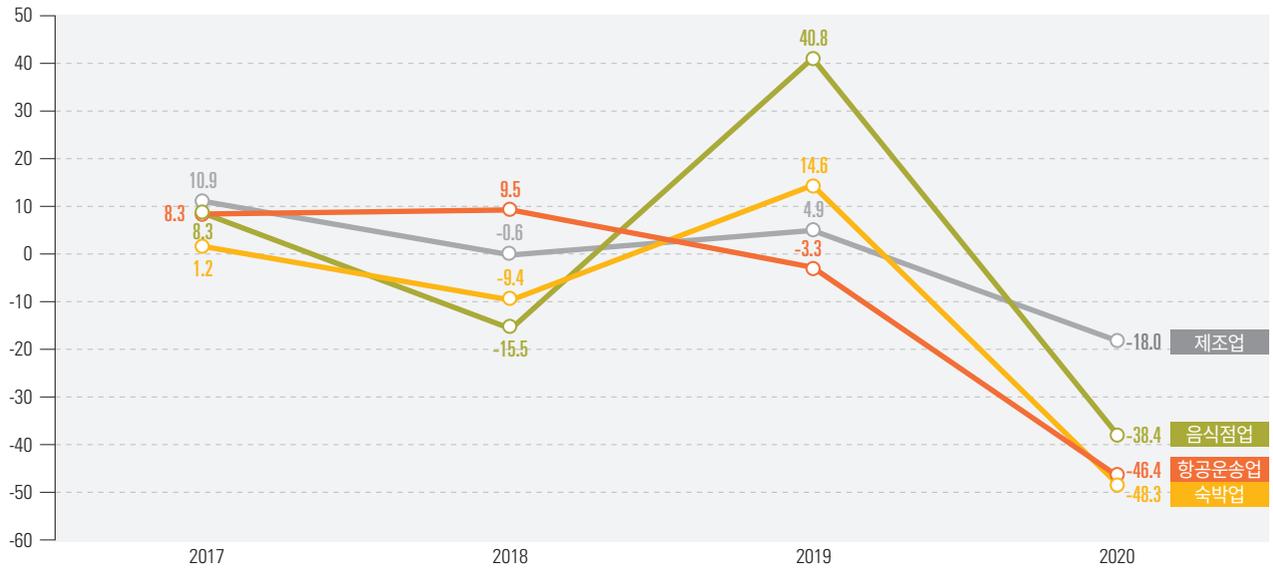
2021년 3월부터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2021년 1월 이후 4월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동월 대비 2021년 12월의 증가율은 3.3%였다. 취업자 수는 2021년 12월 현재 대부분 산업에서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회복했다.

전년동월 대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률, 2019~2021

(단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E06S&conn_path=I3, 2022.01.18. 인출)



출처: KISVALUE DB(www.kisvalue.com, 2021.09.25. 인출) 자료 활용 저자 작성

매출액은 실제 기업의 경영상태를 가장 빠르게 알려 주는 지표 중 하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매출액에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매출액 감소를 겪는 기업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되어 나타났다. 매출액 감소가 가장 컸던 산업은 항공운송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전년 대비 46% 이상 감소했다. 또한, 음식점업과 숙박업에서도 각각 -38.4%와 -48.3%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제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18%를 기록해 타격을 입기는 했으나 음식점업과 숙박업, 항공운송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과는 달리 그 감소세가 덜 가팔랐다.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량 회복세에 접어들어

코로나19로 급격히 감소했던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량이 2021년 백신 보급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제선 여객 운송량은 국내선 여객 운송량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2020년 2월의 국제선 여객 운송량은 1월에 비해 전년동월 대비 46.6% 감소했다. 그 이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매월 전년동월 대비 약 97%의 감소율이 지속되었다. 국제선 여객 운송량은 2021년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기저효과 때문이겠지만 실제 여객량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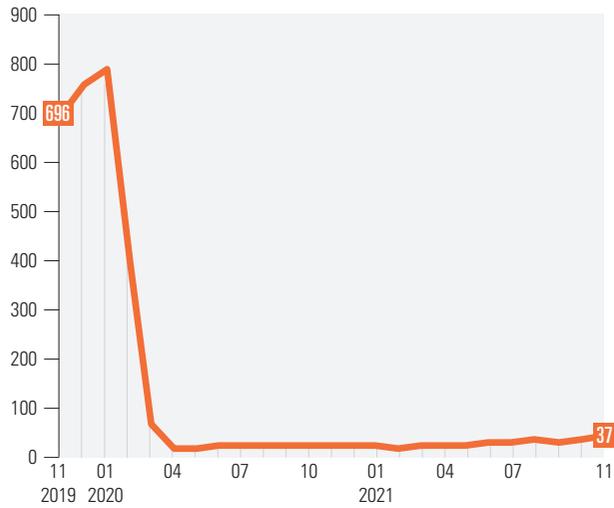
화물 운송량은 여객 운송량과는 다른 추이를 보이는데,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전년동월 대비 약 33%가 감소했으나, 이 수치는 여객 운송량 감소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이후 감소율도 매월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3월의 화물 운송량은 약 29만 3000여 톤이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2월 약 35만 1000톤의 83% 수준이다.

온라인 쇼핑 거래의 비약적인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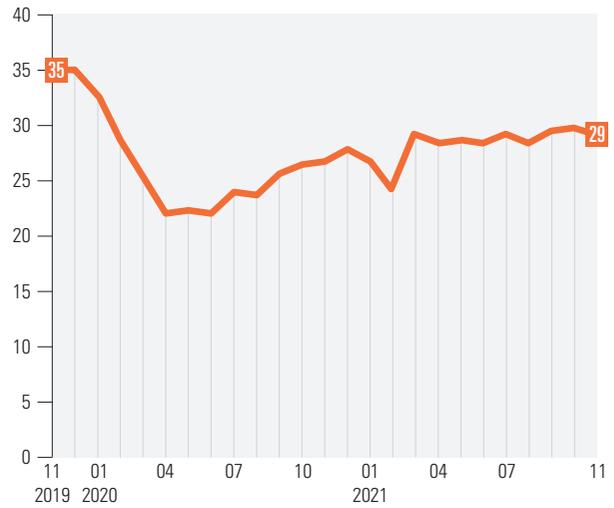
온라인 쇼핑 거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2017년 1분기 온라인 쇼핑 총거래액은 22조 2063억 원이었으며, 2020년 1분기에 36조 8301억 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거래 수요가 폭증하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1년 3분기 약 48조 257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9.7% 증가한 수치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변동은 상품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의 경우 2019년 4분기 4조 6033억 원에서 2020년 1분기 2조 6021억 원으로 급격히 하락했고, 문화 및 레저서비스의 경우도 감소했다. 그러나 음식서비스의 경우 2020년 1분기 3조 4514억 원에서 2021년 3분기 약 7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가전·전자·통신기와 생활용품 거래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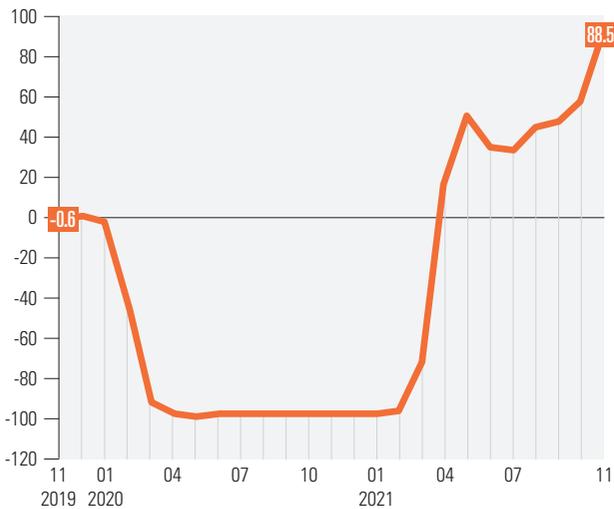
국제선 항공 여객 운송량 추이, 2019~2021 (단위: 만 명)



국제선 항공 화물 운송량 추이, 2019~2021 (단위: 만 톤)



전년동월 대비 국제선 항공 여객 증감률, 2019~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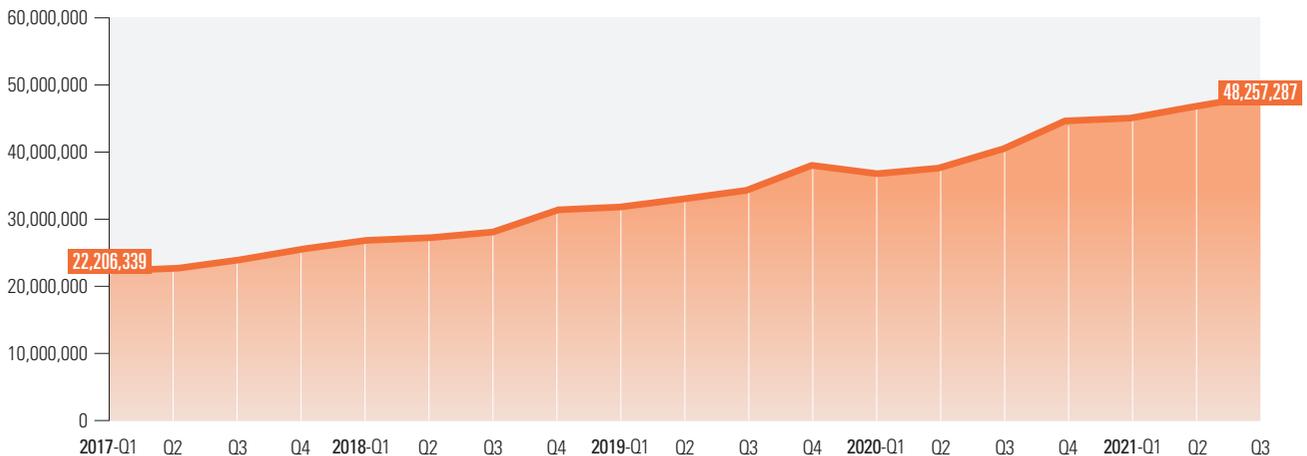


전년동월 대비 국제선 항공 화물 증감률, 2019~2021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통계(www.airport.go.kr/knowledge/statsnew/air/general.jsp#, 2022.01.07 인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전 품목 합계), 2017~2021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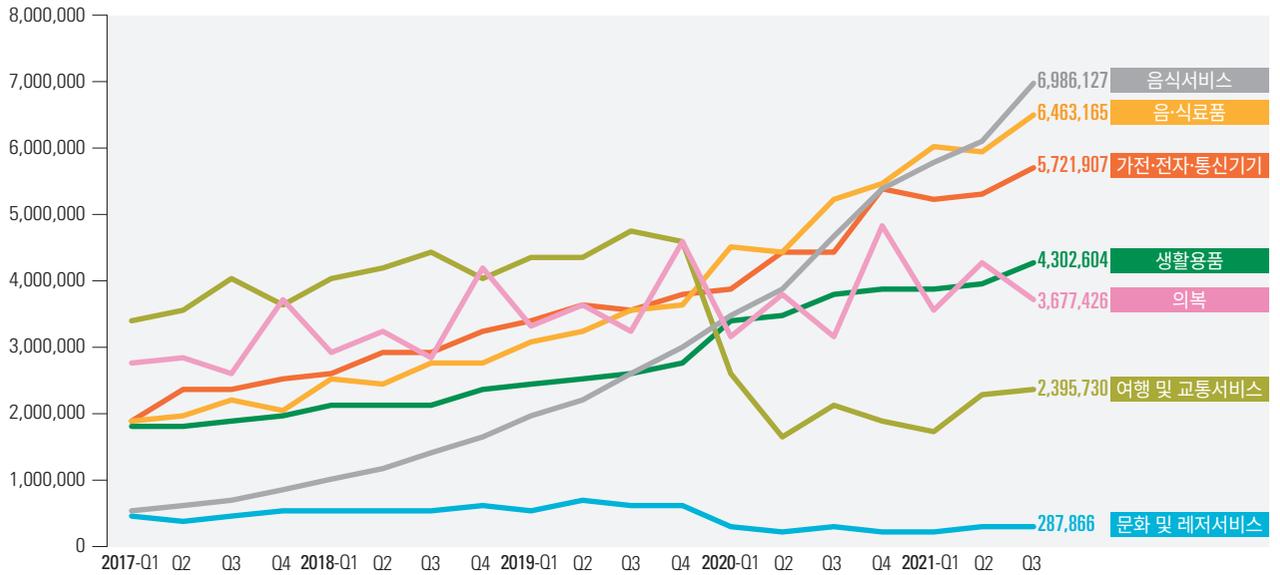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kosis.kr, 2022.01.07. 인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상품군별), 2017~2021

(단위: 백만 원)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E10041&conn_path=13, 2022.01.07. 인출)
 주 : 23개 상품군 중 일부만 발췌

한국의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은 세계 최고 수준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총연구개발비는 2018년 대비 3.9% 증가한, 89조 471억 원이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5년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6%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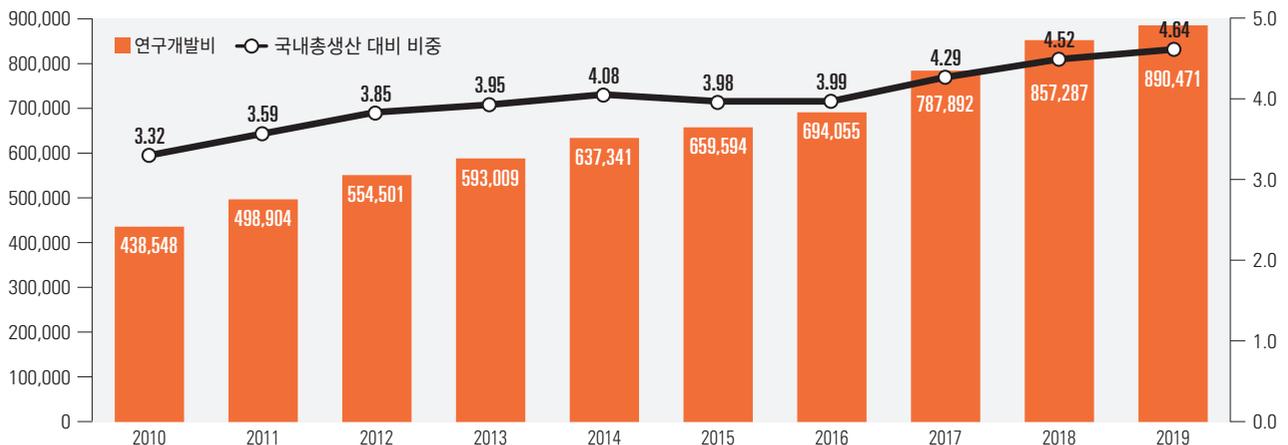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주요 국가들 중

이스라엘의 4.93%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이 수치는 독일의 3.19%와 미국의 3.07%보다도 높다.

한국의 연구개발인력도 증가 추세에 있다. 연구 참여 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3만 690명으로, 이는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큰 규모다. 국제 비교를 위해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를 계산해 보면, 한국은 15.4명인데, 이는 2019년 자료를 제출한 34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그 뒤를 핀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이 따르고 있다.

총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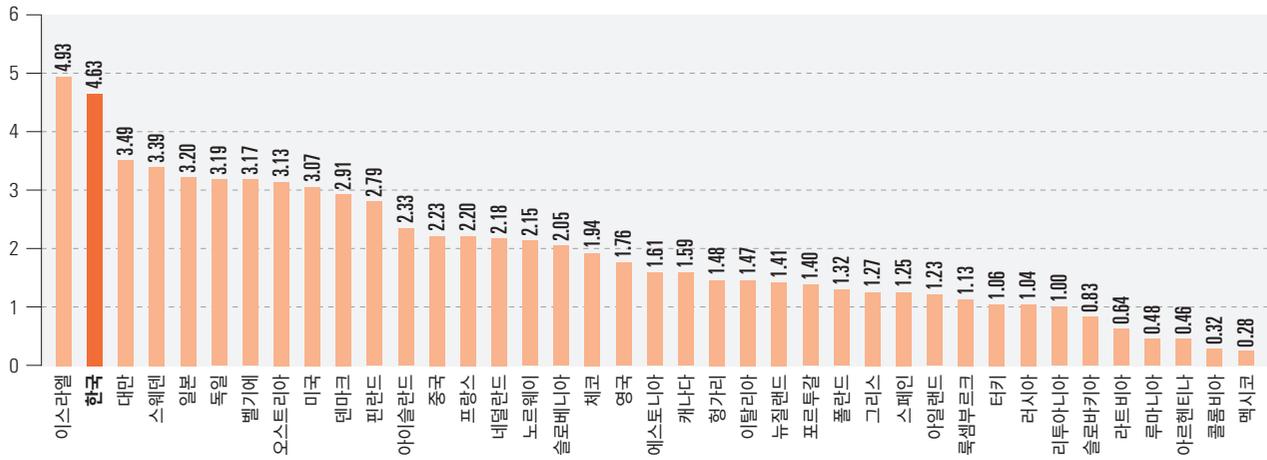
(단위: 억 원,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국제 비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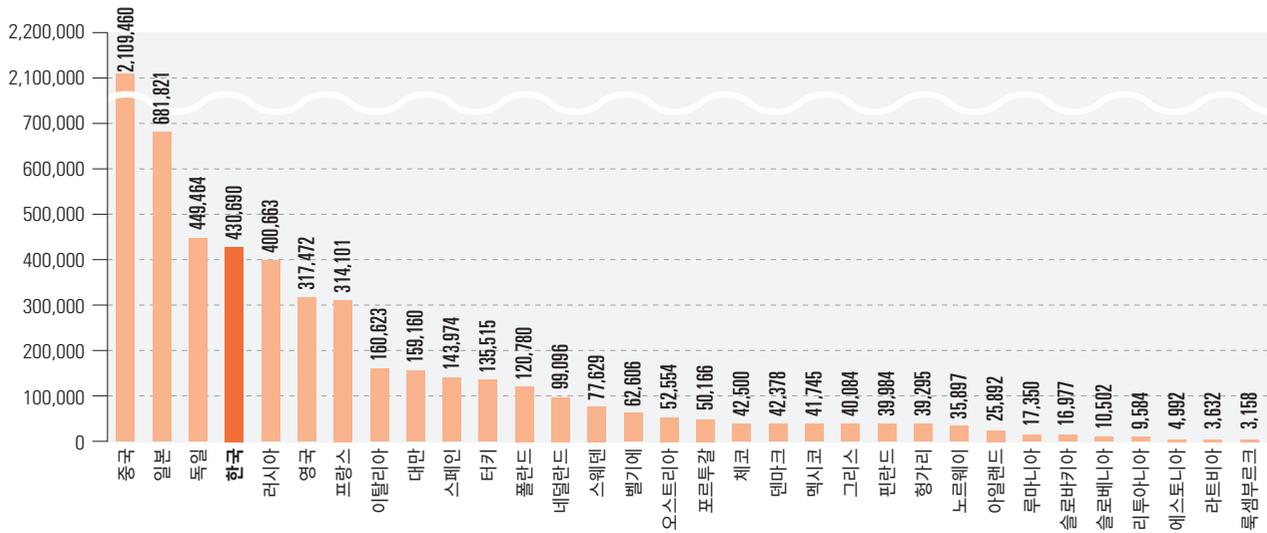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과학기술통계(<https://www.ntis.go.kr/rndsts>, <https://www.ntis.go.kr/rndsts/selectStatsDivlctVo.do>, 2021.11.21. 인출)

상근상당(FTE) 연구원 수 국제 비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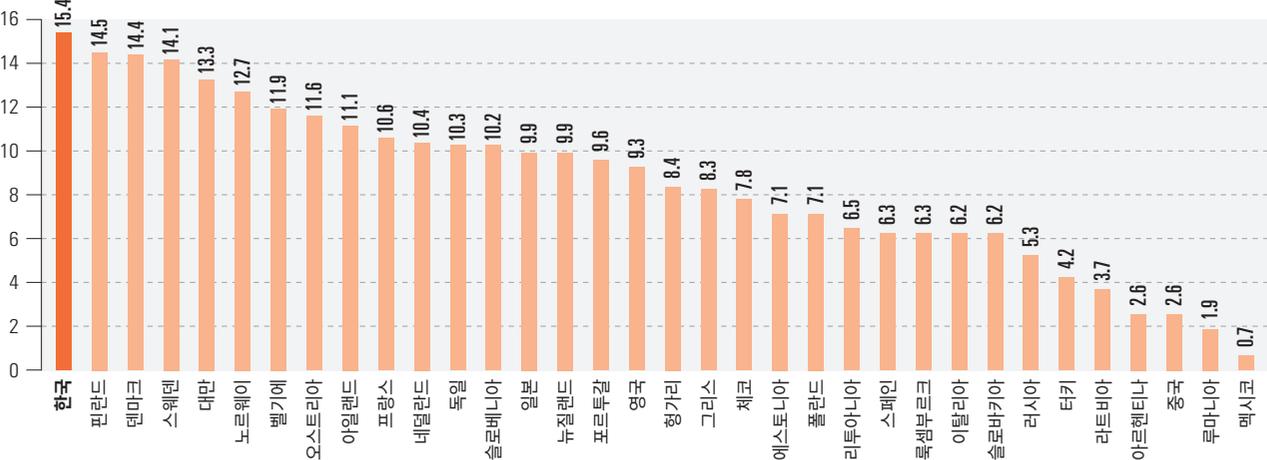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과학기술통계(<https://www.ntis.go.kr/rndsts>, 2021.11.21. 인출)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 국제 비교, 2019

(단위: 천 명당 명)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과학기술통계(<https://www.ntis.go.kr/rndsts>, 2021.11.21. 인출)



10 REDUCED INEQUALITIES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SDGs 10번 목표는 국가 내와 국가 간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지향한다. 국내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뿐 아니라, 기회, 과정,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법률과 제도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적으로는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과 기존 발전 국가의 저발전 국가에 대한 원조를 통해 국가 간 불평등 감소를 추구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국가 간 불평등과 국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는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도, 소득 불평등은 국가 간과 국가 내에서 모두 크게 심화되지 않고 있다. 유엔이 2021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개 국가의 1인당 소득이 전체 국가평균보다 더 증가했으며, 저개발 국가들의 수출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완화되고 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간 차이는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적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2010년 이후 꾸준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 보다는 높은 편에 속한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적 개입과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불평등 완화 노력이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제이주 감소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주 근로자와 유학생의 유입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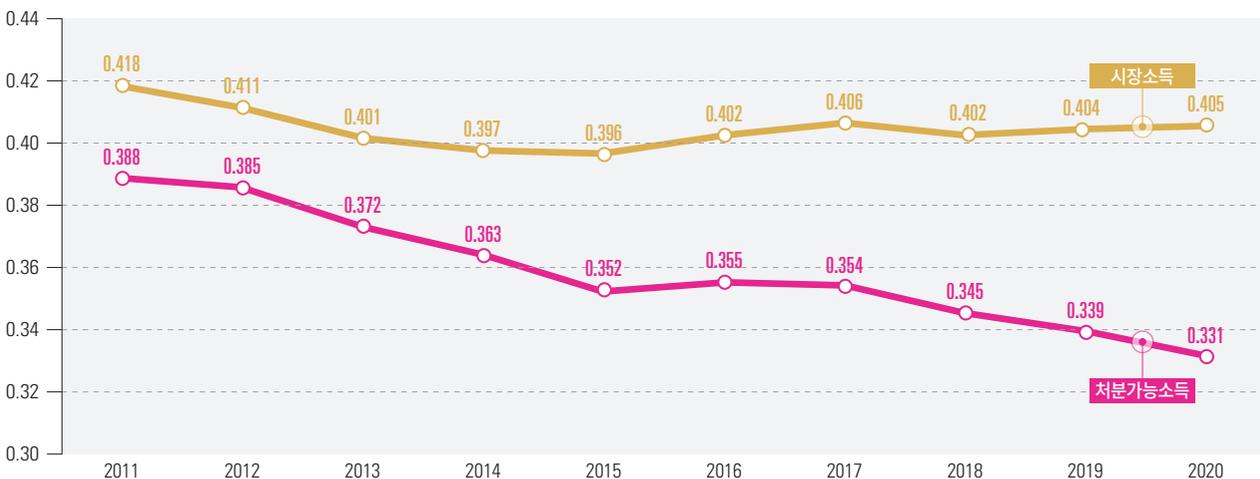
소득 불평등 완화 추세 및 정책 재분배 효과 개선 향상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지니계수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소득의 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 주는 지니계수는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구분해 계산하며,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를 포함하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본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11년에 0.388를 기록한 후 2015년 0.352까지 감소했으며, 2016년 0.355로 약간 높아졌다가 2020년 0.33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차이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강화의 효과가 최근으로 올수록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8~65세(근로연령층)와 66세 이상(은퇴연령층) 집단의 지니계수는 2020년 기준 각각 0.312와 0.376으로 전년 대비 각각 0.005와 0.013만큼 감소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완화 속도가 고령 집단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낸다. 코로나19 대

한국의 지니계수, 2011~2020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한국의 연령집단별 지니계수, 2019~2020

	전체			18~65세(근로연령층)			66세 이상(은퇴연령층)		
	2019년	2020년	증감	2019년	2020년	증감	2019년	2020년	증감
시장소득	0.404	0.405	0.001	0.362	0.365	0.003	0.554	0.554	0
처분가능소득	0.339	0.331	-0.008	0.317	0.312	-0.005	0.389	0.376	-0.013
개선효과	0.065	0.074	-	0.045	0.053	-	0.165	0.178	-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주1: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

주2: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주3: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주4: 개선효과 = 시장소득 - 처분가능소득

유행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강한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 소득 감소, 자산 감소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취약 집단을 중심으로 불평등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기준 OECD 주요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인 0.345는 스웨덴(0.275), 헝가리(0.280), 폴란드(0.281), 독일(0.289), 프랑스(0.301), 캐나다(0.303), 일본(0.339), 이탈리아(0.334), 호주(0.325)보다 높고, 영국(0.366)과 미국(0.390)보다 낮다.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간 차이는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적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소

득 불평등이 2010년 이후 꾸준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 불평등의 재분배 효과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과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아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한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산출이 자본 대비 노동에 배분되는 상대적 몫을 나타낸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실질 소득 분배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GDP에서 피고용자의 보수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경제성장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가를 부분적으로나마 가늠해 해 준다. 한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2006년 56.4%까지 높아졌다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52.6%와 52.9%로 낮아졌다. 이후 최근까지 54% 주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가 여러 번의 위기와 상시적 침체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고려하면, GDP 노동소득 비율의 정체, 즉 국가 경제성장이 노동소득 비율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가 경제가 발전해 부유한 사회가 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개인의 삶도 향상될 것이란 신념에 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인 53.8%는 일본의 54.2%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른 OECD 주요국

OECD 주요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및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처분가능소득 기준	시장소득 기준
스웨덴	0.275	0.428
헝가리	0.280	0.464
폴란드	0.281	0.452
독일	0.289	0.500
프랑스	0.301	0.529
한국	0.345	0.402
캐나다	0.303	0.427
일본	0.339	0.504
이탈리아	0.334	0.516
호주	0.325	0.454
영국	0.366	0.513
미국	0.390	0.505

출처: OECD,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주: 일본(2015년), 독일·이탈리아·미국(2017년) 제외하고 2018년 자료임

인 스위스(70.7%), 네덜란드(63.9%), 벨기에(62.5%)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36.6%), 터키(36.2%), 멕시코(34.6%)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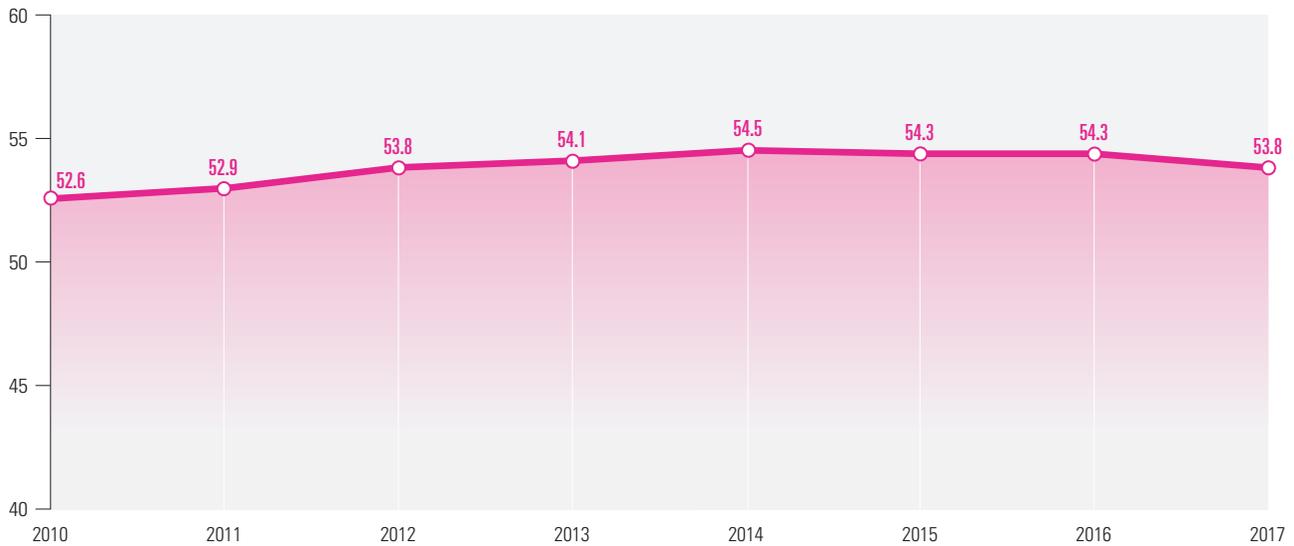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감소

SDGs 10번 목표는 노동의 이동과 이주를 국가 간 불평등

을 감소시키고 저발전 국가의 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기제 중 하나로 본다. 따라서 10번 목표는 도착국에서 일하는 이주 근로자가 치르는 취업비용의 비율과 같은 개인적 수준의 문제와 질서 있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정책의 존재와 같은 제도적 수준의 문제를 동시에 강조한다. 또한 이주 근로자가 이주 과정과 노동 과정의 열악한 환경에서 겪는 안전과 난

한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201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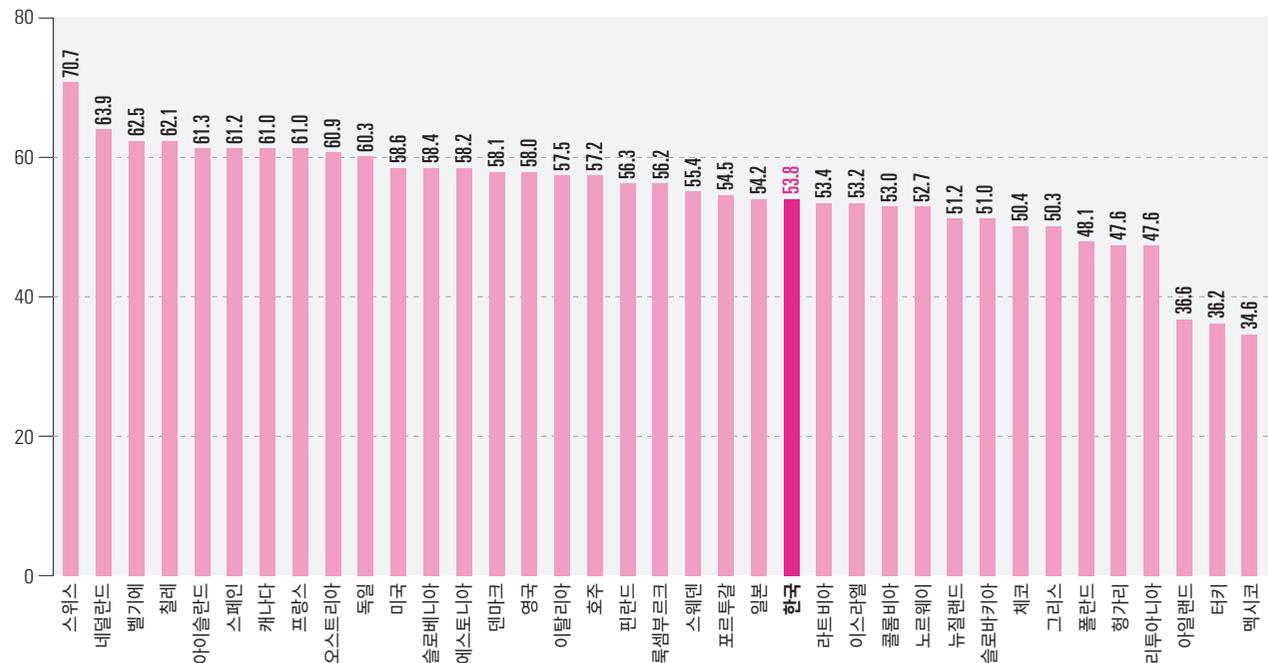
(단위: %)



출처: ILO(<https://ilostat.ilo.org>, 2021.09.26. 인출)

OECD 국가별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2017

(단위: %)



출처: ILO(<https://ilostat.ilo.org>, 2021.12.2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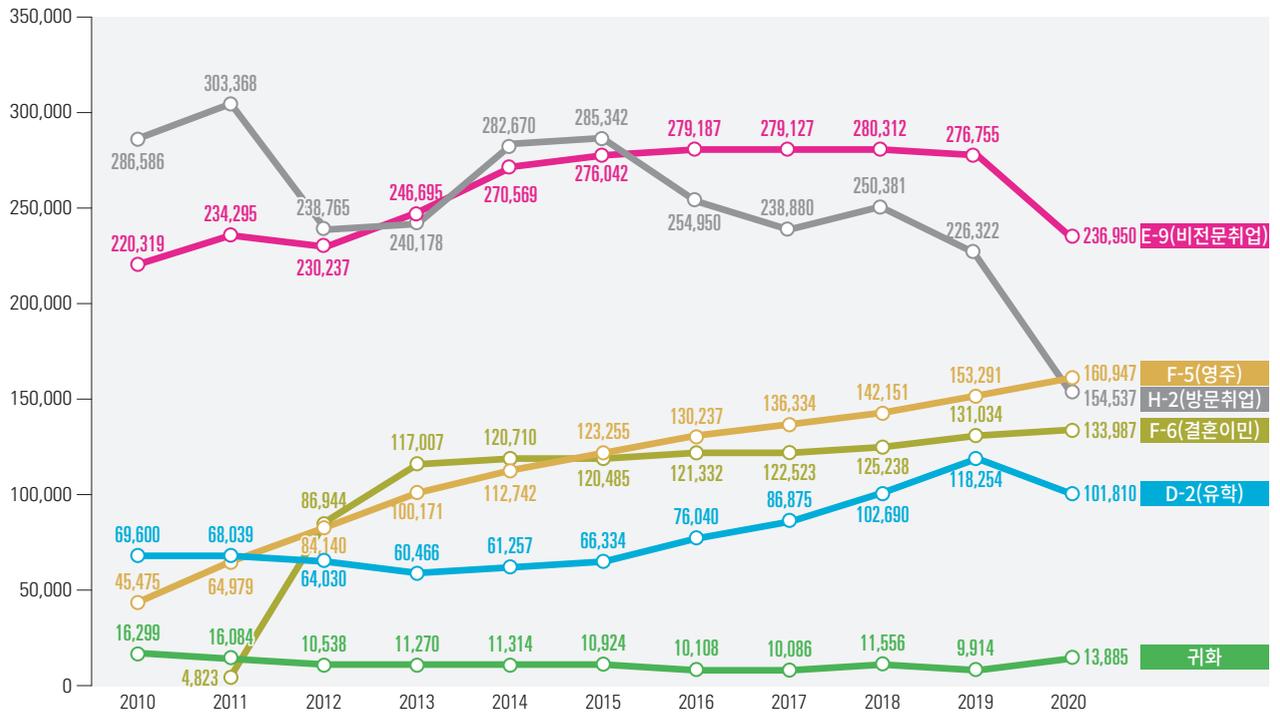
민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국제이주가 개인에게 자신의 삶을 바꾸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위험은 물리적·신체적 안전과 관련된 위험과 도착국에서 빈곤과 불평등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위험 모두를 포함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 간 이동이 막히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렵고, 고된 일을 담당

하고 있는 이주 근로자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전문취업자(E-9) 수는 2014년 이후 2019년까지 27만~28만 명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에 24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그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2020년에 처음으로 그 증가세가 꺾였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근로자가 겪는 사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변화 추이, 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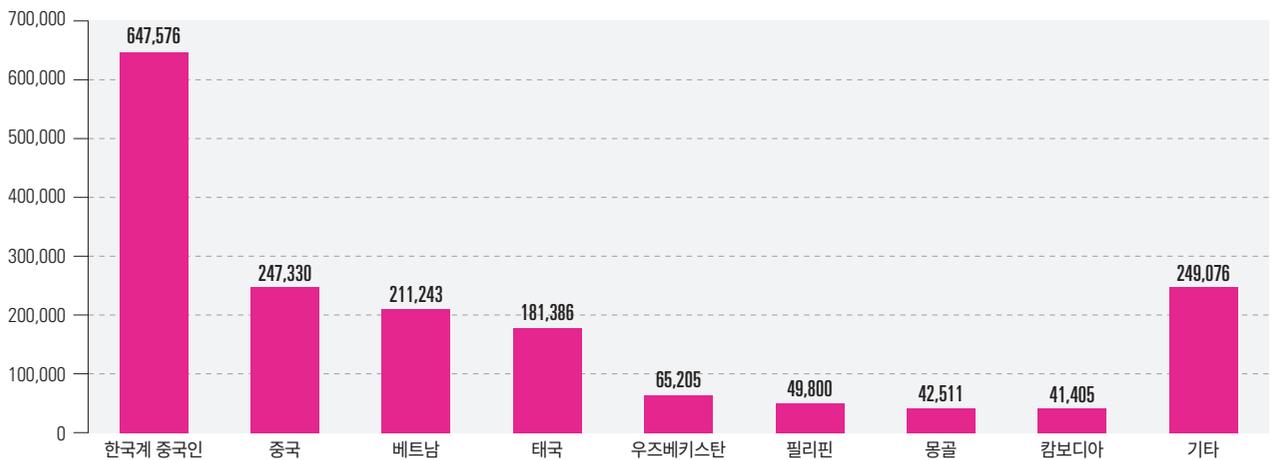
(단위: 명)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2020

(단위: 명)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주 : 기타 국가는 일본, 인도네시아, 네팔, 타이완, 카자흐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홍콩,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임

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다수는 중국과 동남아로부터 온 이주 근로자들이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뒤를 베트남, 태국 등이 따르고 있다. 체류외국인의 증가세가 코로나19 이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체류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단기순환노동 원칙에 따라 체류 기간이 철저히 관리되는 동남아시아 출신 비전문취업 이주 근로자의 규모는 정체되거나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비자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머무르고 있는 미등록 체류자 수는 2016년 20만 8971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39만 2196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체류 외국인의 수가 대폭 감소한 상황을 감안하면, 미등록 체류자 규모의 증가는 소수집단과 취약계층의 정책적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삶에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은 자료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된다. 코로나19 전후 한국에서 체류 중인 주요 외국인집단의 취업자 수 변화를 보면 전체 취업자의 수는 2019년에 약 86만 3200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그 수가 84만 7900여 명으로 1.8% 감소했다. 특히 방문취업(H-2)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2016~2020

(단위: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체류외국인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불법체류자	208,971	251,041	355,126	390,281	392,19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주1: 출입국가 통계와 체류외국인 통계 통합관리

주2: 체류외국인 통계는 매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임

주3: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 및 단기체류로 구분되며, 불법체류자는 체류외국인 중 불법 체류외국인 현황임

체류자격별 주요 외국인집단 취업자 수, 2019~2020 (단위: 천 명, %)

	취업자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유학생 (D-2, D-4-1·7)	영주 (F-5)	결혼이민 (F-6)
2019.05.	863.2	260.8	158.1	23.0	76.7	56.2
2020.05.	847.9	251.1	117.2	27.2	79.7	61.9
전년 대비 증감	-15.3	-9.7	-40.9	4.2	3.0	5.7
증감률	-1.8	-3.7	-25.9	18.3	3.9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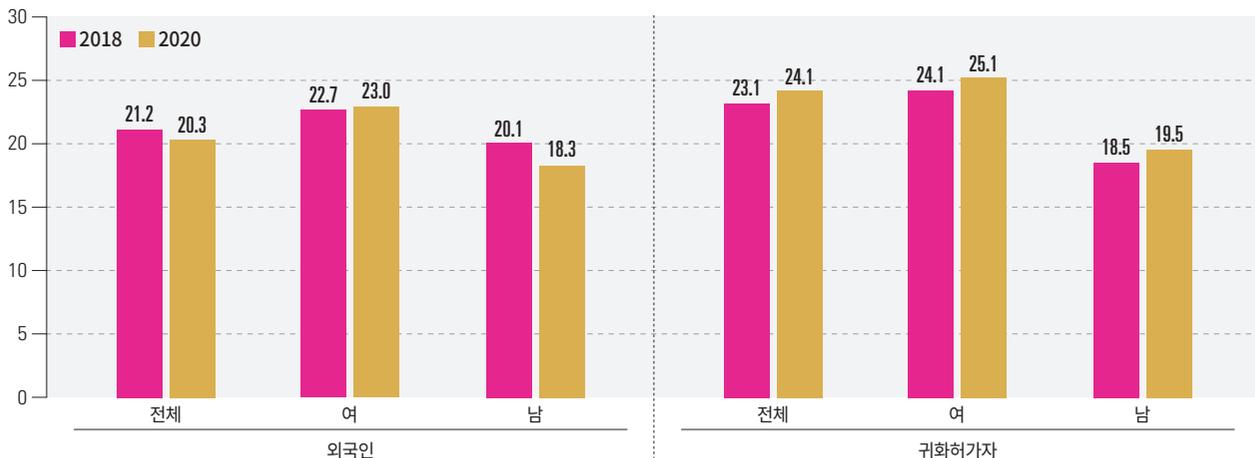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

과 비전문취업(E-9)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 두 집단은 한국 사회에서 보통 외국인 근로자로 분류되는 집단이며, 이들 대부분이 3D 업종과 서비스 업종에 종사한다.

외국인과 귀화허가자가 지난 1년간 출신 국가, 한국어 능력, 외모 등의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는 비율을 보면,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 21.2%, 이후인 2020년에 20.3%로 차별 경험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귀화허가자의 경우 2018년 23.1%에서 2020년 24.1%로 증가했다.

체류외국인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2018, 2020

(단위: %)



출처: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SDGs 11번 목표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을 지향한다. 이 목표에서는 적정 수준의 주택 및 기본 서비스, 안전한 교통체계, 공공녹지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자연재해와 재난의 위험에 대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폐기물과 대기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강조된다.

도시의 환경은 날로 악화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생존과 삶의 질은 위협받고 있다. 최근 들어 폭우, 홍수, 가뭄, 산불, 폭염 등이 도시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60%가 1개 이상의 자연재해(태풍, 가뭄, 홍수, 지진, 산사태, 화산 폭발)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도시는 코로나19의 진원지였으며, 확진자의 90%가 도시에서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하에서 도시는 적정가격주택(affordable housing), 공중보건시스템, 서비스와 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취약성을 드러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치명적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은 거주 기능뿐 아니라 노동, 학습, 여가 등 다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빈민 거주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은 이를 불가능하게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에서도 계층별 격차를 심화시켰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도시 인구의 절반만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성(버스 정류장에서 500m 이내, 철도역이나 선착장에서 1000m 이내)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도시의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의 증가가 도시에서 두드러진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대중교통의 이용도 축소되면서 개인교통 수단이 없는 사람들의 이동권이 위축되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1인당 공원·녹지의 면적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활권 공원에 대한 접근성도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19\mu\text{g}/\text{m}^3$)는 2019년에 비해 17.4%가 감소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기오염 수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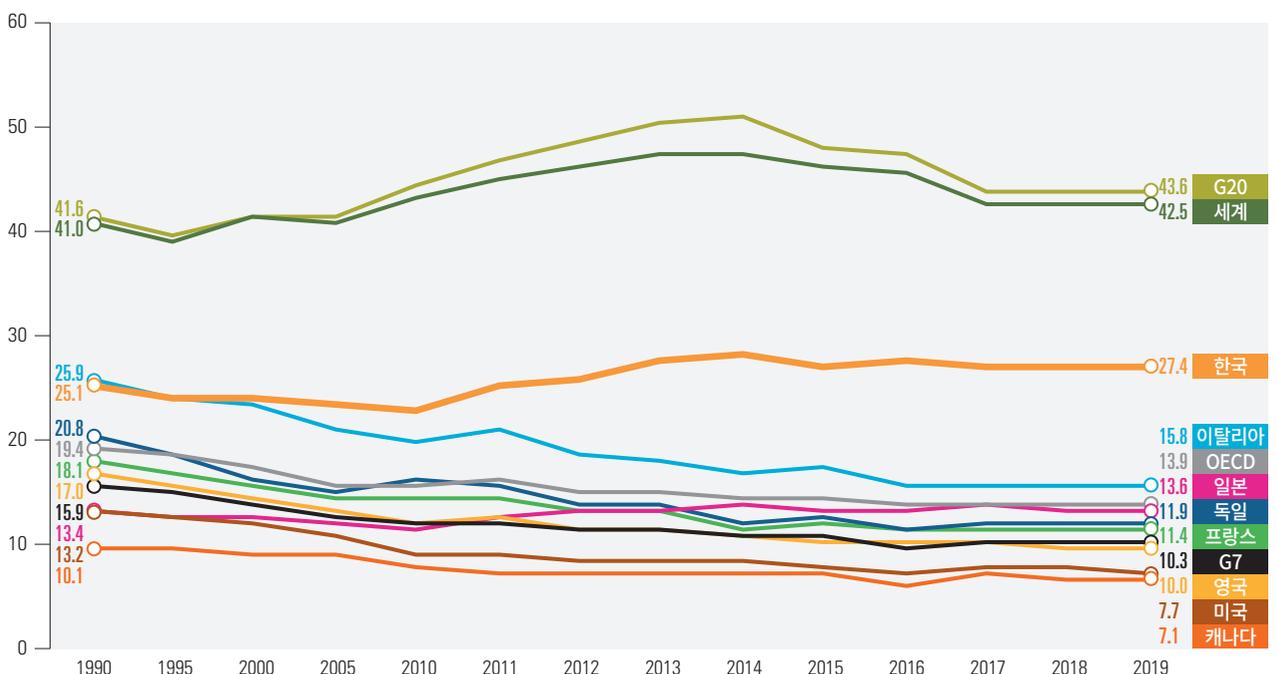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위협은 도시민의 생존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초미세먼지($\text{PM}_{2.5}$)는 입자가 미세해 인체에 흡입되면 폐포까지 직

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0년 $22.9\mu\text{g}/\text{m}^3$ 까지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27.4\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인 $42.5\mu\text{g}/\text{m}^3$ 보다는 낮으나, OECD 평

OECD 주요 국가별 초미세먼지 농도 추세, 1990~2019

(단위: $\mu\text{g}/\text{m}^3$)



출처: OECD Environment Database(stats.oecd.org, 2021.09.11. 인출)



균인 13.9 $\mu\text{g}/\text{m}^3$ 의 2배가량에 해당한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OECD 주요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한국은 답보 상태에 있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OECD 평균 또는 WHO 권고 수준 10 $\mu\text{g}/\text{m}^3$ 로 저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오염원의 파악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필요하다.

도시 공공녹지 면적, 계획과 집행 간 괴리 여전히 존재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도시민의 삶의 질에 공공녹지 확보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인당 공원 면적을 통해 도시 공공 공간의 양적 측면을, 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 질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녹지 면적의 양적 측면을 평가할 때는 원래 계획되었던 면적과 실제로 조성된 면적을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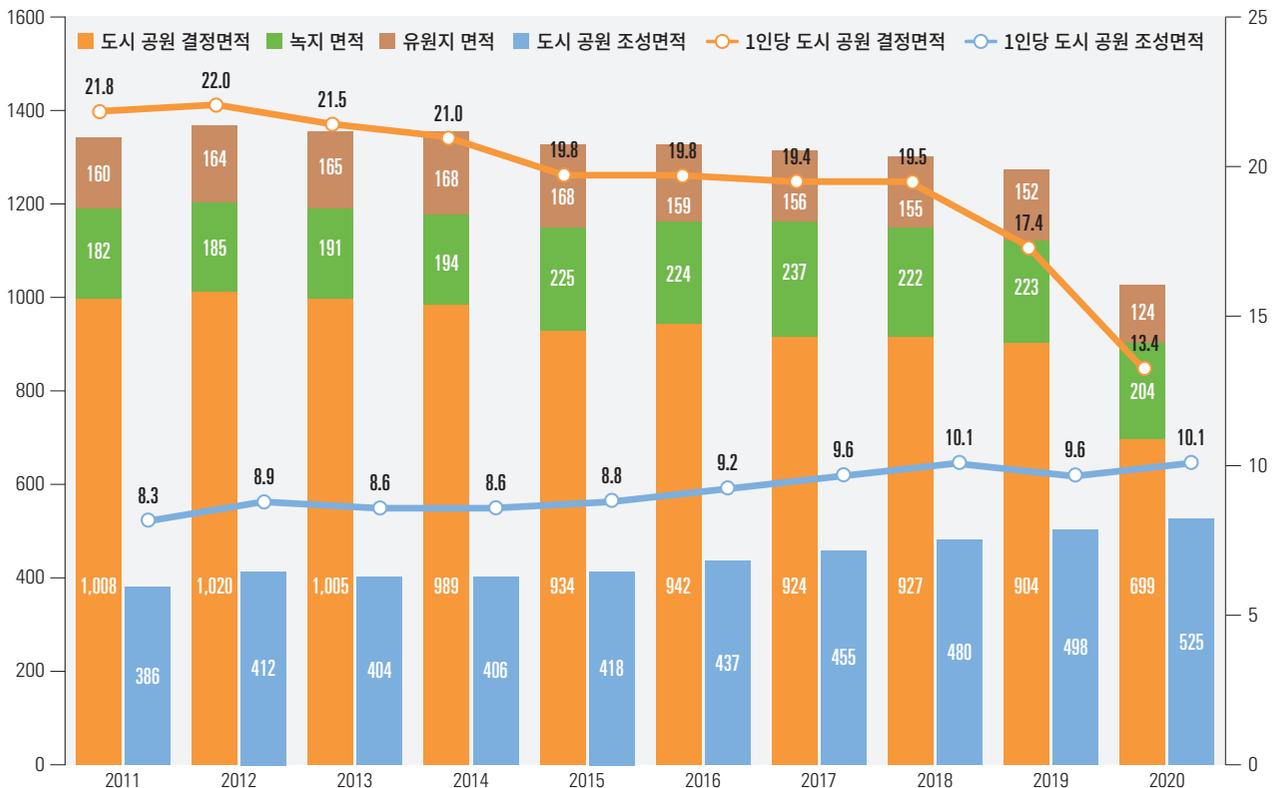
분해 살펴봐야 한다. 한국에서 계획된 도시 공원·녹지 면적의 합은 2010년대 1300 km^2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 해제의 영향으로 1027 km^2 로 낮아졌다. 계획된 1인당 도시 공원 면적도 2011년 21.8 $\text{m}^2/\text{인}$ 에서 2020년 13.4 $\text{m}^2/\text{인}$ 으로 감소했다.

실제로 조성된 도시 공원 면적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조성된 1인당 도시 공원 면적도 2011년 8.3 $\text{m}^2/\text{인}$ 에서 2020년 10.1 $\text{m}^2/\text{인}$ 이 되었다. 이는 WHO 권고 최소 기준인 9 $\text{m}^2/\text{인}$ 을 충족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OECD 주요국 대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계획된 도시 공원 면적(699 km^2)의 해제에 따른 감소와 조성된 도시 공원 면적(525 km^2)의 증가를 고려해 계산한 도시 공원 조성률은 다소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계획된 도시 공원의 24.9%는 조성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는 생활권 공원 서비스 권역 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과 평균 거

도시 공원·녹지·유원지 면적 추이, 2011~2020

(단위: km^2 , $\text{km}^2/\text{인}$)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각 연도(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 2021.09.2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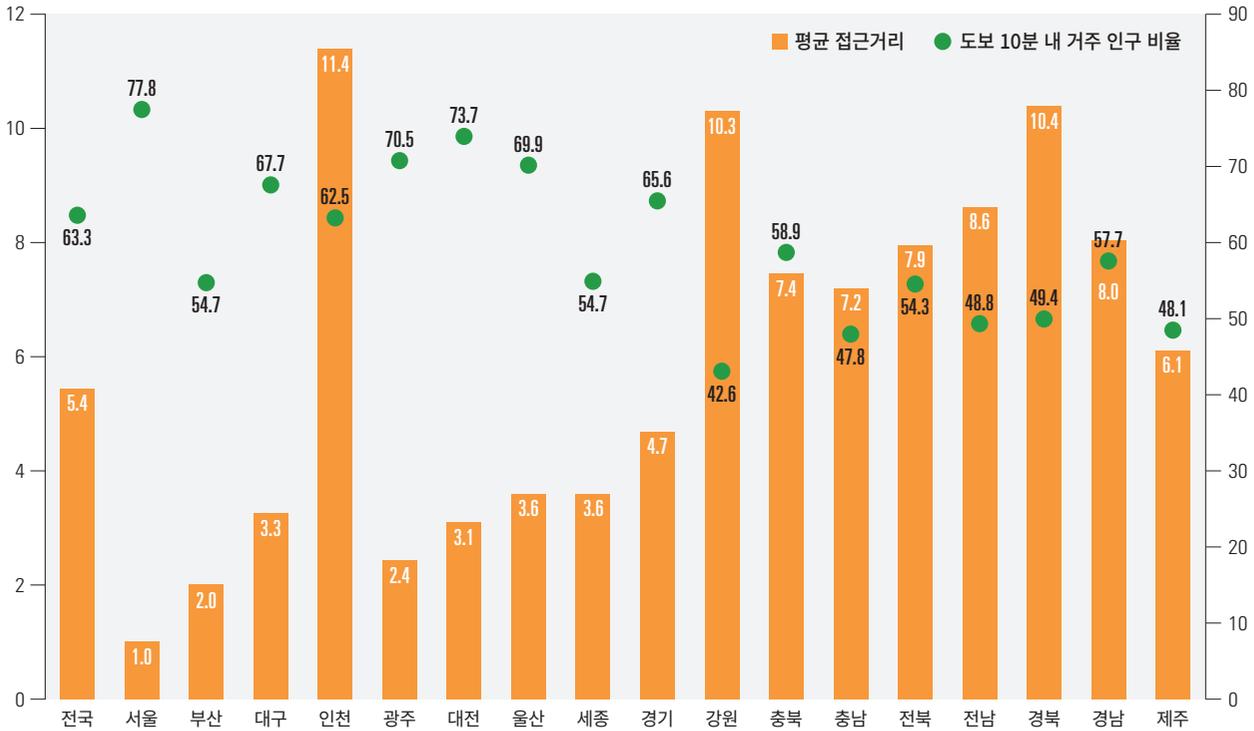
주1: 도시 공원은 도시 지역에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간임

주2: 녹지는 도시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임

주3: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임

주4: 도시 공원 결정면적은 도시계획상 도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로 지정한 면적을, 조성면적은 도시 공원으로 조성되어 실제 도시 공원으로 기능하는 면적을 의미함

주5: 도시계획상 도시 공원을 위한 부지로 지정하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 결정을 해제함. 2000년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지정된 다수의 부지가 2020년 전면 해제됨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2020(<http://map.ngii.go.kr/ms/pblict/nationalYearBook.do>, 2021.09.22. 인출)

리로 접근성을 파악하고 있다. 2020년 생활권 공원까지 전국 평균 접근거리는 5.4km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1.0km), 부산광역시(2.0km) 등이 생활권 공원까지의 접근성이 높으며, 인천광역시(11.4km), 경상북도(10.4km), 강원도(10.3km) 순으로 접근성이 낮다. 접근성 기준 최상위인 서울특별시와 최하위인 인천광역시는 11.4배의 격차를 보일 정도로 지역 간 격차가 크다.

2020년 생활권 공원 서비스 권역 내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 국민의 63.3%가 생활권 공원까지 도보 10분(75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7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강원도가 42.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공공녹지공간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도시 내 접근성을 고려해 공공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의 취약계층에 집중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 면적이나 침실 기준,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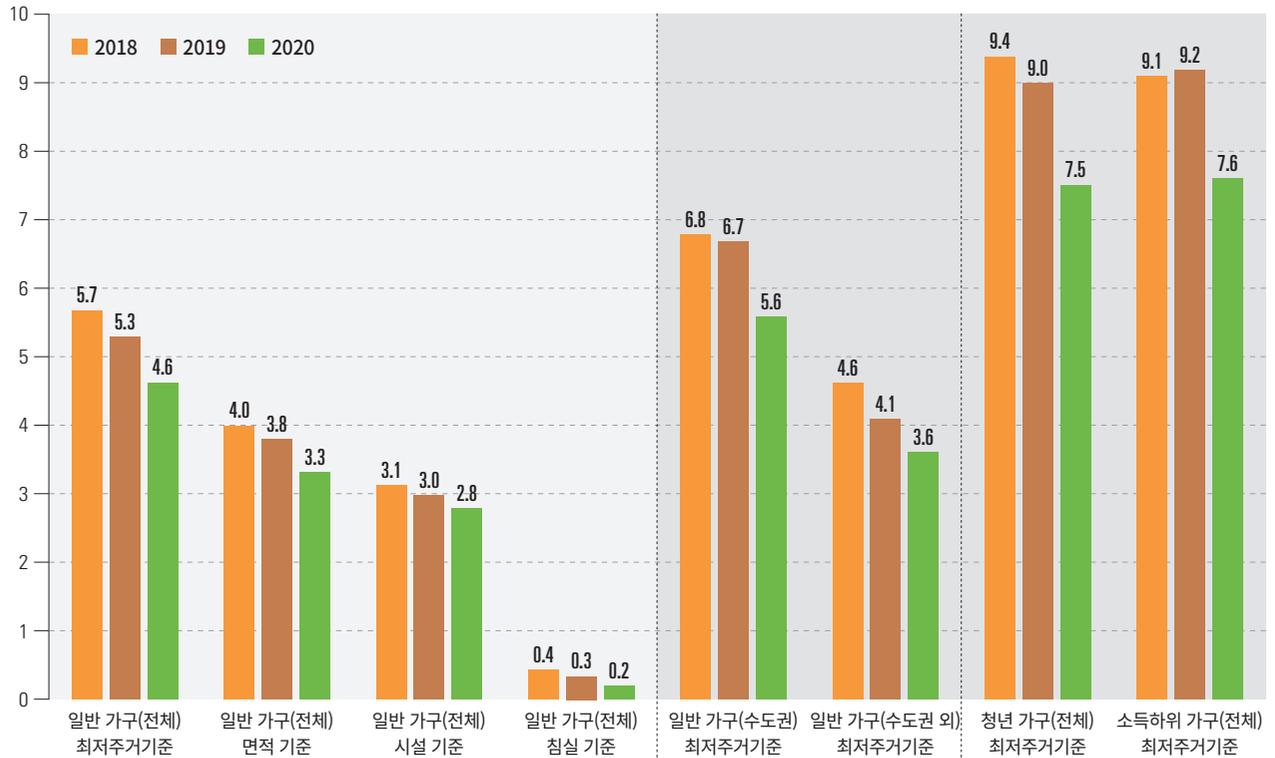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4.6%로 전년 대비 0.7%p 감소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면적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3.3%, 시설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8%, 침실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0.2% 등으로 모든 항목에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5.6%로, 수도권 이외 거주 가구의 3.6%에 비해 2%p 높다. 가구 특성별로는 청년 가구와 소득하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각각 7.5%와 7.6%로 일반 가구에 비해 높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소득하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0.4%, 10.1%로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4.6%의 취약 가구는 환기, 채광 등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고, 코로나로 인해 커진 주거 공간의 중요성 때문에 고용과 교육에서 다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강미나·이후빈, 2021). 또한, 청년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2018~2020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327&hFormId=6033&hSelectId=6033&sStyleNum=1&sStart=2020&End=2020&hPoint=00&hApr=1&oFileName=&rFileName=&midpath=>, 2021.09.22. 인출)

소득하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일반 가구에 비해 높은 점은 특기할 만하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의 악화는 각국 정부가 사회임대주택과 같은 공적 주택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게 만든다. 사회임대주택은 시장 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 거주시설을 의미한다(Salvi, 2016). 사회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으로 기능하며, 국가 주택시장에 다양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의 전체 사회임대주택 재고는 약 2800만 호로 전체 주택 재고의 약 6.9%를 차지하지만, 국가별 격차가 상당히 크다. 사회임대주택 비율은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가 총 주택 재고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부 유럽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전체 주택 재고의 10% 미만을 차지할 뿐이다. 한국은 약 8.9%로 OECD 평균보다 2% 정도 높으며,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비중이 높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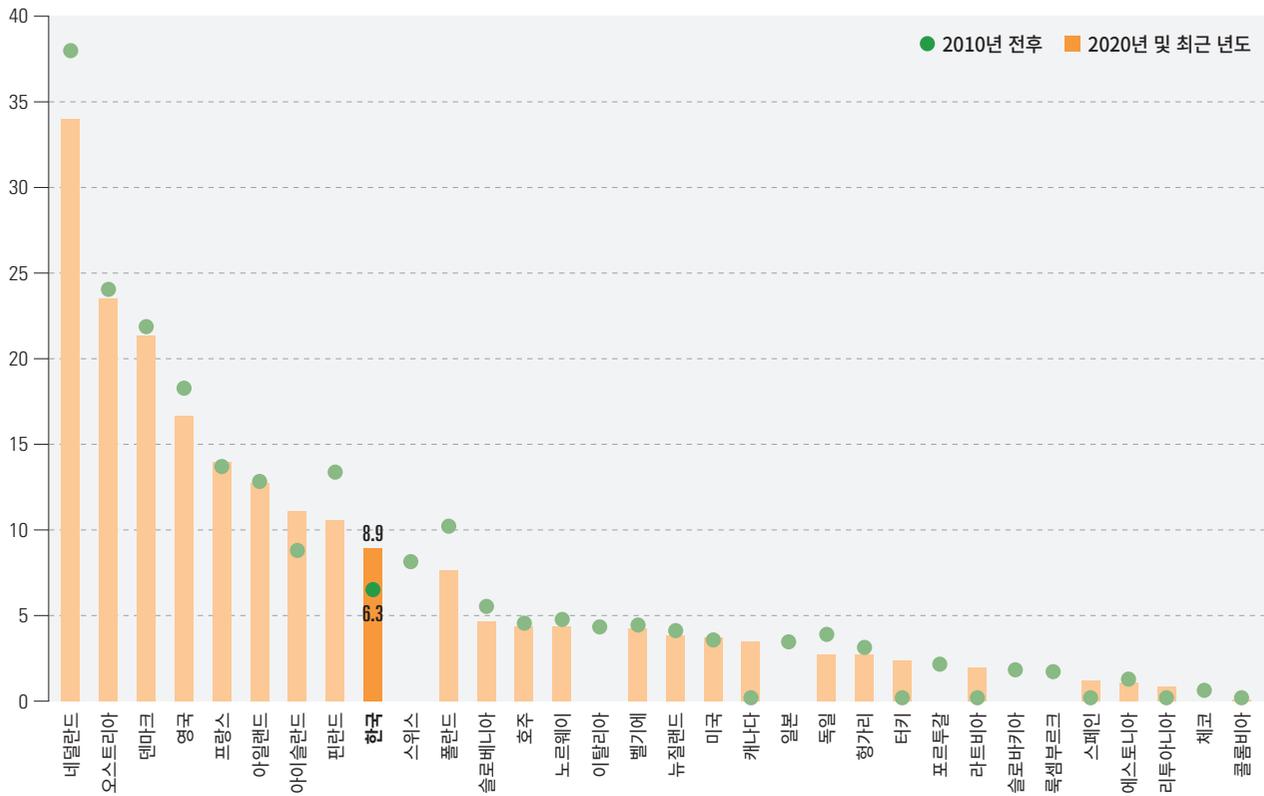
가로 폴란드(7.6%) 등이 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권 지역별로 격차 커

SDGs 11번 목표는 취약계층, 노약자, 아동 등 모두에게 안전하고,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용의 관점에서 저상버스 도입률은 교통약자에 대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저상버스가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2년 총 4215대 수준에서 2020년 총 9840대로 증가했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2년 12.8%에서 2020년 27.8%로 2배 넘게 올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저상버스 도입률은 8개 도시 중 서울시가 57.8%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32.9% 수준이다. 반면, 충남 10.0%, 전남 11.5%, 울산 12.3% 등 일부 지자체는 도입률이 10% 내외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 서울과 다른 지역 간 대중교통 접근권 격차가 2012년에 비해 2020년에 커진 점도 두드러진다. 따라서 지역별로 고르게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인 이동 수단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OECD 국가별 사회임대주택 재고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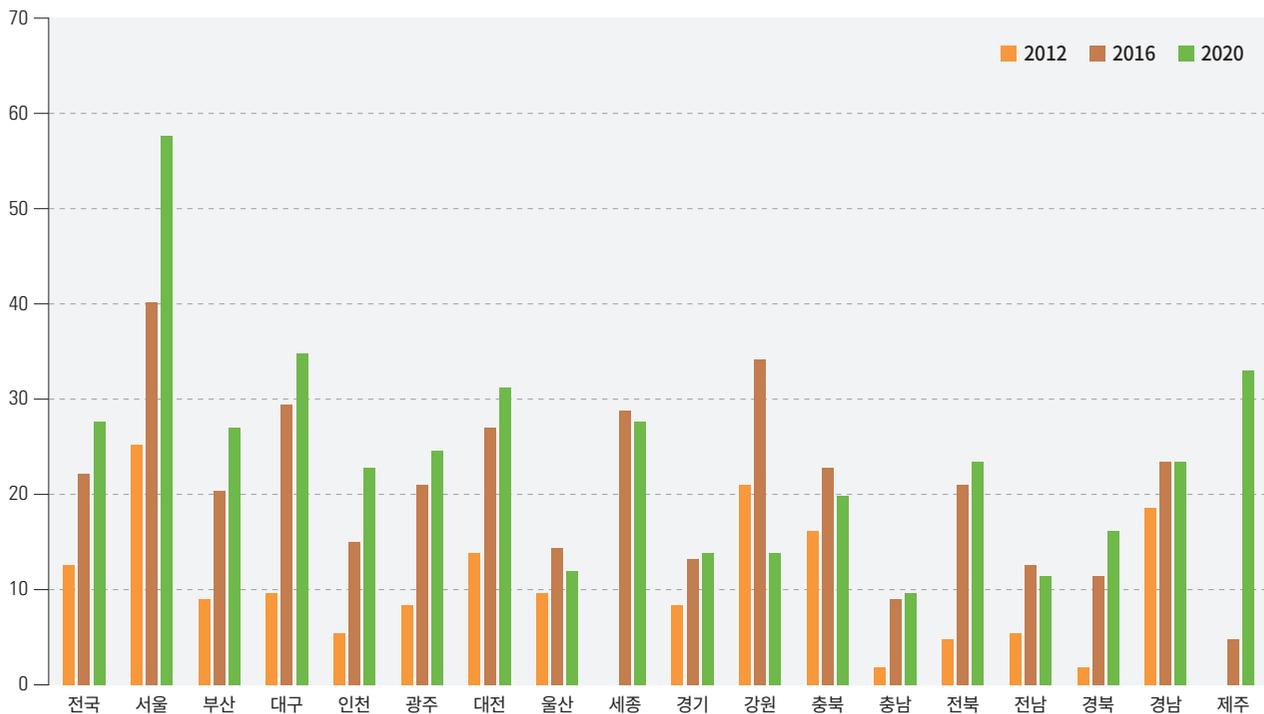


출처: OECD, Public policies towards affordable housing(<https://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housing-policies.htm>, 2021.09.22. 인출)

주 : 데이터 연도는 국가마다 다름. 한국은 2010년과 2018년 기준임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률, 2012~2020

(단위: %)



출처: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현황, 각 연도(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lD=354&hFormId=5250&hSelectId=5250&hPoint=00&hAppr=1&hDivEng=&oFileName=&rFileName=&midpath=&month_yn=N&sFormId=5250&sStart=2012&sEnd=2020&sStyleNum=1&EXPORT=EXCEL, 2021.09.02. 인출)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SDGs 12번 목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생산과 소비라는 단선적인 경제구조를 순환적인 체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의 순환 경제 관점에서 제도의 틀을 재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2018년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근거로 제1차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과 17개 광역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마련, 2021년 한국형(K)-순환 경제 혁신 이행계획안 수립 등을 통해 전환·산업·수송·건물·농업·산림 등 사회 전반의 물질 순환이 완성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자원순환과 순환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량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은행(World Bank, 2018)은 2050년 세계 폐기물 발생량이 34억 톤으로 현재보다 약 60%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2050년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대비 세계적인 추세보다 약간 높은 65.8%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환경연구원, 2020). 한국은 GDP 대비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해 경제사회 요소와는 탈동조화(decoupling)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인당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다소비형 변화에 따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등 포장재 폐기물이 급증했으며, 의료폐기물 등 특정 폐기물의 발생량에도 변화가 있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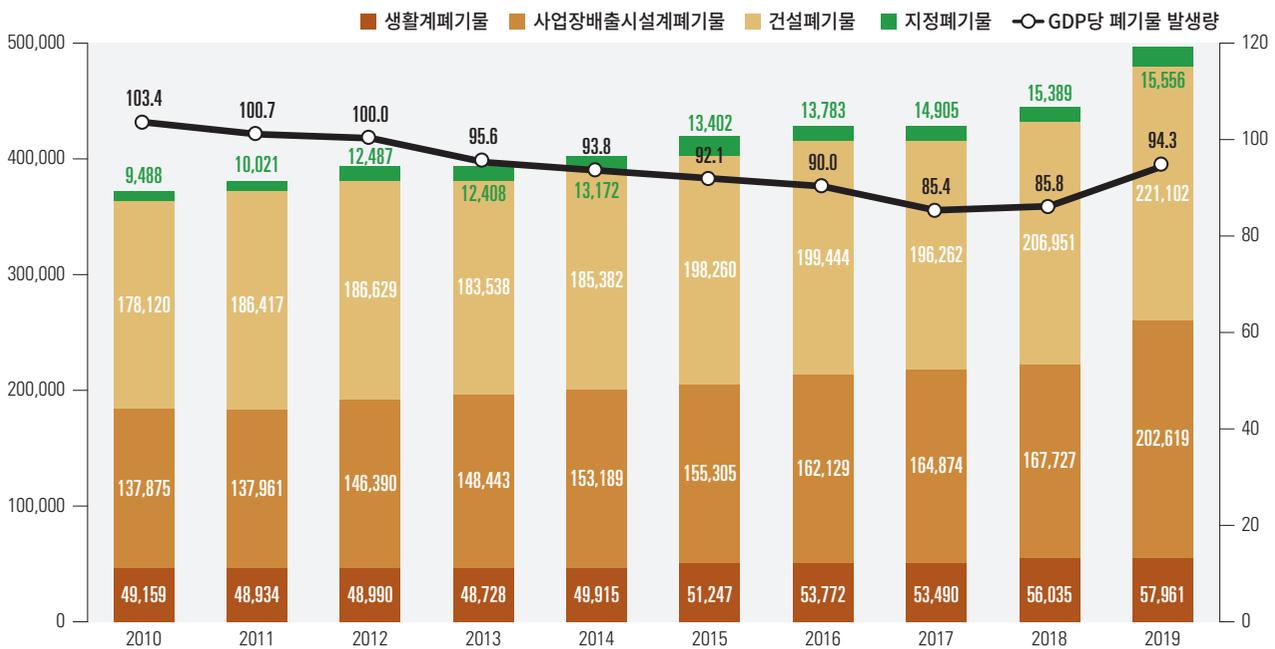
최근 경제성장에 비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

2019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1일 평균 발생량은 49만 7238톤으로 2018년(44만 6102톤/일) 대비 11.5% 증가했다.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13년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당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103.4톤/10

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GDP당 폐기물 발생량이 85.8톤/10억 원(2018년)에서 94.3톤/10억 원(2019년)으로 9.9% 증가했다. 1인당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은 1일 평균 2010년 0.96kg에서 2019년 1.09kg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종류별 현황

유형별 폐기물 발생량, 2010~2019

(단위: 톤/일, 톤/10억 원)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0~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0~2017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한국은행, 국민소득

주1: 전체 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 합임

주2: GDP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 ÷ GDP로 계산함

주3: 2018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부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통합되어 공표됨



을 보면, 1인당 재활용품과 음식물류 발생량은 유사하나 종량제 혼합폐기물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분리배출이 어려운 제품의 증가와 다소비형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8년 OECD 34개국의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평균 발생량은 1.47kg이며, 한국은 1.10kg로 콜롬비아(0.67kg), 코스타리카(0.80kg), 폴란드(0.90kg),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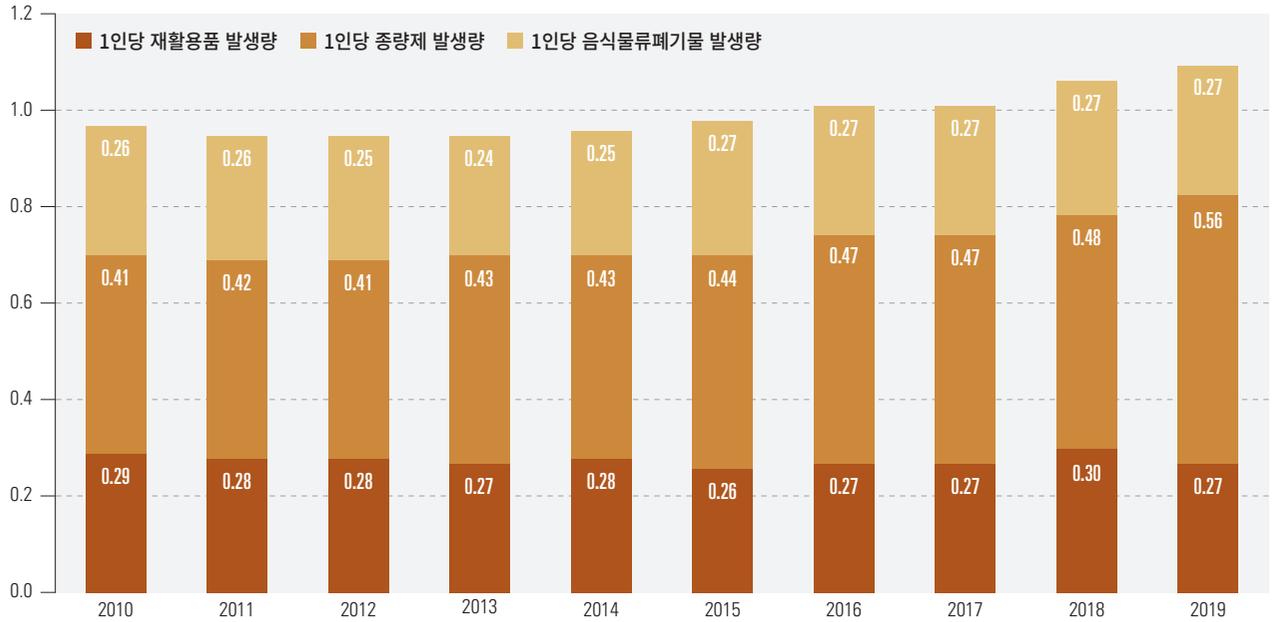
본(0.92kg), 헝가리(1.05kg)에 이어 1인당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6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되었다.

OECD 국가 중 재활용 비율 높은 수준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10년 82.7%에서 2019년 8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사업장배출시설계폐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0~2019

(단위: kg/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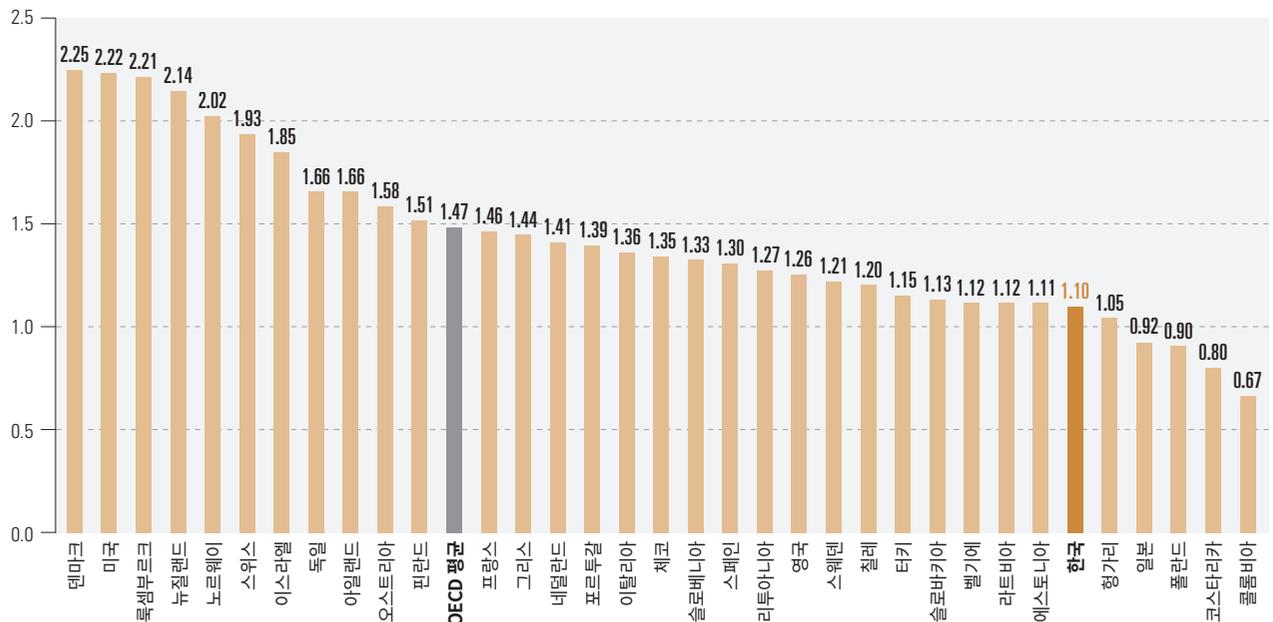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0~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주 : 생활계폐기물은 처리 방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종량제방식 등 혼합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로 구분됨

OECD 국가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8

(단위: kg/일/인)



출처: OECD Statistics, Environment(<https://stats.oecd.org/#>, 2021.09.1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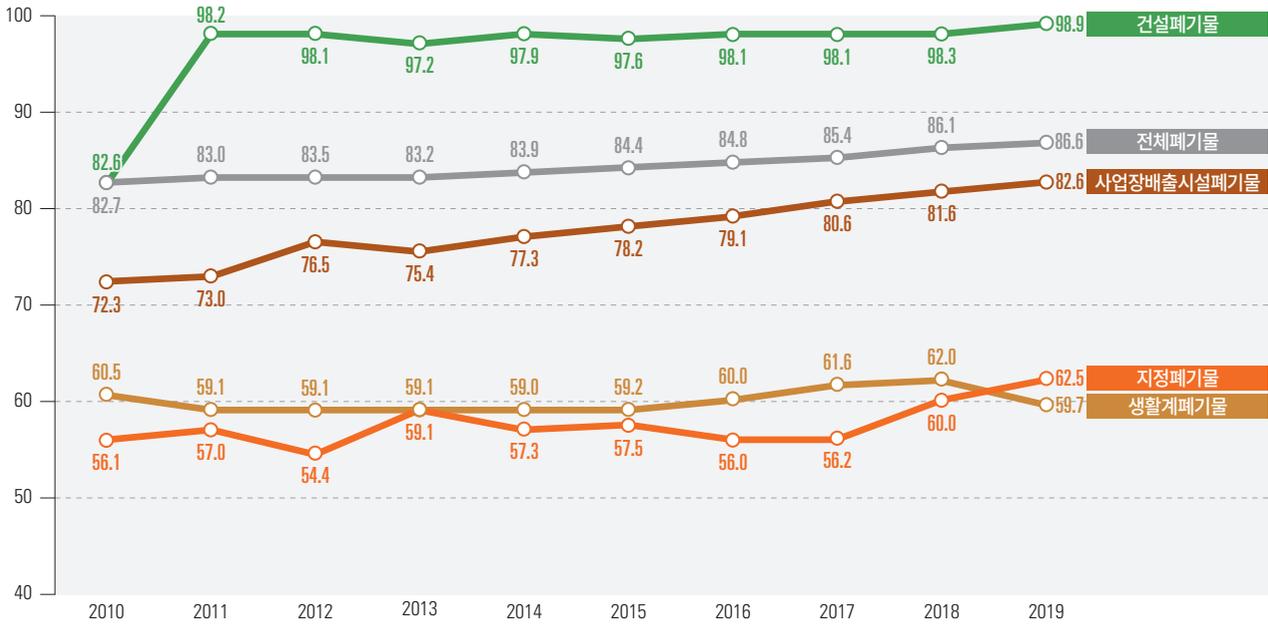
기물과 지정폐기물(유해폐기물)이 각각 10.3%p, 6.4%p 씩 크게 증가했다.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은 매립물량이, 지정폐기물(유해폐기물)은 소각물량이 대부분 재활용으로 전환된 결과다. 한편, 2019년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률은 59.7%로 전년(62.0%)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률

은 높은 편이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4.8%이며, 한국은 64.1%로 33개국 중 1위에 해당되었다. 한국에 이어 슬로베니아(53.9%), 독일(49.2%), 벨기에(34.4%), 덴마크(32.4%)가 재활용률 우수 국가로 평가되었다.

폐기물 유형별 재활용 비율,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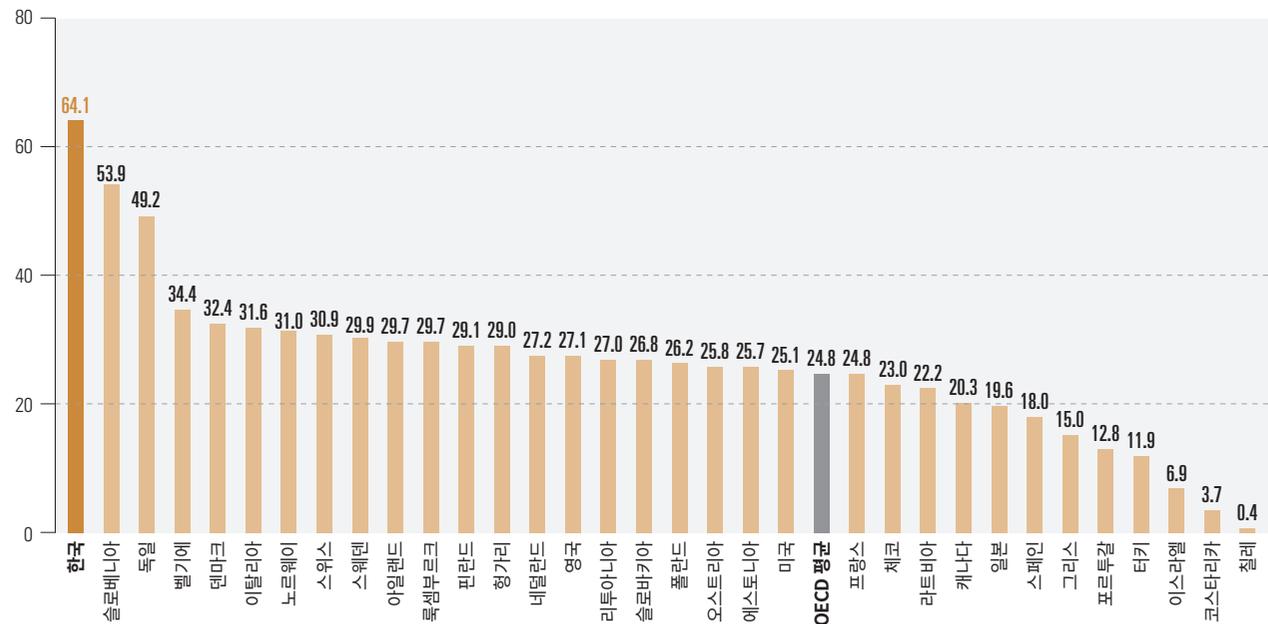
(단위: %)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0~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10~2017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OECD 국가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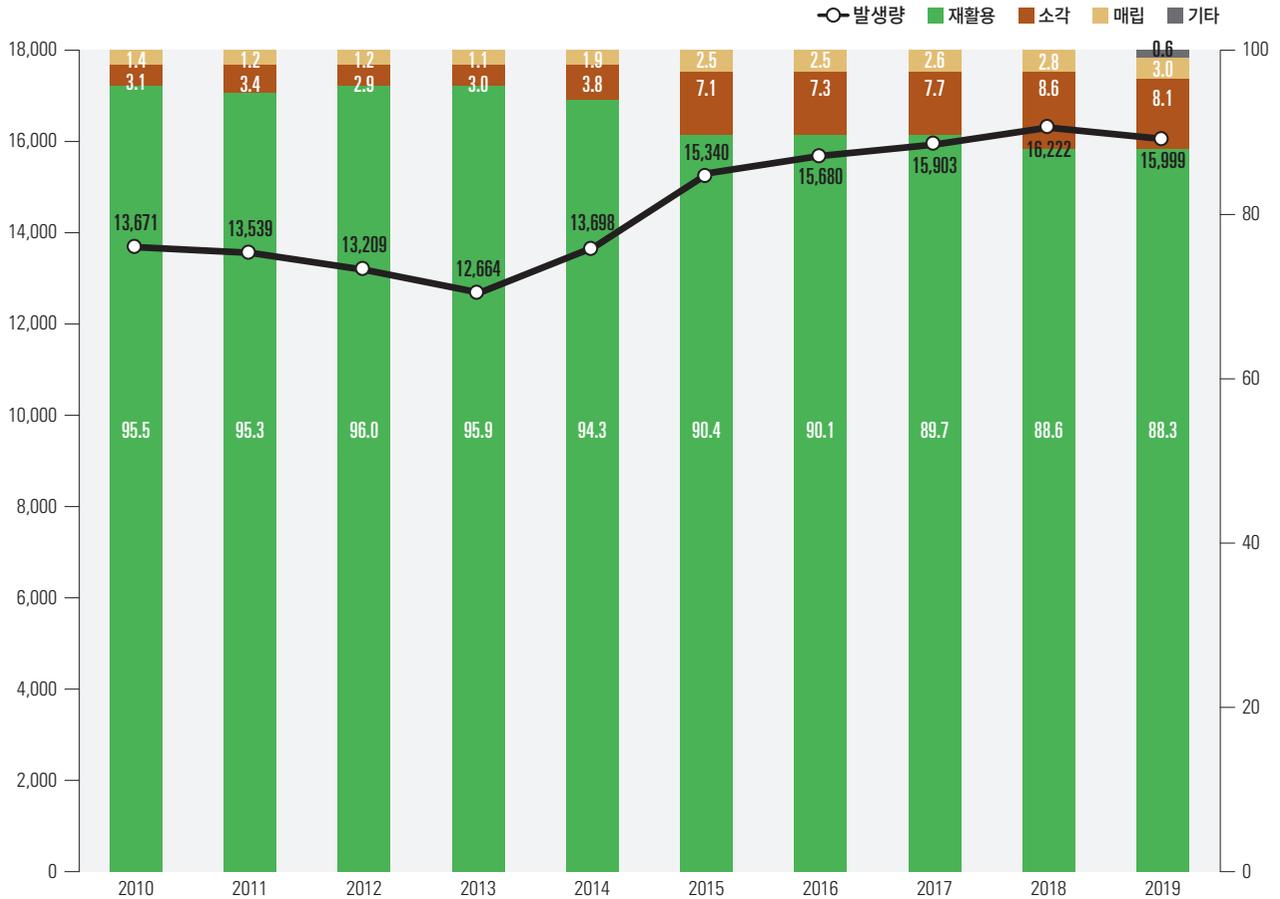


출처: OECD Statistics, Environment(<https://stats.oecd.org/#>, 2021.09.10. 인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방법별 비율, 2010~2019

(단위: 톤/일, %)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0~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전량을 자원과 에너지 회수로 전환해야

생활계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종량제 시범 사업으로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했으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2015년에 큰 폭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하루 평균 1만 5999톤 발생했다. 종량제 시범시행 단계에서는 비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 등 타 품목으로 배출하는 경향이 있어 2010~2014년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0.30~0.31kg/일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재활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에 88.3%였으며, 소각이 8.1%, 매립이 3.0%, 기타 방법이 0.6%이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2005년에 직매립이 금지되고,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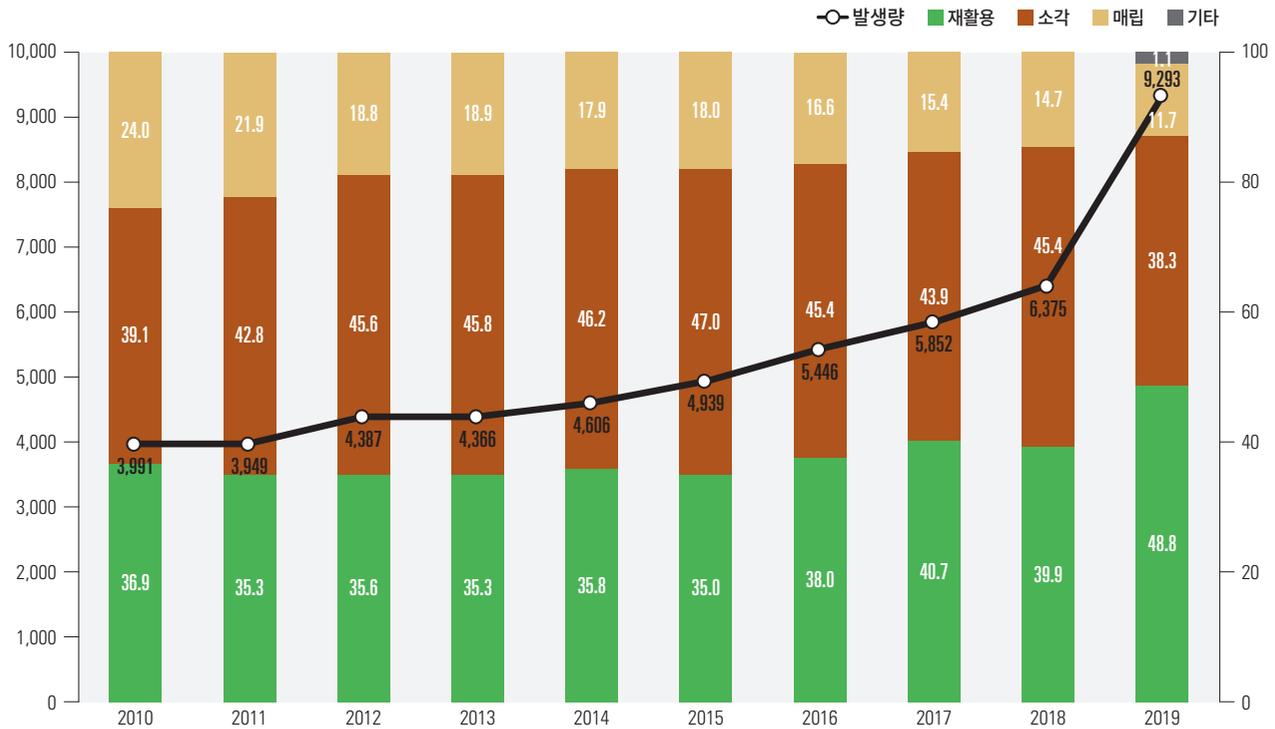
동물 사료 등으로 재활용 처리되었다. 그러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에는 소의 잔반 급여가, 2000년대 중반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닭·오리의 잔반 급여가 금지되었다. 2010년대 후반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잔반 사료는 퇴출되는 분위기다. 바이오가스화 등 다른 재활용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는 있지만 도시의 경우 소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소각에 의한 처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급증하나 재활용 처리 기반은 부족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0년 3991톤/일에서 2018년 6375톤/일, 2019년 9293톤/일로 급증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비중은 2010년 36.9%에서 2017년 40.7%로 증가했다가, 2018년 소폭 감소(39.9%) 후 2019년에 다시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방법별 비율, 2010~2019

(단위: 톤/일, %)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0~201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주1 : 2018년까지는 '플라스틱류(가연성+재활용)'라는 항목으로 집계했으나, 2019년도부터 '폐합성수지류'로 범위 및 명칭을 변경해 데이터를 집계함

주2 : 폐합성수지류는 가연성과 재활용으로 구분하며, 재활용 폐합성수지류는 비닐류, 발포수지류, PET병, 기타로 구성함

주3 : 2019년도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가연성 폐합성수지류와 재활용 폐합성수지류 중 PET병과 기타를 포함해 계산함

주4 : 발포수지류는 2016년에 재활용에 항목 신설함

주5 : 2019년 가연성 폐합성수지류에는 기존의 가연성 플라스틱류와 종량제 폐기물 기타항목으로 분류했던 합성수지류가 더해졌으나 세부항목을 구분하지 않음

48.8%가 되었다. 2018년의 재활용 비율 감소에는 재활용 업체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의 영향이 있었다. 2019년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도 급증하고, 재활용 비율도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통계분류체계의 개편의 영향도 있었다. 즉, 종량제방식 등으로 혼합배출되던 기타 폐합성수지류 물량이 추가되어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의 38.3%가 소각, 11.7%가 매립되었다. 2026년 수도권, 2030년 전국 차원에서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매립 처분되던 물량은 상당량 재활용이나 소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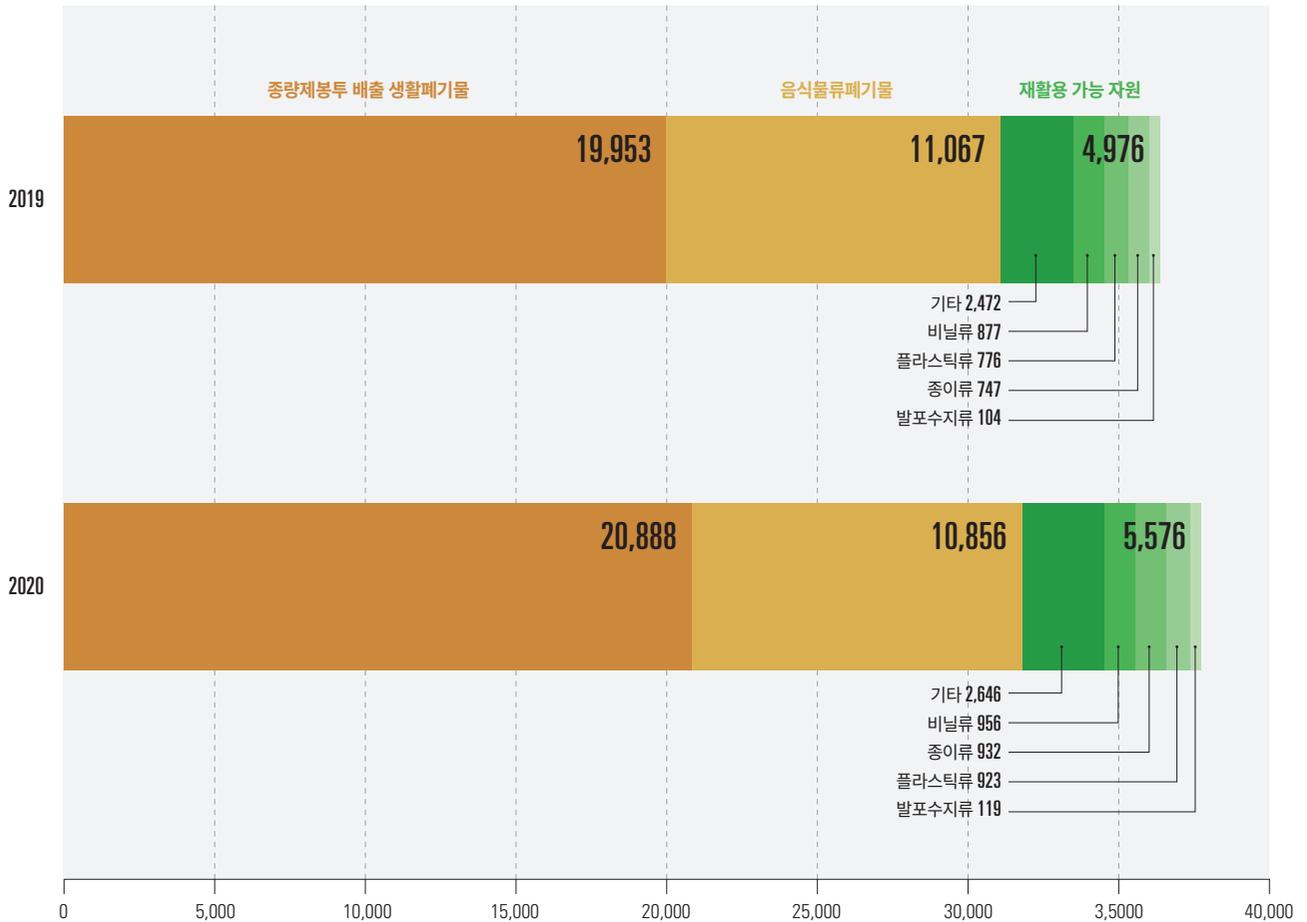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포장재 관련

재활용 폐기물이 대폭 증가

재활용 가능 품목의 하루 폐기물 발생량 중 종이류는 코로나19 이전 10년 평균(2010~2019) 약 4330톤/일이었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은 평균 -3.0%였다. 같은 기간 플라

스틱류 폐기물은 1345톤/일 발생했고, 2018년까지 전년 대비 증감률은 평균 4.2% 수준이었다. 한편, 2019년에 폐기물 구분이 개편되어 2019년 생활계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종량제 및 재활용 포함)는 1만 1014톤/일이 발생했다. 이는 2010년 발생량(4875톤/일) 대비 2019년 발생량(1만 1014톤/일)이 124.9%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즉, 코로나19 이전에는 합성수지류를 제외한 종이류와 플라스틱류 재활용품 폐기물의 발생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다. 환경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된 총 폐기물은 2019년 3만 5996톤/일이며, 2020년은 3만 7320톤/일로 전체적으로 3.7% 증가했다. 세부항목별로, 종이류(24.8%), 플라스틱류(18.9%), 발포수지류(14.4%) 순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택배, 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음식물류폐기물은 감소했는데, 간편식의 선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출처: 환경부·환경공단,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공공처리시설) 내부자료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관리체계는 단계적으로 안정화

한국의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의료폐기물, 태반),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이 2020년 1월부터 신규로 구분되었으며, 같은 해 3월부터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도 코로나19 의료폐기물로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 이때 확진자와 접촉이 없는 운영·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환경부, 2020).

의료폐기물은 매년 증가 추세며 2019년은 645.9톤/일(2010년 발생량(315.2톤/일) 대비 104.9% 급증했다. 그중 일반의료폐기물이 75.4%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10월 29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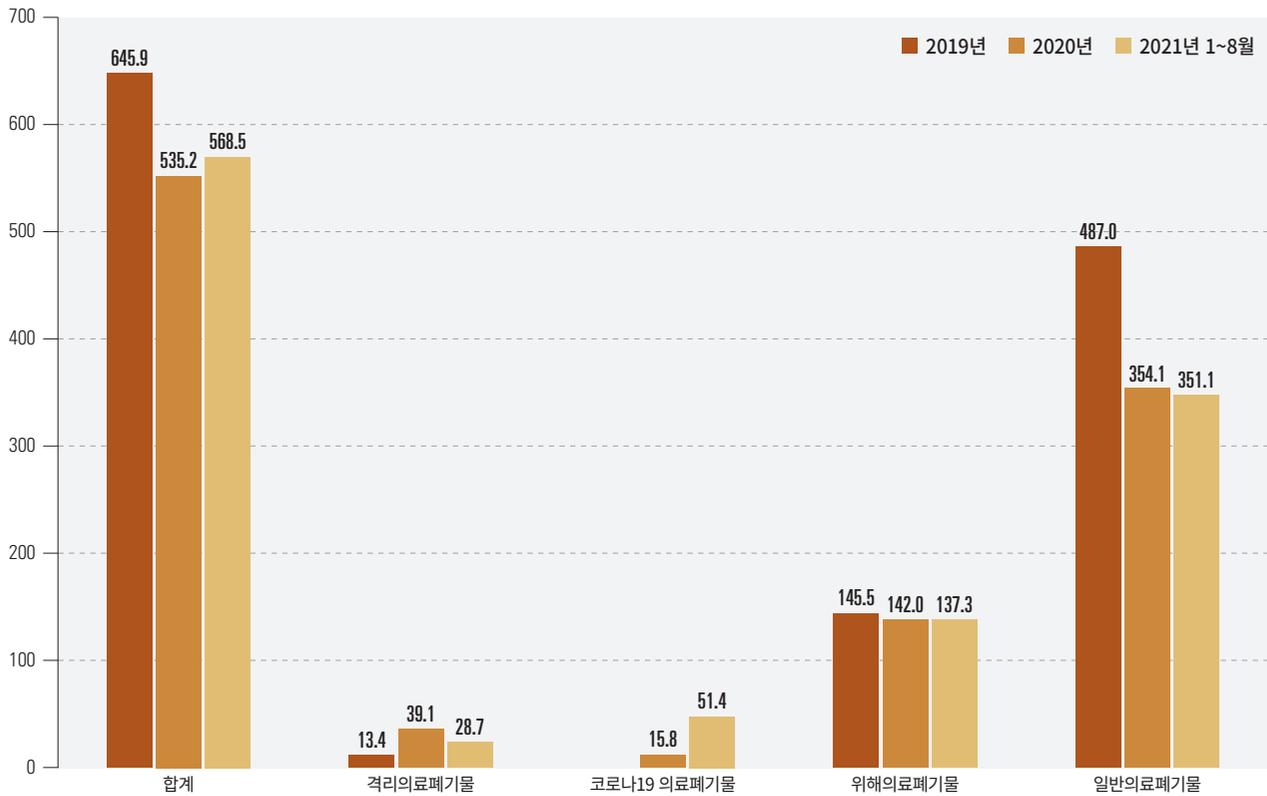
영향으로 2020년 의료폐기물은 535.2톤/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전년도 대비 하루 평균 110.7톤의 처리여유 용량(2020년 의료폐기물 하루 발생량-2019년 의료폐기물 하루 발생량)을 확보시켜 준 셈이다.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코로나 의료폐기물은 2020년 15.8톤/일로 전체 의료폐기물의 2.9%를 차지했다. 2021년 1~8월에 발생한 코로나 의료폐기물은 51.4톤/일로 9.0%로 증가했다. 2020년 1월~2021년 8월 누적 기준, 코로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30.0톤/일이며, 확진자 수 1인당 코로나 의료폐기물 월간 발생량은 72.7kg/인/월이다. 이를 1일 기준으로 하면 2.4kg/인/일이다.

한편, 기타 의료폐기물(위해의료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의 합)의 비중은 2019년 97.9%였으나 2020년에는 92.7%, 2021년(8월까지) 85.9%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전후 의료폐기물 발생량 변화,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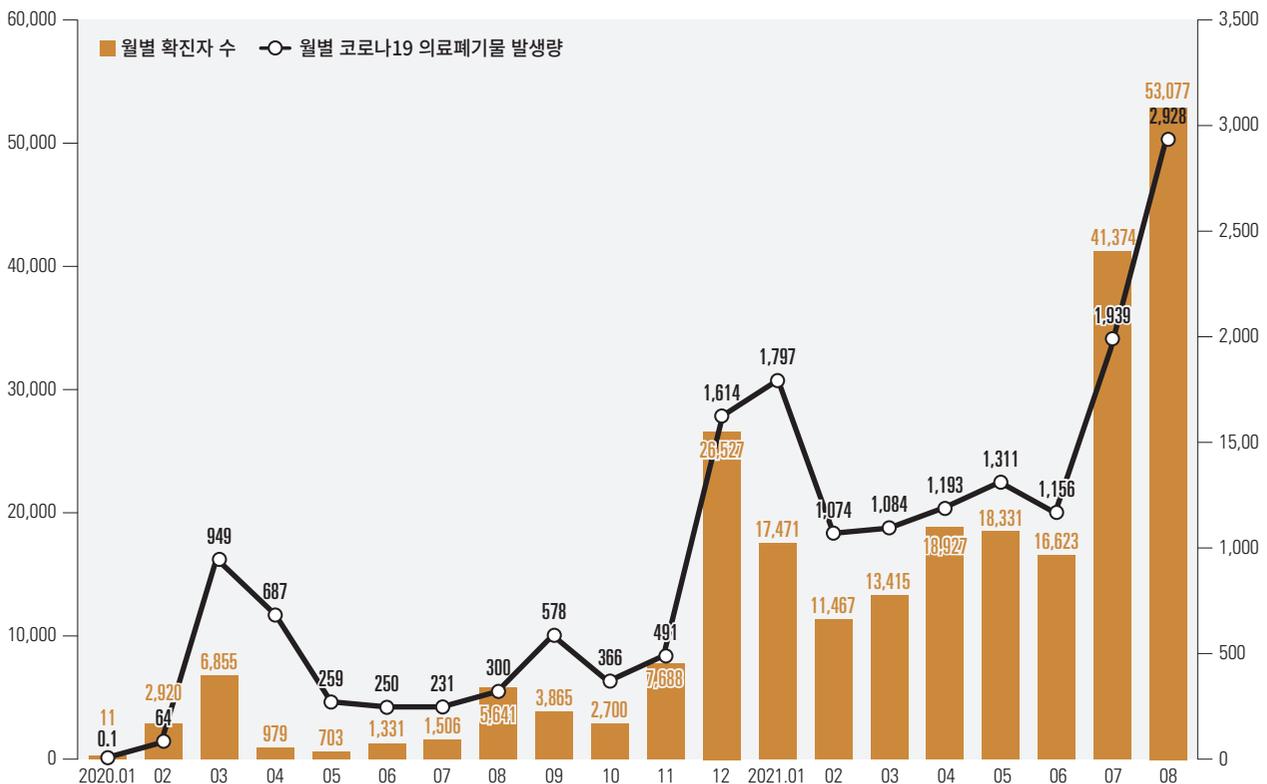
(단위: 톤/일)



출처: 환경부·환경공단, 2019~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의료폐기물 및 코로나 폐기물자료(2020.01.~2021.08.) 내부자료

코로나19 월별 확진자 수와 의료폐기물 발생량, 2020~2021

(단위: 인/월, 톤/월)



출처: 환경부, 환경공단 의료폐기물 및 코로나 폐기물자료(2020.01.~2021.08.) 내부자료, 질병관리청 질병통합관리시스템(<http://ncov.mohw.go.kr>, 2021.09.10. 인출)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SDGs 13번 목표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로 인한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낮춰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제1실무그룹 제6차 평가보고서(2021년 8월)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C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2021~2040년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지난 2018년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했던 2030~2052년보다 10여 년 빨라진 것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최근 들어 급증한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과 그 피해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0년 12월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필두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021년 5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2021년 8월)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안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이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소기로 결정했다(2021년 10월). 정부는 또한 탄소중립비전선언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의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주간 행사를 가졌다(2021년 12월). 이러한 정책 동향과 더불어 산업계의 RE100 선언과 ESG 경영 도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 **RE100**: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으로 한국도 한국형 RE100을 운영 중임
- **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적인 요소와 함께 고려되는 비재무적인 요소임. 기업 경영에서 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 투자,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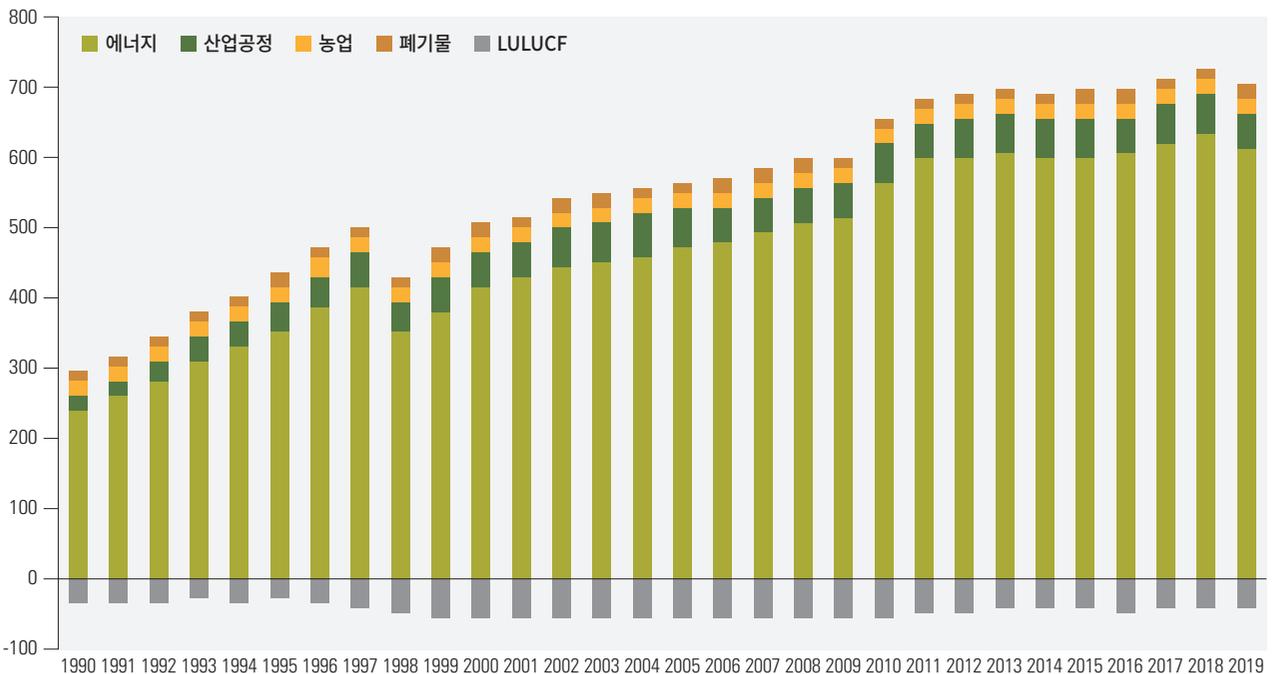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을 당장 줄이더라도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막을 수는 없기에 기후변화 적응 행동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21~2025)이 수립되어 각계각층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

행계획 수립(2021)이 이루어졌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적응 대책 수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이 계획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영향은 일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증가한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은 기후변화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199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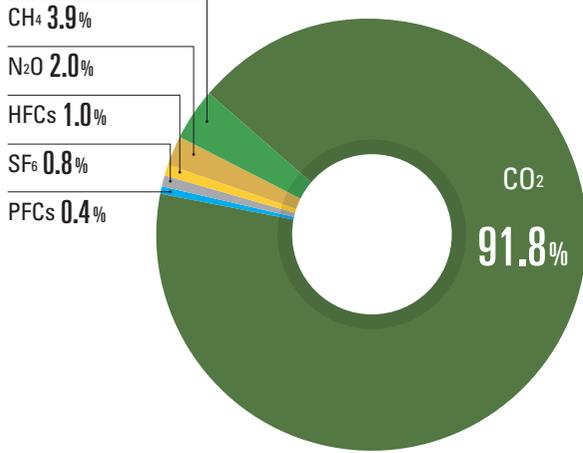
(단위: 백만톤CO₂eq.)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464, 2022.01.10. 인출)



온실가스 유형별 배출 비중, 2019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464, 2022.01.1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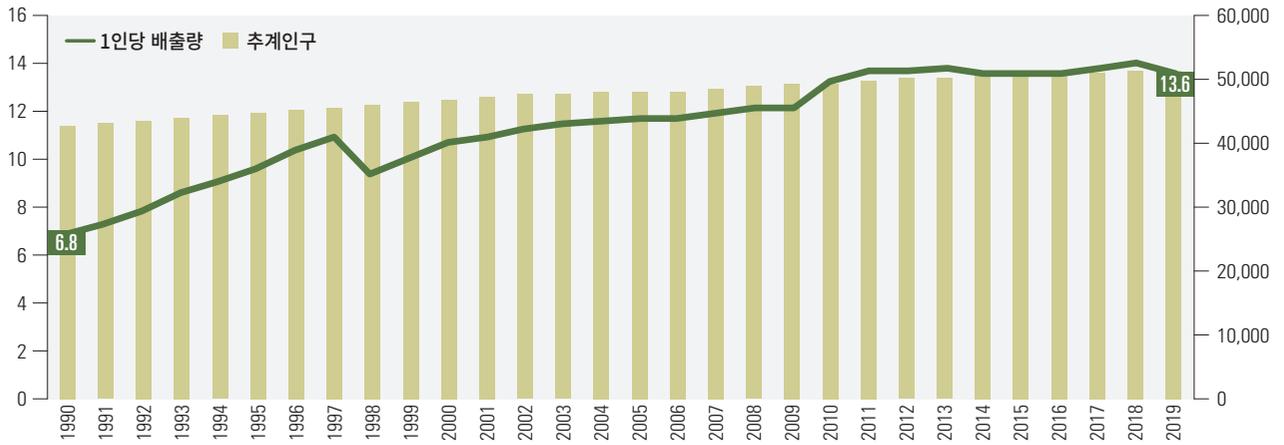
것으로 보인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적응 대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201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01.4백만톤 CO₂eq.이며, LULUCF를 포함한 순배출량은 661.8백만톤 CO₂eq.이다. 2000년 이후 연도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총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경향이다. 특히 총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에너지 분야로 611.5백만톤CO₂eq.(87.2%)을 배출했으며, 이어서 산업 공정 분야(52.0백만톤CO₂eq., 7.4%), 농업 분야(21.0백만톤CO₂eq., 3.0%), 폐기물 분야(16.9백만톤 CO₂eq., 2.4%) 순으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ULUCF 분야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1990~2019

(단위: 톤CO₂eq./인,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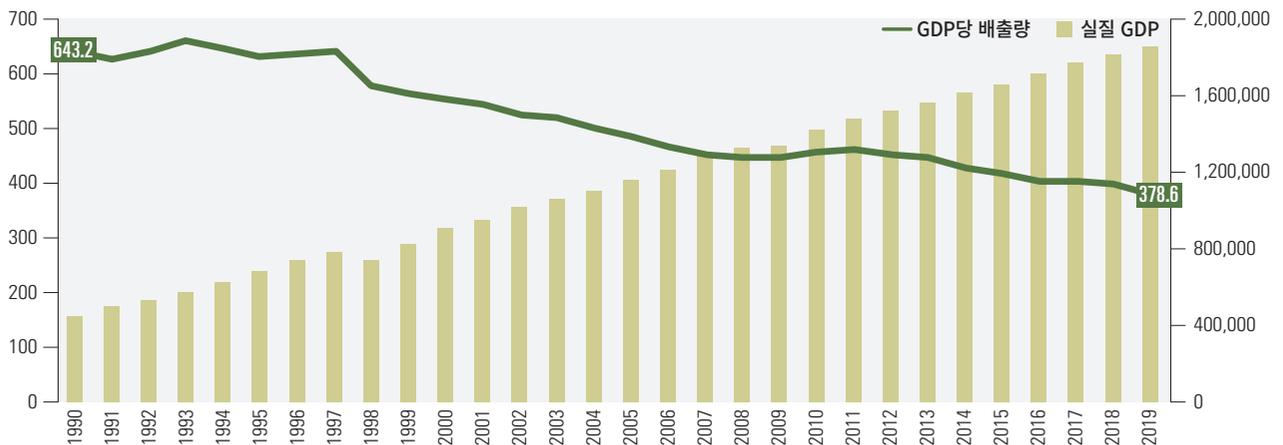


출처: 2021년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1990~2019) 공표 결과(www.gir.go.kr/home/index.do?menuId=36, 2022.01.10. 인출)

주 : 인구수는 2017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기준임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 1990~2019

(단위: 톤CO₂eq./10억 원, 10억 원)



출처: 2021년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1990~2019) 공표 결과(www.gir.go.kr/home/index.do?menuId=36, 2022.01.10. 인출)

주 : 실질 국내총생산은 2015년 불변가격 기준임

는 배출량과 흡수량을 모두 포함하는 분야로 -39.6백만톤 CO₂eq.으로 배출량보다 흡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유형별 배출량을 보면, 이산화탄소(CO₂)가 643.8백만톤 CO₂eq.으로 총배출량의 91.8%를 차지했다.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₂) 온실가스의 비중은 메테인(CH₄) 3.9%, 아산화질소(N₂O) 2.0%, 수소불화탄소(HFCs) 1.0%, 육불화황(SF₆) 0.8%, 과불화탄소(PFCs) 0.4%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활용해 산정한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3.6톤CO₂eq.으로 2018년 대비 3.7% 감소했으며, 1990년 대비 99.1% 증가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이유는 인구증가보다 산업 발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컸기 때문이다. 1990~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140.1%로 인구 증가율 20.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99.1% 증가했다.

2019년 GDP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378.6톤 CO₂eq./10억 원으로 1990년도 643.2톤CO₂eq./10억 원 대비 41.1% 감소했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GDP가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으나, 1998년 GDP 증가율에 비해 온실가스 총배출량 증가율이 낮은 경향을 유지해 GDP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10~2011년에는 2009년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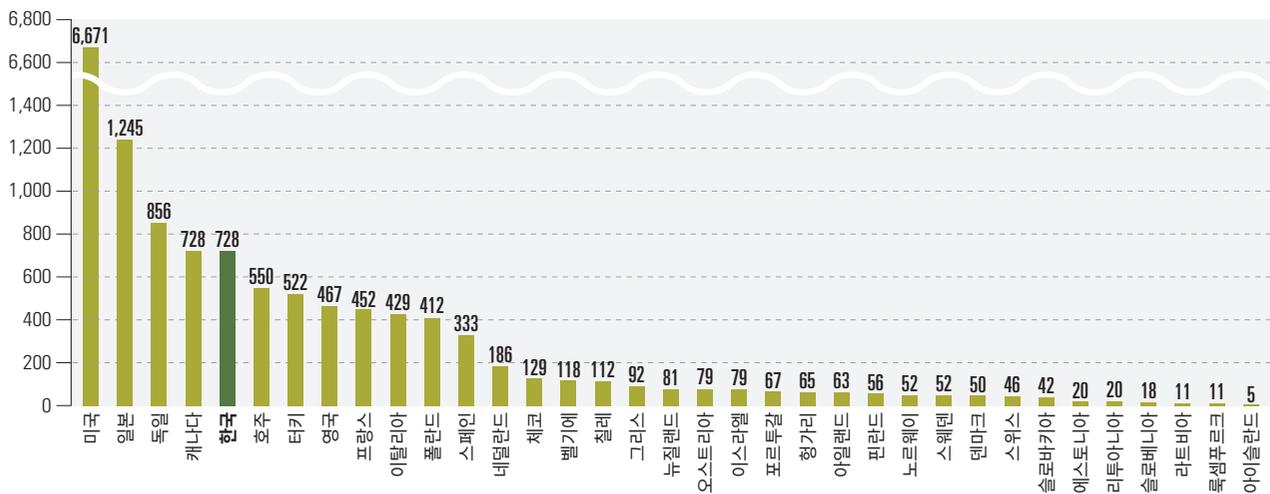
OECD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2018년 기준으로 미국(6671.4백만톤CO₂eq.), 일본(1,245.0백만톤CO₂eq.), 독일(855.9백만톤CO₂eq.), 캐나다(728.5백만톤CO₂eq.)에 이어 한국이 5위의 배출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호주(22.1톤CO₂eq.), 미국(20.4톤CO₂eq.), 캐나다(19.6톤CO₂eq.), 룩셈부르크(17.5톤CO₂eq.), 뉴질랜드(17.0톤CO₂eq.), 에스토니아(15.3톤CO₂eq.)에 이어 8위로 나타났으며, GDP천 달러당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에스토니아(0.46톤CO₂eq.), 호주(0.45톤CO₂eq.), 캐나다(0.43톤CO₂eq.), 뉴질랜드(0.41톤CO₂eq.), 폴란드(0.35톤CO₂eq.)에 이어 6위로 나타났다.

2021년 폭염일수는 11.8일, 1376명의 온열 질환자 발생

지난 10여 년간의 국가 적응 대책 및 광역·기초지자체의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으로 사회 전 부문에 걸친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기후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국내외 이상기후 현상과 피해를 알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재해연보를 통해서도 매년 태풍, 호우, 대설, 폭염, 풍랑·강풍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을 수집해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발생하는 이상기후 상황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인명피

OECD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8

(단위: 백만톤CO₂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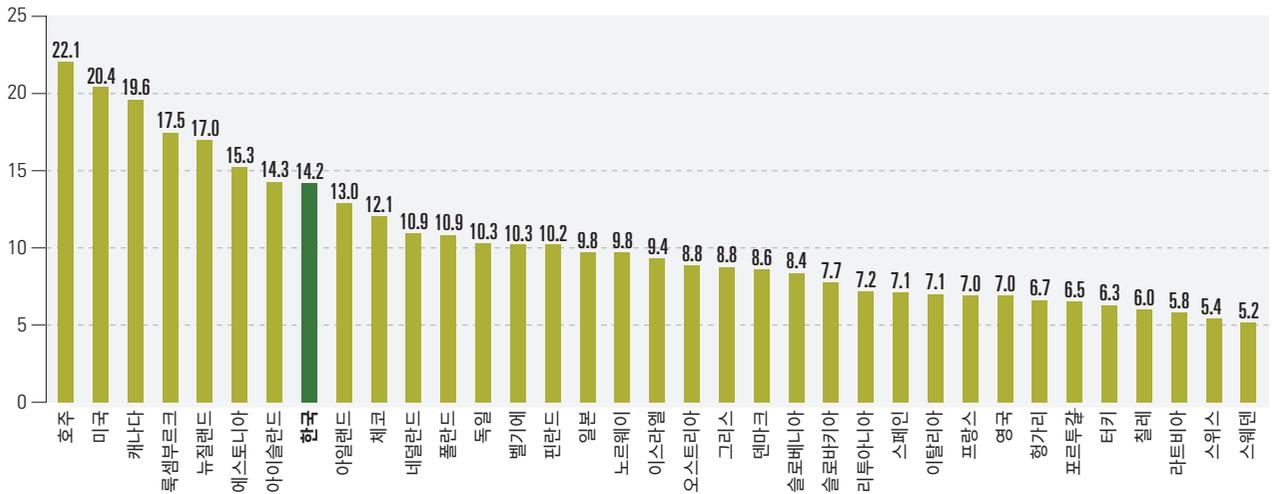


출처: OECD Stats, Environment(2022.01.10. 인출)



OECD 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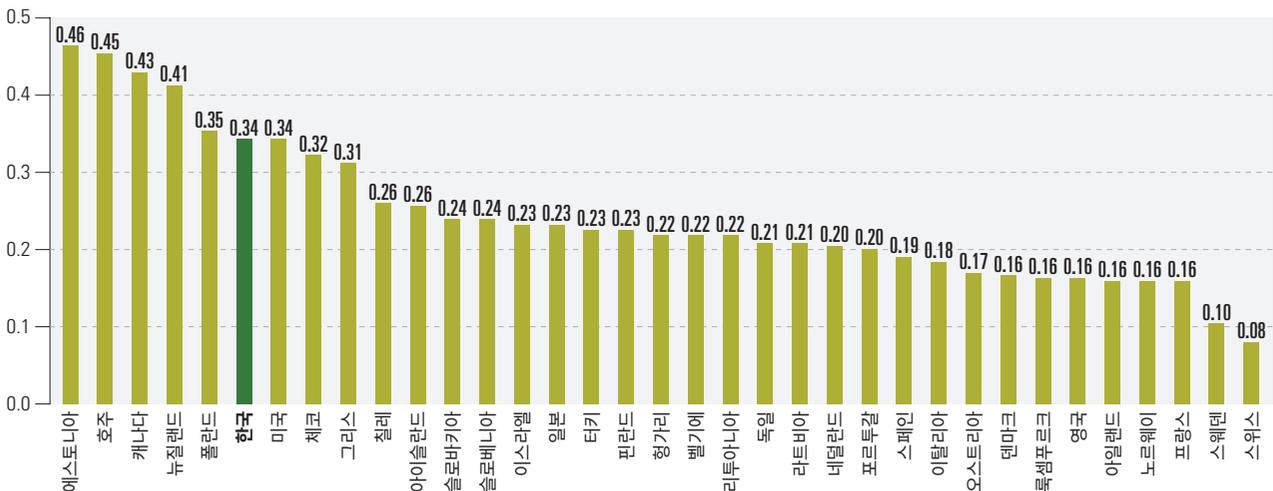
(단위: 톤CO₂eq./인)



출처: OECD Stats, Environment(2022.01.10. 인출)

OECD 국가별 GDP 단위당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8

(단위: 톤CO₂eq./천 USD(2015 PPP))



출처: OECD Stats, Environment(2022.01.10. 인출)

해 발생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서 중점 리스크로 관리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관리되며, 2021년에는 약 11.8일의 폭염 기간 동안 총 20명의 추정 사망자를 포함해 1376명의 온열 질환자 발생이 집계되었다. 온열 질환자의 79.7%(1096명)는 실외에서 발생했으며, 구체적으로 작업장(40.3%, 555명), 논·밭(11.6%, 159명), 길가(10.0%, 137명) 순으로 많이 분포했다. 지금까지 무더위쉼터나 방문상담과 같은 실내/대면 적응 대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야외 근로자와 농업 종사자, 보행자 등을 위한 야외 쉼터나 실외/비대면 등의 적응 대책 발굴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OECD 국가별로 보고된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2017~2020년 평균 10만 명당 0.21명으로 22개 국가 중 호주와 함께 공동 9위로 사망 및 실종자 수가 적었다. 한국보다 사망·실종자 수가 적은 국가로는 터키(0.03명), 체코(0.05명), 아일랜드(0.06명), 핀란드(0.07명), 오스트리아(0.09명) 등이 있다. 기후 리스크의 피해는 위해성(이상기후), 노출성(피해 대상), 취약성(민감도와 적응 능력)의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초래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지속 완화시켜 나가더라도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와 규모에 따라서 그 피해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사회·경제 발전에 필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사항으로 인식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폭염일수	6.5	14	16.6	6.6	9.6	22	13.5	31	12.9	7.7	11.8	
온열 질환 감시체계	온열 질환자	443	984	1,189	556	1,056	2,125	1,574	4,526	1,841	1,078	1,376
	사망자	6	15	14	1	11	17	11	48	11	9	20

출처: 질병관리청, 2021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신고현황 연보

주1 : 온열 질환자는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를 포함

주2 :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 33.0°C 이상인 날의 일수로 전국 62개 지점을 활용하여 산출한 일수

되고 있으며, 피해를 예방하고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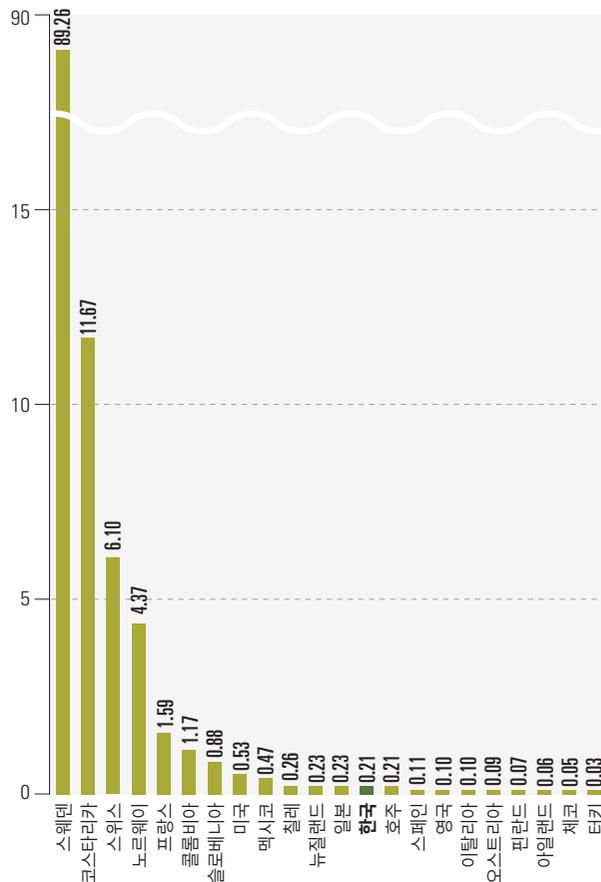
기후안심 국가 구현을 위한 적응 대책 추진 필요

기후변화 대응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완화, 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이 존재한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문(물, 생태계, 농·수산, 국토·연안, 산업·에너지, 보건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 산업의 촉진이나 기회로 활용하는 노력을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라 한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21~2025)이 수립되어 작년에 이행 원년을 맞이했으며, 전국 광역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기후변화 적응 시책을 위한 정보관리체계의 마련이 국가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적응 대책의 투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M&E(Monitoring & Evaluation)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적응 정책에 대한 효과를 사업 이행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그치고 있어, 5개년 계획 수립 시 기준 변경에 따라 계획 예산에 큰 변화가 발생해 통계자료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중요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39개(2018년 28개 → 2020년 34개)의 공공기관 적응 대책 수립이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실종·사망자 수
(단위: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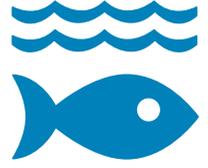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2021.09.22. 인출) 바탕으로 저자가 계산함
주 : 2017~2020년 평균값으로, 해당 기간에 국가별 데이터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한국은 2017~2019년 3개년도 데이터만 포함

됨에 따라 향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의 확대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도구의 개발, 기후변화 적응정보의 통합 관리·서비스 체계 마련, 기존의 적응 대책 수립 지침(2016년 12월) 개선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14 LIFE BELOW WATER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997년 미국 해양환경운동가인 찰스 무어에 의해 태평양 거대 쓰레기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해양쓰레기가 전 지구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동태평양에 한반도 약 6배 넓이의 쓰레기가 있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를 새롭게 부상하는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선정했고, 유네스코(UNESCO)도 해양 생태계 건강 보호를 위한 4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선정했다. 해양생물에 국한되었던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해양 생태계로 확대한 것이다. 해양쓰레기는 수산자원 감소, 선박운항 장애, 경관해소 및 해양산업 피해, 인접 국가 간의 갈등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SDGs 14번 목표는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고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해양오염 방지 노력을 강조한다. 해양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불가분의 관계다.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자원 이용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어획활동을 유지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근절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 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며 모든 수준에 걸쳐 과학협력을 강화해 해양 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한다.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해양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해양 보호구역 선정,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과 소규모 어업인의 시장 접근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는 육상 오염물질 차단,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 생태계 서식지 보호, 불법어업 근절, 해양 보호구역 확대 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량 지속적 증가

한국의 최근 10년(2011~2020)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90만 6062톤이다. 쓰레기 유형별로 보면 해안쓰레기 62만 2667톤, 침적쓰레기 23만 1386톤, 부유쓰레기 5만 2009톤이다. 지역별 수거량을 보면 전남(27만 2658톤), 경남(15만 8131톤), 제주(10만 4229톤) 순으로 많다. 지역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양식어장, 조업어장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 2020년에 수거한 해양쓰레기 총량은 13만 8362톤으로 2019년에 비해 27.4%(2만 9718톤) 증가했다.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하게 해양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노력

이 지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양쓰레기는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발생한 해양폐기물의 영향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 주도로 조기에 수거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수거 전용 선박 운영, 마을 단위 집하장 설치, 페그몰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으로 되가져오는 회수체계와 해변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제 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기본계획(2021~2030)

해양쓰레기 유형별 수거량, 2011~2020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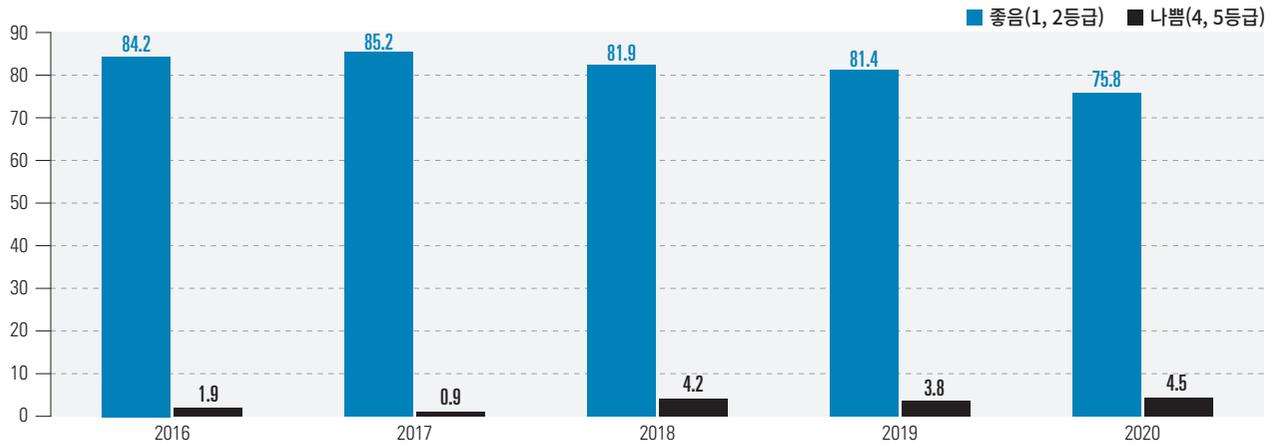


출처: 한국해양공단, 해양환경정보포털(<https://www.meis.go.kr/mlti/business/collectStat.do#>, 2022.01.12. 인출)



해수수질(좋음, 나쁨) 비율 변화 추이, 2016~2020

(단위: %)



출처: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2020년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

주 : 해역별 해양 환경 특성을 고려해 부영양화 원인 물질(표층 용존무기질소 농도, 용존무기인 농도), 일차반응 물질(chlorophyll a, 투명도) 및 이차반응 물질(저층 용존산소포화도)의 기준 값을 이용해 계산한 지수 값을 등급으로 표현[1등급(매우 좋음), 2등급(좋음), 3등급(보통), 4등급(나쁨), 5등급(아주 나쁨)]

은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으로 다 함께 누리는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해양폐기물 발생량 60% 감축, 2050년까지 제로화를 실천 목표로 설정했다.

해수수질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2018년부터 나쁨 비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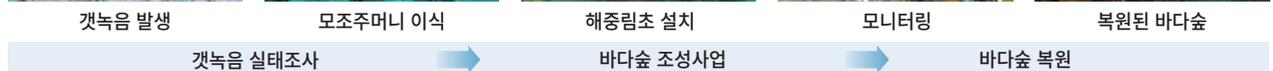
세부목표 14.1은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수질평가 지수 값(WQI)을 이용한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로 세부목표를 평가할 수 있다. 해수수질은 한국 연안을 해역별(동해, 대한해협, 서남해역, 서해중부, 제주생태구)로 구분해 5등급(매우 좋음 - 아주 나쁨)으로 평가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해수수질 등급을 평가한 결과, 수질 좋음에 해당(1, 2등급)하는 비율은 평균 81.7%고, 나쁨에 해당(4, 5등급)하는 비율은 평균 3.1%다. 전국 연안의 해수수질은 최근 5년간 좋음등급을 차지한 비율이 76%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다만 2018년 이후 대한해협 생태구를 비롯해 금강하구, 한강하구 등의 일부 정점에서 나쁨등급 비율이 증가 추세다.

바다숲 조성면적 점차 확대

바다숲 조성이란 갯녹음(바다사막화)이 진행된 해역에 해조류 이식, 자연석 또는 해중림초 설치, 천연 해조장 관리, 자연 암반 개선 등을 실시해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바다숲 조성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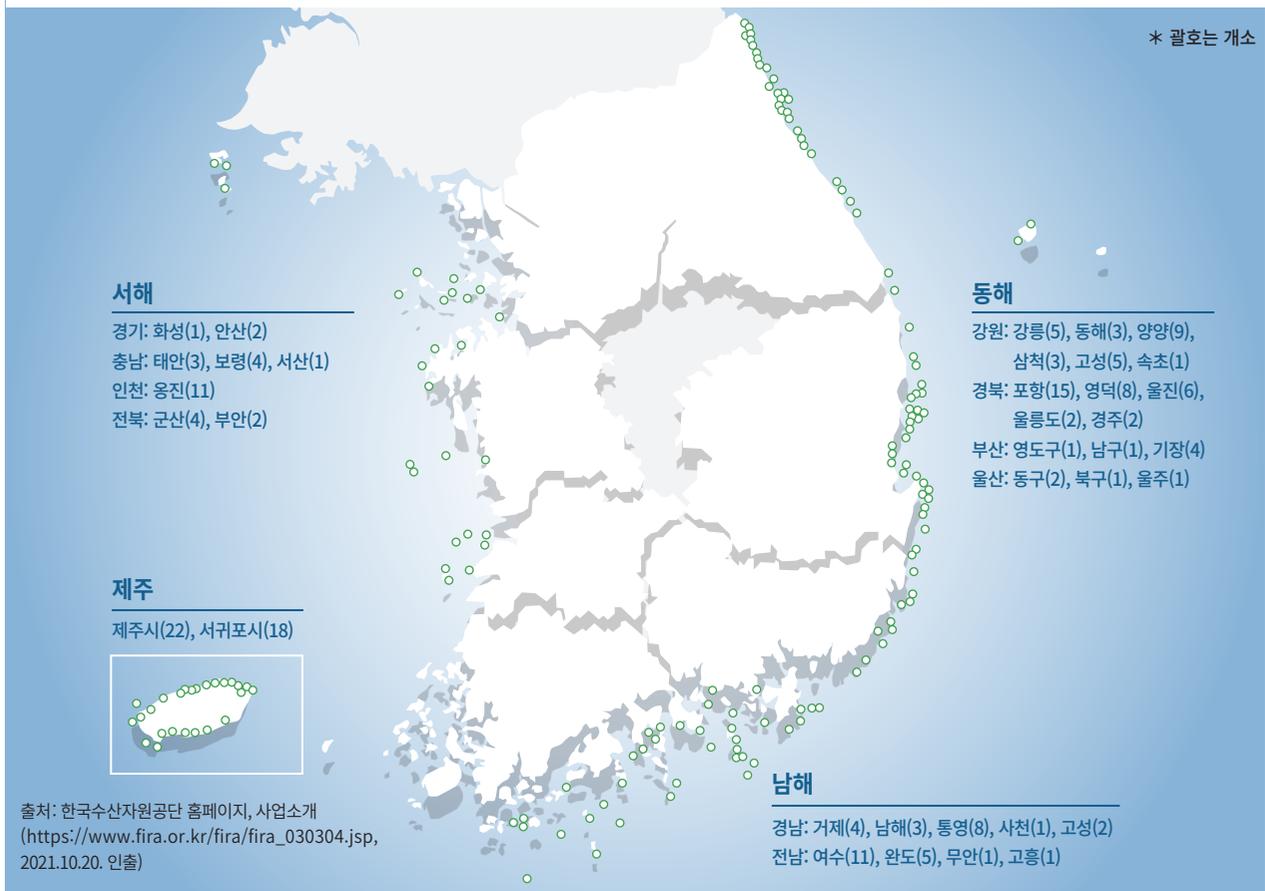


바다숲 조성 건수 및 면적, 2009~2021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개소수	7	10	11	10	9	19	21	24	18	20	24	21	17	211
면적(ha)	121	250	715	860	1,388	2,575	3,236	3,064	3,043	3,108	3,130	2,768	2,386	26,644
사업비(억 원)	100	150	130	159	183	327	357	347	352	352	352	334	300	3,443

출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바다숲 사업 백서, 저자 제작성/ 사진제공: 한국수산자원공단

바다숲 조성 현황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전국 연안 암반의 75%에 달하는 5만 4000ha의 바다숲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만 6644ha가 조성되었고 2024년까지 추가로 9006ha를 조성할 예정이다.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대상 어종 15개로 확대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는 어업자원을 관리 없이 이용한다면 공공재의 비극으로 인해,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원관리 수단은 투입량 규제, 산출량 규제 그리고 기술적 규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산출량 규제의 대표적인 수단이 총허용어획량제도(TAC)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1999년에 도입(4개 어종) 현재 12개 어종(시범사업 대상 어종 제외)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12개 어종 중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대상 어종(8종)은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이며, 지방자치단체장 관리 대상(4

종)은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이다. 연근해 어업에서 어획하는 총어획량 중 TAC 대상 어종 적용 비율도 2018년에는 20%였는데 2022년에는 50% 그리고 2030년에는 8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대상 어종, 1999~2021 (단위: %)

연도	어종 수	대상 어종
1999	4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2001	7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2002	8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2003	9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꽃게
2007	10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2009	11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2019	14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바지락, 갈치*, 참조기*
2020~현재	15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바지락, 갈치*, 참조기*, 삼치*

출처: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https://www.fira.or.kr/fira/fira_030601.jsp)(검색일: 2021.10.18.) 저자 재작성
 주 : *는 시범사업 대상 어종임



15 LIFE ON LAND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SDGs 15번 목표는 육상 생태계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 생물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강조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자연기금(WWF)은 산림 훼손과 산림전용을 인수공통 전염병의 원인으로 꼽는다. 산림면적의 감소가 생물 서식지의 손실을 초래, 동물과 인간의 접촉 범위가 확대되어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의 확산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림은 방어벽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어 보전 그 자체가 중요하다. 따라서 산림면적에 대한 추이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산림 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에서 핵심이며, 산림면적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산불은 산림면적 감소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다. 2021년에는 터키를 포함한 유럽, 북미, 아프리카까지 유례없는 폭염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은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린피스(Green Peace)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300건 이상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8월 16일 기준 약 17만km²에 이른다. 문제는 탄소가 다량 묻혀 있는 시베리아 동토가 산불로 녹게 되면서 기후위기가 악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면적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림면적의 감소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의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멸종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적색목록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하락 추세다. 재조림과 신규조림으로 산림면적을 유지 또는 증진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현존하는 산림을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전해 산림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산림면적의 장기적인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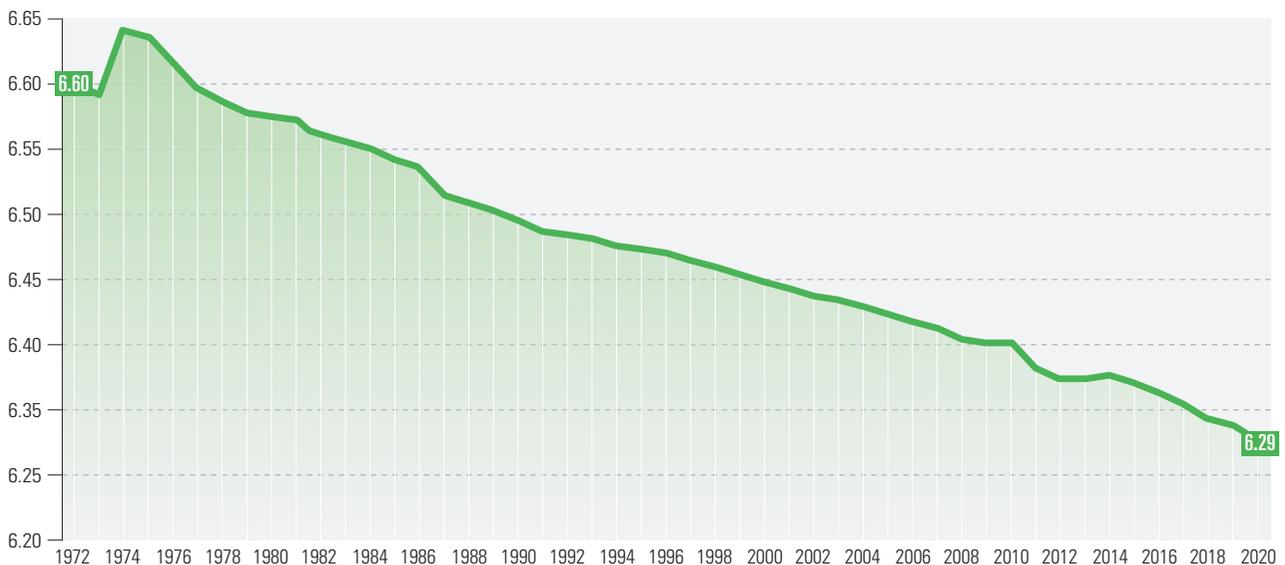
한국의 산림면적은 1970년대에 추진되었던 국가 치산녹화사업을 기반으로 1974년과 1976년에 일시적으로 확장되었으나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1972년 이래 31만 290ha의 규모가 감소해 2020년에는 국내 전체

산림면적이 628만 6438ha 수준에 그쳤다.

국제 통계에 의하면 많은 국가에서 산림면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FAO 자료에 따르면 236개 국가 중 산림면적 증가세를 보이는 국가는 73개국인 반면, 감소세를 보이는 국가는 91개국이다. 236개국 중 OECD 회

국내 산림면적 추이, 1972~2020

(단위: 백 만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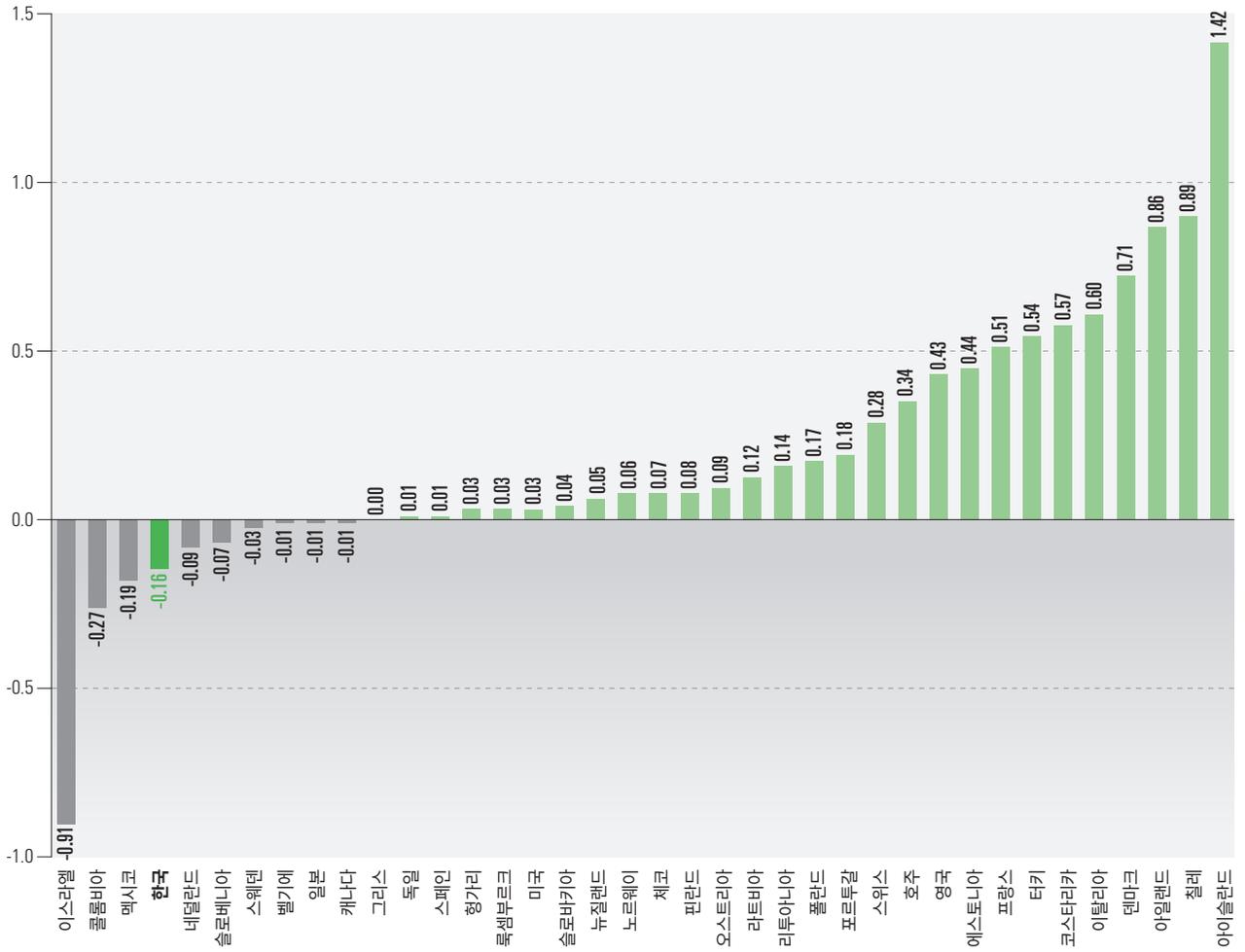


출처: 산림청, 산림임업통계연보(2021) - II. 산림자원(<https://www.forest.go.kr/>, 2021.11.05. 인출)



OECD 국가별 산림면적 연간 순 변화율, 2010~2020

(단위: %)



출처: FAOSTAT, Land Use(<http://www.fao.org/faostat/en/#data/RL>), 인출: 2021.09.14.); FRA 2020

원국 대부분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아이슬란드는 2010~2020년 동안 연평균 1.42%의 증가율을 보여, 산림면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가장 가파른 추세로 산림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0.91%의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증가로 산림면적 감소 위험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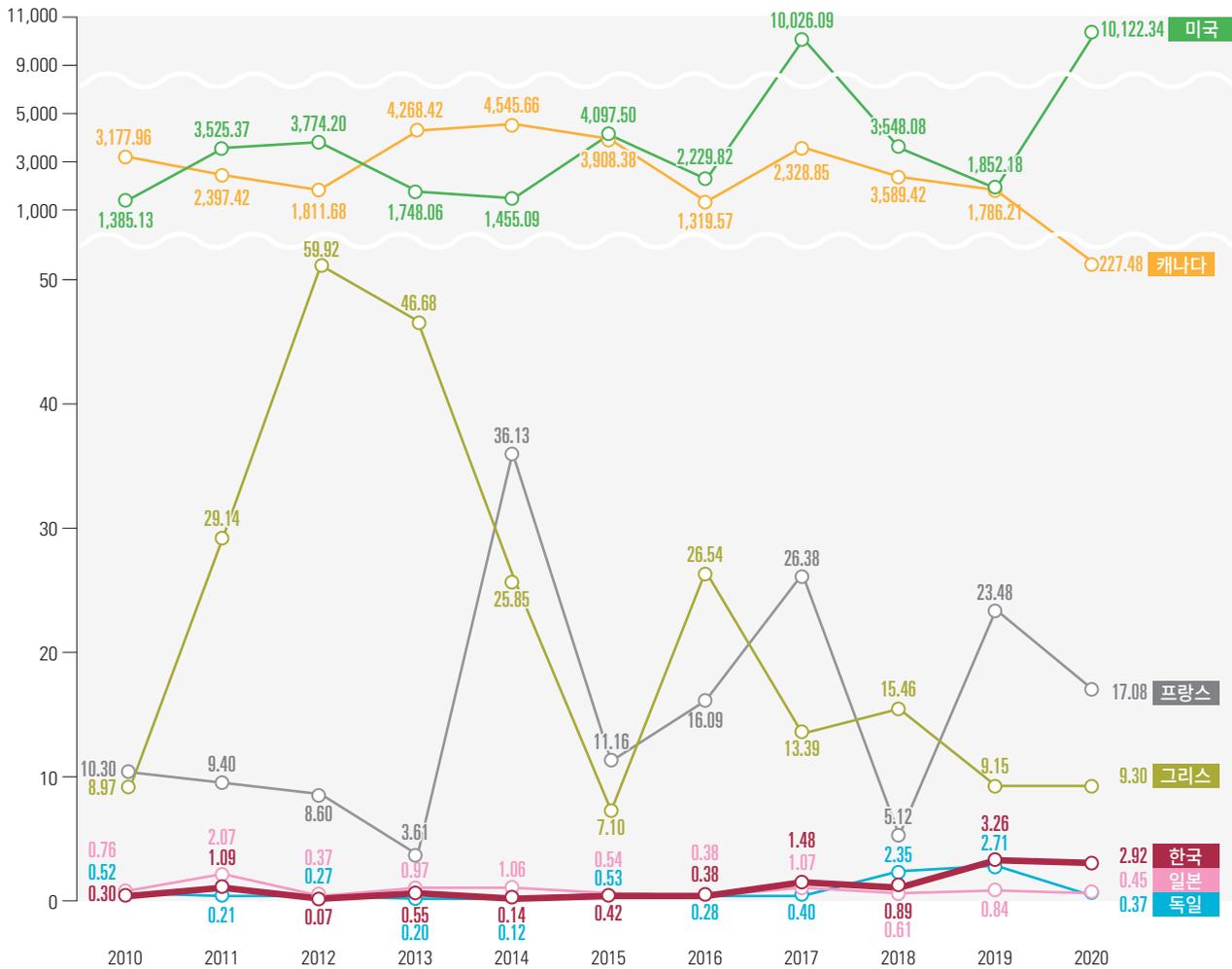
산림면적 감소에는 산불도 영향을 미친다. FAO(2020)는 국제산림자원평가 보고서에서 산불로 인해 산림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시사했다. 산림의 변화가 반드시 산림의 전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산불은 산림의 전용은 아니지만 산림의 큰 변화를 초래한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국내 산불 발생 건수가 한때 감소폭을 그리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며, 산불 피해면적 역시 커

지고 있다. 2010~2014년 동안 발생한 산불로 인한 한국의 피해면적 규모는 연평균 429.6ha이나, 2015~2020년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연평균 1557.5ha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2002년과 2003년 사이에는 큰 감소폭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이후 크고 작은 변동을 보이다가 2019년과 2020년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더욱 큰 환경적 손실을 초래한다. 산림청(2021)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6월 초부터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했으며 313만 1283ha 규모의 산림이 사라졌다. 진행 중이던 33건의 산불 중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산불이 9건이었으며, 그다음으로 고위험 수준을 보이던 산불이 12건으로

주요 국가의 산불 피해면적, 2010~2020

(단위: 천ha)



출처: 산림청, 산불 발생 현황(총괄)(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 2021.09.14. 인출); 산림청, 2020년 산불통계 연보

2020년 누적된 산불 총 8872건 중 대형 산불은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주에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장기화된 전례 없는 대규모 산불로 약 1900만ha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중국 쓰촨성에서도 2020년 3월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80ha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탓에 최근 발생한 산불은 대형화되고, 잦은 빈도로 발생해 대규모 산림면적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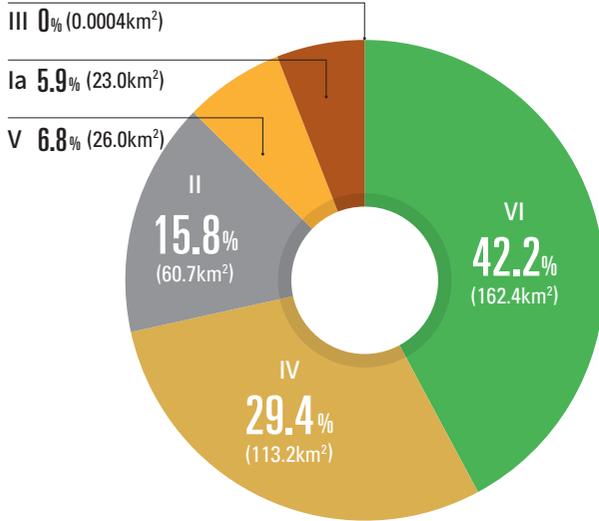
보호지역 비율의 꾸준한 증가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생물다양성, 자연·문화자원 보호와 유지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으로 법을 통한 관리나 기타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보호

지역으로 정의한다. IUCN은 보호지역 카테고리를 총 7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7개 유형은 학술(엄정) 보호구역(Strict Nature Reserve, I a), 원시야생지역(Wilderness Area, I b), 국립공원(National Park, II), 자연기념물(Natural monument or feature, III), 서식지 및 종 관리지역(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IV), 육상 및 해양 경관보호지역(Protected Landscape/Seascape, V), 자원관리보호지역(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VI)이다. 이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개소수가 지정된 보호지역은 서식지 및 종 관리지역(항목 IV)으로 2021년 기준 전체 3409개의 보호지역 중 2885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자원관리보호지역(항목 VI)이 많은 개소수를 보였으나 이 지역은 301개의 개소수로 두 항목 간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원 보호지역은 면적 측면에서 전



보호구역 규모 및 비율, 2021



출처: UNEP-WCMC and IUCN(2021), Protected Planet: The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WDPA)[Online], September 2021, Cambridge, UK: UNEP-WCMC and IUCN(www.protectedplanet.net, 2021.09.14.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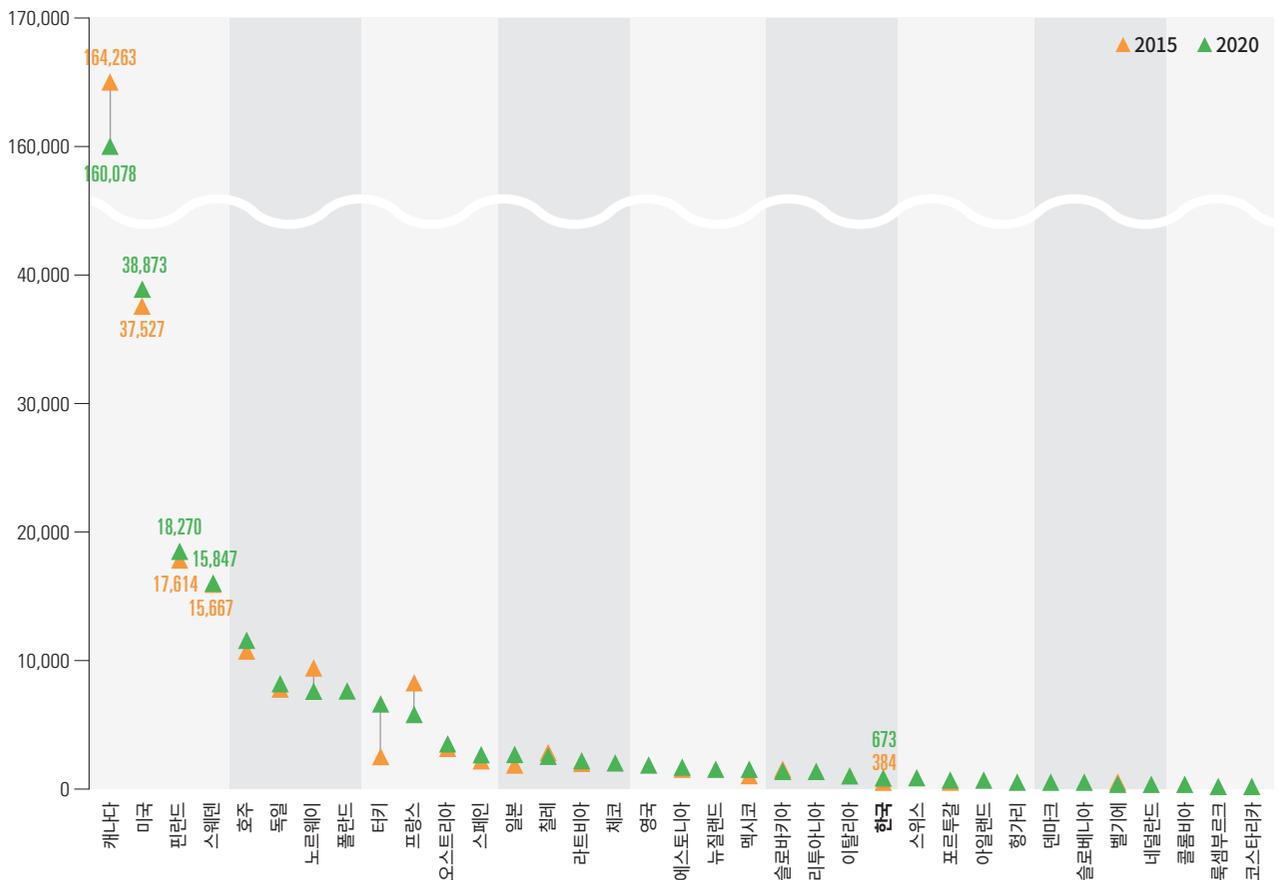
체 보호구역의 42.2%를 구성하며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서식지/종 관리지역은 구역당 면적이 비교적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적게 분포해 있는 항목으로는 자연기념물(항목 III) 항목으로 2개의 구역이 0%에 가까운 규모로 전체의 극히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위한 국가적 노력 가시화

FAO는 각국이 기관에 제출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림 면적 연간 순변화율, 산림 내 지상부 바이오매스 총량, 보호림 비율, 장기산림경영계획 작성 면적 비율, 산림경영인증 면적 등 5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대비 2020년까지 28만 9000ha의 산림경영인증 면적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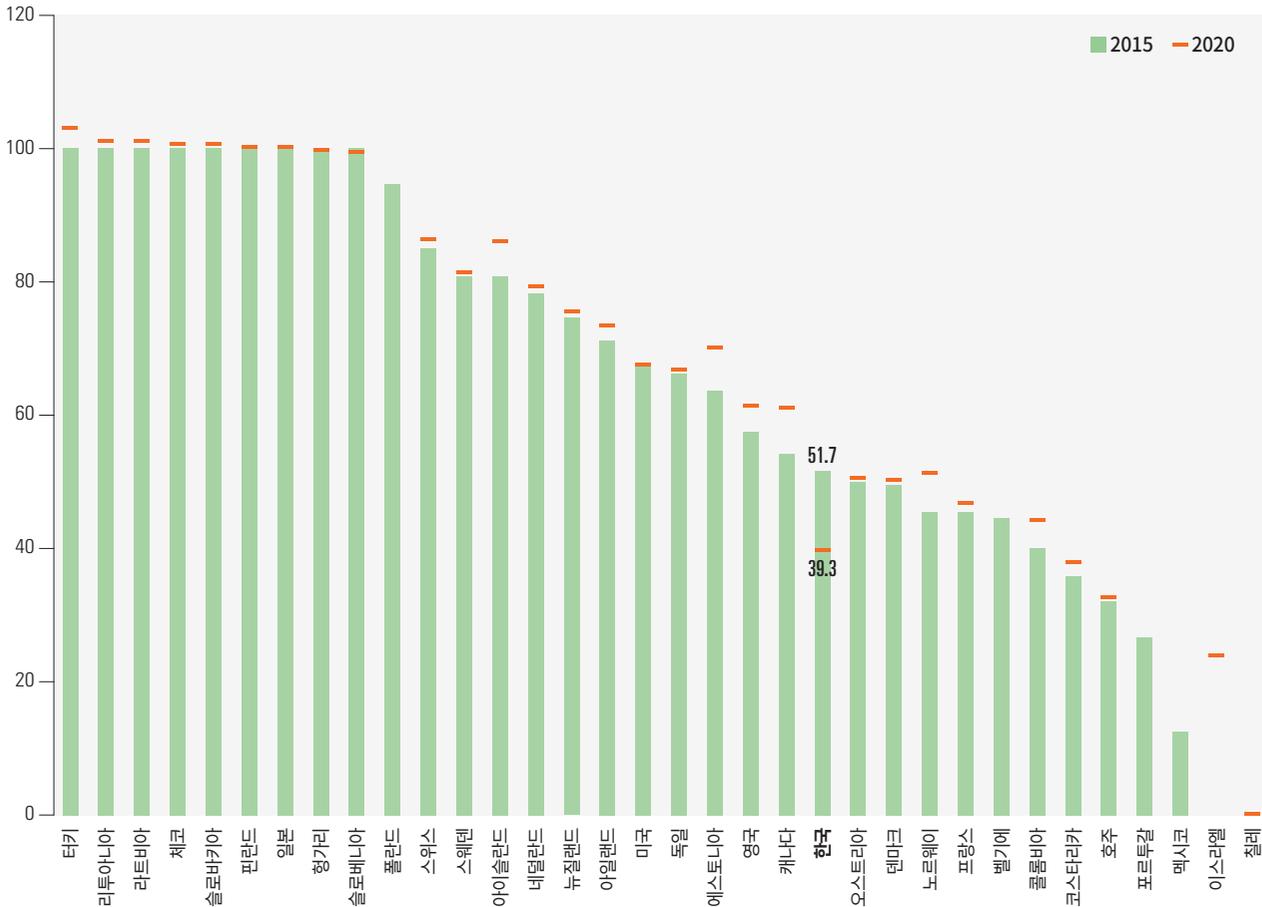
OECD 국가별 산림경영인증 현황, 2015, 2020

(단위: 천ha)



출처: FA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ttps://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1521/en/>, 2021.10.26. 인출)

주 :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그리스는 데이터 부재로 제외



출처: FA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https://www.fao.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indicators/1521/en/>, 2021.10.27. 인출)
 주 :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이탈리아는 해당 연도 데이터 부재로 제외

가 같은 기간 동안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의 증가폭은 상위 10번째다.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상위 8개 국가의 국토면적이 한국에 비해 매우 넓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증가폭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국가 장기산림경영계획 작성 면적 비율은 2015년 51.7%에서 2020년 39.3%로 감소했다. 이는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증가한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주목할 점은 2020년 수치에서 체코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터키는 100%를 초과한다는 점이다. 국가별 장기산림경영계획 작성 면적 비율은 각국의 2015년 산림면적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적어도 2015년에 비해 현재 국가 내 산림면적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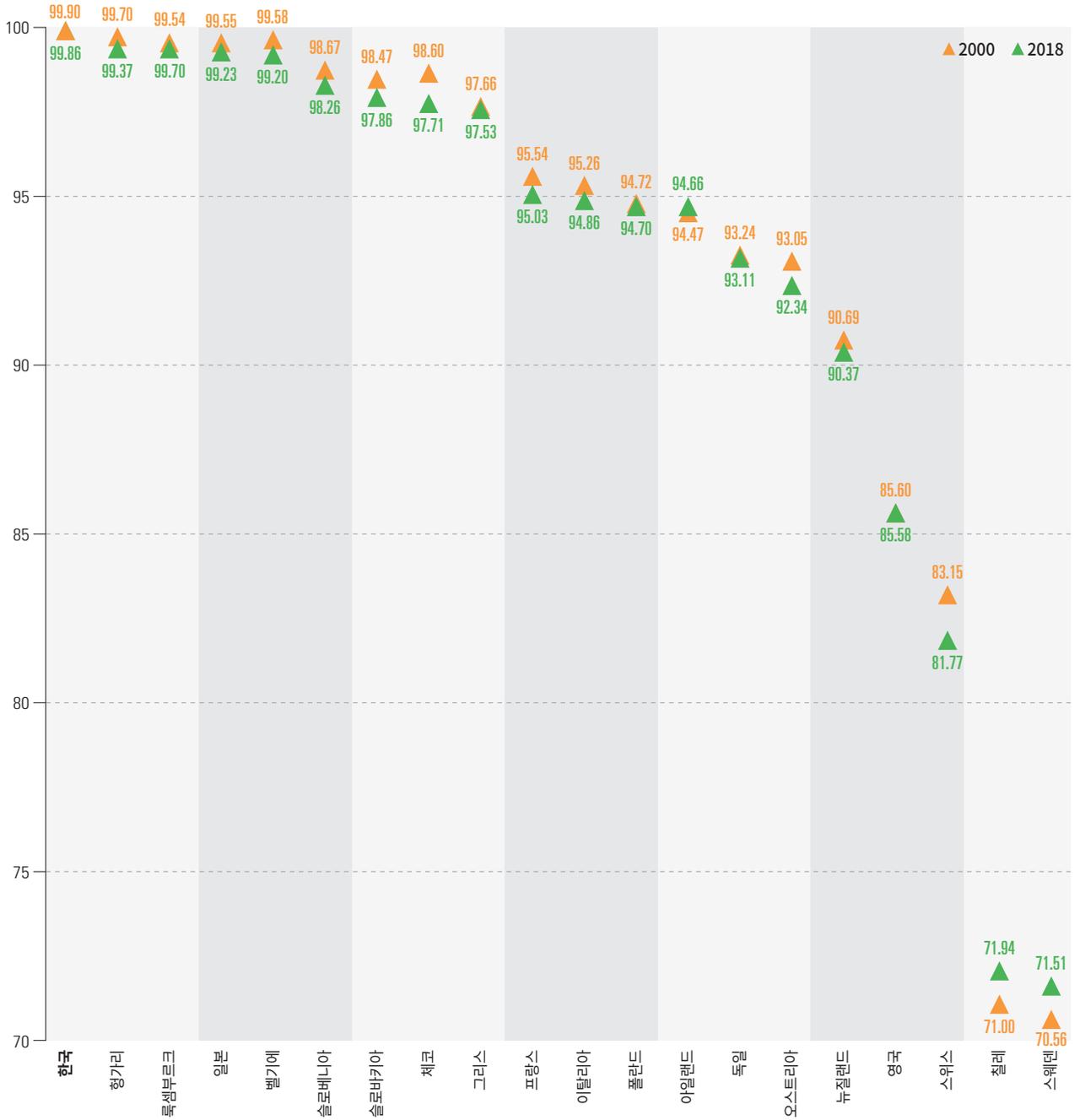
그러나 산림경영인증 면적, 국가 장기산림경영계획 작

성 면적 비율 지표 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세부지표 산정에 대한 갱신과 전반적인 데이터의 확보 및 지속성이 필요할 것이다.

산악녹색피복지수 감소세

산악녹색피복지수(MGCI)는 산악 지역의 면적 대비 토지 피복이 식생으로 덮여 있는 토지(산림, 농경지, 초지)의 면적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FAO가 분석한 MGCI 결과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두 시점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한 20개 국가 중 이전 시기에 비해 2018년에 MGCI 지수가 증가한 국가는 칠레, 아일랜드, 스웨덴 3개 국가에 불과하며,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국의 MGCI는



출처: UN SDG database, indicator 15.4.2(<https://unstats.un.org/sdgs/UNSDG/IndDatabasePage>, 2021.10.26. 인출)
 주 : 데이터 없는 국가는 제외함. 단, 독일과 폴란드는 2015년과 2018년 데이터임

99%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 99.897%에서 2018년 99.858%로 약 0.039%만큼 감소했다. 수치상 그 폭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은 국가 상황을 고려한 MGCI 결과 제시와 주기적 모니터링을 위해 고유의 MGCI 통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적색목록지수 개선 필요

국제적 수준에서의 적색목록 즉, 레드리스트는 IUCN의 기준에 따라 세계적인 멸종위험을 판단 및 분류하는데 레드리스트는 지구적 범주뿐만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도 평가되고 있다. 한국도 국가라는 지역적 수준에 맞게

IUCN의 지역적색목록 기준을 적용해 ‘국가생물적색목록’을 평가 및 분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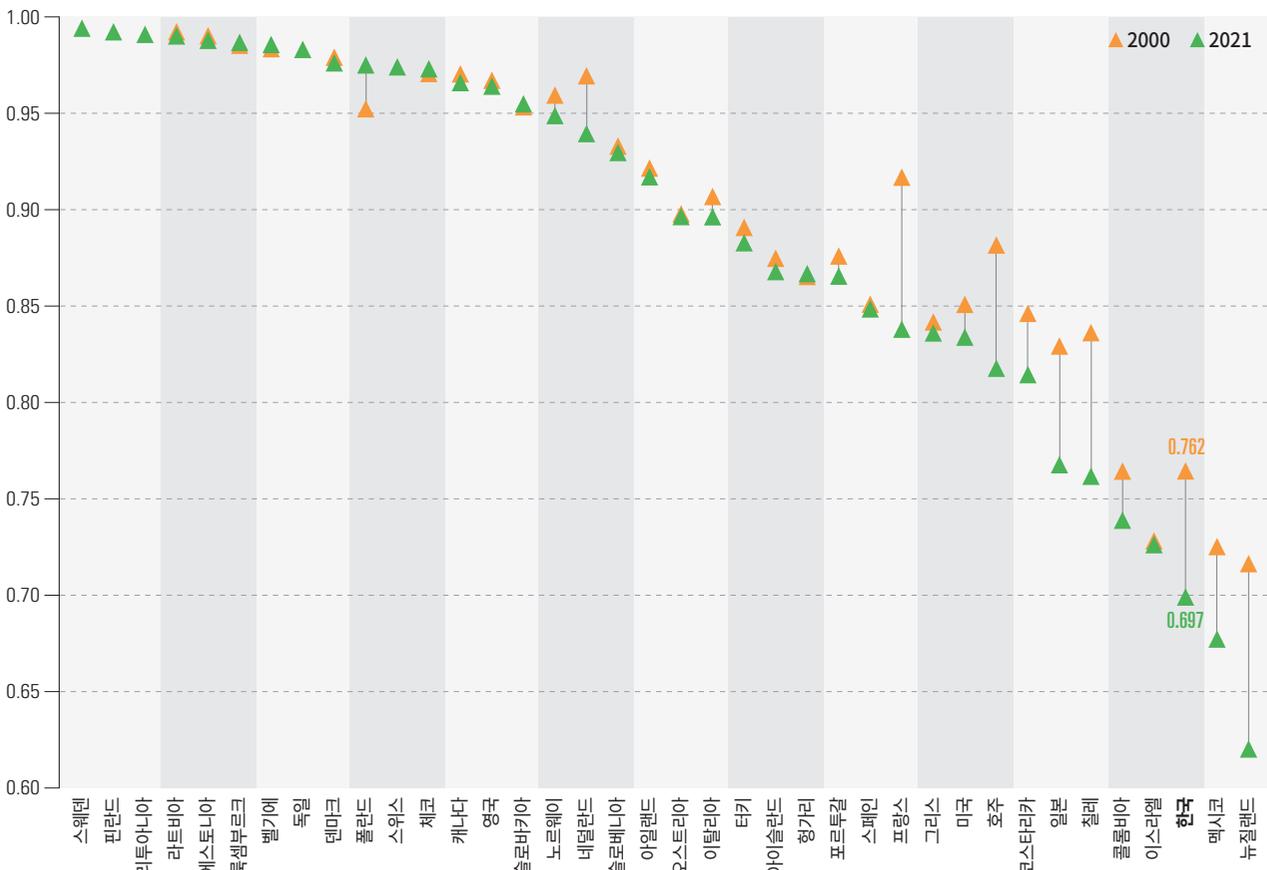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 자료집을 발간한 후에 당시 미평가로 남아 있던 126종 및 이미 수록된 종에 대하여 분류군별로 단계적 개정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이소희 외, 2021). 관속식물은 연구를 통해 현재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종 수의 약 12.5%에 해당하는 554종이 국가생물적색목록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자료에서는 관속식물 중 지역멸절(RE)에 해당하는 종이 없었던 반면 2021년 새롭게 파악된 국가생물적색목록에서는 5개 종(나도풍란, 다시마고사리삼, 무등풀, 벌레먹이말, 줄석송)이 지역멸절로 새롭게 재분류되었다. 나도풍란은 2012년 당시 ‘위급(CR)’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4종은 ‘자료부족(DD)’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지역적으로 멸절되었다고 새롭게 평가됨에 따라 향후 ‘자료부족’ 범주에 속하는 관속식물 47종(2021년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역시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국립생물자원

관, 2021). 생물적색목록은 서식지 및 생태계 변화에 따라 분류되는 범주도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각 종에 대해 즉각적인 변화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적색목록에서 비롯된 적색목록지수(레드리스트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UN의 SDGs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한국은 2000년에 0.762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0.697로 하락세를 보이며 개선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미진한 상승세를 보이는 OECD 회원국으로는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8개국이 있다. 따라서 전 지구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지표이면서 동시에 현대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OECD 국가별 적색목록지수, 2000, 2021



출처: UN SDG database, Indicator 15.5.1(<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2021.09.13. 인출)



16 PEACE AND JUSTICE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SDGs 16번 목표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폭력과 부정부패를 줄이고, 투명하고 열린 제도 구축을 위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걸쳐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례 없는 대유행 상황에서 질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사회적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의 역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된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해의 불균등한 영향을 제도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유엔과 각국의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코로나19는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집단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영향력은 코로나19에서 회복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도 길게 남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생겨난 어려움이 일부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각 집단 간 공정한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노력에 대한 준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포용적이고 강력한 제도는 사회 각 집단 간의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더불어 제도 자체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특히 정부는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만족스러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충분한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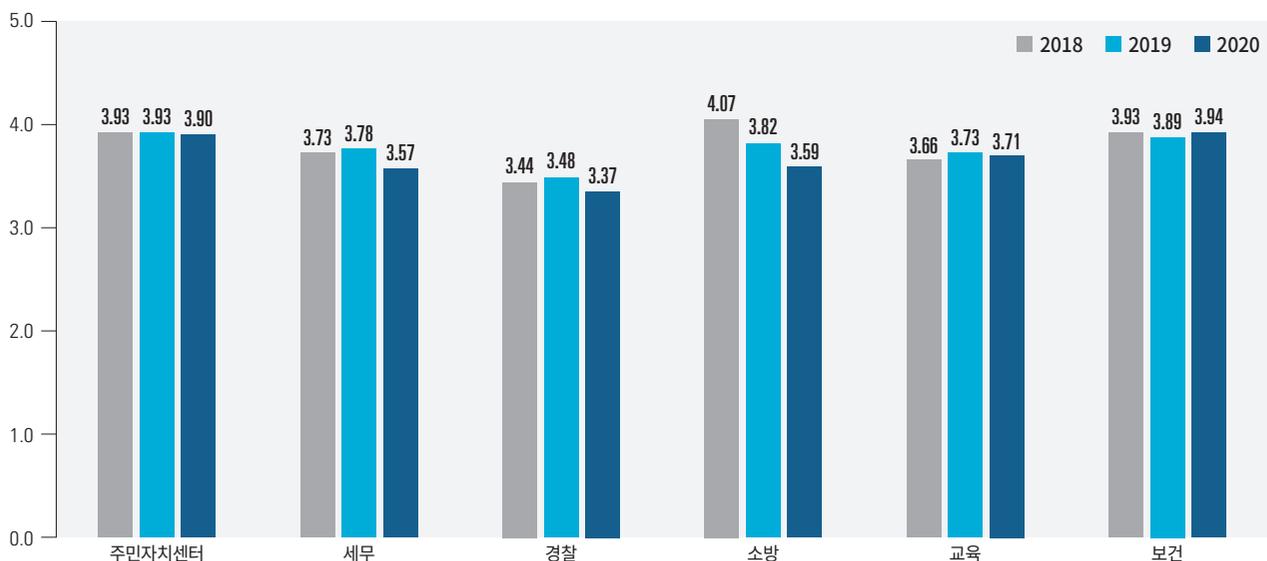
공공기관 서비스 중 높은 보건서비스 만족도

지난 1년간 자신이 경험한 국가 공공서비스 만족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주민자치센터 서비스, 보건서비스 등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단연, 보건서비스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2020년에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경찰서비스, 세무서비스 등은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경찰서비스는 2018년부터 2020년

까지 3년간 계속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2020년은 만족도가 3.37점에 머물렀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보통 수준인 3점을 넘고 있어,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준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방서비스는 2018년에 4.07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2018~2020

(단위: 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주 : 지난 1년간 이용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 매우 만족한다)의 평균값임



대응적 의사결정 과정의 진전과 정치 효능감의 상승

SDGs에서는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이며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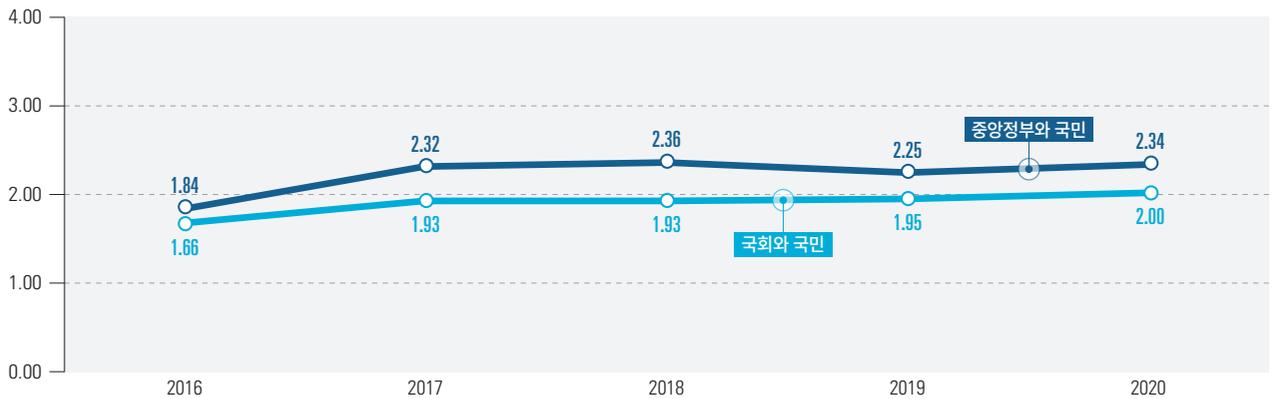
사회 부문 간 의사소통 정도에 대한 평가는 제도의 포용성을 가능하는 중요한 척도다. 지난 수년간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는 2016년 1.84점으로 낮았으나, 2017년 2.32점으로 상승했으며 꾸준히 유지되어 2020년도에는 2.34점을 기록했다. 반면 국회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평가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6년 1.66점을 기록했으며, 그 이후 소폭 상승하

고 있으나 2020년 2.00점을 기록하는 등 정부기관의 의사소통 평가에 비해 낮은 점수다. 중간점이 2.0점인 점을 고려한다면,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응답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응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제도의 영향을 받는 구성원들은 자신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치적 효능감은 대응적 의사결정 구조의 간접적인 척도가 된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효능감 점수는 2015년에 2.71점에서 2016년 조사에서는 2.60점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2017년 2.79점으로 상승했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국민 간 소통 평가, 2016~2020

(단위: 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주 : 중앙정부와 국민, 국회와 국민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질문에 4점 척도(1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로 응답하도록 했으며, 평균값을 산출함

정치적 효능감 평가, 2015~2020

(단위: 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주 : 정치적 효능감(외적 효능감)은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와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문항으로 측정되며,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5 매우 동의한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함. 응답을 역코딩(reversed coding)해 두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함

살인범죄율은 꾸준히 감소

한국의 살인 기수 건수는 2011년, 2012년 400건대에서 2013년 342건으로 떨어진 이후 비슷한 추세를 한동안 유지하다가, 2016년 356건을 나타낸 후 2017년 301건으로 감소했으며 이후 꾸준히 300건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면 2020년 0.60건이다. 2011년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가 0.85를 보인 이래로 2016년 0.70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듬해인 2017년에는 0.59건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바탕으로 살인범죄 발생 건수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17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감소세가 주춤하지만 OECD의 가장 최근 통계결과 나타난 회원국

들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 건수가 평균 2.4명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2020년 발생한 살인범죄의 가해자 중 남자가 75.1%, 여자가 24.9%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수년간 유사한 패턴을 보여 왔다. 반면, 살인범죄의 피해자는 그동안 여자가 남자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011년 여자 피해자의 비율이 52.5%였으며 이는 2016년 54.4%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20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가 전체의 45.7%로 비율이 줄어든 반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는 54.3%로 증가해, 성별 피해자의 분포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범죄 발생 건수와 발생비, 2011~2020

(단위: 건, 10만 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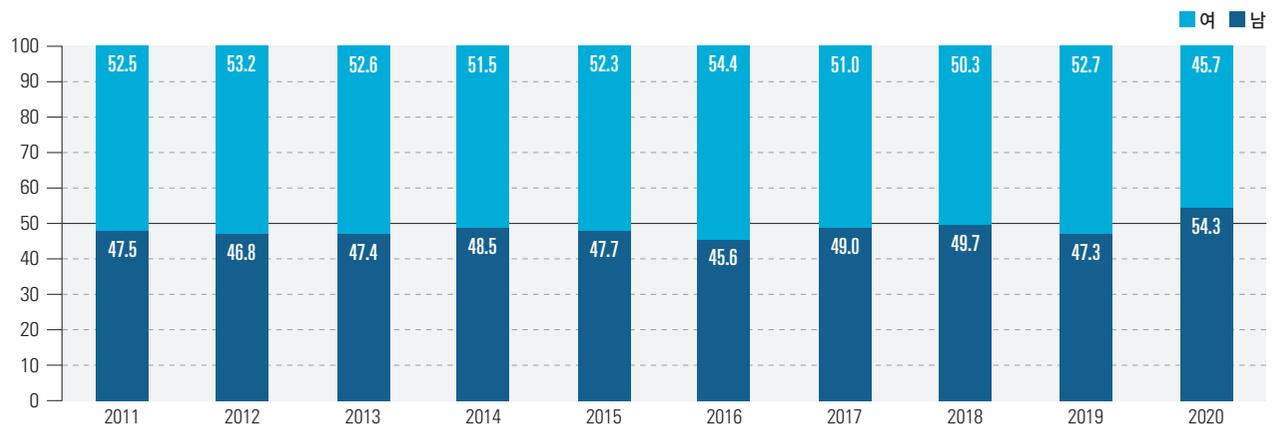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각 연도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dbUser=NSI_IN_132)

주1: 발생비는 각 연도 연앙인구를 적용함(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2: 살인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 수를 의미하며, 통계에는 SDGs 지표의 정의에 따라 살인범죄 중 살인 기수만 포함함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비 추이, 2011~2020

(단위: %)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각 연도

주1: 한국의 범죄피해자 통계에서 피해자 수는 발생 건수 기준 대표 피해자 1명의 정보를 기초로 집계함

주2: 성별 불상사건은 제외함



여성의 범죄 피해 두려움 높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약 19.8%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같은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30.3%였으며, 2015년에 22.1%, 2017년에 20.7%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세분화된 집단별로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의 경우 2013년 절반에 가까운 48.6%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운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수치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2019년에는 31.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에는 2013년에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12.1%에 불과했으며, 2019년 조사에는 소폭 줄어들어 8.1%가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왔다는 점과 특히 여자가 느끼는 두려움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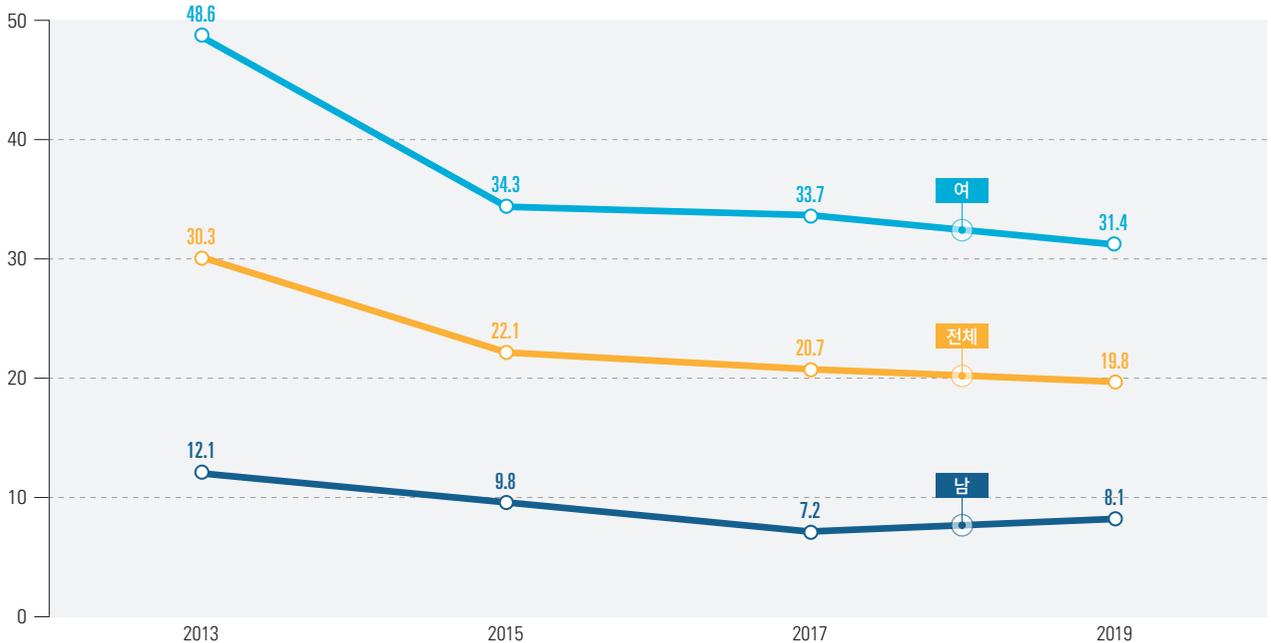
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여자가 남자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아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범죄 피해 두려움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 30대는 2013년 조사에서 각각 39.0%, 37.6%, 34.9%가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지만 2019년에는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느끼는 응답자가 10대는 28.2%, 20대는 23.0%, 30대는 22.3%로 나타나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40, 50대의 감소폭도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10%p 내외를 보여 주었다. 청장년층의 감소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연도별 감소 추세는 60세 이상의 노령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가장 최근 조사인 2019년에도 10대의 경우에는 28.2%가 밤에 홀로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14.8%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70대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성별 범죄 피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2013~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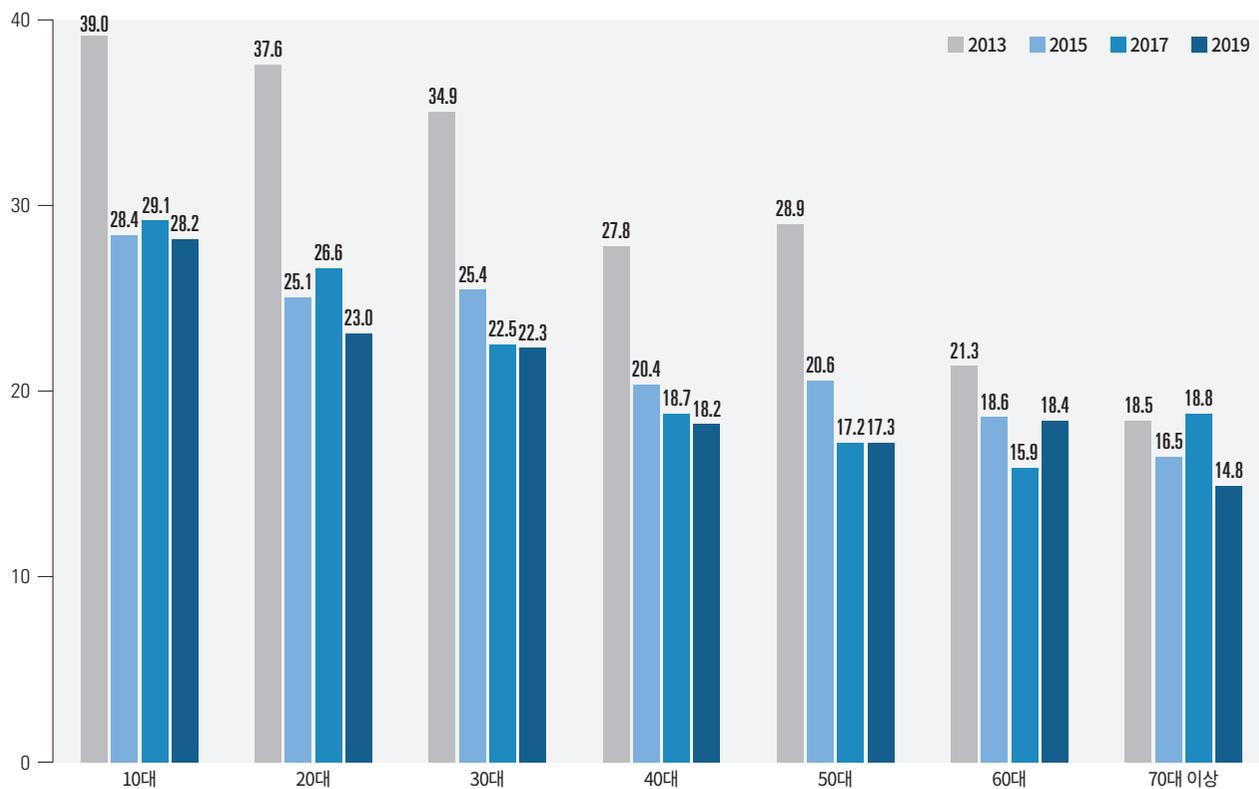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각 연도 내부 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주 : 범죄 피해 두려움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연령대별 범죄 피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2013~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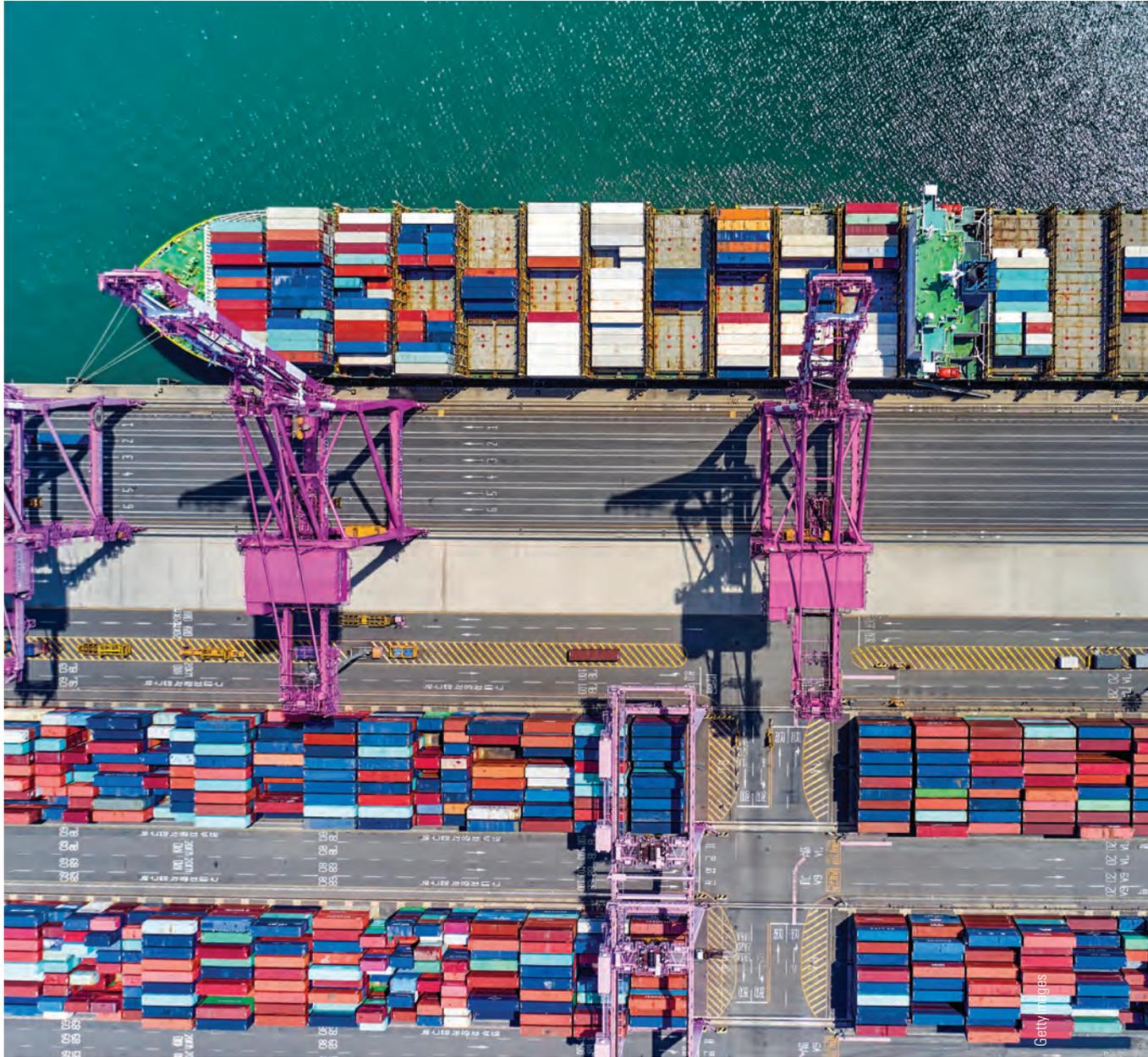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각 연도 내부 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주 : 범죄 피해 두려움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DGs 17번 목표는 SDGs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시민사회 및 민간,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포괄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국제협력의 변화를 살펴 보고,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작업은 향후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더욱 많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 GDP가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는 1612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2020년 한국의 총 ODA 규모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에 적극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했다. 이는 공여국의 지원이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로 인해 수원국에 일관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수원국에 좀 더 안정적이고 균등한 ODA 제공을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생산에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둔 일관된 개발의제 설정과 ODA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ODA와 더불어 무역은 개발도상국 및 최저개발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치로 2020년 최저개발국 수출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는 상품 수출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최저개발국의 경우 글로벌 위기에 매우 큰 취약성을 나타낸 것이다. 최저개발국의 무역 위기는 향후 장기적으로 이들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비한 전 지구적인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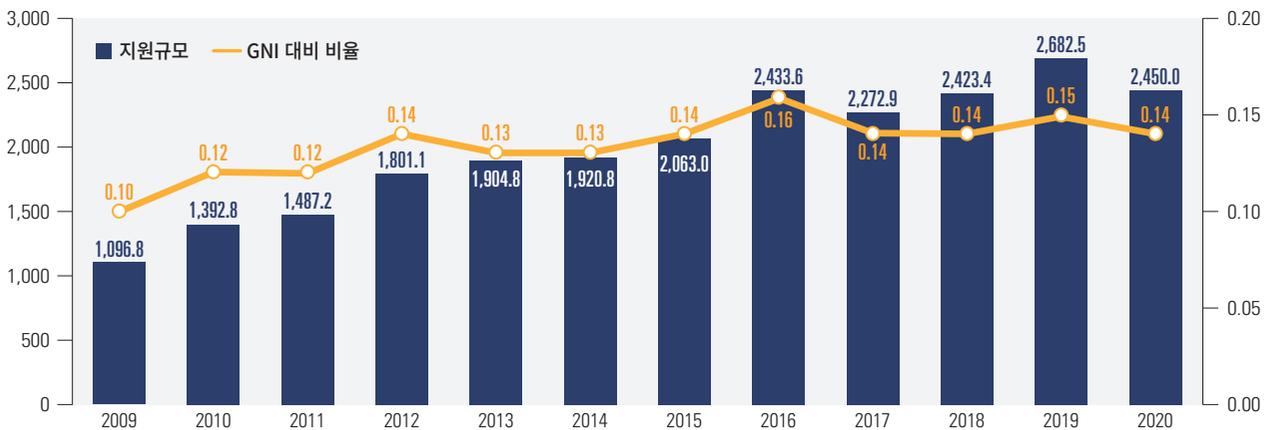
한국의 ODA 규모 24억 달러, GNI 대비 0.14%로 낮아

2020년 한국의 ODA 규모는 약 24억 달러(잠정)로, 2009년 11억 달러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한국은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ODA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2010~2018년 11.9% 증가율을 나타냈고, 이는 같은 기간 DAC 회원국 연평균 증가율인 2.4%

와 비교할 때,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2020년 ODA 규모는 전년 대비 8.6% 감소한 것으로, 2020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를 나타내 같은 해 OECD DAC에 속한 전체 29개 공여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20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0%까지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

한국 ODA 지원규모 및 GNI 대비 비율, 2009~2020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 Korea - ODA volume(https://www.oecd-ilibrary.org/sites/d919ff1a-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5e331623-en&_csp_=b14d4f60505d057b456dd1730d8fcea3&itemIGO=oecd&itemContentType=chapter&_ga=2.197826223.1279694035.1628080677-192542855.1608730099#endnotea1z88, 2021.11.12. 인출)

주1 : 2020년 수치는 잠정치임

주2 : GNI 대비 비율은 2017년까지는 순지출 기준이며, 2018년 이후는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 기준임



으나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

2020년 OECD DAC에 속한 전체 공여국의 ODA 규모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612억 달러(잠정)로, GNI 대비 평균 0.32%(잠정)로 집계되었다. ODA 규모가 큰 공여국은 미국(약 344억 5600만 달러), 독일(약 283억 8200만 달러), 영국(약 178억 4700만 달러), 일본(약 154억 8700만 달러), 프랑스(약 140억 700만 달러) 등의 순이며, 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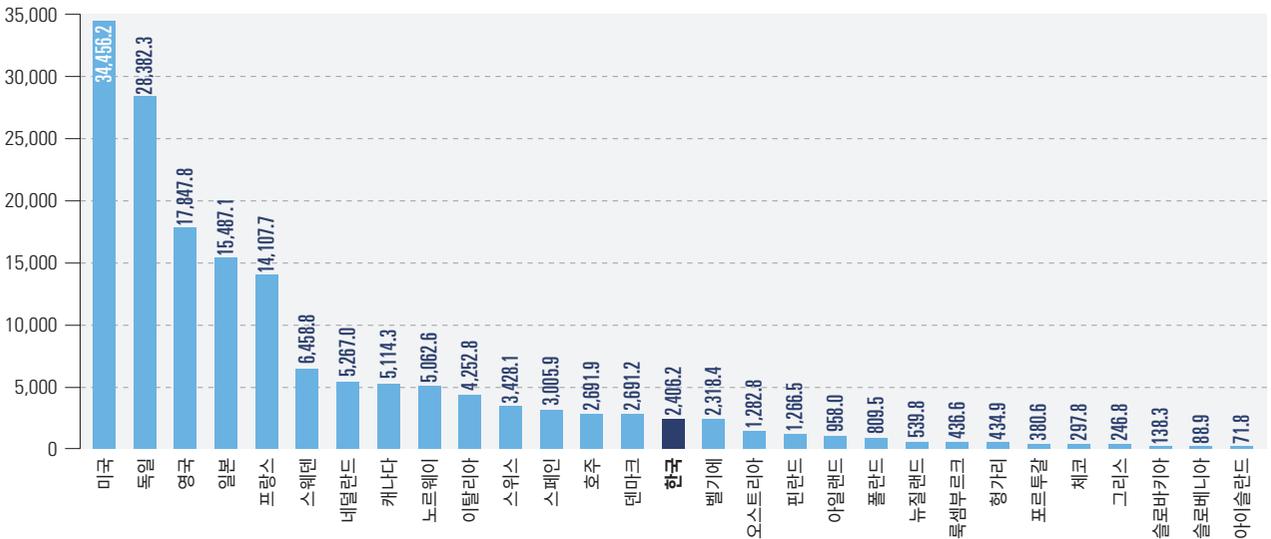
대비 ODA 비율이 가장 높은 공여국은 스웨덴(1.14%), 노르웨이(1.11%), 룩셈부르크(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유사한 비율의 국가는 폴란드(0.14%), 슬로바키아(0.14%), 체코(0.13%) 등이다.

최저개발국 대상 양자원조 37.1%로 높아져

2019년 기준, 한국 ODA 중 개별 국가에 지원되는 양자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원규모(지출액 기준), 2020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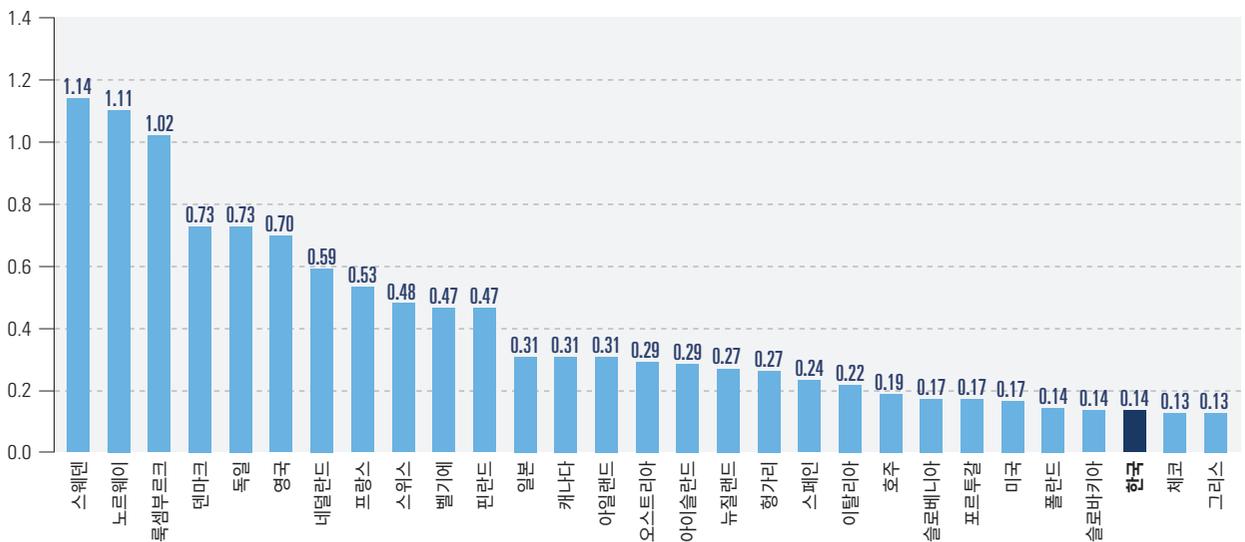


출처: Wilks, J., N. Pelechà Aigües and E. Bosch(2021), 'Development co-operation funding: Highlights from the complete and final 2019 ODA statistics',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OECD Publishing, Paris(https://www.oecd-ilibrary.org/sites/401f9a42-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5e331623-en&_csp_=b14d4f60505d057b456dd1730d8fcea3&itemIGO=oe.cd&itemContentType=chapter&_ga=2.197826223.1279694035.1628080677-192542855.1608730099, 2021.11.12. 인출)

주 : 총 DAC 30개 회원국 중 EU 제외, 29개국으로 분석

OECD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중(지출액 기준), 2020

(단위: %)



출처: Wilks, J., N. Pelechà Aigües and E. Bosch(2021), 'Development co-operation funding: Highlights from the complete and final 2019 ODA statistics',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OECD Publishing, Paris(https://www.oecd-ilibrary.org/sites/401f9a42-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5e331623-en&_csp_=b14d4f60505d057b456dd1730d8fcea3&itemIGO=oe.cd&itemContentType=chapter&_ga=2.197826223.1279694035.1628080677-192542855.1608730099, 2021.11.12. 인출)

주 : 총 DAC 30개 회원국 중 EU 제외, 29개국으로 분석

원조(bilateral aid)는 총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21억 8000만 달러로 전체 ODA의 77.1%(양자 64.7%, 다자성양자 12.5%)를 차지해 전년 대비 14.2% 증가했고, 국제기구 등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되는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id)는 6억 4500만 달러로 22.9%를 차지했다. 2019년 기준, OECD DAC 회원국의 총 양자원조 지출액은 1176억 달러로 평균 75.5%(양자 59.9%, 다자성양자 14.7%)를 차지했고, 다자간 원조는 463억 3900만 달러로 평균 25.5%를 차지했다.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의 평균(75.5%)보다 양자원조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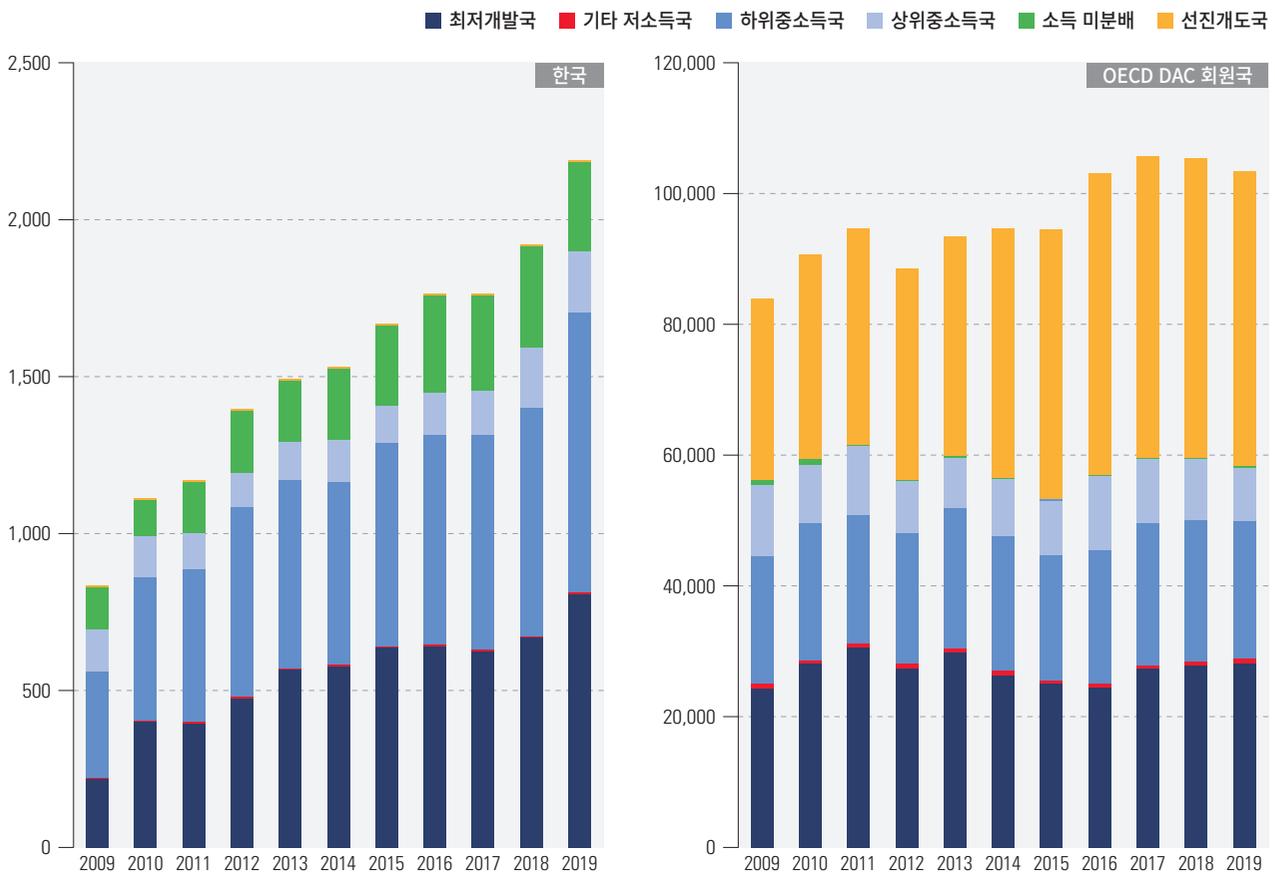
2019년 한국의 양자원조 지원 비중을 수원국 소득그룹별로 살펴보면, 하위중소득국(LMIC)이 40.9%(8억 91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최저개발국(LDC)

37.1%(8억 900만 달러), 소득 미분배 13.1%(2억 8500만 달러), 상위중소득국(UMIC) 8.8%(1억 91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나, 전체 양자원조 중 78%가 하위중소득국 및 최저개발국에 제공되었다. 특히, 한국은 2018년 최저개발국에 35.1%(6억 7100만 달러)를 지원한 것과 비교해 2019년에 소폭 증가했다.

OECD DAC 회원국의 소득그룹별 양자원조 지원 비중은 선진개도국 43.7%(451억 1100만 달러), 최저개발국 27.3%(282억 1800만 달러), 하위중소득국 20.4%(210억 5500만 달러), 상위중소득국 8.1%(83억 6800만 달러), 기타 저소득국 0.5%(5억 50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2019년 DAC 회원국보다 양자원조 중 최저개발국 지원 비중은 높다.

한국 및 OECD DAC 회원국의 수원국 소득그룹별 양자 ODA 규모(지출액 기준), 2009~2019

(단위: 백만 달러)



출처1: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 Korea - Bilateral ODA by income group(https://www.oecd-ilibrary.org/sites/401f9a42-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5e331623-en&_csp_=b14d4f60505d057b456dd1730d8fcea3&itemIGO=oecd&itemContentType=chapter&_ga=2.197826223.1279694035.1628080677-192542855.1608730099, 2021.11.12. 인출)

출처2: OECD stats, Aid (ODA)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

주 : 양자원조는 공여국이 직접 특정 국가에 지원하는 양자지원(bilateral) 및 공여국이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하되 특정 국가 등 지원 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여(earmarked multilateral, 다자성양자(multi-bi)지원이라고도 함)를 포함한 수치임. 다자간 원조의 경우, 다자기구 핵심기여금 지원(core multilateral)을 지칭함



양자원조의 36.6%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33.8%는 경제 인프라에 지원

2019년 기준, 한국의 양자원조를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약정액 기준 약 13억 1100만 달러(36.6%)를 지원했으며, 이어 경제 인프라 분야에 약 12억 1200만 달러(33.8%), 다부문에 약 5억 2900만 달러(14.8%), 생산 분야에 약 1억 9100만 달러(5.3%), 기타 분야에 약 2억 2600만 달러(6.3%), 인도적 지원 분야에 약 1억 1500만 달러(3.2%)를 지원했다. 한국은 사회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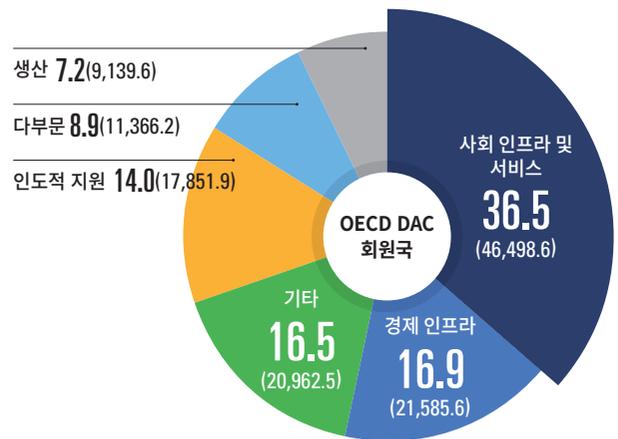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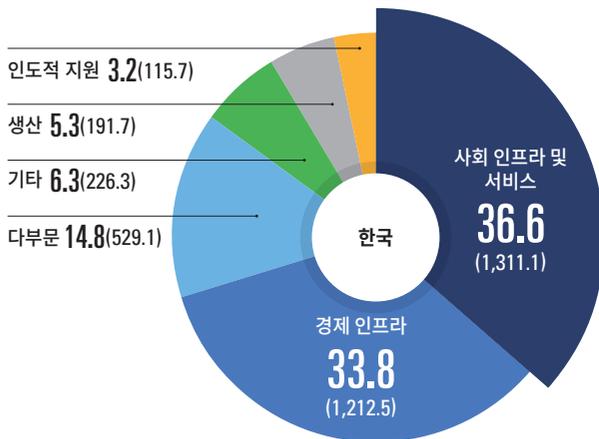
프라 및 서비스 분야 내에서도 보건 분야에 약정액 기준 약 5억 160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는 39.4%를 차지한다. 2020년 한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한 원조는 잠정액 기준 약 5억 86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약 4억 6300만 달러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기준, OECD DAC 회원국의 양자원조를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약정액 기준 약 464억 9800만 달러(36.5%)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지원되었고, 경

한국 및 OECD DAC 회원국의 양자원조 분야별 지원 비중(약정액 기준), 2019

전체 분야별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Bilateral ODA by sector(<https://www1.compareyourcountry.org/dev-coop-profiles-2021/en/0/2548/default/all/2001+20006+20008?embed=noHeaderDAC>)

주 : OECD DAC에서 제공하는 보건 분야 ODA는 120: I.2. Health, Total 값으로 추출함. Health, Total 값 안에는 Health General(120:I.2.a), Basic Health(122:I.2.b), Non-communicable diseases(NCDs, 123:I.2.c)가 포함됨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내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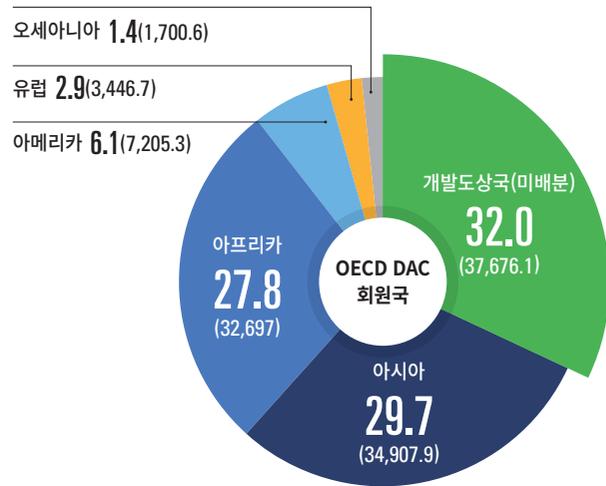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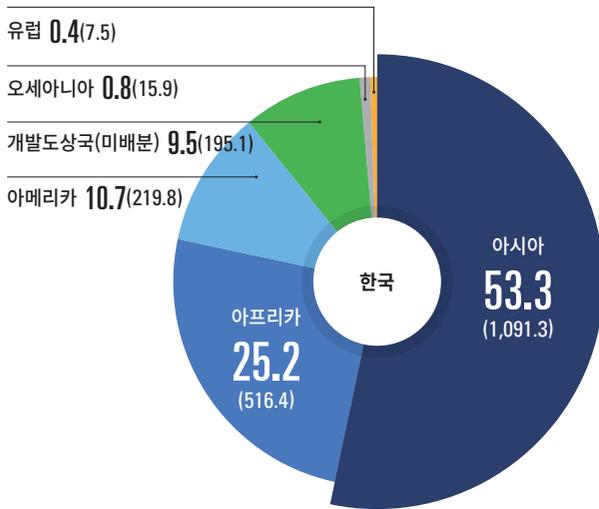
한국



OECD DAC 회원국



출처: OECD.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2A#>, 2021.11.12. 인출)



출처: OECD stats, Aid(ODA)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2A>, 2021.11.12. 인출)

제 인프라 분야에 약 215억 8500만 달러(16.9%), 기타 분야에 약 209억 6200만 달러(16.5%), 인도적 지원 분야에 약 178억 5100만 달러(14.0%), 다부문에 약 113억 6600만 달러(8.9%), 생산 분야에 약 9130만 달러(7.2%)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DAC 회원국들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내에서도 보건 분야에 약정액 기준으로 66억 820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는 14.4%에 해당한다.

양자원조의 53.3%는 아시아, 25.2%는 아프리카 지원

2019년 기준 한국의 지역별 양자원조 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액 기준으로 아시아에 약 10억 9100만 달러(53.3%), 아프리카에 약 5억 1600만 달러(25.2%)를 지원해 총 78.5%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어 아메리카에 약 2억 1900만 달러(10.7%), 유럽에 약 750만 달러(0.4%), 오세아니아에 약 1600만 달러(0.8%)를 각각 지원했다. 2019년 기준, OECD DAC 회원국의 양자원조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지출액 기준으로 아시아에 약 349억 700만 달러(29.7%), 아프리카에 약 326억 9700만 달러(27.8%), 아메리카에 약 72억 500만 달러(6.1%), 유럽에 약 34억 4600만 달러(2.9%), 오세아니아에 약 17억 달러(1.4%)를 지원했다. 지역을

특정하지 않는 미배분도 376억 7600만 달러로 약 32%에 달했다.

전 세계 수출에서 최저개발국 비중 0.94% 수준 유지

SDGs 17.11.1 세부목표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저개발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고, 개발도상국의 비중을 상당히 증대하는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전 세계 수출에서 최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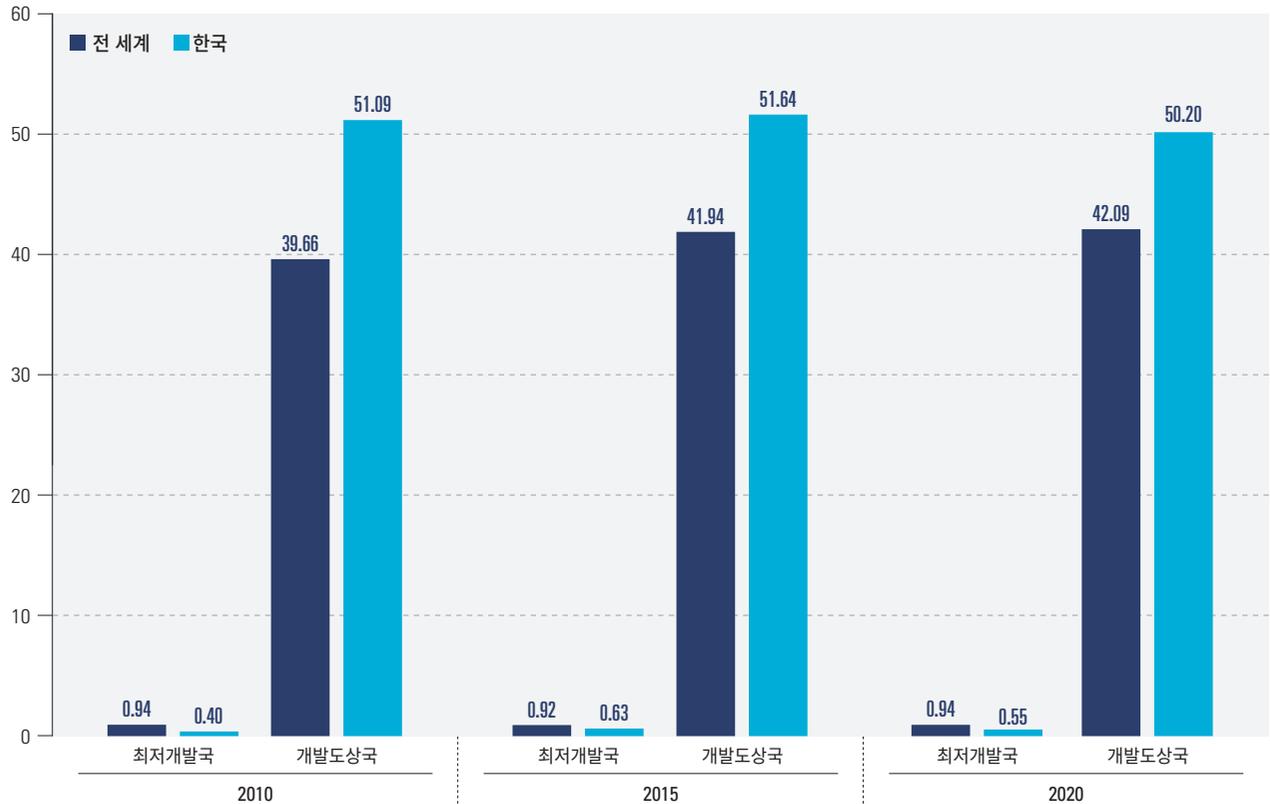
전 세계 수출에서 최저개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0.94%, 2015년 0.92%, 2020년 0.94%로, 사실상 목표 기준 연도인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 0.02%p 증가해 목표치인 2배(1.84%) 증대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전 세계 수출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39.66%, 2015년 41.94%, 2020년 42.09%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0.15%p 증가했는데, 이는 '상당한 증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 총수입에서 최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최저개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0년 0.40%, 2015년 0.63%, 2020년 0.55%로, 이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평균인 0.94%보다 0.39%p 낮을 뿐만 아니



전 세계 및 한국 수출에서 최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비중, 2010, 2015, 2020

(단위: %)



출처: 전 세계 데이터 https://sdgpulse.unctad.org/trade-developing-economies/#Ref_8IVYHP88; 한국 데이터 <https://comtrade.un.org/data/> 바탕으로 계산함

주1: 전 세계 데이터의 경우 서비스 및 재화 총합

주2: 한국 데이터의 경우 재화 총합(서비스 자료는 집계되지 않아 제외함)

주3: 국제 비교를 위해 최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의 분류는 UNCTAD에서 제공하는 국가분류체계(country classification)를 준용해, 최저개발국 46개국 및 개발도상국(최저개발국 제외) 130개국 등 총 176개국을 대상으로 함. 다만, 3개의 분석 연도에 한국의 무역 상대국이 아니었던 국가들은 제외함

라, 목표 기준 연도인 2015년보다 0.08%p 감소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2010년 51.09%, 2015년 51.64%, 2020년 50.20%로, 이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평균인 42.09%보다 높은 수준이나, 2020년에는 2015년보다 1.44%p 감소해 상당한 증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최저개발국으로부터의 상위 5개 수입국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예멘(24.7%), 잠비아(22.1%), 미얀마(9.4%), 방글라데시(8.2%), 앙골라(6.7%) 순이고, 2015년에는 미얀마(18.3%), 예멘(13.1%), 잠비아(12.6%), 방글라데시(12.1%), 콩고민주공화국(10.9%) 순이며, 2020년에는 미얀마(18.2%), 콩고민주공화국(17.3%), 방글라데시(15.4%), 캄보디아(12.5%), 앙골라(5.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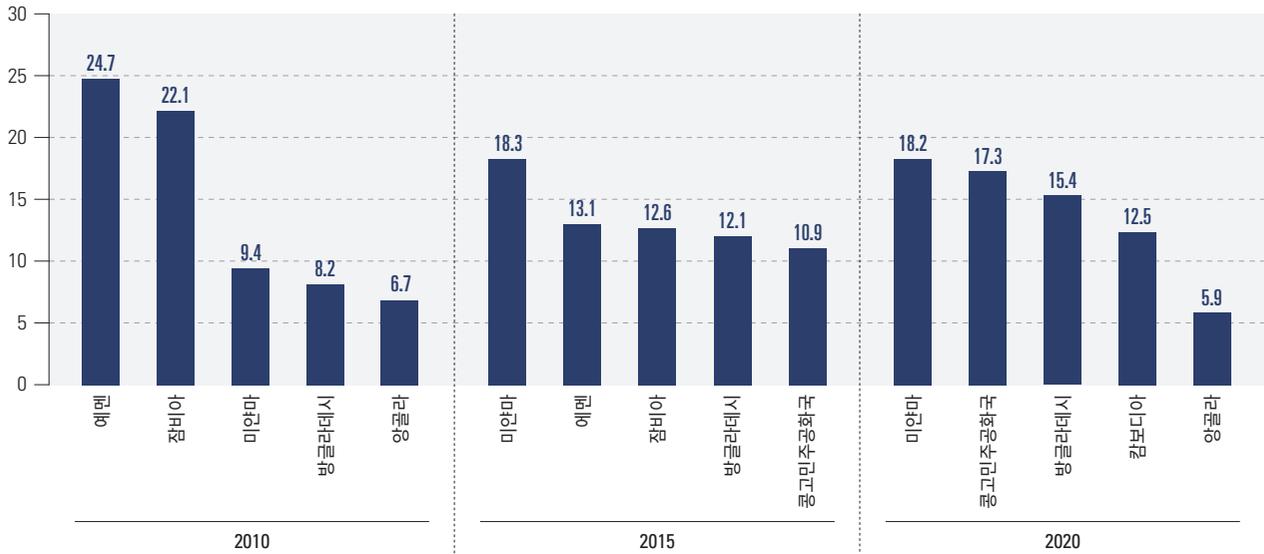
아울러, 지표 17.11.1 세부목표 중 2020년까지 전 세

계 수출에서 최저개발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려는 목표의 경우, 한국의 최저개발국으로부터의 수입 중 2010년 대비 2020년 수입 비중이 2배 이상 증대한 국가는 캄보디아(2010년 2.5% → 2020년 12.5%), 모잠비크(2010년 0.4% → 2020년 5.3%), 마다가스카르(2010년 0.1% → 2020년 2.1%)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상위 5개 수입국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중국(28.1%), 사우디아라비아(10.5%), 인도네시아(5.5%), 아랍에미리트(4.8%), 카타르(4.7%) 순이고, 2015년에는 중국(40.0%), 사우디아라비아(8.7%), 카타르(7.3%), 베트남(4.3%), 쿠웨이트(4.0%) 순이며, 2020년에는 중국(46.4%), 베트남(8.8%), 사우디아라비아(6.8%), 말레이시아(3.8%), 싱가포르(3.6%) 순으로 집계되어, 최근 중국이 한국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개발국 수입국 중 상위 5개국 비중, 2010, 2015,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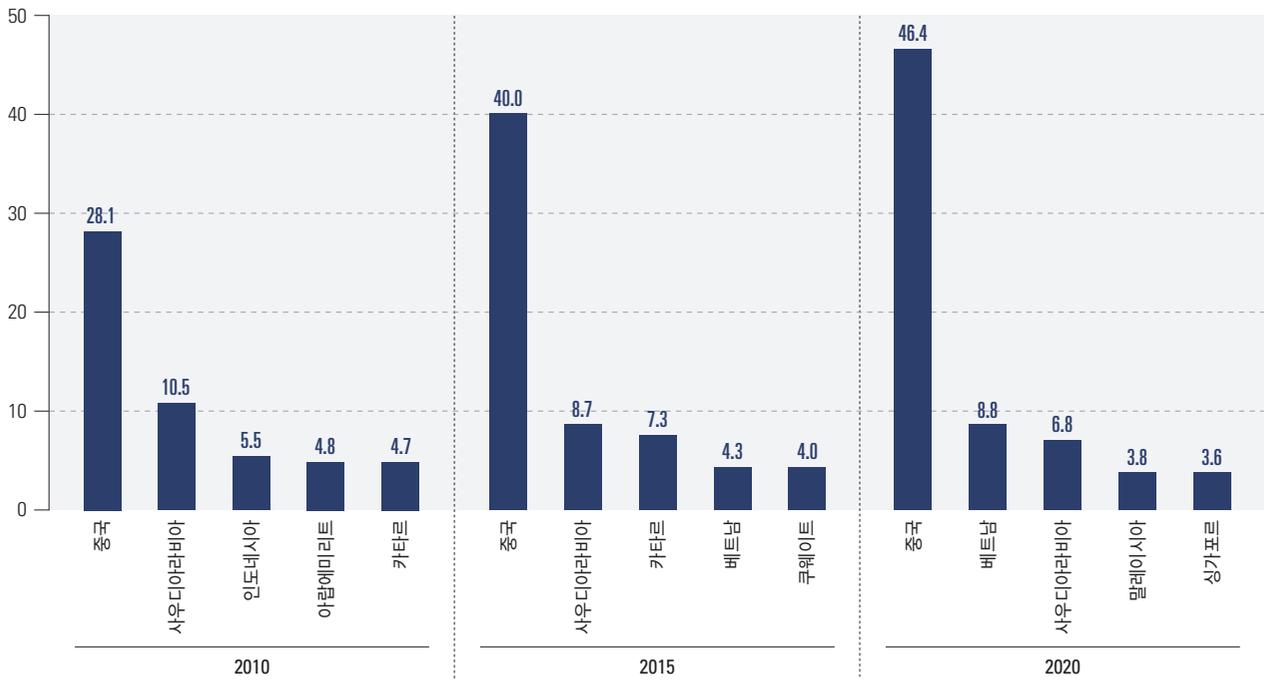
(단위: %)



출처: UNSD 웹사이트(<https://comtrade.un.org/data/>, 2021.11.12. 인출) 바탕으로 계산함
 주: 재화 총합(서비스 자료는 집계되지 않아 제외함)

개발도상국 수입국 중 상위 5개국 비중, 2010, 2015, 2020

(단위: %)



출처: UNSD 웹사이트(<https://comtrade.un.org/data/>, 2021.11.12. 인출) 바탕으로 계산함
 주: 재화 총합(서비스 자료는 집계되지 않아 제외함)



참고문헌

- 강미나·이후빈,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강한 집, 건강한 이웃, 월간국토 2020년 6월호 특집6, 국토연구원.
- 구남옥·김미림·이소라·곽민호(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구남옥·김미림·이소라·곽민호(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립생물자원관, 2021,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5권(2020년 개정판0) - 관속식물.
- 국민연금공단, 2021. 2020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 김혜숙·신안나·김한성(2020). OECD PISA 2018을 통해 본 한국의 교육정보화 수준과 시사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대검찰청, 2019, 범죄분석통계, 이용자용통계정보보고서.
- 보건복지부, 2021, 통계로 본 2020년 기초연금.
- 서민희·김원수·김미림·한정아·손윤희(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민희·김원수·김미림·한정아·손윤희(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소희·권선만·도민석·정승규·이경진 외, 2021, 국가생물적색목록 개정 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 척추동물분과, 제76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p.283.
- 이소희·현진오·권희정·최은경·김진석 외, 2021, 국가생물적색목록 개정 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 관속식물분과, 제76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p.291.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2019 에너지통계 연보.
-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 한국환경연구원, 2020,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 환경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3판, pp.2~3.
- IPCC, 2021,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 Salvi del Pero, A. et al.(2016), 'Policies to promote access to good-quality affordable housing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7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m3p5gl4djd-en>.
- World Bank, 2018, Waste to Energy 2050(ESWET: European Suppliers of Waste to Energy Technology, 2020).

참고 사이트

- 국제노동기구(ILO),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Country policy responses(<https://www.ilo.org/global/topics/coronavirus/regional-country/country-responses/lang-en/index.htm>)
-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https://www.worldsteel.org>
-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business/policy_re100.aspx)
- 한국석유화학협회, <https://www.kpia.or.kr/index.php/pages/view/industry/phase>
-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web/airMatter?pMENU_NO=130)
- OECD Library(<https://www.oecd-ilibrary.org/sites/c82850c6-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c82850c6-en#figure-d1e12753>)
- OECD Social Rental Housing(<https://www.oecd.org/els/family/PH4-2-Social-rental-housing-stock.pdf>.)

용어 약어

- ASF** African Swine Fever(아프리카돼지열병)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 Chemical Oxygen Demand(화학적 산소요구량)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개발원조위원회)
ENV Environmental Water Requirements(환경적 물 요구량)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적인 요소와 함께 고려되는 비재무적인 요소)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유엔식량농업기구)
GDP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GGI Gender Gap Index(성격차지수)
GII Gender Inequality Index(성불평등지수)
GNI 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
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정치포럼)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에너지기구)
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석탄가스화복합발전)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세계자연보전연맹)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통합수자원관리)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새천년개발목표)
MGCI Mountain Green Cover Index(산악녹색피복지수)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M_{2.5} Particulate Matter(초미세먼지)
RE100 Renewable Energy 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TAC Total Allowable Catch(총허용어획량제도)
TP Total Phosphorus(총인)
TRWR Total Renewable fresh Water Resources(총재생수자원)
TWW Total fresh Water Withdrawn(총취수량)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보편적 의료 보장)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유엔개발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유엔환경계획)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유엔산업개발기구)
UNS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유엔통계처)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
WQI Water Quality Index(수질평가지수)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세계자연기금)



지표 총괄표

1. 지표 총괄표에 수록된 데이터는 유엔 글로벌 SDGs 데이터베이스 및 한국 SDGs 데이터 플랫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본문에 활용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출처: **빨간색 점**은 유엔 글로벌 SDG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이며, **초록색 점**은 유사지표로 글로벌 지표와 유사한 국내 통계에서 발췌한 것임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1.1.1 국제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	2014	0.2%	2016	0.2%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1.2 각 국가빈곤 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1 국제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	2019	67.0%	2020	77.3%	ILO Social Security Inquiry(SSI)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	2019	100%	2020	100%	WHO/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2021)
	1.4.2 (a)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			2016	(a)100% (b)96%	Census & Administrative Data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 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 감소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사망 또는 실종: 0.28명 •직접 영향: 25.6명	2018		2019	0.21명 17.8명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2021)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	2018	0.000015%	2019	0.000026%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2021)
	1.5.3 '재난위험 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2018	0.95	2019	1	Sendai Framework Monitoring System as provided by designated national focal points(2021)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	2018	100%	2019	100%	Sendai Framework Monitoring System as provided by designated national focal points(2021)
1.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차원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과 정책 제공을 위해 증강된 개발협력력을 포함해 다양한 자원 동원 보장	1.a.1 수원국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	2017	0.01%	2018	0.01%	OECD, CRS database, 2021
	1.a.2 정부 총지출 중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 보호) 지출 비율					
1.b 빈곤 퇴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인직접 개발 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탄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1.b.1 빈곤친화적 공공사회지출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2.1.1 영양부족 인구 비율 ●	2018	< 2.5	2019	< 2.5	FAO
	2.1.2 식량불안정험척도(FIES) 기준으로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불안정험인구 비율 ●	2018	5.2%	2019	5.1%	FAO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2.2 2025년까지 5세 미만의 발육부진 및 쇠약에 관한 국제 목표 달성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부족을 종식시키고 여성 청소년,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 영양상태 개선	2.2.1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 ●	2003	2.5%	2009	2.5%	Joint Child Malnutrition Estimates(2021 Edition),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UNICEF), World Health Organisation(WHO) and the World Bank Group
	2.2.2 5세 미만 영양불량 아동 비율 (저체중 및 과체중) ●	2003	(저체중) 0.9% (과체중) 6.2%	2009	(저체중) 1.2% (과체중) 7.3%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014;43:69~77
	2.2.3 15~49세 여성 빈혈 유병률 (임신 여부별) ●	2018	13.2%	2019	13.5%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https://www.who.int/data/gho/)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 가치 창출과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가	2.3.1 노동 단위당 생산량 (농림축산업 생산규모별) ●	2019		2020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h 미만: 7천 원/시간 • 0.5~1.0ha 미만: 12천 원/시간 • 1.0~1.5ha 미만: 13천 원/시간 • 1.5~2.0ha 미만: 16천 원/시간 • 2.0~3.0ha 미만: 20천 원/시간 • 3.0~5.0ha 미만: 25천 원/시간 • 5.0~7.0ha 미만: 30천 원/시간 • 7.0~10.0ha 미만: 32천 원/시간 • 10.0ha 이상: 44천 원/시간 					
	2.3.2 소규모 식량생산자 평균 소득 (성 및 원주민 여부별) ●	2019		2020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h 미만: 2,022천 원 • 0.5~1.0ha 미만: 5,574천 원 • 1.0~1.5ha 미만: 9,450천 원 • 1.5~2.0ha 미만: 14,928천 원 • 2.0~3.0ha 미만: 19,354천 원 • 3.0~5.0ha 미만: 23,335천 원 • 5.0~7.0ha 미만: 37,016천 원 • 7.0~10.0ha 미만: 34,741천 원 • 10.0ha 이상: 65,494천 원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어 기후변화, 기상 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보장하며,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이행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면적 비율					
2.5 2020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은행 등을 통해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접근 개선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 유전자원 수 ●	2020	26종	2021	26종	DAD-IS http://www.fao.org/dad-is/
	2.5.2 멸종위험 상태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 ●	2020	86%	2021	86%	DAD-IS http://www.fao.org/dad-is/
2.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농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2.a.1 농업지향지수 ●	2017	0.71	2018	0.77	FAO Questionnaire. UNSD national account estimates
	2.a.2 농업 부문 총 공적지원 (ODA와 기타 공적지원)					
2.b 도하개발라운드에 따른 농산물 보조금 철폐를 포함해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 규제 및 왜곡 시정	2.b.1 농업수출보조금 ●	2016	3,164만 달러	2017	3,503만 달러	World Trade Organization
2.c 지나친 식품가격 변동성 제어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상품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조치 채택	2.c.1 식품가격이상지표 ●	2019	105.42	2020	104.85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3.1 2030년까지 모성 사망비를 출생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1.1 모성 사망비 (출생아 10만 명당) ●	2019	9.9명	2020	11.8명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3.1.2 숙련된 의료인력이 참여한 출산 비율 ●	2015	70.6%	2018	8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2 2030년까지 신생아와 5세 미만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켜, 모든 국가의 신생아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12명 이하, 5세 미만 사망률을 1000명당 최소 25명 이하 목표	3.2.1 5세 미만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	2019	55.141명	2020	48.803명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2.2 신생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 당) ●	2019	1.5명	2020	1.3명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3.3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및 소외열대질환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 방지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규 감염자 수(성, 연령 및 주요 인구특성별) ●	2019	1,006명	2020	818명	질병관리청, HIV/AIDS 신고현황 연보
	3.3.2 결핵 발생 건수 (인구 10만 명당) ●	2019	46.4명	2020	38.8명	질병관리청,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3.3.3 말라리아 발생 건수 (인구 10만 명당) ●	2019	1.08명	2020	0.74명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 연보
	3.3.4 B형간염 발생 건수 (인구 10만 명당) ●	2019	0.75명	2020	0.74명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 연보
	3.3.5 소외열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인구수 ●	2019	277명	2020	45명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 연보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로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웰빙 향상	3.4.1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	2019		2020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 158.2명 •심혈관계: 0.4명 •호흡기 질환: 12.848명 •당뇨: 15.8명 					
3.5 마약 및 해로운 알코올을 포함해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3.5.1 약물사용장애 치료개입 (약물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2019	26.9명	2020	25.7명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3.5.2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 알코올 소비량 ●	2017	8.652 리터	2018	8.477리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운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절반으로 감소	3.6.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2019	3,349명	2020	3,081명	경찰청, 경찰청수교통사고현황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 및 생식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생식보건을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통합	3.7.1 현대적 피임법 사용으로 가족계획 욕구가 충족되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비율 ●	2015	90.7%	2018	9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7.2 여성 청소년(10~14세, 15~19세) 인구 1천 명당 출산율 ●	2019	0.8명 (15~19세)	2020	0.7명 (15~19세)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8 재정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 서비스 제공	3.8.1 필수 보건서비스 보장 범위 ●	2017	86	2019	87	WHO
	3.8.2 가구 총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과부담 인구 비율 ●	2014		2015		WHO
3.9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 상당 수준으로 감소	3.9.1 실내공기오염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			2016	20명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GHO)
	3.9.2 안전하지 않은 물과 하수처리,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			2016	1.8명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GHO)
	3.9.3 비의도적 중독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	2015	0.3명	2019	0.2명	WHO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강화	3.a.1 연령표준화한 15세 이상 인구의 현재 흡연율 ●	2017	22.6%	2018	22.0%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Department of the Prevent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s: Secretariat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3.b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성 및 비 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약품 개발과 연구 지원, 저렴한 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 제공, 특히 모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	3.b.1 국가 정책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접중한 인구의 비율 ●	2018		2019		WHO/UNICEF coverage estimates 2019 revision, July 20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DTP3):		98%		98%	
	•폐구균백신(PCV3):		97%		98%	
	•홍역2차예방백신(MCV2):		97%		96%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부문 ODA 순지출액					
	3.b.3 적절한 가격으로 필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비율					
3.c 최빈개도국 및 개도국에서의 보건인력 양성, 훈련 및 보건 분야 재원 상당 수준 증가	3.c.1 보건인력 인력 밀도 및 분포 (인구 1만 명당) ●	2017		2018		Global Health Workforce Statistics database, Global Health Observatory, WHO
	•간호사:		71.482명		74.625명	
	•의사:		23.608명		24.082명	
	•치과의사:		4.951명		5.04명	
	•약사:		7.237명		7.394명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조기경보, 위험 감소, 국가 및 글로벌 보건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 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	2019	•SPAR01:100% •SPAR02: 80% •SPAR03:100% •SPAR04:100% •SPAR05:100% •SPAR06:100% •SPAR07:100% •SPAR08:100% •SPAR09:100% •SPAR10: 80% •SPAR11:100% •SPAR12:100% •SPAR13:100%	2020	•SPAR01:100% •SPAR02: 80% •SPAR03:100% •SPAR04:100% •SPAR05:100% •SPAR06:100% •SPAR07:100% •SPAR08:100% •SPAR09:100% •SPAR10:100% •SPAR11:100% •SPAR12:100% •SPAR13:100%	IHR National Self-Assessment and reports received and registered at WHO e-SPAR database
	3.d.2 선별된 항생제 내성 유기체에서 기인한 혈류 감염률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고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 교육 이수 보장	4.1.1 (a)초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시점, (b)초등학교 말 (c)중학교 말에 (i)읽기와 (ii)수학 분야 최소숙달수준에 도달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성별) ●	2015	초등·수학: 96.85	2019	초등·수학: 95	TIMSS, PISA
	4.1.2 초중고등학교 교육 원수율	2015	중등·읽기: 86.34 ·수학: 84.54	2018	중등·읽기: 84.89 ·수학: 84.54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측면에서 정상 발달 과정에 있는 24~59개월 아동 비율(성별) ●	2013	언어 3.41점 인지 3.43점	2018	언어 2.25점 인지 2.23점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연령이 되기 1년 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비율(성별) ●	2017	95.9%	2018	98.6%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4.3.1 지난 12개월 동안 형식 및 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 비율(성별) ●	2019	41.7%	2020	40.0%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4.4 2030년까지 전문·직업기술 등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 실질적으로 증가	4.4.1 정보통신기술(I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기술유형별) ●	2018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기초적인 산술 계산하기:		43.13%		45.72%	
	•파일과 폴더의 복사와 이동:		83.7%		84.97%	
	•문서 내 정보 복사 및 이동:		78.83%		84.97%	
	•파일첨부해 이메일 보내기:		68.05%		76.82%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사용해서 작성:		36.9%		39.32%	
	•모뎀, 카메라, 프린터 등 기기를 연결하고 설치하기:		52.53%		55.68%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5.56%		6.13%	
	•소프트웨어 탐색해 찾고 내려받아 설치하기:		51.03%		61.29%	
	•컴퓨터와 다른 기기 사이에서 파일을 전환하고 옮기기:		50.32%		57.54%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	4.5.1 교육지표에 대한 형평지수 (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원주민, 분쟁영향 여부별) ● 1) 성평등지수: 2) 사회경제적평등지수:	2015	•읽기: 1.125 •수학: 1.055 •읽기: 0.832 •수학: 0.785	2018	•읽기: 1.085 •수학: 1.014 •읽기: 0.816 •수학: 0.799	OECD, PIAAC/TIMMS * 중학생 기준임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보장	4.6.1 특정 연령집단에서 기능적 (a)문해력과 (b)수리력이 최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인구 비율(성별) ●			2012	•문해력: 87.1% •수리력: 81.0%	OECD, PIAAC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 보장	4.7.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			2020	(a)1.0 (b)0.883 (c)1.0 (d)0.833	UNESCO
4.a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4.a.1 기본 서비스 제공하는 학교 비율(서비스유형별) ●	2015	100%	2016	100%	UNESCO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 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도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4.b.1 장학금의 ODA 금액 (연구 부문 및 연구유형별) ●	2019	70.7백만USD	2020	69.8백만USD	기획재정부,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4.c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력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	4.c.1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 비율 (교육단계별)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성에 근거한 비차별과 평등을 증진, 집행,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 ● •1영역(법적제도와 공공생활): •2영역(여성에 대한 폭력): •3영역(고용과 경제적 혜택): •4영역(결혼과 가족):			2020	90.0% 91.7% 70.0% 90.9%	UN Women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해 공격 및 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폭력형태별) ● 5.2.2 15세 이상의 여성과 여아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연령 및 사건발생 장소별) ●			2019	27.5% 0.4%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선실태조사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근절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비율 ● 5.3.2 15~49세 여아와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를 한 인구 비율(연령별)	2015	0.098%	2020	0.107%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4 국가별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보호 정책 제공과 가구 및 가족 내 책임부담 축진을 통해 무보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인지하고 가치를 부여	5.4.1 무급 가정관리 및 돌봄노동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및 지역별) ●	2014	여성: 13.96% 남성: 3.3%	2019	여성: 13.6% 남성: 4.2%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5.5 정치, 경제, 공공 부문에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 보장	5.5.1 (a)여성 국회의원 비율 (b)여성 지방의원 비율	2020	(a)17.3%	2021 2018	(a)19.0% (b)28.3%	(a)Inter-Parliamentary Union (b)UN Women, ESCAP
	5.5.2 여성 관리자 비율 ●	2019	15.4%	2020	15.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회의 결과 문서에 따라 모든 이가 성,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보장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성 및 생식보건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대해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5.a 경제적 자원, 소유권, 토지 및 기타 형태의 부동산, 상속,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등의 평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하도록 개혁 실시	5.a.1 (a)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보유형태별)					
	5.a.2 토지 소유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권한 증대를 위해 유용한 기술 사용 강화(특히 ICT)	5.b.1 휴대폰 소유 인구 비율(성별) ●	2018	96.0%	2019	9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5.c 모든 수준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와 성평등 촉진을 위해 명확한 정책과 집행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5.c.1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 한 가격의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	2018	97.0%	2020	97.3%	환경부, 상수도 통계
6.2 2030년까지,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청결에 대한 접근 달성, 노상배변 금지	6.2.1 (a)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과 (b)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	2019	100%	2020	100%	WHO/UNICEF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 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가정용 및 산업용 하·폐수 비율 ●			2020	99.5%	WHO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의 비율 ●	2017	87.3%	2020	93.3%	World Environment Situation Room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 보장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	2017	52.45USD/m ³	2018	53.81USD/m ³	FAO
	6.4.2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가능한 담수 대비 취수 비율 ●	2017	85.2%	2018	85.2%	FAO
6.5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해 통합 된 물 자원관리 이행	6.5.1 통합수자원관리 이행 정도 ●	2017	67.9	2020	76.0	UNEP, IWRM Data Portal
	6.5.2 물 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접경 지역 비율 ●	2017	0%	2020	0%	UNECE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	2019	0.00442%	2020	0.00445%	UN Environment
6.a 물-위생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 2030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배양 지원 확대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 분야 관련 ODA 금액					
6.b 물-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및 강화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7.1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과 지속가능하며 현대화된 에너지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	2018	100%	2019	100%	World Bank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	2018	> 95%	2019	> 95%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7.2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상당히 증가	7.2.1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	2018	3.9%	2019	3.9%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
7.3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글로벌 비율 2배 증가	7.3.1 1차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	2017	5.61MJ/USD	2018	5.47MJ/USD	IEA
7.a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이행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7.b 2030년까지 개도국에 현대화된 지속가능한 에너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시설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7.b.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	2018	235.5와트/인	2019	305.6와트/인	IRENA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은 최소 연간 7% GDP 성장을 유지	8.1.1 1인당 실질GDP 연 성장률 ●	2018	2.8%	2019	1.9%	UN
8.2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 다각화, 기술업 그레이드 및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8.2.1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연 성장률 ●	2018	2.6%	2019	1.2%	ILOSTAT
8.3 생산적 활동, 일자리 창출, 기업가 활동, 창의성 및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형 정책 촉진: 중소기업 육성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 (부문 및 성별)					
8.4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서의 국제적 자원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 선진국의 주도하에 10년 주기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 억제	8.4.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2017		Environment Live /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8.4.2 국내물질소비량,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 GDP당 국내물질소비량 ●	2016				
	•총 소비량: 8.04억톤 •1인당 소비량: 15.83톤 •GDP당 소비량: 0.616kg/USD				8.09억톤 15.86톤 0.601kg/USD	
8.5 2030년까지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을 포함,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 달성: 동등한 가치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보수 보장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	2018	21,922원	2019	23,069원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	2020	4.0%	2021	3.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적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5~17세 아동 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8.8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및 이주 근로자, 특히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촉진	8.8.1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재해 건수(성 및 이주 상태별) ●	2019	0.46‰	2020	0.4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 분야 직접 기여 비율					
8.10 보험업, 금융업 및 금융지원서비스의 접근가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8.10.1 (a)성인 10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성인 10만 명당 ATM의 개수 ●	2018	(a)15.3개 (b)272.59개	2019	(a)15.1개 (b)266.97개	IMF
	8.10.2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 보유(15세 이상) 성인 인구 비율 ●	2014	94.4%	2017	94.9%	Global Financial Inclusion Database, World Bank.
8.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원조의 증가(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관계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원조 포함)	8.a.1 무역원조 약정 및 지불 ●	2018		2019		OECD, CRS database
	•약정액: 1452.2백만 달러 •지불액: 608백만 달러				1402.9백만 달러 687백만 달러	
8.b 2020년까지 청년 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8.b.1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			2020	3점	ILO

목표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9.1 경제 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시골 인구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	2018		2019		항공: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철도: the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at the OECD(ITF-OECD)
	•항공 - 승객: - 화물:		178,239,190,042(P_KM) 11,929,556,028(T_KM)		189,826,294,057(P_KM) 10,664,378,230(T_KM)	
	•철도 - 승객: - 화물:		138,305,470,213(P_KM) 17,775,221,048(T_KM)		119,610,800,000(P_KM) 25,696,000,000(T_KM)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하고,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우 2배로 증가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2019	26.6%	2020	26.1%	UNIDO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	2018	16.8%	2019	16.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가능성 강화 (특히 개도국)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	2016	8.0%	2017	7.9%	OECD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자원사용 효율 제고와 청정/환경 친화 기술 및 산업공정의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및 개조하고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행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2017	0.17kg/USD	2018	0.16kg/USD	UNIDO MVA 2021 Database
9.5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2018	4.5%	2019	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9.5.2 인구 100만 명당 (상근상당)연구원 수 ●	2018	79.1명/인구 1만 명	2019	83.1명/인구 1만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개도국들, 소규모 도서 개도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인프라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9.b 산업 다각화, 상품가치를 부가시키는 산업 환경 정책을 보장해 개도국가의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	2017	66.2%	2018	63.8%	UNIDO CIP 2020 Database
9.c ICT 접근성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 달성을 위해 노력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 ●	2018	99.9%	2019	9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0.1 2030년까지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을 점진적으로 국가평균보다 높게 달성 및 유지	10.1.1 총인구 및 소득하위 40% 인구의 1인당 가구 지출 또는 소득 성장률					
10.2 2030년까지 연령, 성, 장애, 인종, 종교, 기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 권한 확대 및 촉진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 (성, 연령 및 장애별) ●	2019	16.3%	2020	15.3%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감소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			2019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 13.9%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10.4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평등 달성	10.4.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 ●	2016	54.3%	2017	53.8%	ILOSTAT
	10.4.2 재정 정책의 재분배 효과 ● • 지니계수 처분가능소득 기준: • 시장소득 기준:	2019	0.339 0.404	2020	0.331 0.40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0.5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 및 모니터링 개선 및 이행조치 강화	10.5.1 금융건전성지표 ● •총채권대비 부실채권 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대비 기본자산 비율: •총자본대비 부실채권충당금 비율: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산 비율: •단기부채대비 유동자산 비율: •총자본대비 외환종합포지션 비율:	2018	0.25% 0.78% 7.96% 1.28% 13.25% 114.49% 0.04%	2019	0.25% 0.71% 7.82% 1.20% 13.22% 109.96% 0.11%	IMF
10.6 글로벌 국제경제 및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도국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화	10.6.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지분율)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IMF: •FSB:	2019	1.85%(1.85%) 1.73%(0.53%) 3.51%(4.17%)	2020	1.85%(1.85%) 1.73%(0.53%) 3.51%(4.17%)	개별 국제기구
10.7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잘 관리된 이민 정책 수립 및 이행	10.7.1 이주국가에서의 월소득 대비 이주 근로자가 부담하는 취업비용 비율 ● •취업비용 지불하는 이주 근로자 비율	2018	12.7%	2021	14.0%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10.7.2 질서 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하는 이주 정책을 갖춘 국가의 수					
	10.7.3 국제이주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 ●	2019	0명	2020	0명	IOM Missing Migrant Project
	10.7.4 난민 인구 비율(출산국별)(인구 10만 명당) ●	2019	0.351명	2020	0.304명	UNHCR refugee statistics
10.a 세계무역기구(WTO)협약에 따른 개도국(특히,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규정 이행	10.a.1 최빈개도국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무관세 비율 ●	2018	공산품 51.4% 농산품 51.9%	2019	공산품 53.3% 공산품 53.9%	ITC/UNCTAD/WTO database
10.b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최빈개도국, 아프리카국가, 군서도서개발국) ODA, 자원 지원, 직접투자권장	10.b.1 개발지원 총액(공여국, 수원국 및 유형별) ●	2018	126.2억USD	2019	121.6억USD	OECD
10.c 2030년까지 이민자송금 수수료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10.c.1 송금총액 대비 송금비용 비율 ● •한 → 중국: •한 → 베트남:	2018	5.2% 4.9%	2019	5.0% 4.8%	Remittance Prices Worldwide database, World Bank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 및 저렴한 주택 및 기본 서비스 제공 그리고 빈민가 개선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	2019	5.3%	2020	4.6%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특히, 취약계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안전 및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교통시스템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11.3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소모율 비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있는 도시의 비율					
11.4 세계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10만 명당) ●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	2018	(사망 또는 실종) 0.28명 (직접 영향) 25.6명	2019	(사망 또는 실종) 0.21명 (직접 영향) 17.8명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8	0.000015%	2019	0.000026%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1.6 대기질과 지사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해,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인구 1인당)을 감소	11.6.1 지사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	2018		2019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계폐기물: 46,749.3 •사업장폐기물: 9,286.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67,726.9 •건설폐기물: 206,950.9 (단위: 톤/1일)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준(인구수 가중) ●	2015	PM _{2.5} : 26.3μg/m ³	2016	PM _{2.5} : 26.4μg/m ³	WHO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계공(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	2019	1.4%	2020	1.2%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통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	2016	폭력범죄: 387.8건/10만 명	2018	폭력범죄: 566.0건/10만 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해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 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고리 지원	11.a.1 (a)인구다양성, (b)토지균형개발, (c)지방재정강화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을 갖춘 국가의 수 ●			2020	1	NUP 2020 Status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 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년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재난위기 관리를 구축하고 시행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2018	0.95	2019	1	Sendai Framework Monitoring System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사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	2018	100%	2019	100%	Sendai Framework Monitoring System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2.1 선진국 주도하에, 개도국들의 역량과 발전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			2020		UN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이행계획 보유 및 정책 우선순위 여부: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제도 구비 여부: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관련 제도 개수: 				1 1 5개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물질발자국, GDP당 물질발자국					
	12.2.2 물질소비량, 1인당 물질소비량, GDP당 물질소비량 ●	2016		2017		Environment Live /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소비량: 8.04억 톤 •1인당 소비량: 15.83톤 •GDP당 소비량: 0.616kg/USD 				8.09억 톤 15.86톤 0.601kg/USD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2분의 1로 감소하고 식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 감소	12.3.1 (a)식량손실지수 및 (b)식량폐기지수 ●	2011	311.3g/일/인	2016	367.95g/일/인	환경부, 전국 폐기물통계조사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수명 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 크게 감소	12.4.1 유해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	2015		2020		UN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테르담협약: 72.55 •바젤협약: 16.67 •스톡홀름협약: 33.33 				67.24 20.00 50.00	
	12.4.2 (a)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	2018	지정폐기물 발생량 15,389톤/일	2019	지정폐기물 발생량 15,556톤/일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2.5 2030년까지 방지, 감축, 재생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 재활용 톤 •재활용 처리 비율:	2018	98.3%	2019	98.9%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2.6 기업들이(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반영토록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이행하도록 권고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	2019	135개	2019	138개	한국표준협회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			2020	1	UNCTAD, UNEP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의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과 자연과 조화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의식 및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			2020	(a)1.0 (b)0.883 (c)1.0 (d)0.833	UNESCO
12.a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	2018	235.5와트/인	2019	305.6와트/인	IRENA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관광업의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도구 개발 및 이행	12.b.1 경제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툴 이행					
12.c 조세구조 조정 및 유해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시장왜곡 요인 제거를 포함해 에너지낭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합리화 이행(이때,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악영향 최소화)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	2018	0.0046%	2019	0.0034%	IEA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3.1 기후 관련 위험 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	13.1.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10만 명당) ●	2018		2019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사망 · 실종: •직접 영향:	0.28명 25.6명	0.21명 17.8명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2018	0.95	2019	1	Sendai Framework Monitoring System as provided by designated national focal points
13.1.3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	2018	100%	2019	100%	Sendai Framework Monitoring System as provided by designated national focal points	
13.2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	13.2.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국가의 수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	2017	727.045 백만톤CO ₂ eq.	2018	701.37 백만톤CO ₂ eq.	환경부, 온실가스통계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3.3.1 (i)세계시민교육 (ii)지속가능발전교육이 (a)국가교육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			2020	(a)1.0 (b)0.883 (c)1.0 (d)0.833	UNESCO
13.a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 활동의 이행 및 녹색기후펀드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상의 선진국들의 공약인 연간 1000억 달러 동원 촉각 이행	13.a.1 2025년까지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13.b 최빈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 메커니즘 촉진(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및 소외집단 포함)	13.b.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 수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4.1 2025년까지 해양폐기물과 영양분 오염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방지 및 감소	14.1.1 (a)연안해역 부영양화지수 및 (b)부유성 플라스틱 잔해 밀도 •연간 해양쓰레기 수거량 ●	2019	1.08톤	2020	1.38억 톤	해양환경공단,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14.2 2020년까지 회복력 및 복원활동을 강화해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 조치 실행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해양 지역을 관리하는 국가 수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협력을 포함해 해양 산성화 최소화 및 그 영향에 대응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업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파괴적인 어업 방법 금지; 최단시간에 어획량을 복원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계획 이행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자원 비율					
14.5 2020년까지 가능한 과학적 정보 및 국가 법·국제법과 일관되게 최소 연안 및 해양 지역의 10% 보호	14.5.1 해양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 ●			2020	2.46%	UNEP-WCMC, BLI, IUCN
14.6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특별대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특정형태의 어업 보조금 금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 도입 자제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이행 정도 ●			2018	5	FAO
14.7 2030년까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통해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의 경제적 이익 증가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 해양건강 개선 및 해양 다양성 강화를 통해 개도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발국과 최빈개도국들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연구역량 증대 및 과학지식, 선진해양기술 이전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와 해양기술 이전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고려)	14.a.1 총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 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 비율 ●	2016	0.32%	2017	0.25%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14.b 소규모 영세어업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접근성 제공	14.b.1 소규모 영세어업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 규제, 정책, 제도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보고서의 158번째 단락에서 상기된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을 제시하는 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이행을 통해 해양 및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개선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관련 장치들을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목표 15 육상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5.1 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산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	15.1.1 총 국토면적 중 산림면적의 비율 ●	2019	64.6%	2020	64.5%	FAO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유형별) ●	2019	육상 37.6% 담수 36.8%	2020	육상 37.6% 담수 36.8%	UNEP-WCMC, BLI, IUCN
15.2 2020년까지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하고, 산림벌채를 중단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 •지상바이오매스: •보호림 비율: •산림면적 연간 순 변화율(2010): •산림경영인증 면적: •장기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된 산림면적:	2019	128.63톤/ha 6.9% -0.14 214.57천ha 41.14%	2020	131.69톤/ha 6.9% -0.16 673.2천ha 39.34%	FAO
15.3 2030년까지 사막화 퇴치와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해,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그리고 토지 황폐화가 없는 세계 달성을 위해 노력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전 보장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	2019	20.21%	2020	20.21%	UNEP-WCMC, BLI, IUCN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	2015	99.86	2018	99.86	FAO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5.5 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감소시키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	15.5.1 적색목록지수 ●	2020	0.699	2021	0.697	IUCN, BLI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보장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증대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 •표준물질이전협정 보고 건수:	2020	277	2021	277	ITPGRFA Secretariat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불법야생동물 제품들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동물 비율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및 대응종을 통제 및 박멸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	2016	1	2020	1	NBSAP
15.9 2020년까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개발 과정 그리고 빈곤퇴치 전략 및 회계에 반영	15.9.1 (a)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태다양성의통합 ●			2020	1	CHM / WESR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	15.a.1 (a)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	2017	26.9백만 달러	2018	14.5백만 달러	OECD
15.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도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산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15.b.1 (a)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	2017	26.9백만 달러	2018	14.5백만 달러	OECD
15.c 지속가능한 생계 수단의 추구를 위한 지식 사회의 역량 제고를 포함해 멸종위기종의 밀렵 및 밀매 활동 근절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 강화	15.c.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동물 비율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6.1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 사망률 상당 수준으로 감소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성 및 연령별) ● •살인범죄 피해자 수:	2019	297명	2020	308명	경찰청, 범죄통계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 수(성, 연령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간 (a)신체적, (b)정서적, (c)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 ● •폭행: •괴롭힘: •성폭력:	2016	0.16% 0.09% 0.08%	2018	0.16% 0.12% 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 •범죄두려움 비율:	2017	20.7%	2019	19.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	2019	25.0%	2020	22.9%	한국청소년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6.3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권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사고를 한 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	2016	27.4%	2018	32.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	2019	35.4%	2020	35.4%	법무부, 교정시설수용현황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 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기구유형별)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 수준으로 감소, 은닉재산 회수 및 환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 방지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가액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및 뇌물 대폭 감소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해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인구 비율 ●	2020	0.43%	2021	0.4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해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	2020	0%	2021	0%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문 또는 예산코드별)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	2018	93.9%	2019	93.5%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16.7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이며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	16.7.1	국가 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	2019	남성: 52.7% 여성: 47.3%	2020	남성: 52.1% 여성: 47.9%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	2018	43.1	2019	40.6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하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6.8.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지분율) ●	2019		2020		개별 국제기구
		•유엔경제사회이사회:		1.85%(1.85%)		1.85%(1.85%)	
		•IMF:		1.73%(0.53%)		1.73%(0.53%)	
		•FSB:		3.51%(4.17%)		3.51%(4.17%)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해 모두에게 법적신원 제공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된 자의 비율(연령별)					
16.10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2021	1	UNESCO
16.a 폭력 예방 및 테러, 범죄 예방 차원에서 모든 수준, 특히 개도국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관련 국내제도 강화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			2019	1	OHCHR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증진 및 강화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			2019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				13.9%	

목표 17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할성화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7.1 조세 및 기타 수입 징수 국내 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재원 동원 강화(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	2018	33.4%	2019	34.2%	IMF
	17.1.2	정부 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	2018	66.3%	2019	60.2%	IMF
17.2 선진국은 개도국에 GNI의 0.7%를, 최빈 개도국에 GNI의 0.15~0.20%를 ODA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ODA 공약 달성을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ODA 제공 국가는 적어도 GNI의 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고려할 것을 권장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순ODA의 비율 2)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	2019	1) 0.15%	2020	1) 0.14%	OECD, DAC database



세부목표	지표	최근 연도1	값1	최근 연도2	값2	출처
17.3 개도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재원 동원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	2018	121.8억 달러	2019	105.7억 달러	UNCTAD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	2019	0.44%	2020	0.45%	World Bank
17.4 필요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조율을 통해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고채무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북-남, 남-남, 삼각협력 등의 지역 및 국가 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 글로벌 기술혁신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 확대	17.6.1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속도별) ●	2018	41.6명	2019	42.8명	ITU
17.7 상호합의에 따라 양허, 특허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 증진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 혁신 역량구축 메커니즘 운영을 전면 가동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핵심기술 사용을 강화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	2019	91.8%	2020	9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7.9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통해,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지원할 개도국의 효과적, 선별적 역량구축 이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	17.9.1 개도국에 지원하는(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재정 및 기술지원 금액					
17.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보편적, 규칙기반, 개방적, 비차별적, 공평한 다자무역제도 촉진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 * 공산품 기준	2018	4.92%	2019	4.79%	ITC/UNCTAD/WTO database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의 비중을 2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대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특허 원산지규정 투명성 및 명료성을 포함해 최빈개도국의 무관세 및 수량규제 없는 시장접근에 대한 WTO 결정을 시의성 있게 이행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 공산품 기준	2018	1.72%	2019	1.69%	ITC/UNCTAD/WTO database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율을 통해 글로벌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에서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 존중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2018		2019	52.3%	OECD, UNDP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전문성-기술-재원을 동원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에 기초해 효과적인 공공, 민간,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17.17.1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구축 지원 강화	17.18.1 SDGs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 국가의 수 ●			2020	1	PARIS21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			2020	1	PARIS21
17.19 2030년까지 GDP 보안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을 지원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최소한 1회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했고, b)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			2019	1	UNSD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집필진

연구책임 김석호(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개요·목표10)

공동연구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표1)

박준기(농촌경제연구원, 목표2)

신정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표3)

박성호(한국교육개발원, 목표4)

주재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표5)

안중호(한국환경연구원, 목표6)

손인성(에너지경제연구원, 목표7)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 목표8)

최현경(산업연구원, 목표9)

안예현(국토연구원, 목표11·13(재난))

이소라(한국환경연구원, 목표12)

홍제우·박진한(한국환경연구원, 목표13)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목표14)

김래현(국립산림과학원, 목표15)

박효민(서울시립대, 목표16)

한승현(한국행정연구원, 목표17)

연구보조 박소현·장효민·정우연(서울대)

편집진

박영실(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진유강(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윤민희(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발행 2022년 3월

발행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 2765-3803

인쇄처 숨쉬는책공장



발간등록번호
11-1240245-000071-10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 REPORT 2022